93340
9 788997 257164
ISBN 978-89-97257-16-4

값 20,000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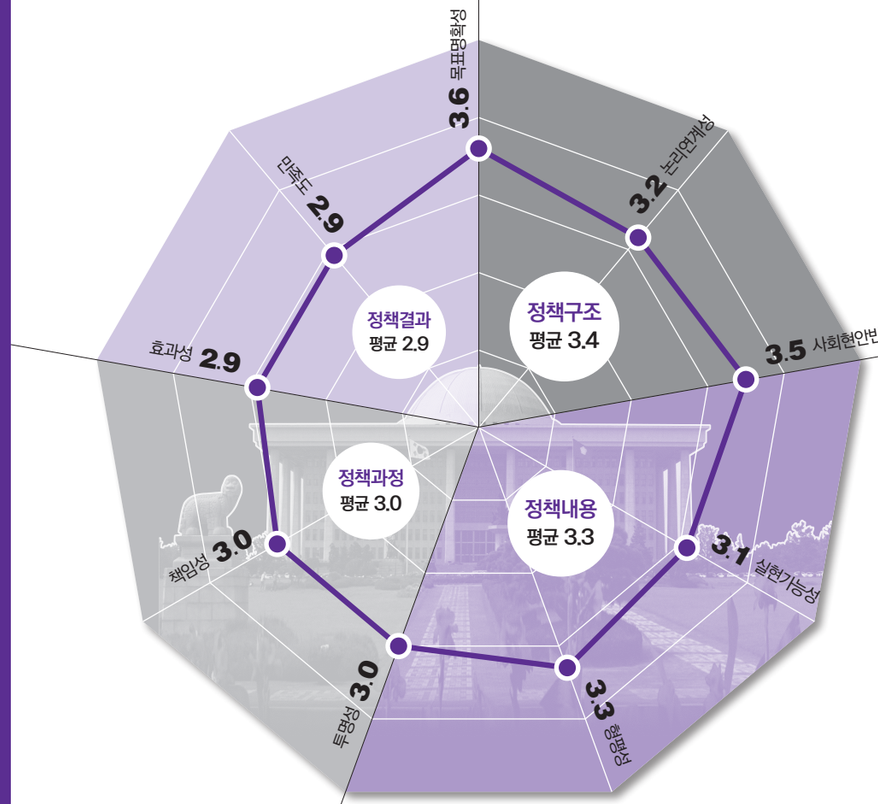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지은이: 최진욱, 심동철, 구교준, 이응균,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김선혁, 임현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 서울 : 동아E&D, 2019
p. ; cm

권말부록: 2018년 평가대상 정책 목록 (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7257-16-4 93340 : ₩20,000

한국 행정[韓國行政]
정책 평가[政策評價]

351.11-KDC6
352.3-DDC23 CIP2019005457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9005457)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참여 저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조정)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총괄)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여론조사 수행기관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동아E&D

contents

제 1장 서론 12

1. 연구 목적 14
2. 연구 방법과 대상 16

제 2장 정책평가 방법론 18

1. 평가지표와 의미 20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20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20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21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21
   5) 기타 영역 21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23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24
   1)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26
   2)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32

제 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36

1. 경제정책분야 38
   1)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38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39
   3)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39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40
   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41
   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41
   7) 소득주도성장(다부처) 42
   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43
   9)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43
   10)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45
2. 사회복지정책분야 46
   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46
   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47
   3)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48
   4)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49
   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50
   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51
   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52
   8)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52
   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53
   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55
3. 교육문화정책분야 56
   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 56
   2)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56
   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58
   4) 학교폭력예방(교육부) 59
   5)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59
   6)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60
   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61
   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62
   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62
   10) 도시숲 조성(산림청) 63
4. 외교안보정책분야 64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64
   2)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64
   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65
   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65
   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66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66
   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66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67
   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67
   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68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70

1. 경제정책분야 72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72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95
3) 평가결과 종합 126
2. 사회복지정책분야 132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32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58
3) 평가결과 종합 190
3. 교육문화정책분야 198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98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19
3) 평가결과 종합 246
4. 외교안보정책분야 252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52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78
3) 평가결과 종합 311

제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8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20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324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330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32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36
1) 경제정책분야 336
2) 사회복지정책분야 340
3) 교육문화정책분야 344
4) 외교안보정책분야 346

참고문헌 349

부록: 2018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355

표 목차

[표 2-1] 경제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4
[표 2-2] 사회복지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5
[표 2-3] 교육문화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5
[표 2-4] 외교안보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6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분야 32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분야 33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분야 34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분야 34
[표 3-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47
[표 3-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49
[표 3-3] 기초연금 지원 금액 49
[표 3-4] 2018년 아동수당제도 선정기준액 50
[표 3-5] 전국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2014-2017) 50
[표 3-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53
[표 3-7]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2012-2017) 54
[표 3-8]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2012-2017) 54
[표 3-9] 2018년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이용자 현황 57
[표 3-10]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61
[표 4-1] 진단의 공정성 및 진단위원의 독립성 확보 장치 개요 234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324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26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27

그림 목차

[그림 2-1] 경제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7
[그림 2-2] 사회복지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8
[그림 2-3] 교육문화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9
[그림 2-4] 외교안보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31
[그림 3-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 체계 58
[그림 4-1] 경제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72
[그림 4-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3
[그림 4-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5
[그림 4-4]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5
[그림 4-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7
[그림 4-6]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8
[그림 4-7]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9
[그림 4-8]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80
[그림 4-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2
[그림 4-10]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82
[그림 4-11]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4
[그림 4-12]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84
[그림 4-13]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6
[그림 4-14] 소득주도성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87

[그림 4-15] 소득주도성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88
[그림 4-1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89
[그림 4-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1
[그림 4-18] 재생에너지 3020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91
[그림 4-19] 재생에너지 3020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3
[그림 4-20]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93
[그림 4-21]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5
[그림 4-2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96
[그림 4-2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98
[그림 4-24]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98
[그림 4-2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1
[그림 4-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2
[그림 4-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5
[그림 4-28]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5
[그림 4-2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7
[그림 4-30]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8
[그림 4-31]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0
[그림 4-32]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0
[그림 4-33]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3
[그림 4-34] 소득주도성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4
[그림 4-35] 소득주도성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7
[그림 4-3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8
[그림 4-3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21
[그림 4-38] 재생에너지 3020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21
[그림 4-39] 재생에너지 3020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23
[그림 4-40]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24
[그림 4-41]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25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126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127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130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132
[그림 4-46]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4
[그림 4-47]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36
[그림 4-48]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6
[그림 4-49]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38
[그림 4-50] 국민기초생활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9
[그림 4-51] 국민기초생활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1
[그림 4-52] 아동수당제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1
[그림 4-53] 아동수당제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3
[그림 4-54]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4
[그림 4-5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6
[그림 4-5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6
[그림 4-57]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8
[그림 4-58]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9
[그림 4-59]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1
[그림 4-60] 아이돌봄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51
[그림 4-61] 아이돌봄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3
[그림 4-62]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54
[그림 4-63]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6
[그림 4-64]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56
[그림 4-65]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8
[그림 4-66]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59
[그림 4-67]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2
[그림 4-68]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2
[그림 4-69]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5
[그림 4-70]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6
[그림 4-71]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8
[그림 4-72] 아동수당제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9
[그림 4-73] 아동수당제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2
[그림 4-74]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2
[그림 4-7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4
[그림 4-7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5
[그림 4-77]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7
[그림 4-78]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8
[그림 4-79]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80
[그림 4-80] 아이돌봄 서비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81
[그림 4-81] 아이돌봄 서비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84
[그림 4-82]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84
[그림 4-83]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87
[그림 4-84]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88
[그림 4-85]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90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191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193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195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198
[그림 4-90]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99
[그림 4-9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0
[그림 4-92] 온종일 돌봄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1
[그림 4-93] 온종일 돌봄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2
[그림 4-9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3
[그림 4-9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4
[그림 4-96]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5
[그림 4-97]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6
[그림 4-98]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7
[그림 4-99]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8
[그림 4-100] 대학기본역량평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9
[그림 4-101] 대학기본역량평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0
[그림 4-102]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1
[그림 4-103]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2
[그림 4-10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3
[그림 4-10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4
[그림 4-106]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5
[그림 4-107]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6
[그림 4-108]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7

[그림 4-109]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8
[그림 4-110]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19
[그림 4-11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1
[그림 4-112] 온종일 돌봄 정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1
[그림 4-113] 온종일 돌봄 정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4
[그림 4-11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4
[그림 4-11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6
[그림 4-116]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6
[그림 4-117]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9
[그림 4-11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230
[그림 4-11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2
[그림 4-120]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2
[그림 4-121]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5
[그림 4-122]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6
[그림 4-123]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8
[그림 4-12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8
[그림 4-12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41
[그림 4-126]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41
[그림 4-127]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43
[그림 4-128]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43
[그림 4-129]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46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246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247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250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253
[그림 4-134]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3
[그림 4-135]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55
[그림 4-136] 병 복무기간 단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6
[그림 4-137] 병 복무기간 단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58
[그림 4-138]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8
[그림 4-139]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0
[그림 4-140]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1
[그림 4-141]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3
[그림 4-142]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3
[그림 4-143]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6
[그림 4-144]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6
[그림 4-14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8
[그림 4-146]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8
[그림 4-14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1
[그림 4-14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71
[그림 4-149]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3
[그림 4-150]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73
[그림 4-151]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6
[그림 4-152]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76
[그림 4-153]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8
[그림 4-154]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0
[그림 4-155]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3
[그림 4-156] 병 복무기간 단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3
[그림 4-157] 병 복무기간 단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6
[그림 4-158]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6
[그림 4-159]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9
[그림 4-160]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0
[그림 4-161]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3
[그림 4-162]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3
[그림 4-163]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6
[그림 4-164]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7
[그림 4-16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9
[그림 4-166]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0
[그림 4-16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2
[그림 4-16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3
[그림 4-169]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5
[그림 4-170]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6
[그림 4-171]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8
[그림 4-172]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9
[그림 4-173]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11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312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313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316
[그림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 320
[그림 5-2]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 321
[그림 5-3]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 322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22
[그림 5-5]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23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 333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 334
[그림 6-3]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 335

01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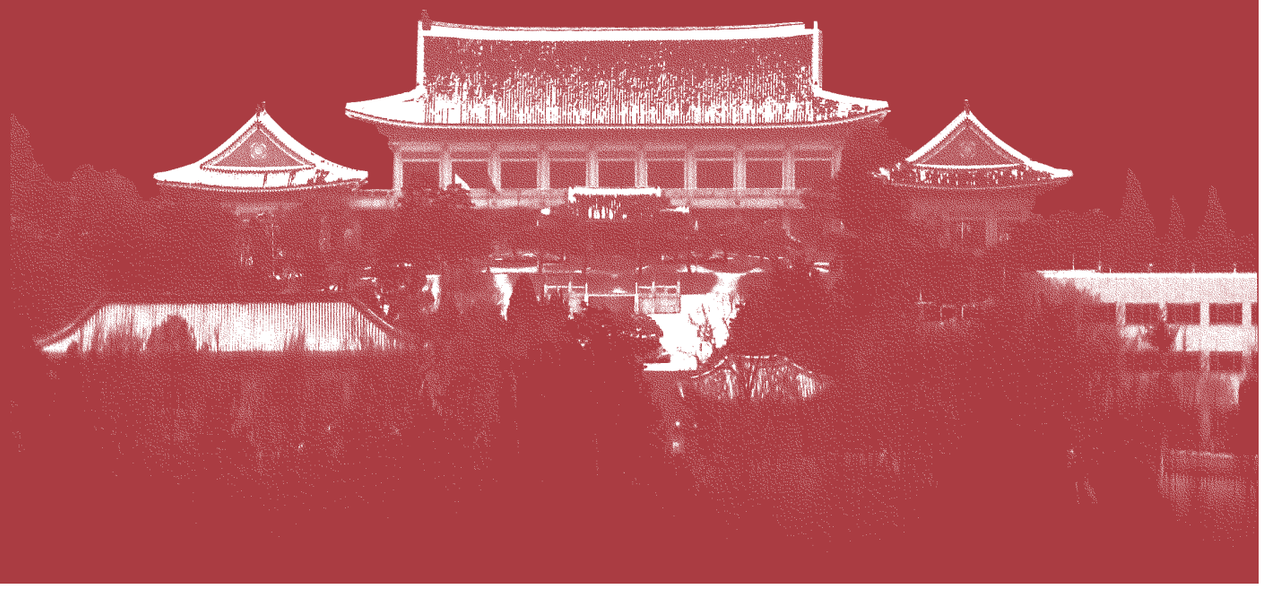
2018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치와 함께 제시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되면서 평가의 분기점을 맞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람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국외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2017년과는 긴장이 완화된 정치 외교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이 정권 초기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서 실제 체감의 정도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2018년도의 정책평가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 연구 목적 014

2 | 연구 방법과 대상 016

정책평가 방법의 다양성

5년간 정부학연구소 정책평가 연구진들은 새로운 항목들을 매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의 정책이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1. 연구 목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주요정책들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평가”를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2018년의 정책평가는 정책평가를 시작한지 5년이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지난 5년간 평가의 엄정성과 평가의 범위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의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옴으로써,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의 틀을 구축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학연구소는 경제정책, 교육문화정책, 사회복지정책,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문가들로 분야별 정책분석팀을 구성하고, 매년 각 분야에서 10개의 정책을 여러 단계를 거쳐 선정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지난 5년간 매년 40개 정책을 지난 5년간 200개에 가까운 정책을 평가해 왔다. 또한 매년 40개의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정책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정책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학연구소에서 방점을 두는 정책평가의 목표가 일회성, 이슈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일련의 평가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집행된 정책평가는 지난 5년간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정책분석·평가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는 지난 5년간 큰 틀에서는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이는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5년간 정부학연구소 정책평가 연구진들은 새로운 항목들을 매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의 정책이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치와 함께 제시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되면서 평가의 분기점을 맞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람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국외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2017년과는 긴장이 완화된 정치 외교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이 정권 초기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서 실제 체감의 정도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2018년도의 정책평가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2018년 평가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분야별 평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하나의 정책의 효과성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의 범위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다각도에서 이루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그 평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모두 각기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다. 또한, 이들 정책들은 각기 다른 정책 주기(policy cycle)에 놓여 있으며, 그 효과성을 온전히 평가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도 물론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들을 평가할 때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대비효과로 인해 어떤 정책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각각의 정책에 대한 환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최근 일부 정책평가 분야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 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책 평가의 본래 목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 정책영역의 구분과 정책 목록의 선정: 평가에 참여한 10명의 교수진들은 기존의 4개의 정책분야(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정책을 중앙 부처·청 단위에 요청하여 취합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배정된 교수들은 중요한 정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누락된 정책을 회의를 통해 추가하였다.

2. 정책평가 대상의 선정: 분야별로 정책평가대상 선정은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참여교수들의 정성적 평가를 더해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600명(정책분야별 150명)과 정책전문가 80명(정책분야별 2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선정된 정책들의 영향력, 정책시행의 시급성을 물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분야별 10개, 총 4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3.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는 앞서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40개의 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2,000명(정책분야별 500명), 정책전문가 200명(정책분야별 50명)를 아우르는 총 2,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자들은 선택한 정책분야에서 9개의 세부항목의 질문에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40개 정책의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4. 전문가 정성평가와 최종 점수의 산출: 앞서 설명한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참여한 교수들은 9개의 세부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30%), 정책전문가의 평가결과(35%),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결과(35%)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개 분야 40개 정책의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8년 정책평가는 2015년부터 조사된 국민의 삶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설문 항목과 함께, 2016년도에 추가된 정책분야의 중요도, 그리고 영역별 4개의 정책분야의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2017년 정책평가에서부터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02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1 | 평가지표와 의미 020

2 |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3

3 |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4

본 연구진은 2014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임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 년 간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1. 평가지표와 의미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정책목표가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3)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목표 간 일관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정책목표 간에 원인과 결과로서 뚜렷한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제시된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논리적 연결이 뚜렷하게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가)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대상 정책이 현재 거시적인 국가/사회의 목표(social goal)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극화해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수집 분석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해야 하고(재정적 실현가능성), 2)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타당해야 하며(행정적 실현가능성), 3) 정책의 법적근거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적 실현가능성).

다) 정책의 형평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려서도 안 된다.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가)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입안 및 집행)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이란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하고, 2) 정책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궤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가)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대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혹은 정책이 고유의 목표 뿐 아니라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반영하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5) 기타 영역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평가의 4가지 영역 이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요인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7년 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 선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책평가 관련 문헌에서 정책의 결과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과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된 좋은 정책의 기준은 구조와 내용,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학계의 평가 기준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는 이미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자체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좋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014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임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 년 간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의 예비 선정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동아일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망라적 목록(exhaustive list)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부처는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정책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이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검토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마련된 망라적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전문가 집단 검토 FGD(Focused Group Discussion)를 통해 취합된 정책들 중에 영역 별로 다음과 같이 각 20개의 정책을 선별하였다. 전문가 집단 검토 시 고려된 요인들은 정책 목표 및 추진일정의 유무, 소요 예산의 규모, 전담 인원의 크기, 근거 법령의 존부(存否) 등이다.

[표 2-1] 경제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2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경쟁 촉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R&D(국민생활연구) 추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연결 지능화(DNA, Data-Network-AI) 역량 강화
5		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7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8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9		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10		기획재정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주52시간근무)
11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대
12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업 체질개선
13		다부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14		다부처	핵심 생계비 경감대책
15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16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17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벤처투자)
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1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지주회사
20		해양수산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표 2-2] 사회복지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경찰청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2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3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4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5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7		대검찰청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9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제도
10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11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1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13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14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15		인사혁신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소신행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16		행정안전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17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18		소방청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1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0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표 2-3] 교육문화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2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3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
4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5		교육부	대학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6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7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8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9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10		교육부	대학 입시제도 개편
11		문화체육관광부	방한관광시장 안정화 및 다변화
12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14		문화체육관광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16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17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8	교육문화	산림청	도시숲 조성
19		산림청	산림복지 정책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표 2-4] 외교안보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3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5		국방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6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7		국방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8		방위사업청	국가 연구개발(R&D)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
9		방위사업청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11		병무청	보충역복무제도 중 산업지원인력정책
12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강화
13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14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15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 협력인재 양성
16		외교부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7		통일부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18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19		통일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20		통일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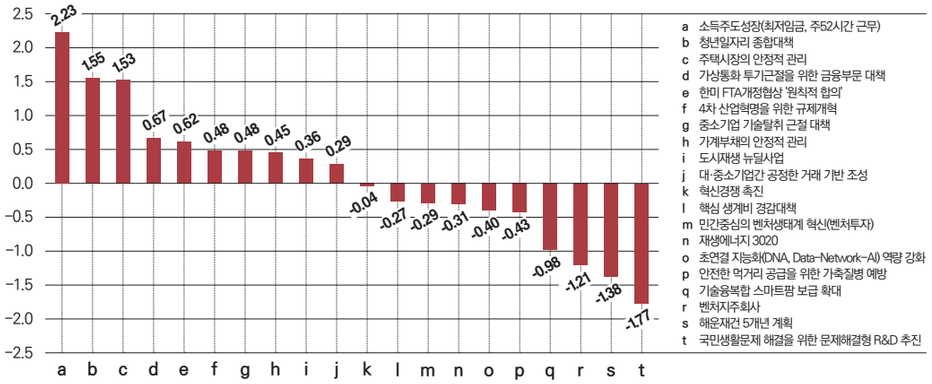
1)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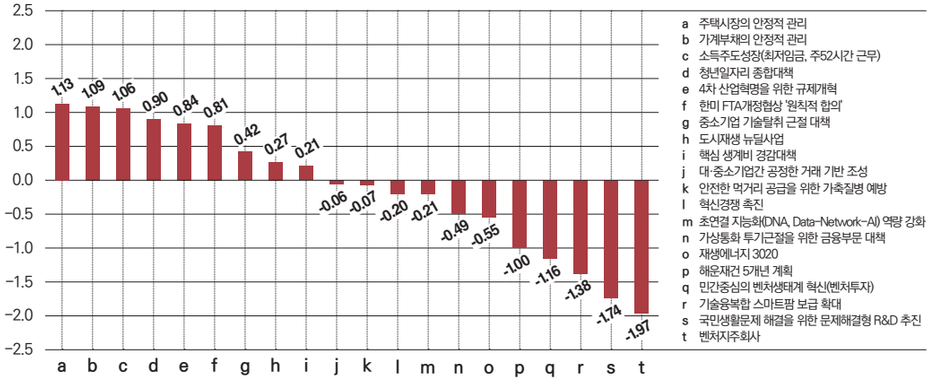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다시 가중평균하여(전문가 60%, 일반인 40%) 점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정책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2-1] 경제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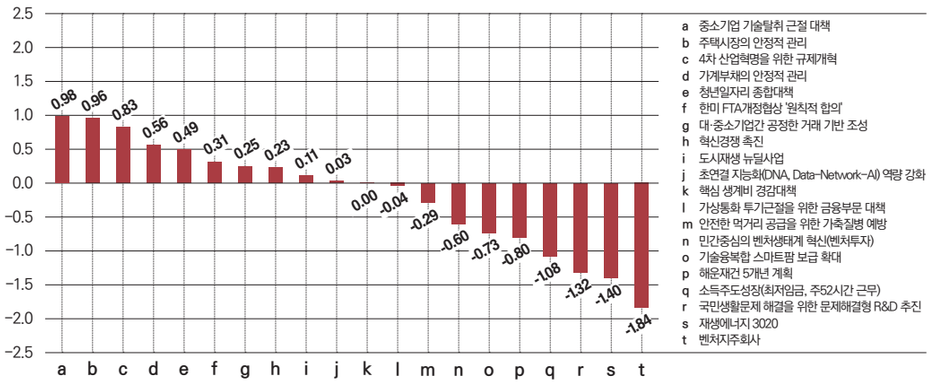
경제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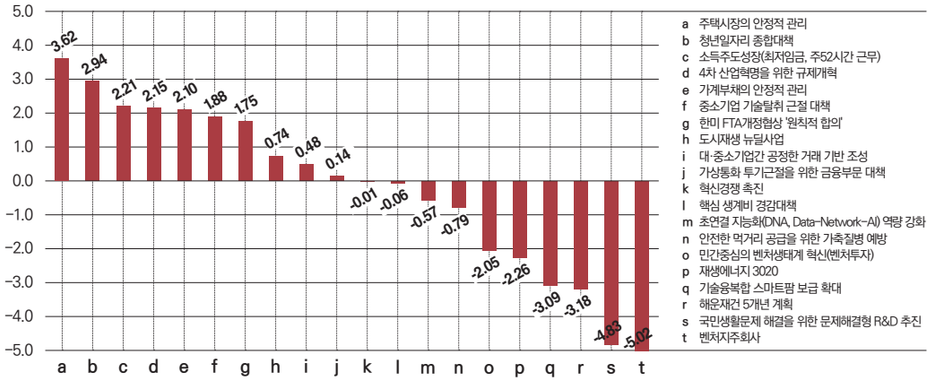
경제분야 : 영향력



경제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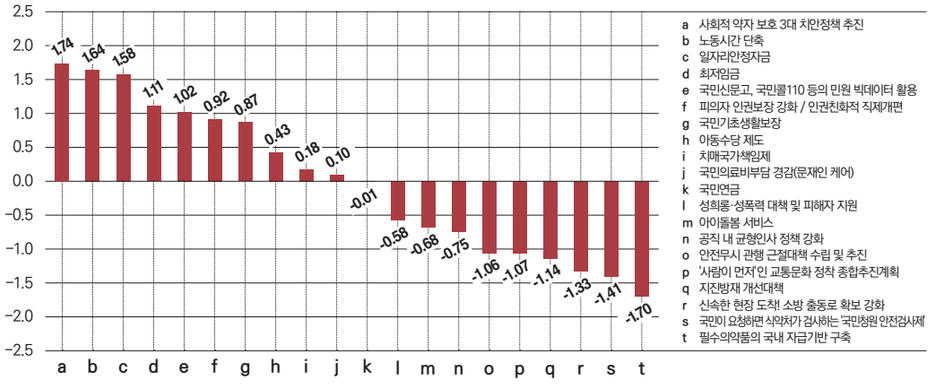
경제분야 : 합산점수



a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b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c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
d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e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f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g 한미 FTA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h 도시재생 뉴딜사업
i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j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k 혁신경쟁 촉진
l 핵심 생계비 경감대책
m 초연결 지능화(DNA, Data-Network-AI) 역량 강화
n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o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벤처투자)
p 재생에너지 3020
q 기술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대
r 해운재건 5개년 계획
s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
t 벤처지주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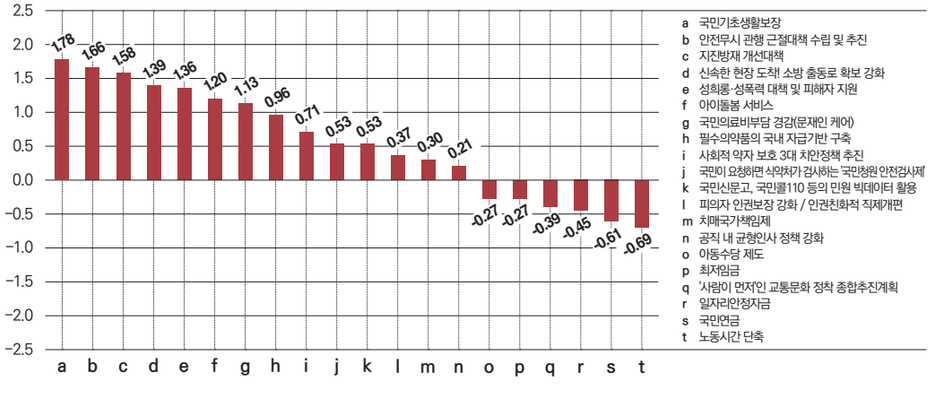
[그림 2-2] 사회복지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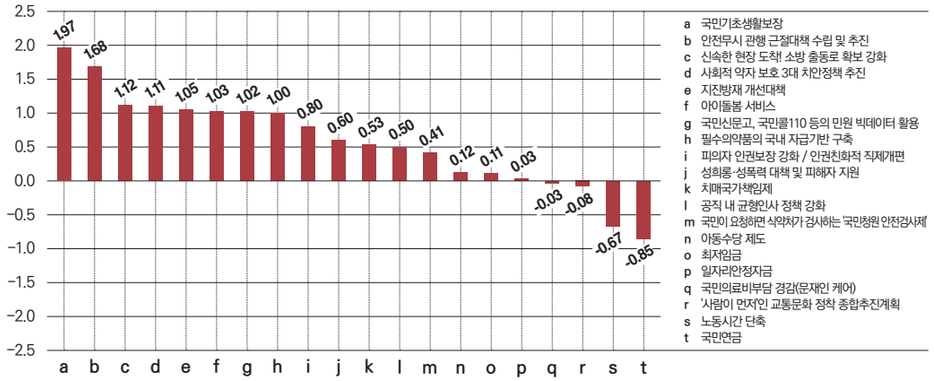
a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b 노동시간 단축
c 일자리안정자금
d 최저임금
e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 활용
f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g 국민기초생활보장
h 아동수당 제도
i 치매국가책임제
j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k 국민연금
l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m 아이돌봄 서비스
n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o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p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q 지진방재 개선대책
r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s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t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사회복지분야 :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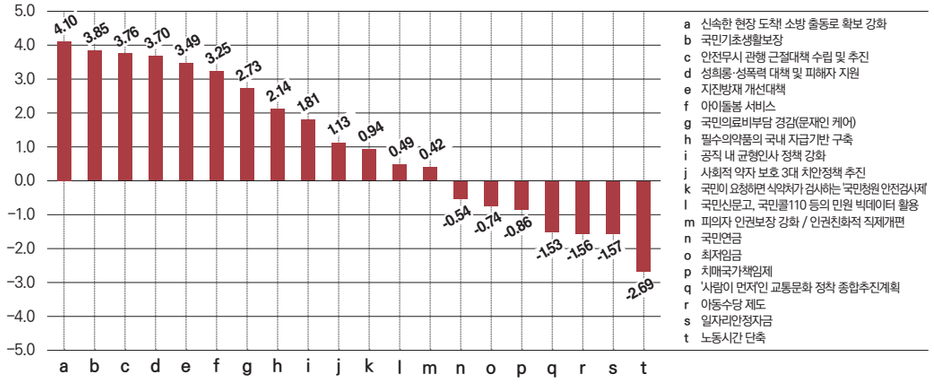
a 국민기초생활보장
b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c 지진방재 개선대책
d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e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f 아이돌봄 서비스
g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h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i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j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k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 활용
l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m 치매국가책임제
n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o 아동수당 제도
p 최저임금
q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r 일자리안정자금
s 국민연금
t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분야 : 우선시행 여부



a 국민기초생활보장
b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c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d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e 지진방재 개선대책
f 아이돌봄 서비스
g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 활용
h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i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j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k 치매국가책임제
l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m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n 아동수당 제도
o 최저임금
p 일자리안정자금
q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r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s 노동시간 단축
t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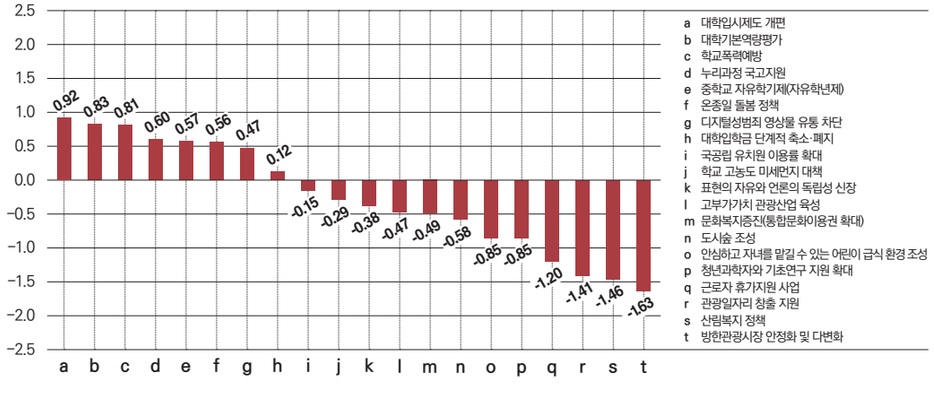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 합산점수



a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b 국민기초생활보장
c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d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e 지진방재 개선대책
f 아이돌봄 서비스
g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h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i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j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k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l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 활용
m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n 국민연금
o 최저임금
p 치매국가책임제
q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r 아동수당 제도
s 일자리안정자금
t 노동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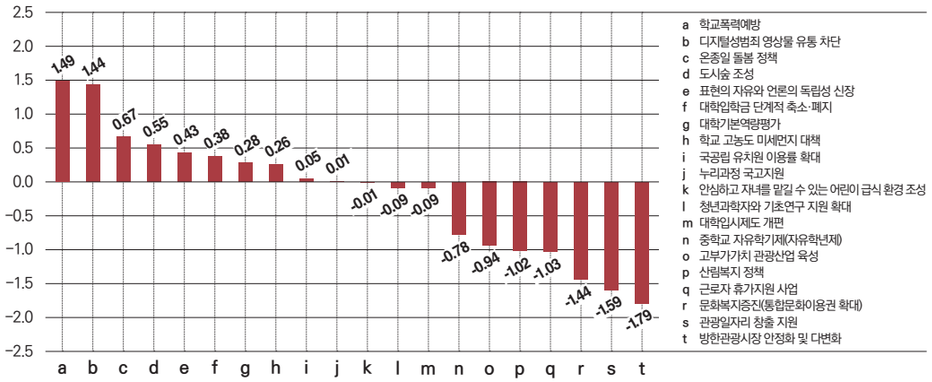
[그림 2-3] 교육문화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교육문화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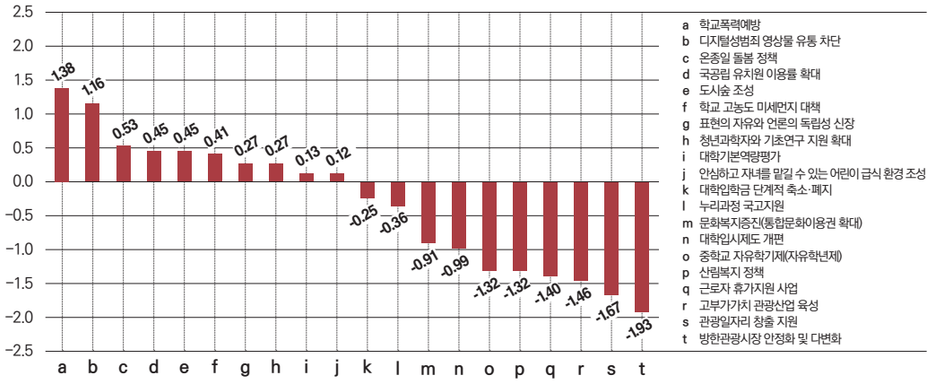


a 대학입시제도 개편
b 대학기본역량평가
c 학교폭력예방
d 누리과정 국고지원
e 중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f 온종일 돌봄 정책
g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h 대학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i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j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k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l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m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n 도시숲 조성
o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p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q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r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s 산림복지 정책
t 방한관광시장 안정화 및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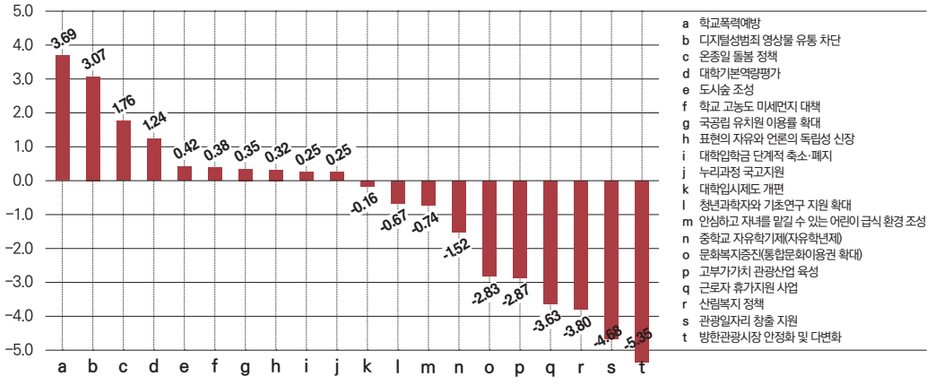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 영향력



교육문화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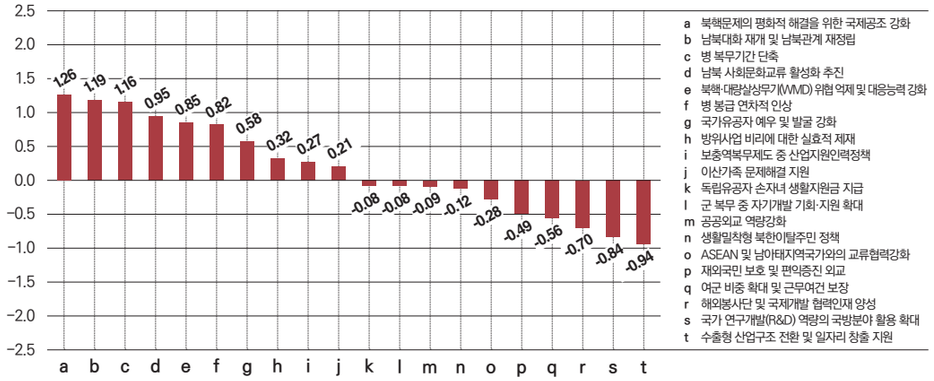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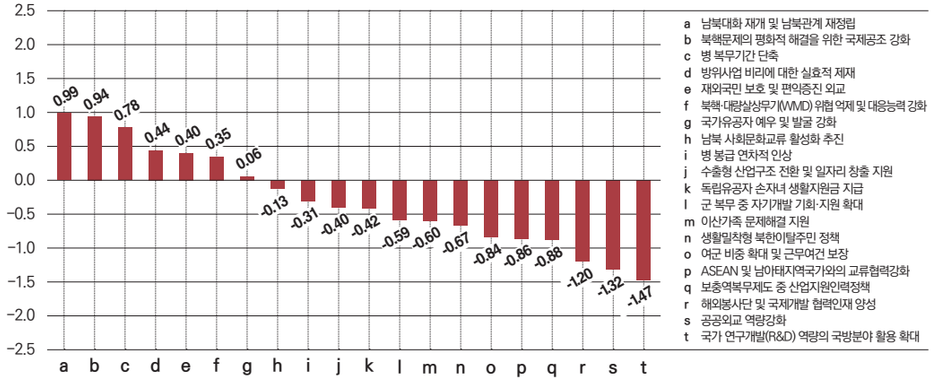


[그림 2-4] 외교안보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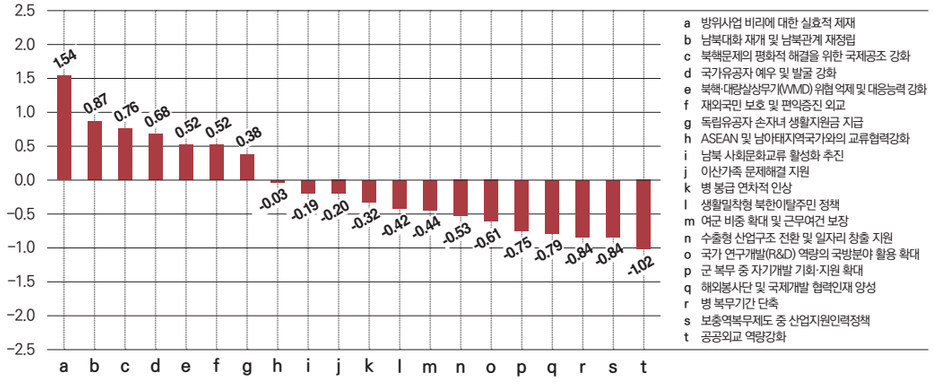
외교안보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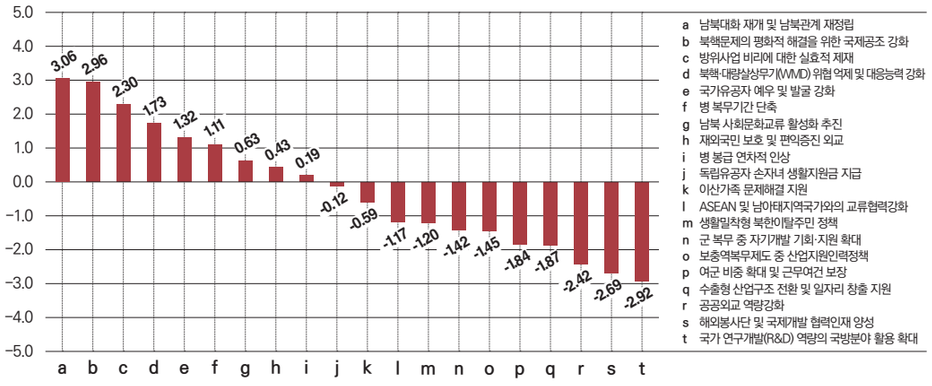
외교안보분야 : 영향력



외교안보분야 : 우선시행 여부



외교안보분야 : 합산점수



2)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 10개의 목록과 그 선정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다. 다만 경제분야의 경우 실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로 나누어 시행한 후 결과를 평균하여 순위를 매겼다.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2		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4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5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6		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7		다부처	소득주도성장
8		다부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9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10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선정 근거

경제팀의 최종리스트는 1차 설문조사 결과중 상위 10개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설문결과 상위 10개 정책 중 유일하게 제외된 정책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며(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유사한 성격), 그 대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3020이 포함되었다.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2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4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제도
5		소방청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6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7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9		인사혁신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10		행정안전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선정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최종 평가대상 정책 10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20개 정책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였다. 20개 정책 가운데 순위에 오른 10개 정책을 먼저 선정하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강화(인사혁신처)",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지진방재 개선대책(행정안전부)", "신속한 현장 도착 - 소방 출동로 확보강화 정책(소방청)",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약처)",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이렇게 사회안전분야 5개 정책과 복지여성식품분야 5개 정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사회안전분야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프로그램 위주의 정책들이고, 그럴 경우 특정 부처의 정책을 두 개 이상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지진방재 개선대책(행정안전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진방재대책 등의 재난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순위를 고려하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책은 11위에 해당하는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식약처)"였다. 이 정책은 생리대 성분검사 등의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평가대상의 유력한 후보 정책으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인구·복지와 연관된 정책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최종적으로 "아동수당 정책(보건복지부)"을 평가대상 후보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에 대해서 최대 72개월 간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은, 아동·인구·복지의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등의 정책도 거론이 되었지만, 이들 정책은 모두 경제분야의 평가대상 정책들과 부분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작년에 한번 평가를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특정 연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할 정책이 아니고, 특정 부처가 좌우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정책이 [표 2-6]의 10개이다.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2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
3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4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5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6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8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9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10		산림청	도시숲 조성

선정 근거

교육문화 분야의 최종 평가대상은 대부분 1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지나치게 교육부의 정책에 편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각급 교육과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정하였다. 대학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을 제외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포함하였다. 이중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재정부담 문제가 해소되어 제외하였으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을 통해 유아교육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급 교육과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은 대학기본역량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을 포함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정을 통해 2차 설문조사 결과로 제외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최종 평가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다.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2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3		국방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4		방위사업청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6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7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8		통일부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9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10		통일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선정 근거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최종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1차 평가, 즉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경우 국가의 안전과 존립 및 국익의 신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매년 중요 정책의 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외교안보정책의 중점이 두어졌고, 1차 평가결과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었다.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은 모두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차 설문조사에서의 점수가 상위 10개 정책에 해당하였으나 2차 평가대상 정책으로 선정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과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정책이 있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정책은 지난 2014년과 2017년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정책은 올해 더 시의성을 갖는 다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두 정책으로 대체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상위 10개 정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차 평가대상 정책으로 선정된 두 정책은 방위사업청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통일부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0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대상 정책 분야 : 경제정책분야 / 사회복지정책분야 / 교육문화정책분야 / 외교안보정책분야
분야별 각 10개씩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

1 | 경제정책분야 038
2 | 사회복지정책분야 046
3 | 교육문화정책분야 056
4 | 외교안보정책분야 064

1. 경제정책분야

1)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3)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7) 소득주도성장(다부처)
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9)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10)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2) 문재인 케어(국민의료비부담 경감)(보건복지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4)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8)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
2)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4) 학교폭력예방(교육부)
5)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6)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10) 도시숲 조성(산림청)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2)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1. 경제정책분야

1)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본 정책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근절 및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정책은 1)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2) 감독 및 법집행의 강화를 통해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는 물론 기존의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하도급계약, 유통계약, 대리점계약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맺어지는 대중소기업 거래구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 개선의 경우 계약관계 특성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선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인상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하도급분야 및 유통분야의 경우 대기업에게 유리한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협상력 저하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한 2차 협력사 협상력 제고(하도급분야), 납품업체 거래현황 및 거래조건 공시,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분석 및 공개 내실화(유통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전속구조 완화,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개선 독려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에서 제외, 중견기업에 맞는 협약평가기준 도입, 하위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을 대기업 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도급분야),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남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추진(유통분야),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및 상생협약 체결,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대기업이 보다 투명한 로열티 형태로 가맹금을 수취하도록 그 전환 정도를 협약 평가요소로 추가(대리점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이행 유인 제고 및 정책 이행의 실효성 제고가 시도되었다.

감독 및 법집행 역시 공정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도급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사례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대중소기업 당사자들의 협약이행의 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리점분야 및 유통분야의 경우 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안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이를 협약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 제품을 PB제품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의 단가인하 혹은 반품 등의 행위(하도급분야), TV 홈쇼핑 분야의 구두 발주,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의 불공정관행(유통분야), 그리고 일방적 영업지역 축소행위, 외식업종에서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강제(대리점분야) 등의 민원다발 사항에 대한 감독 강화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습득 비용의 감소를 통해 보다 손해배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시 및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본 정책은 2017년 8.2 대책, 가계부 대책 등의 후속조치와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과 금융 대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계획이다.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의 3.2% 중과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과 서울 및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의 공급을 통한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혜택 방안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의외에도 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40여개 지정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외에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밝혔다.

본 정책은 이렇듯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더불어 8.2대책의 신DTI와 DSR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후속조치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3)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본 정책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복지의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심의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공동체 및 사회 통합에 목표를 두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 27일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2022년까지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의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의 정비와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의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을 위해 저층 주거지에 생활인프라 정비 지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구도심에 지역 특화재생과 주변 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도심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과 기금 지원이 진행된다. 마지막 추진 전략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기반을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이다.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이 직접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여 현장중심 재생이 이루어질 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추진 전략의 골자이다. 또한 내몰림 예상지역의 상생계획 마련을 통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에 관한 계획도 수립되었다.

이러한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단계별 전략으로 2022년까지 지역 주도의 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위임하고 도시재정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뉴딜사업은 예산 총 50조(연 10조원)로 최대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적재원이 재정(연 2조원), 기금(연 4.9조원), 공기업(연 3조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정책 기반 마련을 통하여 뉴딜사업의 3대 추진 전략을 진행할 계획이다.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본 정책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2)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3)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4) 2017년 10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이라는 4가지 세부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서 DSR(Debt Service Ratio: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RTI(Rent to Interest)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을 도입하였다. DSR의 경우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2021년 말까지 은행 별 평균 DSR을 현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에서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RTI와 관련하여서는,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RTI 규제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 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 및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장하는 채권)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 분석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이상 징후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면담 등 실시하고 있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하였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보험권의 경우 2017년 45%에서 2018년 47.5%(은행), 2017년 30%에서 2018년 40%(보험권)로 목표비율을 상향했으며,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을 현행 수준보다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을 위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가 주택을 매각 후 임대거주 하면서 5년후 기존에 매각한 가격으로 자신이 매각한 주택을 재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 자본규제 역시 개편하였는데, 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가계대출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해 가계대출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중소금융의 경우 집단대출 편중 리스크 완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조정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보험권의 경우 은행권에 준하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체자산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본 정책의 목표는 가상통화의 실명거래를 통한 자금이동 투명성 제고하고 범죄 악용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당부 및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확인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 및 운영하여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 및 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본 정책은 노동시장·교육·산업의 구조적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과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18년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의 세 가지 큰 추진 과제는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독려, 그리고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이다.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정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중견기업이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과 5년간 소득세 면제(최대 연 150만원)가 보장된다. 또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과 교통이 열악한 산업 단지에 재직할 경우 매월 교통비 10만원 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 1명을 신규채용 할 시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주고 공공기관은 2018년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할 계획(2.3만 명→ 2.8만 명+α)을 밝혔다.

두 번째 정책으로서는 청년들의 창업자금과 사업 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서 청년 창업활성화를 독려하는 방침이다. 생활혁신 창업자와 기술혁신 창업자 선발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사업지원 바우처(연 1백만원·3년) 제공으로 특허, 회계, 노무, 세무 등 행정업무의 부담을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청년 창업기업은 법인, 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주고 민간주도 창업과 지방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시한다.

마지막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정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원과 해외취업과 창업, 장기 해외봉사단에 맞춤형 해외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7) 소득주도성장(다부처)

가계의 소득과 임금의 증가로 소비도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흐름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월: 174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율 상승과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이를 통한 임금격차의 축소 효과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18년 8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약 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해 추가부담을 감소화하고 고용감소를 방지하며 근로장려금(EITC)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평일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연장 근로 시간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12시간으로 한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실행 시기가 달라지고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든다. 그 외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2021.7.1~2022.12.31)으로 인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본 정책은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18년 2월 27일 규제정비종합계획을 공표하며 혁신과 민생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추진 계획을 가진다.

먼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입법화 추진(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등)을 통하여 신산업 규제특례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까지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확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역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추진계획은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선도사업의 핵심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혁파 제고의 필요성과 규제혁신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맞춤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다부처가 연합하여 미래신산업 규제 혁신으로서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 혁신, 에너지 신산업 혁신, 무인 이동체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기타 분야별 규제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본 정책은 이렇듯 위에 세 가지 큰 추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9)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본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2018년 5월 현재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이며, 신규설비 보급 목표(2018년, 1.7GW)의 84.1%만큼 달성하였다. 또한 보급 증대와 함께 기업 유휴부지 활용, 동반성장, 주민참여형 모델 등 다양한 민간의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창출하였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하여 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모멘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본 정책은 1)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2)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3)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4) 태양광 및 풍력 발전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한 대여 및 보급 사업 확대를 실시 중이며 A/S 전담업체 관리권역 세분화, 통합모니터링 등 설비 유지보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5개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소규모발전사업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수익 안정화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였다. 한편 농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수요조사(63MW, 640호) 후 농지 일시사용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 확정 후 11월중 착공식 개최 및 염해피해 간척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을 위한 농지법령을 개정하였다.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 15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고시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로 청정에너지 기반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이 주민 수익이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주민 지분참여에서 채권 펀드 형태로 주민 참여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초중고의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추진, 전국 산업단지 대상 태양광사업 확대방안 마련 등의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2018년 태양광 12개, 풍력 8개 등 450억 원 규모의 R&D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업들과 인프라가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으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베트남, UAE 등 기존 네트워크의 적극 활용을 통해 해외진출 협의제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에 따른 부작용해소 방책은 다음과 같다. 산지 등 환경 훼손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과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허가기준의 강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태양광을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 축소 등을 실시하였다. 입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허가신청 전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 후 발전사업허가가 나도록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 시, 지목 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로 하였으며, 발전사업허가권 및 설비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동일사업자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가족이 인접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현 동일사업자에 준하는 공급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가 정보 제공, 태양광 분양피해 상담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 개설, 발전사업 안내, 정부 보조금 사업 등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력계통 안내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지자체 인력 확충 추진 및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0)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개정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지목되었던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지난 3년 평균 수출량의 70%, 268만 톤까지 적용), ISDS 개선(투자자의 ISDS 남용 방지 등), 섬유원산지 기준(일부 원료에 대한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 등을 관철하였으며, 또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한국에 불리한 항목들은 제외되었다. 한편 이번 재협상으로 달성된 미국의 핵심적 이익사항으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연장(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연장),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까지(현행 25,000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2016-2020)하고 차기기준(2021-20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보완에 합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미 수입규제 조사 시 현지실사 절차규정 신설 등)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주요범죄의 대상이 되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여성대상 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라는 3가지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정책인 여성대상 폭력 근절에서 정부는 2018년 「여성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면서(5.17~8.24) 불법촬영 등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진행하였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은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공중화장실 등 38,957개소를 점검하고 불법촬영이 적발될 시 적극 수사,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을 검거하고 불법촬영물의 유통플랫폼을 수사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하여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객관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6.16~9.24)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였다.

두 번째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실종 대응 강화이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영유아 합동점검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6.15~6.30)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인권옹호단체의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시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6.20) 앞두고 장애인시설에 학대예방을 홍보, 관련 현장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강화는 실종자 신속발견을 위한 정책을 내실화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지문사전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지문사전등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 세부정책은 청소년 보호 정책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선도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6.1~6.30)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면담관리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수사부서간의 소년범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시기별 예방 활동을 전개, '학교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제작, 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명예경찰소년단-치안동아리 간 연계 활성화 등으로 또래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18.6)는 지난해('17.6)에 비해서 여성폭력 미검률이 3.9%에서 3.5%로 하락, 가정폭력 사건대응률이 32.9%에서 16.6%로 하락,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프로그램으로의 연계율이 16.3%에서 40.5%로 상승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주요 성과지표가 개선되었다.

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2017년 8월 9일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건강보험 정책이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였다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17~'22년)하겠다는 목적이어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비급여를 줄여 현재 60% 초반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2년까지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7.08.09.). 첫째, 본 정책을 통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둘째, '18년부터 선택진료는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본 정책을 통해서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되고,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도 10만 병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넷째,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섯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아래의 내용으로 추진·집행되고 있다. 향후 상급병실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며,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신생아 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3-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구분	시행시기	주요 내용
공통	'18.1월	-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8.4월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8.7월	- 상급병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노인	'17.10월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 → 10%) -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17.11월 '18.7월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18.1월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구분	시행시기	주요 내용
아동	'17.10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여성	'18.7월	-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장애인		-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2017.08.09.).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국민의료비경감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고 보다 합리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8.06.19.). '18년 7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은퇴자·실직자·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의 부담수준을 상향조정하며, 금융·임대소득 등 보수 이외의 고소득(연간 3,400만원 초과) 상위 1%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2만원(21%)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피부양자 및 보수 이외의 고소득 직장가입자 등 상위 1~2% 계층(84만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본 정책의 도입 및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빈곤율은 더욱 악화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의 문제는 신문지상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8월 앞으로 3년간의 '빈곤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년~'20년)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8.10.).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에 대한 사후적·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층의 삶을 책임"지는 "예방적·적극적 빈곤정책"이라고 소개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08.10.). 정부는 이를 통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그 결과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뉴시스, 2018.07.18.). 정부는 우선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하였고, 소득·재산 하위 70% 증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래의 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이다.

[표 3-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구분	시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1단계	2017.11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老-老-障-障 부양')된 경우
2단계	20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	20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4단계	2022.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08.10.).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러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20년까지 생계급여는 3.5만 명, 의료급여는 7만 명, 주거급여는 90만 명을 신규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며, '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 명, 의료급여 23만 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08.10.).

또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급여별 보장수준이 강화되었다. 올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오르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되었다. 생계급여는 1.16% 올랐으며, 이자소득 공제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다.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용품비 신규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역시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16만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더불어 정부는 올 9월부터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설정된 후,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25만 원) 2017년 7월 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2.22.).

향후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인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3] 기초연금 지원 금액

시기	'14.7월	'15.4월	'16.4월	'17.4월	'18.9월
지원 금액	20만원	20만2600원	20만4010원	20만6050원	25만원

출처: 보건복지부(2018.02.22.).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4)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9월부터 집행되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되고(가구소득 상위 10% 제외) 시행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는 2018년 현재 선정된 소득·재산 수준을 나타내며,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표 3-4] 2018년 아동수당제도 선정기준액

주요 결과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2018.05.14.).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며,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또한 7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합의 하에, 내년 9월부터는 만9세 미만 모든 가정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인 구조, 구급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자동차의 사고현장 골든타임의 확보이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서울연구원, 2017). 그러나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차 평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골든타임 도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뉴시스, 2018).

[표 3-5] 전국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2014-2017)

주요 결과	2014	2015	2016	2017
5분 도착률	61%	61.9%	58.8%	57%

출처: 뉴시스(2018). '소방차 골든타임 5분 도착' 광주 69.5%·전남 49.1%…전국 평균 55.6%.

특히 사고현장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 투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좁은 주택가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신호 시스템 개선, 국민 행동 변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2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공동주택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화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준비되었다. 이러한 개정 법률에 대한 홍보가 각종 언론, 미디어매체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 출동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 간 호환성 확보 및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2018년 상반기 기준 375개소 설치·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전국단위의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실시하여(분기별 1회) 국민들에게 양보요령을 체득할 기회를 확보해주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정책 세부계획을 통해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소방활동을 보장, 재난현장의 피해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하여 공급되지만 수익성 저하, 원료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국내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며, 이 경우 국민(환자)은 공급 안정성이 낮은 고가의 수입 대체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15년 4월 수입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카나마이신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자, 우선적으로 이 약을 사용해왔던 많은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이 치료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약품 공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의약품의 공급을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 대책은 전 세계적인 신종 전염병 발생과 지진이나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공중보건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이들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자급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 국민의 치료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이 정의되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필수의약품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 이루어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지정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2016년 처음으로 109개가 지정되고, 2017년 126개, 2018년 315개로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구축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국내 우수 제약사에 필수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치료기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판매금액은 차년도 생산에 다시 투입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시장 차원에서 공급하려는 제약사가 있을 경우 사업을 이관한다는 방침을 가진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과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 협의회'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국민 모두가 존엄과 성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위해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온전한 작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저항하는 혜화역 시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 및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17.11.29.),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02.27.) 그 결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2018년 3월 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07.03.). 이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상시 모니터링 구성을 하는 등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다. 디지털성범죄 방지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에 쓰이는 변형카메라를 수입 및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8)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과 공백을 막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2007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1일 4시간 이상의 영아 돌봄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놀이, 등·하원을 포함한 (일반)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 아동 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약 9만 5000명(이용 가구 기준 약 6만 5000가구)의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4년 사이 서비스 이용 아동은 약 1만 5000명(약 1만 가구)이 늘어났다.

[표 3-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용가정(가구)	54,362	57,687	61,221	63,546	65,000 (예상)
이용아동(명)	80,209	84,402	88,847	92,626	95,000 (예상)

출처: 여성가족부(2018). 내부 자료.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17)에 비해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서비스 이용요금(7,800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각 5% 포인트 확대되었으며, 시간제 서비스도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올 1월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이돌봄수당이 7,800원으로 지난해의 6,500원에 비해 20% 인상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31일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8.31.). 이 개선대책에는 이용자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근로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는 중위소득 60%(3인 기준 월 221만원) 이하 가정은 70~80%의 비용을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75%(월 282만원) 이하 가정까지 75~85%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월 443만원) 이하에서 150%(월 56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월 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가정이 연간 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대책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주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현행 시간당 급여 7,800원에서 내년에는 10,080원을 받게 되며, 월 100시간 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78만원에서 100만800원으로 급여가 상승하게 된다.

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과거와 달리 오늘날 공공부문은 성장의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인사의 '균형인사' 원칙이 효율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넘어서 공직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정책', '지역인재 채용제도', '이공계 채용제도', '저소득층 공직 진출제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펴왔고, 다양한 채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운영

하면서 공직 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 확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달성,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균형인사 정책이 개별 정책대상의 단기적 성과 달성에만 치중되어 있고 체계적인 목표나 전략 없이 추진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표 3-7]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2012-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용인원(명)	4,805	4,830	4,832	5,000	5,014	5,107
고용률(%)	3.27	3.29	3.26	3.41	3.44	3.47

출처: 인사혁신처(2018.7). 인사혁신통계연보.

[표 3-8]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2012-2017)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622,424	621,823	634,051	637,654	650,149	656,665
여성	299,539	299,101	310,860	315,290	323,575	329,808
남성	322,885	322,722	323,191	322,364	326,574	326,857
여성비율 (%)	48.1	48.1	49.0	49.4	49.8	50.2

출처: 인사혁신처(2017.6.; 2018.6.).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성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는 2017년 12월 29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2018년 7월 17일에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양성 평등 차원에서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현재 6.5%에서 2022년까지 10%로, 본부과장급의 비율은 14.7%에서 21%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 주요직위의 여성임용을 확대,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한다. 두 번째, 장애인 공직임용에 있어서 기회를 확대한다. 7·9급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4%에서 6.8%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 인정을 추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웹사이트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부서 가점 부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한다. 그 다음은, 지역인재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으로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채용목표비율 달성할 때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선발자 기본 교육시간, 연장,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공계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을 2022년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하여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국가인재DB 여성과학기술 인재정보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형 인재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분모집 적용시험을 현재 9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적용비율을 현재의 2%보다 확대한다.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 채용 정보도 제공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할 때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지적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지목하면서, 2018년 5월 3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해나가자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밝힌 7대 안전무시 관행의 목록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7대 세부과제는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참여를 통한 의견조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관행별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 활성화,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제도 개선에서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 및 이동 조치 강화,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적색 노면 표시), 과속운전 근절을 위한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처벌 강화, 산불 실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산불 위험시기 입산통제 강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 규제기준들이 정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안전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고위험 건설현장 순찰 강화, 산불 감시용 CCTV 및 감시초소 확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확대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한 신고·점검·단속 활성화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안전무시 관행 신고 및 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고용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직장·학교 안전교육 강화, 생활 속 국민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기별·테마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활동과정상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정책은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4년(2018~2021년)간 최소 2,600여 개 학급을 추가 신·증설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이상을 목표로 올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왔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유아교육 기관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저출산 제고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설 단계부터 유아 배치계획 분석 등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공립 유치원에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올해부터 추진하였으며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담 체계를 구축하여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이 적합한 지역·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등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 교실 또는 중·고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립 유치원 신설 및 학급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급 당 유아 수를 낮추는 등 과밀학급 개선하고 유아 공교육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수행 결과 올해 2018년 497개의 유치원 학급을 신설하였고 2019년 내 1,000개 학급 신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019년 약 2000억~2200억 원의 예산을 배분(news1, 2018)하여 3월 운영을 목표로 500개 학급을 설치했고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아를 모집할 것이라 밝혔다. 2019년 하반기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 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추가로 500개 학급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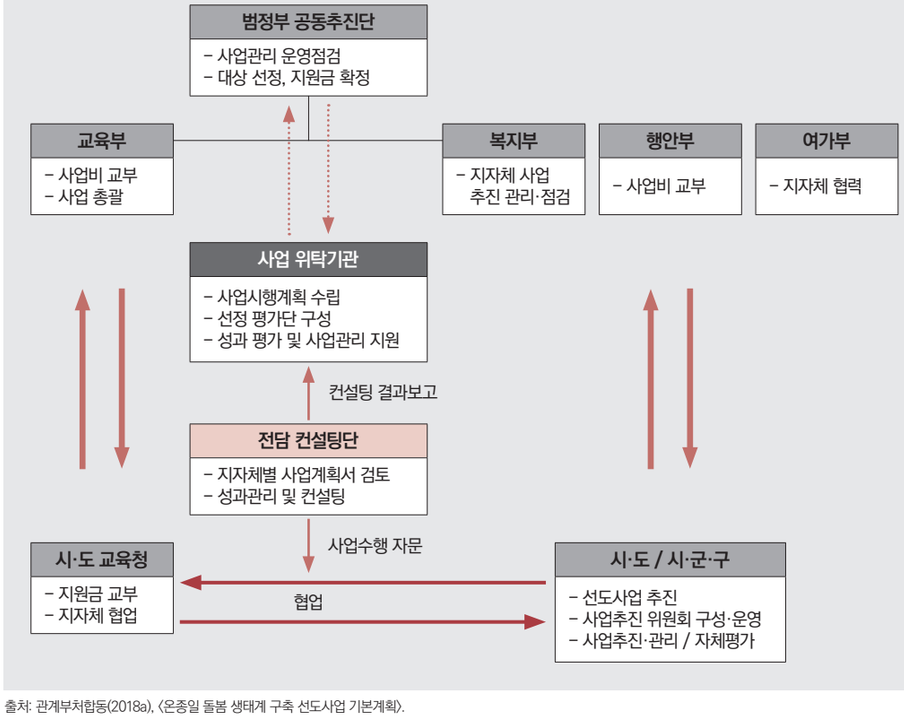
온종일 돌봄은 양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 지방, 돌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3대 과제와 중점 추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 2018a). 우선,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다. 지역사회 기반 온종일 돌봄의 모형을 개발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모델의 적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둘째, 기존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역량 제고이다. 초등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운영을 강화하고 틈새 돌봄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셋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정책 개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부처가 마련한 추진 전략에 따르면 1단계(2017~2018년)는 기반 조성기로서 돌봄체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2단계(2019~2020년)는 확대기로 돌봄체계의 확산 방안을 검증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3단계(2021년 이후)는 전면 시행기로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지자체별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여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선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b).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2022년 매년 700실의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18년 추경부터 210억 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표 3-9] 2018년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개소, %)

시도	초등학생수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이용 현황					2018년 추경 배분	
			누적교실수		이용학생수		대기자수	물량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서울	424,800	15.7	1,730	14.0	36,833	14.1	1,126	300	42.9
부산	152,775	5.6	584	4.7	12,749	4.9	89	7	1.0
대구	125,160	4.6	443	3.6	9,365	3.6	0	44	6.3
인천	158,871	5.9	571	4.6	12,290	4.7	554	1	0.1
광주	88,622	3.3	291	2.3	6,195	2.4	256	0	0.0
대전	83,453	3.1	399	3.2	8,119	3.1	294	1	0.1
울산	67,290	2.5	276	2.2	6,153	2.4	135	1	0.1
세종	24,865	0.9	145	1.2	2,945	1.1	0	6	0.9
경기	752,499	27.8	2,933	23.7	58,354	22.3	3,918	293	41.9
강원	75,412	2.8	542	4.4	11,083	4.2	768	20	2.9
충북	85,344	3.1	450	3.6	9,427	3.6	182	2	0.3
충남	120,152	4.4	744	6.0	15,595	6.0	353	3	0.4
전북	97,606	3.6	756	6.1	16,653	6.4	968	12	1.7
전남	94,134	3.5	656	5.3	14,258	5.5	564	0	0.0
경북	129,290	4.8	797	6.4	16.302	6.2	317	10	1.4
경남	191,016	7.0	896	7.2	20,340	7.8	415	0	0.0
제주	40,096	1.5	185	1.5	4,626	1.8	195	0	0.0
합계	2,711,385	100.0	12,398	100.0	261,287	100.0	10,134	700	100.0

자료: 교육부(2017, 2018) 자체조사, 단 초등학생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조사('18.4.1 기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그림 3-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 체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a),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세부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를 2020년까지 단계적 설치를 확대하며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 12,000개교에 우선 설치를 병행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학교 내 공기 질을 개선 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 실내체육시설 미설치 979교('17.6월 기준) 중 362교에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현장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완하고,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매년 2~3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PM 2.5) 기준을 추가 신설('18.3.27.)하고, 매년 정기검사를 하였다. 추가적으로 유아,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 마련 및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및 교육청 미세먼지 담당자의 교육·연수를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교육·홍보자료 또한 개발·보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9,539개 기관에서 37,474명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고, 유아의 경우 결석하더라도 유아 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4) 학교폭력예방(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문화 지원을 비전으로 세우고 3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8d). 첫째, 단위학교 맞춤형 예방교육 역량 강화로서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의 적용을 확대하고(2018년 9,000개교), 시도 및 단위학교 맞춤형 예방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며, 체험형 언어폭력 예방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언어문화개선 선도 학교를 2015년 100개교에서 2017년 2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학생 주도 또래활동 활성화를 위한 또래상담학교를 2014년 6,396개교에서 2018년 8,200개교로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로서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본–심화–심층의 3단계로 구조화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감정조절',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4개 역량의 총 16종 심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래활동을 교육과정 기반과 연계하여 2018년 상반기 초·중·고 3종의 기본프로그램과 2019년 3종의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UCC, 웹툰, 플래시몹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로서 정보윤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2015년 100개교에서 2018년 150개교로 확대하고, 2019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여 초등 3·4, 5·6학년, 중 1, 2학년,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거점 WEE센터와 현장 상담지원단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치유를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추진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방교육 우수사례와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시도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단위학교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교원연수(8,929명), 또래상담학교 지도교사(4,177명) 및 상담자(138,945명) 연수, 학교관리 및 책임교사 연수(22,348명)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이 5만 명(1.3%)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0.7%로 중학생(0.2%)과 고등학생(0.1%)에 비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교육부, 2018g2) 학교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5)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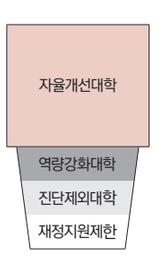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에

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교육부에 의하여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었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에게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재능을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을 통해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 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며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이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후에는 주로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정책의 결과로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시행으로 창의성, 자기 주도 학습능력 상승하였으며 다채로운 체험 행사 개발 및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전윤경, 2018).

6)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책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제2주기(2017~2019년)에 모든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 기존 제1주기 양적조정 중심의 획일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면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17d1). 이러한 진단 평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된다(교육부, 2018a).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도록 모든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고(대학혁신지원사업 I유형),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일부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며(대학혁신지원사업 II유형),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거나(재정지원제한 I유형) 전면 제한하게 된다(재정지원제한 II유형). 2018년 대학기본역량 평가 대상은 총 323개교(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이었으며, 이 중에서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가 자율개선대학, 20%인 66개교(일반대학 30, 전문대학 36)가 역량강화대학, 3%인 9개교(일반대학 4, 전문대학 5)가 재정지원제한 I유형, 3%인 11개교(일반대학 6, 전문대학 5)가 재정지원제한 II유형으로 지정되었다(교육부, 2018f, 2018g3). 재정지원의 차등화와 함께 평가 등급에 따라 2021학년도까지의 학생정원 감축 비율도 결정되었다. 자율개선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정원 감축이 권고되지 않으나,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10%(일반대학) 혹은 7%(전문대학)의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 15%(일반대학) 혹은 10%(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 35%(일반대학) 혹은 30%(전문대학)의 정원 감축이 각각 권고되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는 조치도 취해진다.

[표 3-10]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 구분		대학 수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	제외	지원* (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	감축 권고 실시	지원** (일부)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9%)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	I	4교	5교	9교(3%)				일부 제한
	II	6교	5교	11교(3%)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II유형
***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 일부 제한 검토
출처: 교육부(2018),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벤처육성 (2012년 시작), 관광두레 육성(2013년 시작),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2014년 시작), 관광일자리 센터(2018년 시작)를 추진하여 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벤처 육성을 통해 他 산업 융합, IT 접목 등을 통해 新 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외연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관광두레를 통해 지역별 관광 전문인력인 '관광두레 PD'를 선발하여 육성하고, 지역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창업 및 경영개선 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여왔다. 관광 일자리센터의 경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관광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상시 취업상담 및 현업인 멘토링, 취업특강 등 예비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해왔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경우 호텔업, 여행업 등 전통 관광 일자리 및 관광벤처 등 신유형 관광업체 참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해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400여 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및 약 1,400개 일자리 창출되었으며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공고·이력서 총 991건 등록, 취업컨설팅 304회, 취업특강 5회 실시(2018년 4월 말~6월 말)하였다. 특히 2017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는 1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320명이 취업하였다. 그리고 관광두레육성으로 지역관광에 기반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운영됨으로써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의 일자리 495개가 만들어졌다.

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우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하고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언론인 해직 재발 방지 방안의 마련과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추진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정보 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이사회 구성절차, 사장 선임 절차, 공영방송 운영 및 평가체계,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법제도,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의 구체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8a).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2007년에 도입된 임시조치제도가 인터넷 게시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격, 사생활, 명예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임시조치 기간 단축, 정보 게시자의 이의 제기권 신설,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등을 포함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8b).

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불법 영상물 대상 집중점검 및 긴급심의, 기술적 조치 적용 확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인터넷상 유통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여 왔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심의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확대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조기에 원천 차단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대폭 경감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 정보 DB의 보급을 확대하고,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등 기술적 조치의 고도화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였다. 추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유통 차단 활동을 제도화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심의를 법 제도로써 정착시키고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 일선 수사기관까지 심의요청이 가능하게 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삭제 등 실시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 수행 결과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웹하드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12,267건을 삭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2018).

10) 도시숲 조성(산림청)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산림복지 공간으로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조성 및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산림청, 2018a, 2018b). 도시 생활권에 다양한 유형의 숲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의 보호와 보건위생을 위해 공단, 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과 주변지역,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을 활용하는 생활환경숲, 도시지역의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산림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녹색쌈지숲은 87개소(58ha), 산림공원은 23개소(69ha), 생활환경숲은 72개소(85ha)에 조성되었다(산림청, 2018c).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은 사업 대상지를 사전 검토하여 부지 확보를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사업 실행에서 5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의 현장 책임관을 지정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비 부담금 등 보조금 사업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조성 사업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의 신규사업은 도시 내·외곽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숲 시범조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숲 조성,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도시숲 반영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신규 대상지를 발굴 및 확대하고 있다. 도시숲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종의 다양화, 안내표시판, 나무이름표 등을 신규 사업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도시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지관리원을 지자체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숲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녹화 기부와 참여 절차를 포함한 도시숲 매뉴얼과 도시숲 이용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예우정책과, 국립묘지정책과, 공훈관리과 및 공훈발굴과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훈을 기리고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국립호국원 의전단의 신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로의 승격,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 확대,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의 위문 확대 등을 그 추진내용으로 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의 경우 기존의 '투옥 등 사법적 제재 여부 중심'에서 '실질적 독립운동 활동 여부'로 개선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자료에 대한 국가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자와 행방불명자 외에도 유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위패로 봉안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추진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한 포상심사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을 하고도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장의전 및 장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정책으로 현대적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병사들의 전투임무에의 전념을 정책목표로 한다. 그 추진배경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병역자원 급여 등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의 의미와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군을 기준으로 2018.10.1. 전역자(2017.1.3.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2021.12.14. 전역자(2020.6.15. 입대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되며, 공군의 경우에는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과 핵WMD 전력과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통한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북핵·WMD 위협 고도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을 그 추진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는 선제공격 계획(Kill Chain)이고, 제2축은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계획(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이며, 제3축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응징하는 계획(대량응징보복·KMPR)이다. 또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북핵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며, 3축 체계 관련 전략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전력운영비는 2018년 29조 6,37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정책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와 절충교역과, 방산일자리과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능동형 수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책 내용은 절충교역 패러다임 전환, 수출품목 및 방식 다변화와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절충교역 제도를 '방위산업협력'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 쿼터제 등을 도입하여 국방산업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수출품목 및 방식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한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방산전시회에 적극적인 참가와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중고무기, 임대, 패키지 수출 등 구매국 맞춤형 수출방식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중고품 수출을 제도화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과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을 연계하여 방산 관련 우수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 정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며, 방위산업을 수출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업의 불황 탈피에 기여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분야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혁신 TF 등이 담당하는 정책으로 군·산업체간 유착 근절 및 비리 예방 대책을 고도화하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군수물자의 품질 결함 발생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군의 불만과 방위산업의 침체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비리와 부정의 근본 원인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에 그 배경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와 교육시스템 강화, 퇴직자의 방산업체 재취업 제한,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부여,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 등 국방기관 간 그리고 방사청-출연기관-방산업체 등 획득기관 간 협업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을 그 담당부서로 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여건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약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이나 2017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외교부, 2018). 북핵 문제는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다수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진퇴를 거듭해 온 문제이며, 외교정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주변국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에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또는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또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며, 교류의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책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담당 정책으로 국정과제인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2억 원으로 2017년 151억 원보다 약 19.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사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국민 위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정보 전파, 여행경보제도 운영, 여권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제도 운영, 해외안전여행 정보 문자서비스(SMS) 제공, 비로밍 여행객 대상 안전정보 제공, 위험지역 안전점검 활동, 영사콜센터 운영, 대형위난시 현장 대응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행정직원 확충, 영사협력원 제도 운영, 긴급구난활동비 제도 운영,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치안관계자 초청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책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는 정책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책은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문화·체육분야 협력사업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1991년부터 계속 시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약 12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는 2016년 약 23억 원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통일부, 2018). 무엇보다도 올해 초에 개최되었던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 및 응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재개 및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외에도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단일팀을 결성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북한 공연단의 방남 공연, '봄이 온다' 방북 공연이 성사되는 등 체육교류 외에도 다양한 사회 문화교류가 재개되었다.

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책은 통일부 산하 남북회담본부에서 담당하는 정책으로 국정전략인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과제이다. 이 정책으로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및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약 23억 원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많은 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우선,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회담이 2018년 재개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말 현재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 35회의 남북회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4월 성사된 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및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들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12월 공개된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기초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기본 목표로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연합뉴스, 2018.12.3.). 이 외에도 판문점 남북연락채널 재가동(1.3) 및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복원(7.1), 군통신선 정상화(7.16) 등 남북연락채널이 속속 복원 및 운용되고 있다.

한편, 남북대화의 재개로 남한은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6월 한반도 분단 이래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성사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연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2차 북미회담 개최까지 이루어내 이러한 답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

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 정책으로 남북 당국 간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구축하며, 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1991년부터 계속되어 온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초청행사의 횟수를 연 15회(2017년 5회)로 확대하고,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 횟수를 전년도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특히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유전자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교류경비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교류 주선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이에 2018년에는 이산가족문제해결 지원 및 교류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6년 16억, 2017년 60억 8,500만원에서 약 120억(119억 8,500만원)으로 약 59억 원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큰 예산 증가가 수반되었다.

04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모두 각기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다. 또한, 이들 정책들은 각기 다른 정책 주기(policy cycle)에 놓여 있으며, 그 효과성을 온전히 평가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도 물론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들을 평가할 때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대비효과로 인해 어떤 정책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각각의 정책에 대한 환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최근 일부 정책평가 분야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 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책 평가의 본래 목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 경제정책분야 072
2 | 사회복지정책분야 132
3 | 교육문화정책분야 198
4 | 외교안보정책분야 252

경제정책분야 평균점수는 2018년 2.9점으로 2017년 3.1점보다 하락하였으며, 그 수치가 정책평가가 시작된 5년간의 수치에서도(2014년의 3.0점, 2015년의 3.1점, 2016년 2.9점, 2017년 3.1점), 그 평가가 최하 수준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분야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평균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구조(3.5점)와 과정(3.5점) 측면의 점수가 내용(3.2점)과 결과(3.2점) 측면보다 높았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가중합산한 종합평가에 따르면 전체 10개 정책의 평균점수는 3.1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립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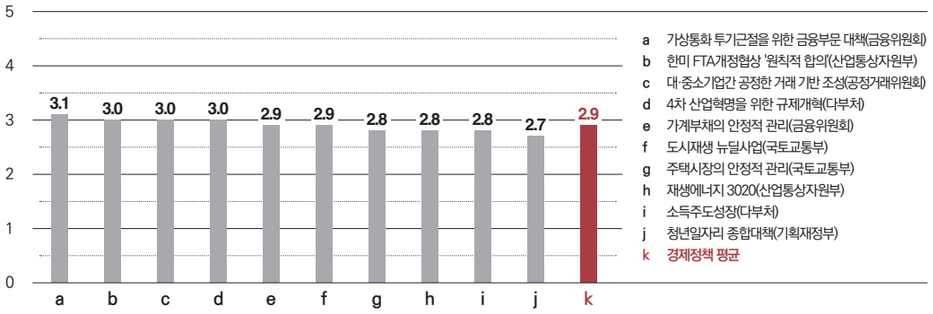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8년 3.4점으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점수를 비교해도(2014년 3.3점, 2015년 3.0점, 2016년 2.9점, 2017년 3.4점) 최고점에 해당하는 수치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경제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1] 경제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올해 경제 분야의 정책별 설문 종합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평가 대상이었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3.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 올 해는 6개 정책의 정책이 3.0 미만을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 전체 평균값도 2017년 3.1점에서 올해엔 2.9점으로 0.2점 하락하였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전반적인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면 올해엔 그러한 기대가 실업문제, 양극화문제 등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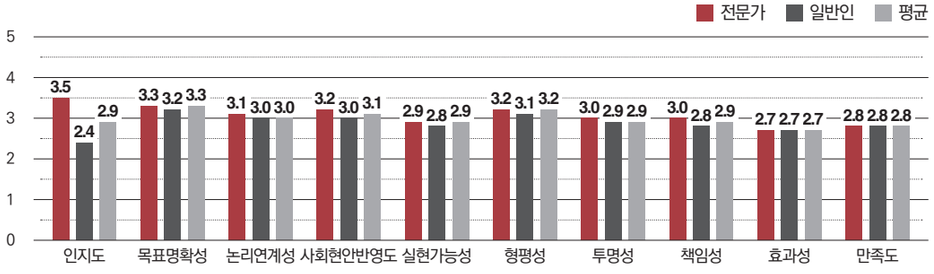
올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상통과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이다.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 열풍이었고, 투기성 가상통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던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경제분야 정책의 상위권에 랭크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같은 공정경제 관련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과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와 함께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재생에너지 3020과 같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경제 분야 정책 중 최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이들 최하위권 정책은 전문가 평가가 일반인 평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본 정책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가: 3.5, 일반인: 2.4). 이러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인지도 차이는 본 정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상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체감하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해 보이는 것이 일반인 사이의 낮은 인지도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목표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3.3, 일반인: 3.2).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다고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3.0). 지난 몇 년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의 '갑질'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일반인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2, 일반인: 3.0).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평가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8). 본 정책이 이미 여러 해 시행되었음에도 대중소기업관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한 결과에서 비롯한 회의감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형평성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3.2, 일반인: 3.1). 본 정책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중심 경제구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의견이 갈리었다(전문가: 3.2, 일반인: 2.9). 본 정책의 특성상 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수렴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대변하는 지점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는 본 정책의 책임성을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2.8).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지속과 이에 대한 미진한 처벌이 담당부처의 약한 책임성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이 일반인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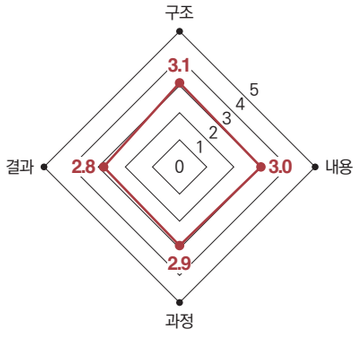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7, 일반인: 2.7). 상술했듯이 이미 여러 해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이 체감될 정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8, 일반인: 2.8). 따라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본 정책은 구조와 내용이라는 정책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결과와 과정이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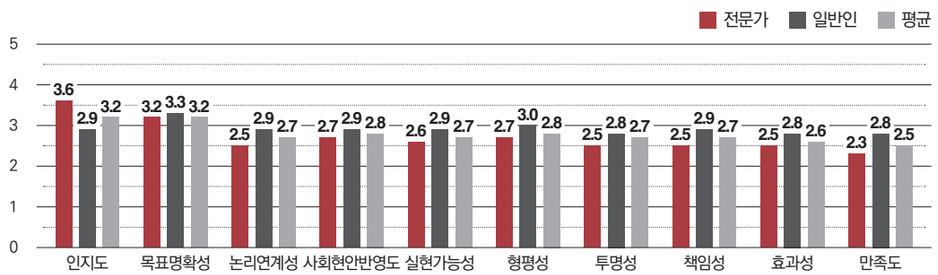
[그림 4-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책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전문가 3.6점, 일반인 2.9점).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본 정책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관심 있는 부동산 정책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답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2점과 3.3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다른 분야와 달리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견해가 가장 크게 엇갈리는 항목이 논리적 연계성이다. 일반인의 응답이 2.9점인 반면 전문가 응답은 2.5점으로 총 9개 평가 항목 중 만족도 다음으로 낮다. 이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대체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 역시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 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응답의 분포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32.3%, 부정적인 응답이 36.8%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전문가의 경우 26%대 50%로 부정적인 응답이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본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소득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대책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그만큼 부정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간극이 큰 항목 중 하나이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9점). 특히 전문가들은 긍정과 부정 답변 간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측면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이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하고 해석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0.3점 차이로 다른 항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전문가 2.7점, 일반인 3.0점),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인의 평가는 전체 10개 평가대상 정책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전문가의 평가는 7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인은 상위권으로 전문가는 하위권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본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대출규제로 중산층의 실질수요를 억누르는 등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은 다른 항목과 유사한 수준인 0.3점의 차이를 보인다(전문가 2.5점, 일반인 2.8점). 그러나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를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격차가 20%대 56%로 두 배 이상으로 일반인 집단의 격차 22%대 3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본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관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평가 격차가 0.4점으로 다른 항목 보다 높은 편이다(전문가 2.5점, 일반인 2.9점). 일반인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음),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54%(긍정 평가의 두 배 이상)로 가장 높다. 이는 본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전문가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에야 일정 부분 반영되는 등 의견수렴과 반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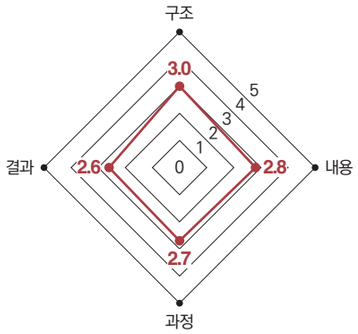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전문가와 일반인 간에 효과성 측면에서의 평가에도 0.3점의 차이가 존재한다(전문가 2.5점, 일반인 2.8점). 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본 항목의 점수는 만족도와 함께 9가지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본 정책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만족도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다. 전문가는 2.3점으로 9개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인은 2.8점으로 역시 9개 항목 중 가장 낮지만 전문가 평가와는 0.5점이라는 큰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전문가 응답에서는 부정 평가가 64%인 반면, 긍정평가가 불과 16%로 무려 네 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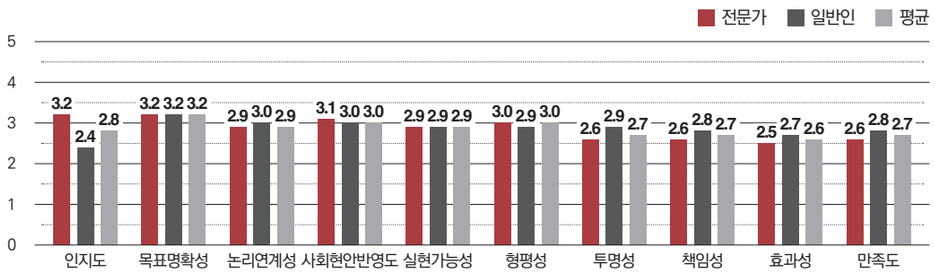
[그림 4-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대체로 폭넓게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 중에는 잘 모르는 응답자가 많은 편이다(전문가 3.2점, 일반인 2.4점). 특히 일반인 인지도는 경제분야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 해 10조씩 5년 간 50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이 정도로 낮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평가 대상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본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항목별 평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6]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거의 동일하게 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전문가 3.2점, 일반인 3.2점). 이 부분은 인지도 격차와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정책의 인지 유무와 상관없이 본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고 있어 드러난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2.9점, 일반인 3.0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긍정, 부정 응답 비율도 전문가 30% 대 18%, 일반인 31% 대 30%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 격차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의 반영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3.1점, 일반인 3.0점). 이는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 쪽이 월등히 높음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평가가 40%로 부정평가 3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본 정책은 전문가 2.9점 일반인 2.9점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응답 분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 다소 많은 점도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전문가 3.0점, 일반인 2.9점).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다만 긍정과 부정 응답 분포에 있어서 전문가에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높은 반면 일반인에서는 부정 응답이 다소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 집단의 의견이 다소 부정적으로 기운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요 낙후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상당 기간 제외되어 왔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응답 차이가 0.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9점).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은 44%로 긍정적인 의견 1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 측면에서의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의 차이는 0.2점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전문가 2.8점, 일반인 2.8점). 본 항목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 보다 다소 낮은 편이고 특히 부정적인 응답 분포가 34%로 긍정적인 응답 분포인 1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일반인 응답에서 긍정 부정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의 비판적인 시각이 확연히 더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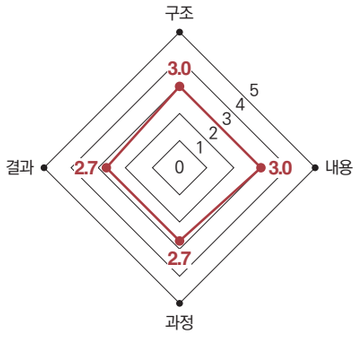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는 2.5점, 일반인 평가는 2.7점으로 두 집단 모두 9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고, 두 집단의 차이도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40%로 긍정적인 의견 1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일반인의 경우도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선 긍정 의견보다 부정 의견이 10% 이상 높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만족도 측면에서의 평가는 전문가 2.6점, 일반인 2.8점으로 효과성과 함께 9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제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결과가 아닌가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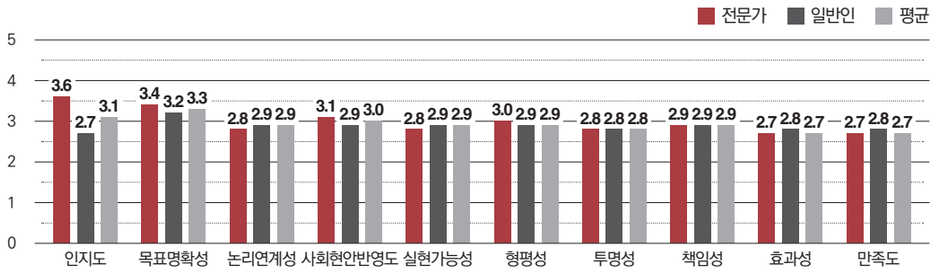
[그림 4-7]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본 정책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3.6, 일반인: 2.7). 상기 정책의 개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정책자체가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지식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동시에 본 정책의 목표 자체가 예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눈에 띄는 정책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큰 인지도 차이를 빚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4, 일반인: 3.2).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목표는 많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8, 일반인: 2.9). 이는 주택확보에 필수적인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본 정책의 목표가 주택난이 가중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 전문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2.9). 일반인의 부정적 평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어렵게 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8, 일반인: 2.9). 상술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정책이 의도한 순효과보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및 일반인의 염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보통으로, 일반인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전문가: 3.0, 일반인: 2.9). 본 정책이 예방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순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가계대출의 제한이라는 불편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이 일반인의 다소 부정적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8, 일반인: 2.8). 상술했듯이 가계대출의 축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역효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반인들이 배제된 채 금융권 당사자들만 포함되어 이루어진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9). 본 정책의 예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본 정책이 다소 역효과를 발생하더라도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본 정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본 정책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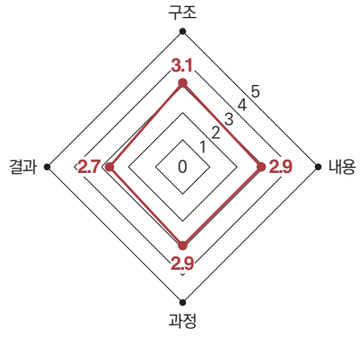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7, 일반인: 2.8). 상술했듯이 본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염려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만족도의 수준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7, 일반인: 2.8). 본 정책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제언은 아래의 항목에서 언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해보자면 본 정책은 구조, 내용 및 과정은 무난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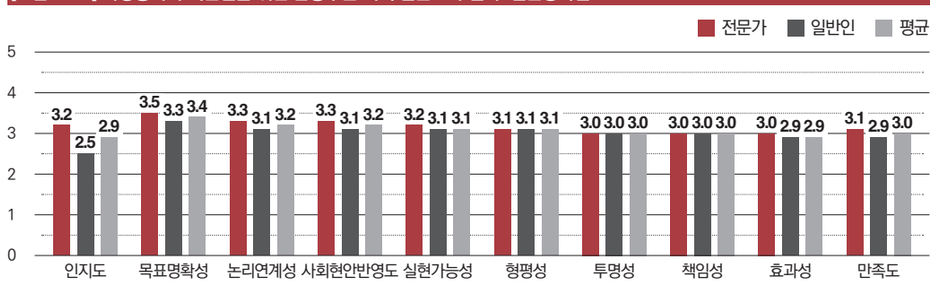
[그림 4-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본 정책은 전문가들에게는 비교적 보통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가: 3.2, 일반인: 2.5). 평균적으로 낮은 이러한 인지도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가상통화를 접한 계기가 최근에 불어 닥친 가상통화 투기 붐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듯하다. 이미 가상통화 투기가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정책의 존재를 유추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10]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목표가 보통 이상으로 명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5, 일반인: 3.3). 최근 불어 닥친 가상통화 투기 열풍을 통해 전문가 및 일반인 공히 가상통화 투기근절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3, 일반인: 3.1).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상통화 실명제와 가이드라인의 제공이라는 본 정책의 내용이 가상통화 투기근절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3, 일반인: 3.1). 최근의 가상통화 투기 열풍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 3.2, 일반인: 3.1). 과거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경험이 가상통화 실명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1, 일반인: 3.1). 투기의 이익은 소수가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3.0). 정책의 내용 자체가 큰 논란 없이 쉽게 합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투명성을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3.0). 본 연구의 경제분야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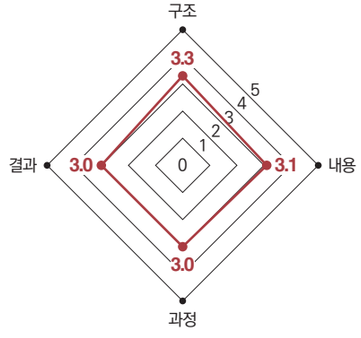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2.9). 본 연구의 경제분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가 모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의 부정적 견해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전문가는 보통 이상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일반인의 만족도는 보통에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3.1, 일반인: 2.9). 본 정책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제언은 아래의 항목에서 제시할 것이다.

본 정책은 구조와 내용의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서도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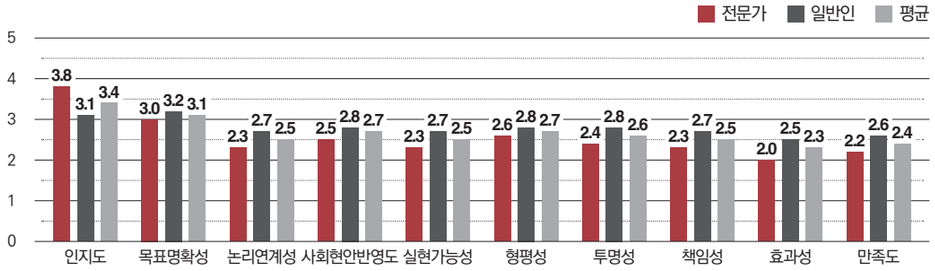
[그림 4-11]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청년 실업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본 정책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평가는 전 영역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4-12]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답변하고 있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2점). 특히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41%로 부정적인 답변 2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된 부분은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다. 전문가 2.3점, 일반인 2.7점으로 두 집단 모두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전문가 집단의 평가 대상인 10개 경제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중 가장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대안으로서 두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부정 평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의 평가는 다소 의외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점 이하로 그리 높지 않게 평가하였는데(전문가 2.5점, 일반인 2.8점)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중요한 사회현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거의 두 배에 달했는데, 이는 청년실업 문제 자체의 시급성을 낮게 평가한다기보다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처럼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서 생긴 본 정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도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에 비해 많이 낮은 영역이다(전문가 2.3점, 일반인 2.7점). 일반인 집단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지만, 전문가 집단의 경우 긍정 평가 12%, 부정 평가 42%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년일자리 대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중요 요소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도 전문가 2.6점, 일반인 2.8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형평성 측면에 대한 일반인 평가에서 본 정책은 10개 평가 대상 경제정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최하위권 이었으며, 특히 부정 평가가 44%로 긍정 평가 20%의 두 배가 넘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언가 상당한 잘못이 있음을 의미하며, 원점에서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는 2.4점, 일반인 평가는 2.8점으로 0.4점이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 14%에 비해 무려 4 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정책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이 훌쩍 넘는다는 것은 정책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 측면의 평가에서도 전문가는 2.3점, 일반인은 2.7점으로 0.4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가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12%로 부정 평가 68%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평가 대상이 되는 10개 경제 분야 정책 중 최하위에 위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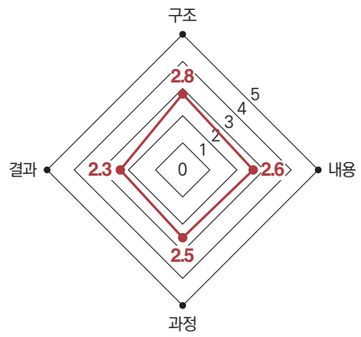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측면의 평가 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문가 2.0점, 일반인 2.5점으로 9개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응답에서 76%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데 반해 긍정적인 답변은 고작 4%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 차이는 다른 어느 분야 정책에서도 보기 힘든 큰 차이로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전문가 2.2점, 일반인 2.6점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대체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만족도는 전체 평가 대상인 10개 경제정책 중에서 소득수도성장과 함께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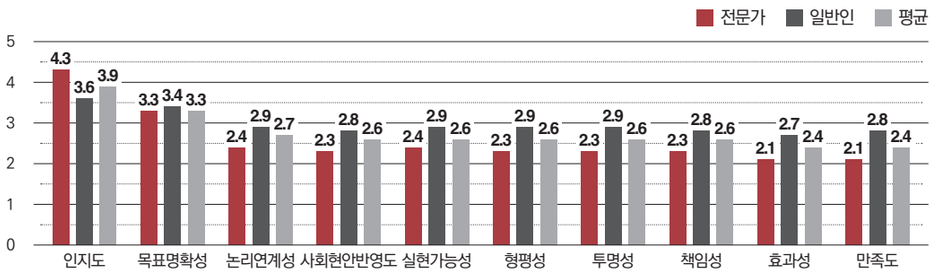
[그림 4-13]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정책이다.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도 높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중요도도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정책이기도 하다.

[그림 4-14] 소득주도성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평가 차이가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책목표의 명확성 면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전문가 3.3점, 일반인 3.4점). 본 정책은 명확하게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이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 이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 다만 일반인의 평가 점수가 전문가 집단 보다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 평가 점수 중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2.4점, 일반인 2.9점으로 0.5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양 집단 간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전문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논리적 연계성의 측면에선 평가 대상 10개 정책 중 최하위권으로(각각 10위, 9위) 평가 되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64%로 긍정적인 의견 18%에 비하여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도 전문가 2.3점, 일반인 2.8점으로 0.5점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역시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최하위이며,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비율이 각각 66%, 18%로 3배가 넘는다. 일반인의 긍정 평가는 32%로 전문가에 비해 많이 높은 편으로 정책을 통한 소득 증가의 기대가 아직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2.4, 일반인 2.9로 0.5점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긍정 64%와 부정 16%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만 일반인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 간에 근소한 차이로(35% 대 33%) 부정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2.3점으로 10개 평가 대상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인 집단에서도 최저점은 아니지만 하위권인 2.9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이 부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2.3점, 일반인 2.9점의 평가로 0.6점의 차이가 벌어졌다. 전문가 집단에선 10개 정책 중 최하위이고, 일반인 집단에선 하위권에 속하는 평가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평가 분포는 부정 평가가 64%, 긍정 평가가 22%로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 측면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 2.3점 일반인 2.8점으로 0.5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0.5점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앞의 여러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 분포를 보면 긍정과 부정 간에 3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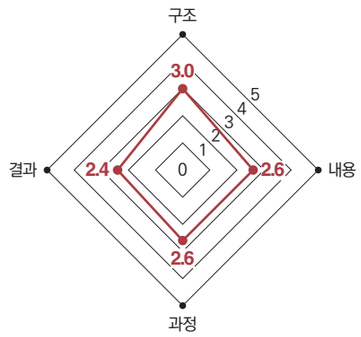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은 효과성과 만족도이다. 효과성은 전문가가 2.1점, 일반인 2.6점으로 0.6점 차이가 난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자그마치 78%로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은 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잘 보여준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만족도 부문에서는 전문가 2.1점, 일반인 2.8점으로 0.7점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9개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차이이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10개 평가대상 정책 중 최하위이며, 일반인 집단의 평가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전문가의 부정 평가 비율은 76%로 효과성과 함께 가장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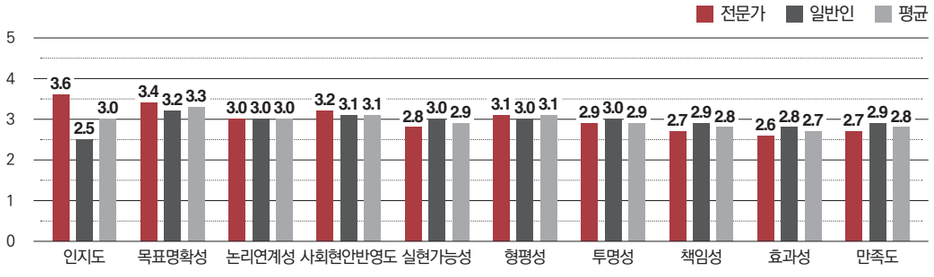
[그림 4-15] 소득주도성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은 전문가들에게는 친숙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정책이다. 전문가의 인지도가 3.6점인 반면 일반인의 인지도는 2.5점으로 1.1점의 차이가 난다. 1점 이상의 차이가 두 그룹 간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항목별 평가에서도 다른 정책들과 달리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인의 평가보다 높은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다.

[그림 4-1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 평가에서는 3.4점으로 상위권을 일반인 평가에서는 3.2점으로 중위권을 나타내었다.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규제개혁 이슈에 있어서는 관심이 높은 편이고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3.0점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 대상 정책 중 상위권의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34%로 부정적인 답변 2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편이다.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 평가가 대부분의 정책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이 3.2점, 일반인 집단이 3.1점으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는 44%로 10개의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 집단에서의 긍정평가는 32%로 전문가 집단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평가 대상 정책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의 항목들과 달리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전문가 2.8점, 일반인 3.0점). 이는 전문가들이 규제완화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 평가가 42%로 긍정 평가 2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3.1점, 일반인 3.0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평가가 40%로 부정 평가 28%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에서 본 정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2.9점, 일반인 3.0점으로 일반인의 평가가 다시 0.1점 높아졌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 평가가 34%로 긍정 평가 24%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전문가 2.7점, 일반인 2.9점). 이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답답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으나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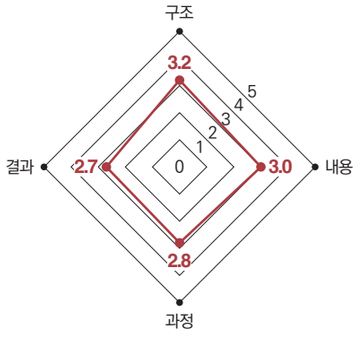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 전문가 2.6점, 일반인 2.8점으로 전문가의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부정 응답이 48%로 긍정 응답 14%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만족도 측면에서도 본 정책은 전문가 2.7점 일반인 2.9점으로 두 집단의 평가에 0.2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전문가의 부정 평가는 44%로 긍정 평가 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다른 항목에 비해 정책의 결과에 해당하는 효과성과 만족도가 전문가 집단에서 현저히 낮게 나온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개혁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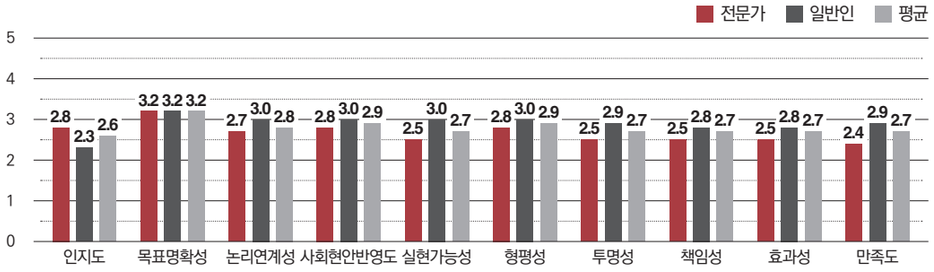
[그림 4-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재생에너지 3020

본 정책은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에게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2.8, 일반인: 2.3).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생소함과 회의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전히 많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및 화력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회의감이 존재하는 상황은 재생에너지 자체와 이를 육성하려는 정책에 대한 냉소적 무관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재생에너지 3020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보통 이상으로 본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평가하였다(전문가: 3.2, 일반인: 3.2).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고갈의 해결이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본 정책의 주목적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반면 일반인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 일반인: 3.0). 이러한 격차는 일반인들은 본 정책을 규범적인 기

준에서 평가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전문가: 2.8, 일반인: 3.0). 상술했듯이 이러한 격차는 전문가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 일반인들은 규범적 측면에서 평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5, 일반인: 3.0). 상술했듯이 일반인들은 본 정책을 규범적, 이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전문가는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8, 일반인: 3.0). 이러한 차이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구조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이해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2.5, 일반인: 2.9). 이는 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정책의 수혜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전문가: 2.5, 일반인: 2.8).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되었다는 인식과 이에 따른 향후 정권교체 같은 상황에서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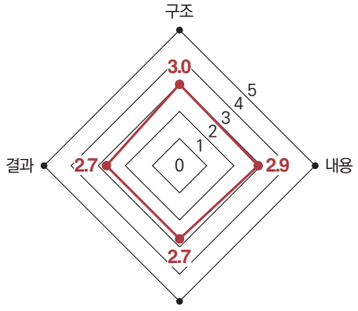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으며, 전문가가 더욱 비관적으로 바라고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5, 일반인: 2.8). 정책의 책임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본 정책이 그 예상되는 효과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지점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전문가의 만족도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문가: 2.4, 일반인: 2.9). 이는 전문가 수준에서 볼 때 정책의 결함이 다소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정책은 그 구조만 무난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나머지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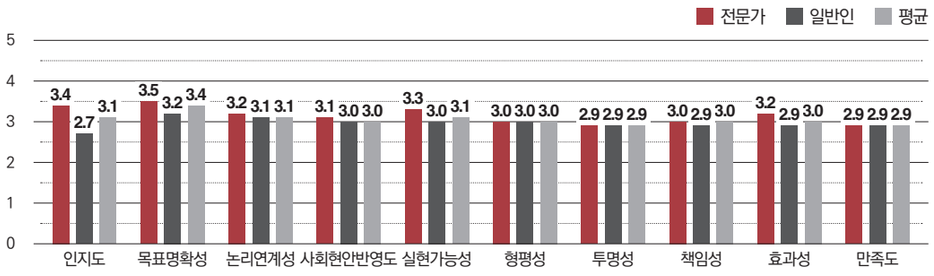
[그림 4-19] 재생에너지 3020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

본 정책의 인지도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통 이상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3.4, 일반인: 2.7). 이러한 예상보다 낮은 인지도는 본 정책이 아직 한미 FTA 개정협상의 공식적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9월 공식개정협상 타결이후 인지도는 본 연구에 조사된 인지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0]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목표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명확하다고 평가하였다(전문가: 3.5, 일반인: 3.2). 한미 FTA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본 정책의 목표는 매우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2, 일반인: 3.1). 본 항목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지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문가는 보통이상으로, 일반인은 보통수준으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평가하였으나 두 집단 사이의 큰 차이는 없다(전문가: 3.1, 일반인: 3.0). 한미 FTA 개정협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보통 이상으로, 일반인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3, 일반인: 3.0). 이미 타결된 재협상이며 국가 간 협정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0, 일반인: 3.0).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큰 타격이 없으며 동시에 농업 분야에 대한 타격도 없는 재협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전문가: 2.9, 일반인: 2.9). 이는 국가 간 협정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국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전문가: 3.0, 일반인: 2.9). 본 정책이 재협상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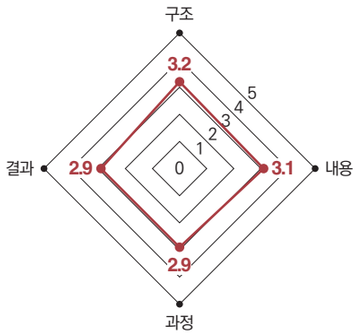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본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일반인은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전문가: 3.2, 일반인: 2.9). 상술했듯 본 정책 자체가 재협상이라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보통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한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전문가: 2.9, 일반인: 2.9).

본 정책은 모든 측면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그 구조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1]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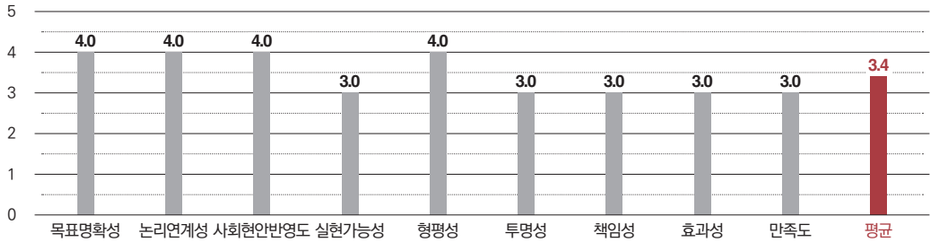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책별 정성평가 결과

(1)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전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9.9%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역시 90.2%에 달해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국한해 보았을 때에도 전체 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79.1%로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 본 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여 보다 건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본 정책의 거시적 목표는 명확하며, 특히 이러한 거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맺는 다양한 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적 정책목표를 설정한 점은 칭찬할 만한 점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원인으로 비대칭정보를 정확히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비대칭정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입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집합행동을 담합에서 제외한 정책 역시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이행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을 설정한 점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낮은 불균형한 구조,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의 소위 '갑질'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및 사회현안 반영도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본 연구는 유보적인 입장을 택한다.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할 정도로 공정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경험적 사실은 본 정책의 구조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다른 필수요소인 집행의지 및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의 수준을 저해하는 후생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 관행의 확립을 통해 사라지는 대기업의 이득 역시 대기업의 지대추구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집합행동을 담합행위에서 배제한 정책 역시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러한 담합에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비대칭정보의 해소 및 협상력 강화를 통해 증진할 수 있는 효율성이 더욱 큰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그 수혜집단과 손해집단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 집단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혜집단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참여는 칭찬할 만하지만, 피해집단인 대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옥의 티로 들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구조와 내용과 더불어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려는 집행의지가 본 정책의 책임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의지는 정책을 담당한 조직의 수장 및 실무담당자들의 의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자체가 집행자들의 개인적 변수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자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적 차원의 집행의지는 높아 보이지만, 본 정책의 제도적 자립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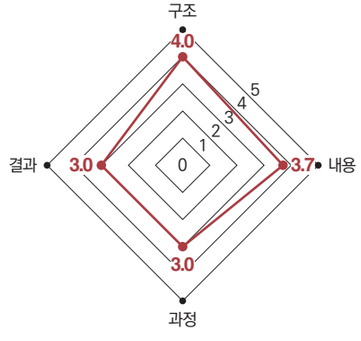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구조와 내용, 집행의지,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의도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의 최소 요구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대기업의 공정거래 확립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들은 역량의 최소요구치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여러 해 본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행의 확립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는 중립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중립적 평가를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자체의 완결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이 아직 체감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며, 정책의 과정 역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정책이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이 목표한 공정거래 기반의 확립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책의 집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적 평가가 온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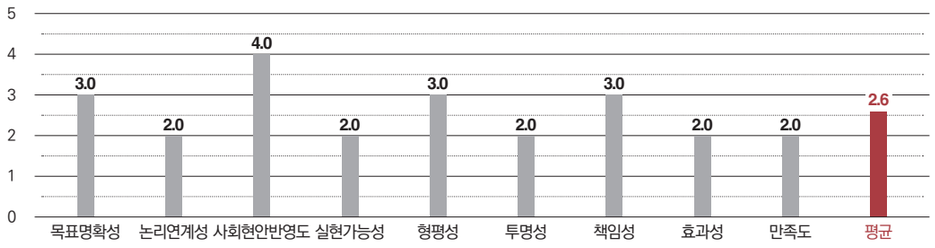
[그림 4-2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대책은 2017년에만 7회, 2018년에도 벌써 수회에 이른다. 가장 중요했던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책 수단을 최대한의 화력으로 총망라하고 있는 역대급의 규모와 강도이다. 주요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내 효과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9.13대책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4-24]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지는 다소 부정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결국 서민주거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결국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보다 궁극의 정책목표에 대한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지표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실제 정작 중요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을 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의 정책 초점은 수요(특히 투기수요) 억제에 맞추어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거의 배제하고 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재건축 시장을 옥죄고 있다. LTV와 DTI 기준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이더라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불안하자 최근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제공과 같은 공급 강화 정책도 내놓고 있다. 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정책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 실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득 증가로 높아진 눈높이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에서 입주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의 78%에 이른다(부동산 리얼투데이, 2017.9.15.). 최근 제시된 공급측면의 정책도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이 아닌 서울 외곽의 택지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주택문제는 민감한 이슈이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중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은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이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는 분명 본 정책이 중요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최근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세계 150개 주요 도시들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서울경제, 2018.5.13.).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2015-2016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중위권에 머물렀던 점에 비교하면 큰 변화이고(조선일보, 2017.5.27), 이는 최근의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감이 든다.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수요에 기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왔고, 그와 더불어 좀 더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왔다. 강남·강북을 망론하고 서울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는 바로 이와 같이 주거환경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각종 규제로 제한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서울 외곽의 공급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수요억제와 서울 외곽 공급 증가로 대표되는 국토부 정책보다는 오히려 도심의 용적률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 선호도가 높은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의 접근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언뜻 보기엔 부동산 가격 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금융규제를 들 수 있다. 대출금액이 LTV 40%로 묶인 상황에서 선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과 함께 수억 원의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호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현금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고소득계층에게만 돌아간다면 형평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만하다. 우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증대와 신규택지 확보 노력 등은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나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무주택자 우선권 제공 등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한 조세 강화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진행도 빠르고 그 과정 역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논란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 회의도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도 있다(매일경제, 2017.8.24.). 그러다 보니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에 있어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투명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흘러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미반영한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이다. 다행히도 정책 발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수용하여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본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문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점은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관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9.13 대책에 포함된 공급관리 강화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수요가 있는 도심의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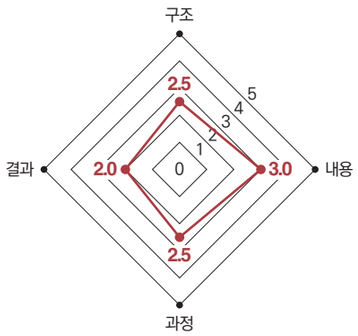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간 이 과정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최근엔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있다. 9.13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안정되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정상적인 시장안정이 아니다. 특히 청약시장의 과열 양상을 고려할 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 기조로 바뀔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내용도 복잡하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성격의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시장 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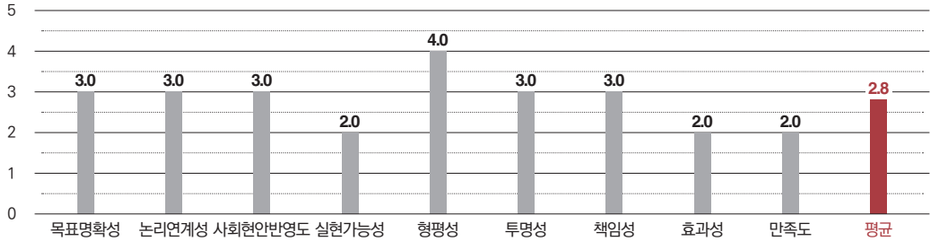
[그림 4-2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이라는 상이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은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자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서울의 중요 대상지역이 제외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책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정책의 상위 비젼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러나 보니 정책목표가 뚜렷한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은 일련 관련이 있어 보일 수도 있으나 각각이 독립된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뚜렷하다. 색깔과 성격이 너무 뚜렷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책은 그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전통적인 정책목표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은 다소 이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도시재생의 핵심은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복원이다. 주거복지의 향상은 건물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공동체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도시재생이 people vs. place의 논쟁에서 place 중심의 사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표방하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와 달리 주요 관심은 하드웨어에 맞추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래서 땅값부터 오른다. 그러다 보니 서울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아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일회성 지역 행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경실련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의 비중이 9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아일보, 2018.1.13.). 이 정도로 불균형한 투자 규모로는 기대한 효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성격의 사업이 중앙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일까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다. 정책의 성격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얹어 놓은 듯한 모양인데, 이는 결국 각 지자체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보다 적절한 사업임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낙후된 도심을 되살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주요 정책들에 비해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할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다른 주요정책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땅값, 집값부터 오른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 전체의 4분의3이 쇠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는 서울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주요 정책의 성과와 물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쉽지 않고, 이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투자 배분의 불균형성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하기 손쉬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을센터는 지어주지만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할지의 내용을 채우는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주요대상은 기본적으로 주요도시의 낙후지역이다.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촉진시켰던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경우도 지속가능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과 건설 관련 일자리들로 저소득층이 주요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뉴딜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의 성북구, 종로구 등 13개구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집값 평균 상승률 보다 높기 때문인데, 성북구, 종로구 안에서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이 즐비하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정릉동과 종로구의 창신동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각각 전체의 74.9% 72.2%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집값 오른 개발 지역 옆이라는 이유로 지원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는데, 이러한 신청 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2018.7.15).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정책 대상 지역과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폭넓게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간 50조원이라는 큰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선정 결과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매일경제는 규모가 커서 파급효과도 큰 알짜 사업지 중 58%는 여야 구분 없이 3선 이상급 중진 국회위원의 지역구에 속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매일경제, 2017.12.25.).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부정했지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형사업의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인 측면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실행되다 보니 지역과 밀착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사업의 70% 정도는 지방 수준에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사업비도 중앙과 지방 간에 5:5로 매칭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일수록 재정이 열악하고 따라서 50% 매칭을 할 여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구조 상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들 도시재생 기업들은 본 사업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현재 상황에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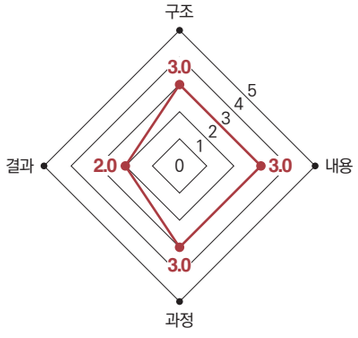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본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에 다소 부정적이다. 우선 마을공동체 만들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재임기간인 5년이 본 정책의 타임테이블이다. 그러다 보니 시간 오래 걸리고 손 많이 가는 소프트웨어 쪽의 내용 보다는 손쉽고 호흡이 짧은 하드웨어 쪽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표방하는 공동체 개발이라는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빠져 버리면 경기 부양을 위해 흔히 사용된 기존 건설 사업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안정 정책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 한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최근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정에 대한 염려로 인해 서울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정책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를 부수고 새로 만드는 개발의 관점이 아니라 보존하고 가꾸는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시대 도시 관리 패러다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최우선 정책의 대상이 되기엔 시급성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 정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보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서울이 부동산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정책의 만족도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살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지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를 무서워해서 피해간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 본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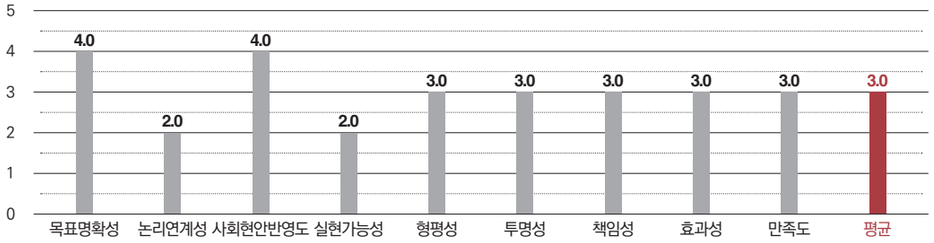
[그림 4-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본 정책의 순효과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가계대출 부담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낮아짐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은 동시에 여러 가지 역효과의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서민들의 자금난 가중 및 저축은행들의 경영악화 등을 역효과의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정책과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계 부처 간의 원활한 정책협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8]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증대한다는 정책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금리 변동은 물가 및 임금 등 거시경제 전체의 대부분의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성 증대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가계대출 규모의 규제를 정책의 목표로 삼은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위 정책목표의 명확성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대출규모 규제를 통해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칭찬할 수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르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高DSR 분류자 중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사실은 경기의 전반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영난의 악화, 이에 따른 서민 자금난의 가중으로 사설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증가 등의 위험성이 분명 존재한다(조선비즈, 2018.10.21).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위와 같은 정책대안의 다소 부정적 논리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총 규모가 이미 1,500조원에 도달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가계부채의 관리는 분명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과잉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음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정책은 예상되는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가계부채의 규모가 매우 높다는 현실의 상황은 다시 말해서 많은 서민들이 소득보다 빚이 많은 여건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민들이 사설 대부업체 또는 개인 간 대출에 쏠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더욱 불리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본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및 SLB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이 예측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및 高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는 학자금이나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득이 없는 은퇴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에 비해 과도한 대출특혜를 받는다고 지적되어온 전문직,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의 대출규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는 본 정책 자체가 일종의 고육지계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등 피해집단의 존재가 매우 명확히 존재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규모로 인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라는 정책의 방향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것이다. 본 정책 추진 시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별로 규제비율의 차등 적용한 점은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피해집단의 입장을 반영한 노력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상술하였듯 본 정책이 고육지계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본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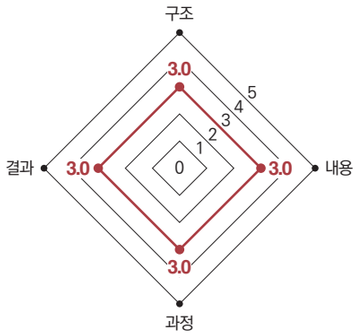
본 정책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DSR 비율 규제는 금년 10월 31일부로 실시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효과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이다. 물론 가계대출 규모의 감소라는 효과는 충분히 예상되지만, 본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는 상술한 역효과를 얼마나 최소화하는지에 달려있으며 이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항목의 평가는 중립적으로 내린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위의 만족도 사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본 정책 결과의 만족도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본 항목의 평가 역시 중립적으로 내린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본 정책의 구조, 내용, 및 과정의 측면 모두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역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결국 본 정책의 성공여부는 가계대출 규모의 감소라는 명시적 목표보다는 본 정책에 수반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최소화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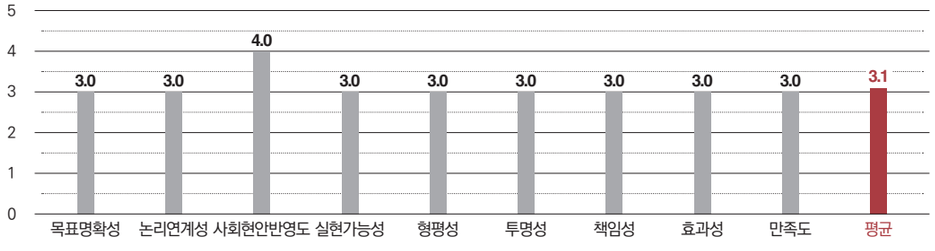
[그림 4-2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최근 불어 닥친 가상통화 투기열풍은 가상통화의 명과 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무엇보다도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사실은 가상통화를 통한 돈세탁, 범죄 악용, 피해구제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림 4-30]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그 목표를 무난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상통화의 투기 근절이라는 거시적 목표아래 가장 실현하기 용이하면서도 매우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실명제라는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는 세부목표 역시 가상통화 거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가상통화 거래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핵심 골자인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공은 가상통화 투기열풍을 이끌었던 두 가지 주된 요인인 익명계좌 및 자금흐름의 추적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무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불어 닥친 가상통화 열풍을 고려해본다면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이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투기근절 및 자금세탁방지라는 예방적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등장한 가상통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통화의 익명성과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상통화가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가상통화 거래자들 및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상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피해자는 일부 투기꾼과 가상통화를 범죄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인 반면 그 수혜자는 가상통화를 정상적인 가치축장 및 거래수단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형평성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정책의 수혜자가 대다수의 국민이라는 점과 기존의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학습하면서 거래실명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투명성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의 주체로 설정한 점은 본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집합행동의 문제 및 책임소재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염려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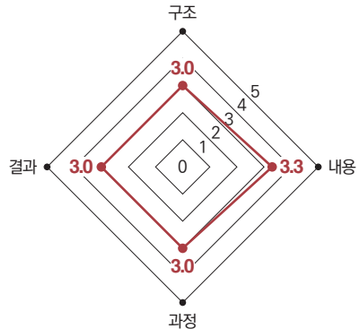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가상통화 투기근절대책의 발표 이후 가상통화 투기의 열풍이 사그라들었다는 점은 분명 본 정책이 투기근절에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 가치창출 수단으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직결된 만큼 가상통화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 결과의 만족도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의 효과성 항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상통화 근절이라는 정책의 명시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시장의 성장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라는 종합적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중립적 평가를 이끈 주된 요인이다.

위 항목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본 정책의 모든 측면이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통화 시장의 성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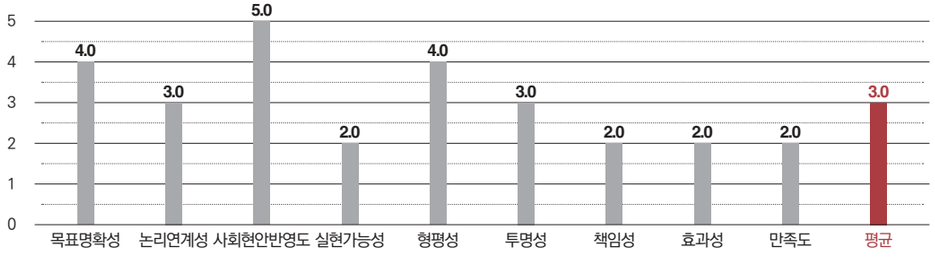
[그림 4-31]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청년 고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시장에서의 창업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완화라는 방향성은 뛰어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4-32]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과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대응을 통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이라는 상당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취업률,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의 성격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시의적절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소득 주거 자산형성 지원, 창업활성화 독려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창업활성화와 같이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시간은 걸리지만 교과서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은 기간과 상관없이 실효성이 다소 의심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이 정도의 지원으로 낮은 선호도가 바뀌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원 수혜기업의 청년 채용이 늘었다고는 하나 청년실업률은 외화위기급으로 역대 최고이다(뉴시스, 2018.9.12.). 이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수단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조급함은 지난 10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4만9천개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연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혁신성장 지원 대책은 규제혁신 등의 알맹이가 빠진 기존 대책의 재탕이고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는 질이 낮은 단기 알바 일자리들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하기 힘들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일자리 관련 언론 보도는 상당 부문이 청년실업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고용참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 문제들 중에서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연 최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률 문제는 정부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과 도시재생 정책에서의 사례와 같이 청년일자리와 다음에서 언급할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약한 청년층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고, 이는 바로 청년실업률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과연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청년소득 및 주거비 지원 등이 실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와 창업자금 및 창업서비스 지원이 미래 유망분야에 실제 일자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3년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의 여력을 만들어낼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주52시간 정책은 대기업에는 당장 적용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는 3년 후에나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짧아진 근로시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힘든 중요한 이유이다. 창업분야도 마찬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신산업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창업 자금과 서비스 지원이 얼마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본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성패는 결국 현재는 불협화음에 가까운 최저임금, 근로시간규제, 규제완화와 같은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본 정책과 잘 조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세대 간 비교에서 비교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 실업률 통계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 2년 간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18.9.12.). 이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청년층은 복지혜택도 적게 누리고 있다. 복지혜택의 세대 간 배분을 보면 유년기와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다. 중장년의 경우 생의 주기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므로 복지혜택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청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년기나 노년기와는 다르지만 상당한 취약성에 노출된 집단으로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들이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별 대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유투브를 통해 홍보하였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와 소통 수단으로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유투브를 활용한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jVGpmwfuzq8). 이러한 부분은 분명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만하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정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때로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보니 한편으론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두 가지 중요 내용 중 한쪽은 한시적인 임금보전 정책에 가깝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따라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정책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의 근무환경 개선보다는 임금보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차이도 있지만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더욱 중요한데 임금보전에 맞춰진 정책 초점이 지속적인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부분도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선 규제개혁과 함께 가야하는데, 이 부분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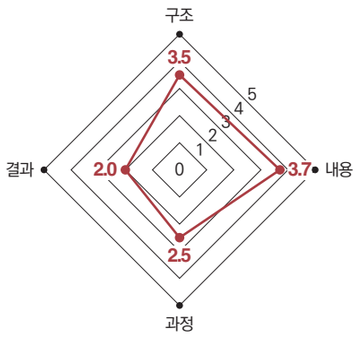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청년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임금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좀 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임금보전이 되더라도 여전히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데 당분간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대기업 보다 훨씬 길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택을 가능성은 여전히 그다지 높지 않고, 이는 실제로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로 나타났다.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공유경제를 활용해서 시작한 몇몇 청년 창업 기업은 관련 업계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201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대 창업은 불과 1.4%, 30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6%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창업은 중장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40대가 33.4%, 50대가 37%이다. 즉 청년 창업은 성공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창업숫자가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정책을 통해 얼마나 청년 실업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많은 경우 관련 정책들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와 같이 정책들 간에 이러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조율의 실패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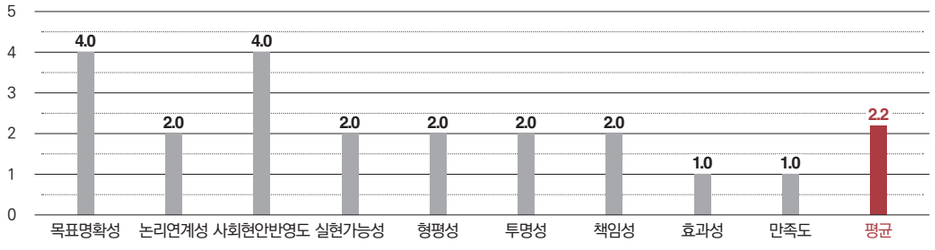
[그림 4-33]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착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기가 나쁜 정책은 없다.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림 4-34] 소득주도성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 시키면 이를 통해 생산증대와 성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분배와 소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가 성장인지 분배인지 명확치 않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안의 분배 담론은 성장이라고 하는 원래의 정책 목표를 희석시키고 있는 듯하며, 이로 인해 본 정책이 성장 정책인지 분배 정책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성장이라는 목표를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라는 분배적 성격의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국가경제의 흐름은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경제주체에게 분배되고, 이것이 소비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과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서는 경제주체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자극하면 생산증대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바로 시작점에 분배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 즉 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성장을 자극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선 중요한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전체 소득이 실제로 증가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수많은 실증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Newmark et al., 2014). 그리고 고용감소는 노동자 전체의 실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져 일자리 감소도 빠르게 나타날 경우 이는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도 정책수단으로서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어야 여가로 인해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든 소득은 여가시간이 늘어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성장과 분배는 모두 우리 경제에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그대로 두기엔 향후 우리 사회의 부담이 너무 크고 자칫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생산의 측면에서도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점차 식어가는 상황에서 본 정책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분배와 소득증대에 초점을 둔 본 정책은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효과성과는 별개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슈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성공하면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너무 멀다. 우선 최저임금인상은 성장은 물론 소득분배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 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는 임금을 통해 1차 분배되고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해 2차 분배된다. 최저임금인상은 1차 분배 과정에 작용하는 정책인데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는 2차 분배와 달리 어느 소득계층에 영향을 끼칠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1차 분배 과정은 고소득층 vs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vs 저소득층 간의 일종의 을들의 전쟁 상황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올 상반기 5개월 동안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도소매, 숙박음식점 일자리 3.4만개가 줄어들었다(서울경제, 2018.7.16.). 이는 최근 발표된 소득분배 현황에도 잘 드러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3분기 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로 벌어졌다(아시아투데이, 2018.11.22.).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하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소득주도성장이 분배라는 토끼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1차 분배가 아니라 증세를 통한 2차 분배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증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52시간 근무도 역시 을과 을의 경쟁에 가깝다. 줄어든 소득, 빨라진 퇴근시간은 기업의 외식문화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분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어 언뜻 보기엔 형평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1차 분배는 2차 분배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이의 크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누군가의 임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고소득층의 임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의도한 대로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로의 파이 이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파이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멍 난 공간을 메우기 위해 바로 옆의 돌을 빼서 사용하다 보니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를 위해 또 다른 저소득층 노동자가 희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거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연봉 1억이 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최저임금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주유원, 식당 종업원 등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는 또 다른 성격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3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 적용이 향후 3년 간 유예되는데 이는 중규모 이상 기업과 비교할 때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짐을 의미한다. 그렇잖아도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의 기피로 사람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벌어진 차이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도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초과근무나 잔업근무가 어려워져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의 인상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형상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경영계, 공익대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노조, 경영계, 공익대표 9명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노조대표와 경영계대표가 대립하고 결국 공익대표의 의사에 의해 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식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동 의사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익대표를 추천하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소득주도성장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라는 통계정의 발표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의도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올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20%의 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7% 감소했다. 이 정도면 정책 수정을 고려할 만도 하지만 어디서도 그럴 의향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을 사실이 아니라 신념에 기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200년 전 유럽의 의학은 미신에 가까웠다.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과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미신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의사들은 피가 오염되어 걸리는 병이 폐렴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결과 폐렴치료엔 오염된 피를 빼는 의도적 출혈이라는 처방이 널리 사용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치료로 목숨을 잃었다. 정책을 처방하는 정책결정자가 사실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이 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혹시 200년 전 유럽의 의사들이 범한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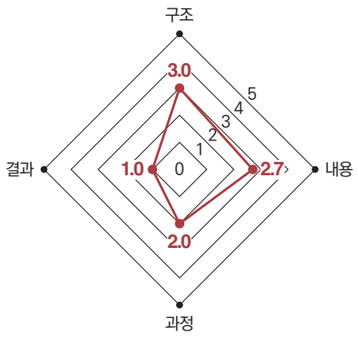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선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인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을과을 간의 일자리 전쟁과 자영업자 타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한 점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야간근무나 잔업 등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의 경우 수입이 오히려 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조치이기는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잡과 같은 행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투잡이 언급된 비율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한겨레, 2018.8.16). 본 정책의 효과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은 전반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증가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까지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정책이라도 의도까지 나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나쁜 정책도 의도는 순수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의도만 좋은 나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부터 버리고 귀를 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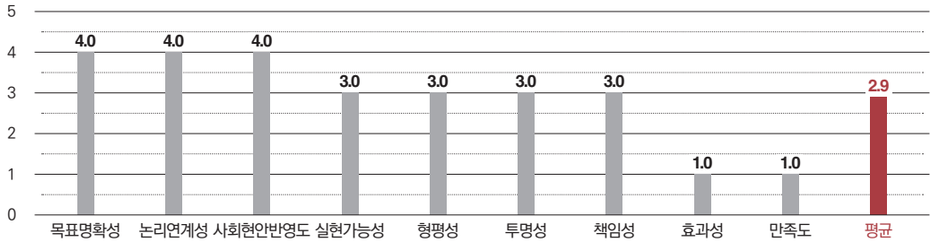
[그림 4-35] 소득주도성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의 규제개혁은 립서비스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기대하긴 아직 어렵다. 최근에 몇 가지 작은 규모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림 4-3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새로운 기술 및 산업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 방향성에 맞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분야는 기존의 틀에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기술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이 정보통신분야의 신산업 융합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 신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제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법령의 규제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법적 제도적 조치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최근에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언급된 법안 몇 개가 바뀐다고 해서 사전규제 중심의 우리 시스템이 창업과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전반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더디게 왔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이끌어 오던 굴뚝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조선의 거제와 울산, 자동차의 군산이 몰락해 가는 모습은 우리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국가경제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자유롭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을 끊임없이 reinvent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기술 혁명은 위기이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신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규제개혁을 통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꽃피우기 위해선 한 두 분야의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blind variation"인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활용될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에만 국한된 혹은 의료기술에만 국한된 규제완화만으로는 이러한 기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의 개발을 담아낼 수 없다. 최근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미미하게나마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들 수 있다. AI분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필요조건인데 그 동안 규제완화한다는 말만 많았지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에너지, 금융, 교통, 환경,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거미줄처럼 걸쳐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슘페터리안 경제의 핵심인 창업과 혁신, 신시장 발굴 등은 애초에 형평성과 거리가 먼 개념들이다. 창업과 혁신의 원동력은 새로운 제품을 통해 만들어지는 초과이윤에서 찾고 있으며, 초과이윤의 배분은 “winner takes it all”에 가깝기 때문이다. 창업과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은 따라서 이러한 조류에 올라 탄 사람들에게만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창업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이 지탱되기 힘들다. 산업의 라이프사이클 상 이제 우리 경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굴뚝 산업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새로운 먹거리의 발굴이 절실하다. 다음 세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먼저 고통을 겪을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을 보면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외부전문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것인지 형식적인 모양새 맞추기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 리스트를 39차례나 정부에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의 민원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 의료보건 분야의 규제혁신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은 지난 2년 간 차고도 넘친다. 최근의 규제개혁 3법 통과는 그나마 작은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신산업의 개발과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존 규제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쳐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제 영역에서 앞장서서 이를 조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서는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론에는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뒤로 물러선다. 현 정부 뿐 아니라 과거정부들에서도 규제혁신은 항상 중요 이슈 중 하나였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공유경제 분야의 신생 스타트업들이 불법 판정을 받아 영업을 접고 국가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나오고 있지 못하며, 그런데도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공론화 실적은 제로라는 점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한국경제, 2018.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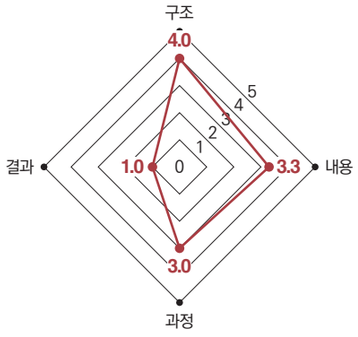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수요자인 기업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부분이다. 기업들이 39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해도 제대로 반영되어 규제가 풀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브릿지경제, 2018.11.12.). 규제혁신 관련 3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혁신은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혁신 분야에서 무서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제의 기본 틀이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이기 때문이다. 규제혁신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부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은 필연적으로 winner와 loser를 만들어 낸다. 새로운 혁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공유경제 분야기 대표적인 예인데, 승차공유 분야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와의 갈등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규제인 주52시간 근무제는 모든 경제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되는데, 이는 벤처 창업 분야의 특성과 직무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규제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벤처 창업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고, 그러다보니 이렇다 할 성과도 없다. 최근에 중요한 규제혁신 관련 3법이 통과 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창업과 혁신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창업과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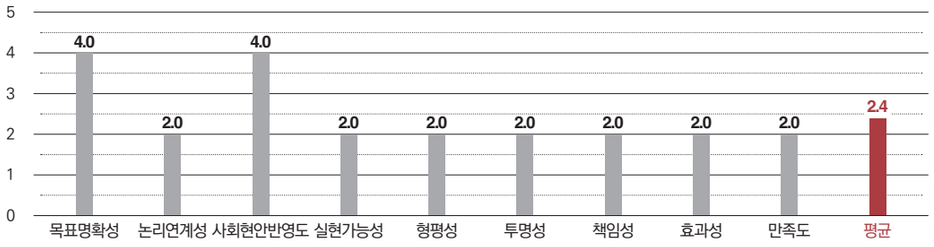
[그림 4-3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재생에너지 3020

화력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생산구조는 환경오염, 화석연료의 고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 등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생산구조로의 궁극적인 변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에너지생산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환은 변환과정에서의 단계별 최적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에너지 생산구조 변환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38] 재생에너지 3020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기존의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생산구조로의 변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위해 수립된 세부 목표 역시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가 명확하다고 해서 그 논리적 연계성의 우수함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본 정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진 변환이 현재의 기술 및 기후, 지형적 제약 속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라는 결과

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래 이슈를 사회 전면으로 부상시켜 정책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규범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라는 명시적 목표의 실현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생산구조로의 변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고려해본다면 명시적인 발전량 비율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물론 본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R&D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연 여건상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정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방안과 더불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 역시 필수적이지만 본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그 수혜집단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낮은 현실의 상황에서 과연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 정책 추진에 투입되는 비용을 능가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원자력과 화력 등 기존 에너지생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집단들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형평성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역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보다는 현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본 정책의 도입을 추동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일리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본 정책이 현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채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그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집권세력이 교체될 경우 본 정책의 추진이 중단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재생에너지 자체의 높은 효율성과 기존 에너지생산원을 대체해야 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현실의 상황에서 본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스레 본 정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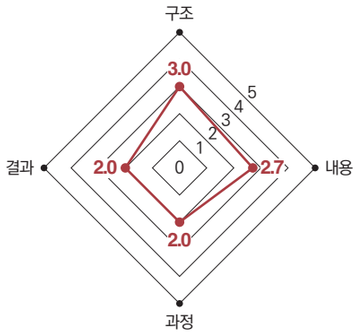
본 항목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정책의 명시적 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견인의 근본적 목표인 재생에너지를 통한 효율적 에너지생산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본 정책 결과의 만족도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래 이슈를 사회 전면으로 부상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통계적 수치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상술한 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본 정책은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목표는 명확하고 그 방향성도 맞지만 과연 현 기술적 상황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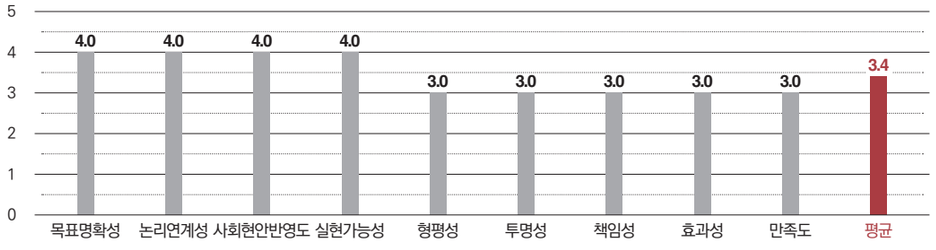
[그림 4-39] 재생에너지 3020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대미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FTA 개정 협상의 결과가 한국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정책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결국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자연스레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림 4-40]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한미 FTA를 개정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핵심적 관심사항을 관철함으로써 한국 경제전반에 끼칠 순영향을 최대화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또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하고 일정 부분 미국에 양보한 측면도 분명 있지만, 이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기본적으로 주고받기 구조의 협상이라는 특성에서 불가피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대미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한중관계, 미중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라는 다양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결속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는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진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본 정책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미국측이 명분을, 한국측이 실리를 얻음으로써 본 협정의 결과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 집단 및 정치세력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중립적인 평가는 기존의 한미 무역협정결과에 비해서 금번 재협상의 결과에 따른 수혜집단이나 피해집단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이 기 존재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집단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정책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본 정책의 투명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함이 온당하다고 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역시 기 존재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정책의 책임성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노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금번의 재협상이 미국 국내정치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미국 또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의해 또 다시 재협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에서 비롯된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번 재협상의 결과를 지지하는 세력을 양국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정책의 책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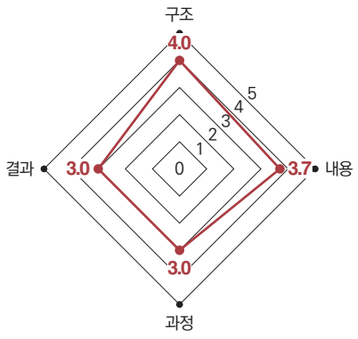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 평가의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통해 특히 새로이 얻은 것도, 그렇다고 잃은 것도 없는 현상유지의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만족도

위의 효과성 항목에서 언급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본 정책의 만족도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함이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종합해보자면, 본 정책은 구조,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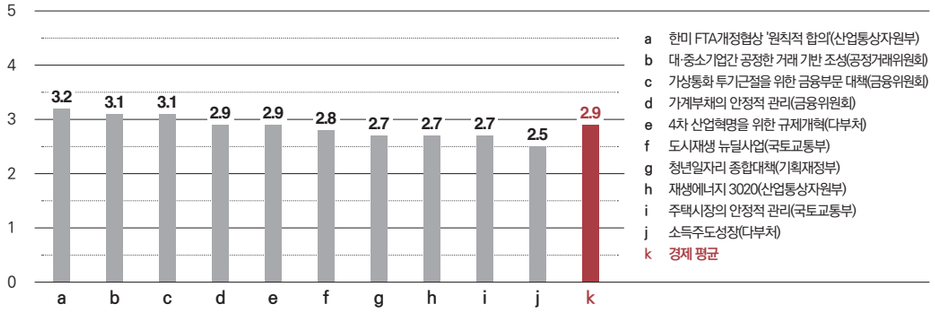
[그림 4-41]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의 관행이 체감될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책자체의 완결성과와는 별개로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이해의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책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큰 틀의 목표에는 공감하나, 과연 강력한 수요억제책 만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에 공급 측면의 정책수단이 추가되긴 했지만 시장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은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공동체 복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발과의 밸런스를 추구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원래 의도한 만큼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이 아쉽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의 충돌로 서울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은 가계부채 총 규모가 1,500조 원을 돌파한 작금의 상황에서 거시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서민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등의 심각한 역효과가 예측되는 바, 이러한 역효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본 정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은 새로운 거래 및 저축수단으로 등장한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기근절이라는 수동적인 규제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상통화 시장의 성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원천기술의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단기적 제한적 처방으로 얼마나 청년실업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증가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경제이론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정책이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시도해봄직하다. 그러나 소득분배 데이터는 오히려 지난 2년 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증대라는 중간목표로서의 지향점은 유지하더라도 정책수단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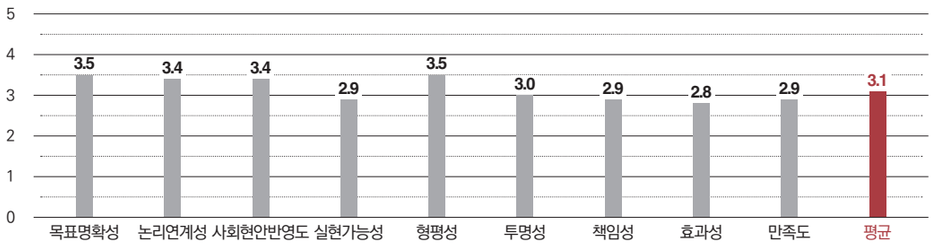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다. 최근까지의 규제개혁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으며 최근 국회를 통화한 정보통신융합법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한 두 분야의 제한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되어야 원래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생산구조를 변환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반 기술발전수준에 대한 고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패턴 수립에 대한 노력,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로의 변환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채 단순한 양적 성과 중심의 정책수립 및 이행은 본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부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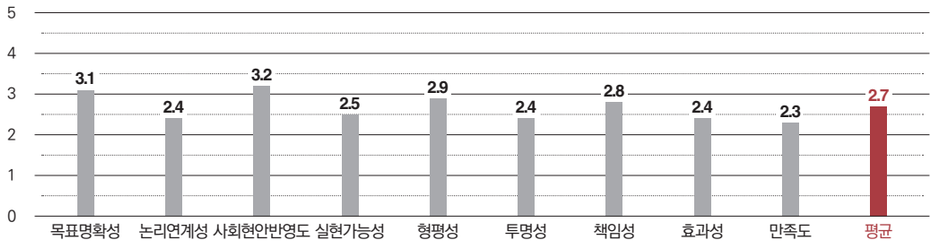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에서는 내줘야 할 것은 내주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킨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었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우리 자동차업계가 비교열위에 있는 픽업트럭 분야에 대해 양보를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면제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로 보인다. 다만 개정협상에 따라 예측되는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서 본 협정과 기타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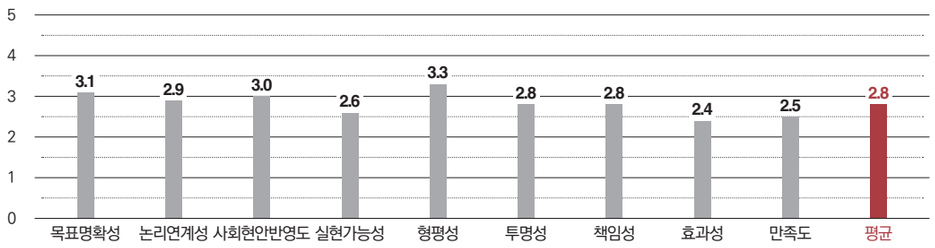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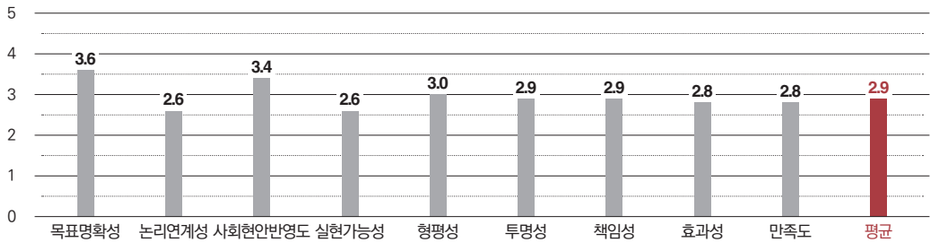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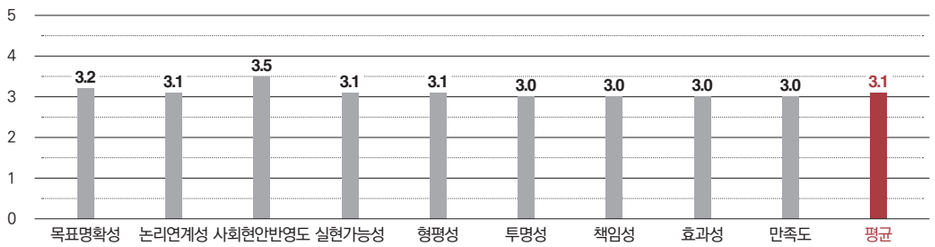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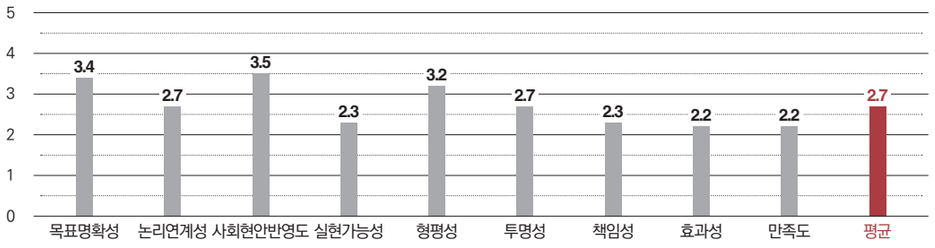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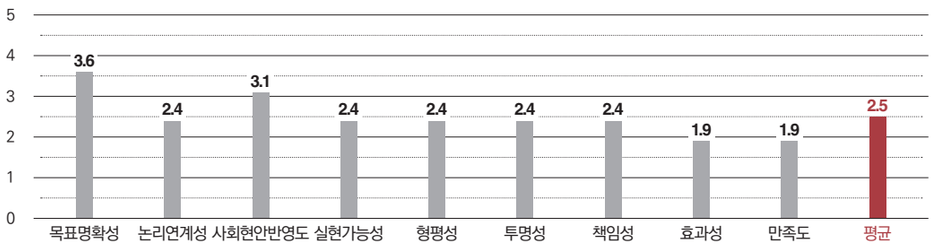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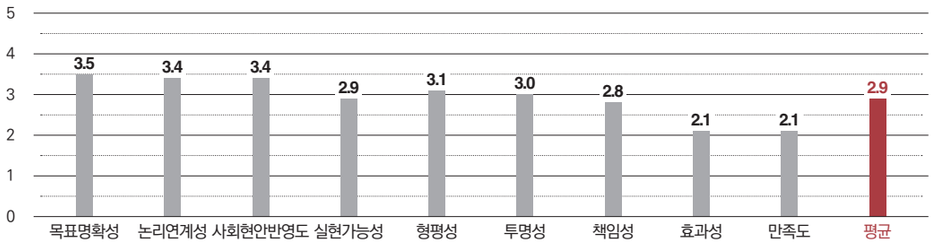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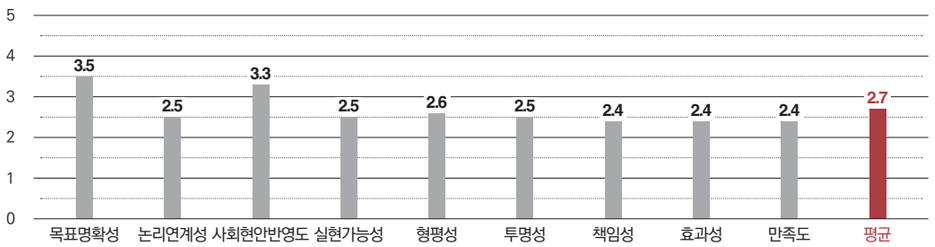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다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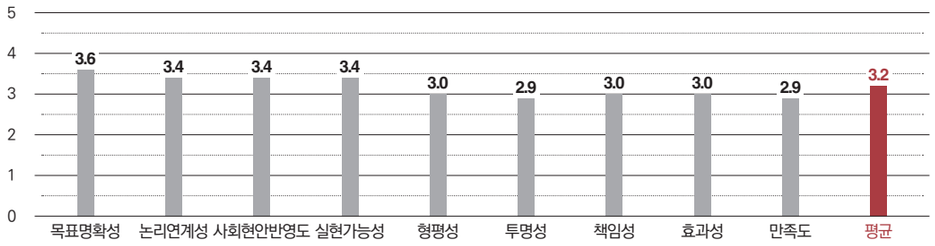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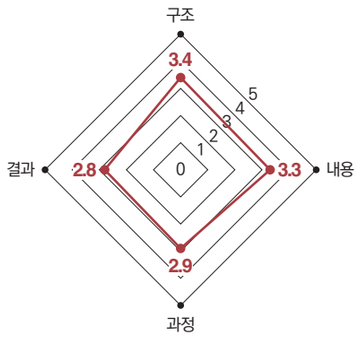


한미 FTA개정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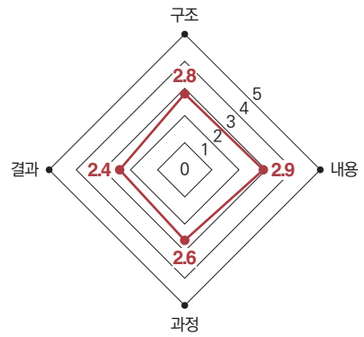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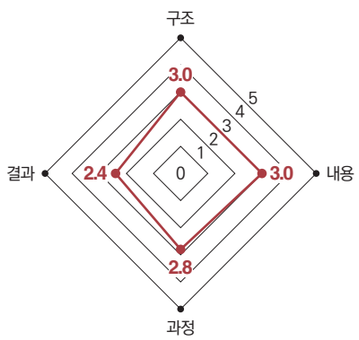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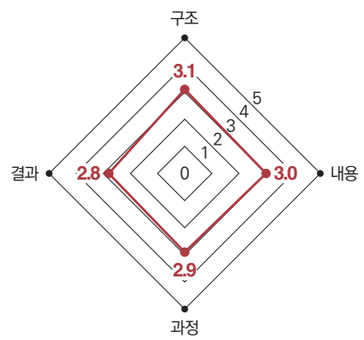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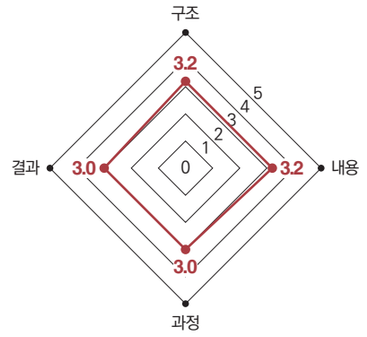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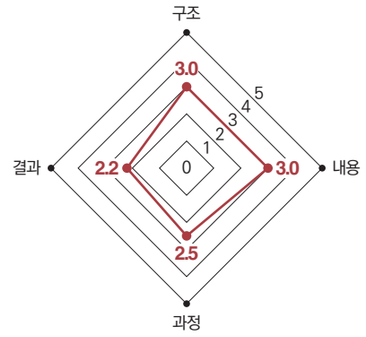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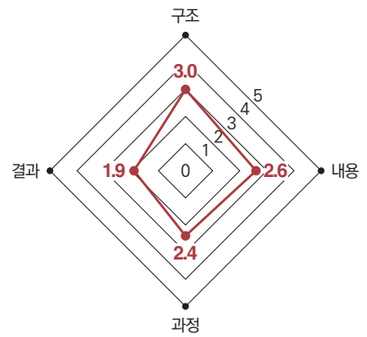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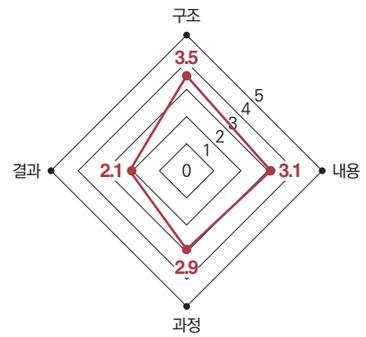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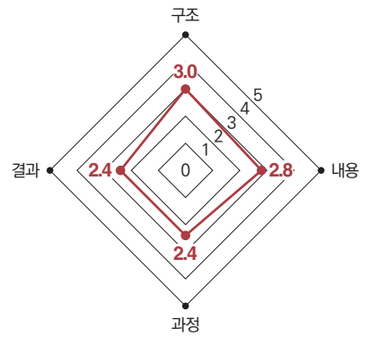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다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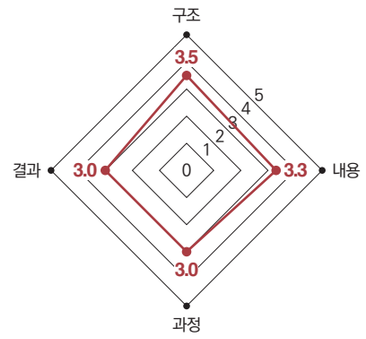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개정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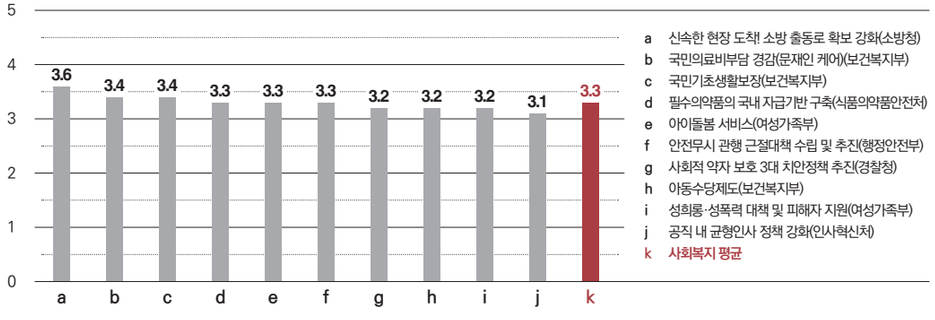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45]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의 종합 평균점수는 3.3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3.6점을 받은 소방청의 소방 출동로 확보 정책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3.1점을 받은 인사혁신처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의 점수 차이는 0.5점 차이로, 대부분의 정책은 3점 중반대의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평균점수인 3.6점과 비교하면 올해의 종합 평가점수는 0.3점 낮아졌다. 지난해의 정책 간 점수 차이인 0.6점에 비하면 평가점수의 차이는 0.1점 줄어들었다. 정책유형으로 설명하면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보건복지부, 3.4점),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3.4점),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3.4점)와 같은 분배 또는 재분배 정책이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3.3점),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경찰청, 3.2점),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3.2점)과 같은 규제적 성격을 가진 정책 그리고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3.1점)와 같은 내부 인사 정책에 비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인지도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조사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의 정책 인지도 순위는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3.2점), 국민의료비부담경감(보건복지부, 3.0점),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3.0점),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3.0점),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2.9점),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2.8점),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경찰청, 2.3점),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약처, 2.2점),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2.2점),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2.2점)의 순서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인지도 측면에서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고, 여성가족부 정책이 4위,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4.1점),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4.0점),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보건복지부, 3.8점),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3.7점),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3.6점) 순서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인지도가 상위권에 있었다. 반면에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3.2점),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3.1점),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경찰청, 2.8점),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2.6점),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약처, 2.5점)의 순서로 전문가의 정책 인지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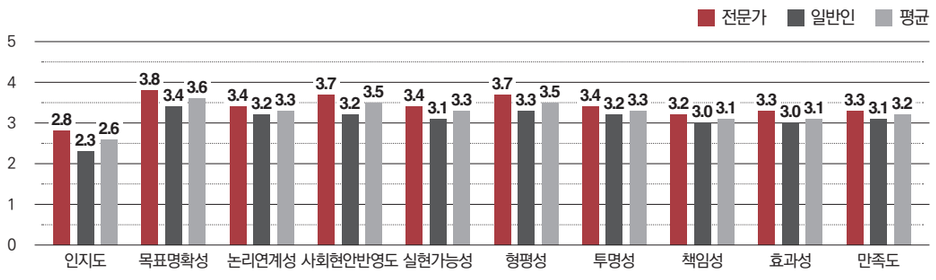
한편 정책 인지도가 높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이 비교적 높은 종합평가 점수를, 인지도가 낮은 공직 내 균형인사 또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이 낮은 종합평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높은 인지도와 높은 종합평가 점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은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서 중간 정도의 인지도 점수를 받은 정책이었다.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은 그 다음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논리적 연결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재 등의 각종 안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 간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정책의 수혜대상이 넓으며, 정책이 가져다줄 공익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이 종합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종합평가 점수를 받은 인사혁신처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은 실적제 선발원칙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정책의 수혜대상의 범위가 좁고, 정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인지도 점수는 사회복지 분야 다른 평가 정책의 인지도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해당 정책의 다른 항목 평가점수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34.0%, 일반인 집단에서는 13.9%로,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40.0%, 일반인 집단의 56.0%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았고,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는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안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사회적 약자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일상적인 경찰청 업무와 특별히 다른 정책으로 보기 어려웠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6]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66.0%, 일반인 집단에서는 38.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8.0%, 일반인 집단에서는 16.6%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책목표의 명확성 점수는 전문가 집단 3.8점, 일반인 집단 3.4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서 중하위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6.0%, 일반인 38.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가운데 10%, 일반인 가운데 21.3%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정책대안 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3.4점, 일반인 집단에서 3.2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해서 중하위 정도의 점수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2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4.0%, 일반인 내에서는 41.2%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8.0%, 일반인 23.6%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해당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44.0%, 일반인의 경우 37.1%에 이르는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14.0%, 일반인의 22.7%로 나타나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0%, 일반인 42.4%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4.0%, 일반인의 경우 18.8%였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형평성을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반인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에서 정책추진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2점을 주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0.0%, 일반인 내에서는 36.7%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8.0%, 일반인의 19.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정책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집단에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중간 정도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34.0%가, 일반인 집단의 28.1%가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반면 전문가의 16.0%와 일반인의 26.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비하여 정책의 책임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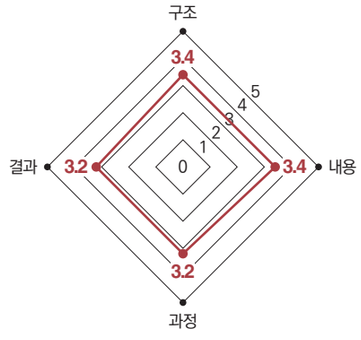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32.0%가 정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12.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26.9%가 긍정적으로 28.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았다. 평균적인 평가점수는 전문가가 3.3점, 일반인이 3.0점을 주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집단의 36.0%, 일반인 집단의 33.4%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10.0%, 일반인 집단에서는 25.6%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책 인지도를 포함한 모든 세부평가 항목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 점수가 일반인 집단의 평가 점수와 차이를 보이며 전문가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달리 일반인 집단에서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정책평가의 각 영역에서는 정책의 구조(3.4), 내용(3.4)이 정책의 과정(3.2), 결과(3.2) 측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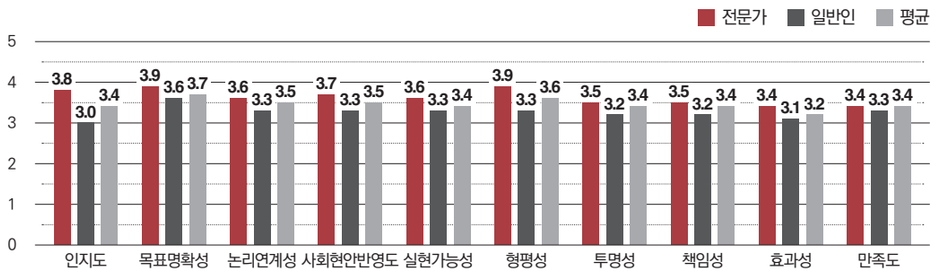
[그림 4-47]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국민의료비부담 경감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8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6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5.6%가 안다고 응답하고 35.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48]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9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2%, 일반인 57.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4%로 일반인 13.6%보다 매우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6점, 일반인이 3.3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8%, 일반인 46.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14%,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21.1%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2%, 일반인 내에서는 46.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10%, 일반인 20.9%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66%, 일반인의 경우 42.6%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20.9%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9점,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0%, 일반인 46.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6%, 일반인의 경우 19.6%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2%, 일반인 내에서는 39.2%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1.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62%, 일반인은 37.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8%와 일반인의 25.7%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1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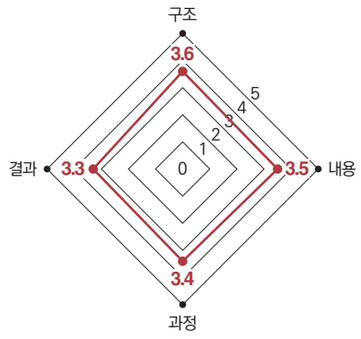
주었다. 전문가의 54%가 긍정적으로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37.9%가 긍정적으로 26.9%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3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54%, 일반인이 44.4%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18%, 일반인 20.6%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6), 내용(3.5), 과정(3.4), 결과(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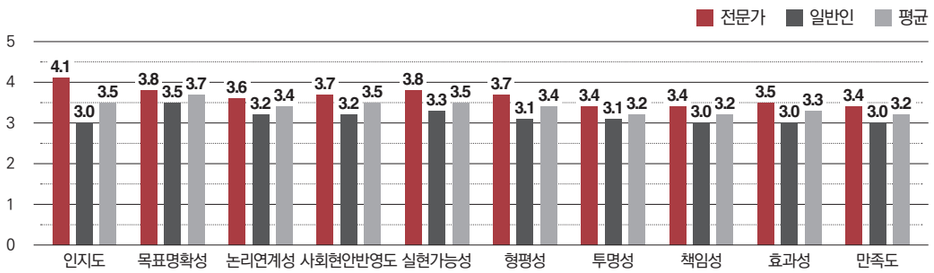
[그림 4-49]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4.1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4.0%가 안다고 응답하고 31.2%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0] 국민기초생활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8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0%, 일반인 54.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6%로 일반인 12.4%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6점, 일반인이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 일반인 40.5%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8%,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23.0%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2%, 일반인 내에서는 42.6%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8%, 일반인 26%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8점,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70%, 일반인의 경우 43.5%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8%, 일반인의 20.1%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2%, 일반인 39.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14%, 일반인의 경우 25.8%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8%, 일반인 내에서는 34.6%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7.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42%, 일반인은 32.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2%와 일반인의 27.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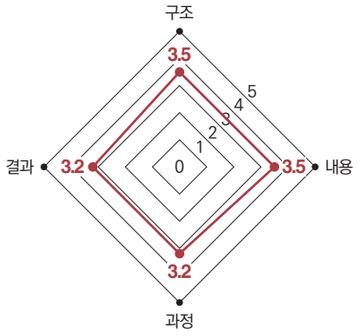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0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56%가 긍정적으로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31.1%가 긍정적으로 29.5%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52%, 일반인이 33.1%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20%, 일반인 30.4%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5), 과정(3.2), 결과(3.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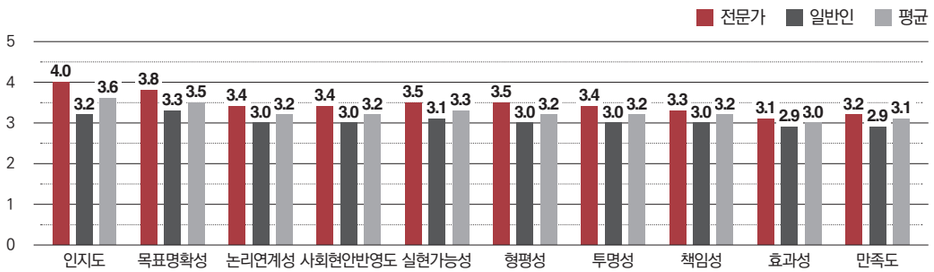
[그림 4-51] 국민기초생활보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4.0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9.4%가 안다고 응답하고 26.6%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2] 아동수당제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2%, 일반인 45.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14%로 일반인 20.3%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0%, 일반인 29.5%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24%,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32.5%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54%, 일반인 내에서는 36.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22%, 일반인 33.8%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54%, 일반인의 경우 35.5%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8.2%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8%, 일반인 35.5%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22%, 일반인의 경우 33.4%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8%, 일반인 내에서는 32.2%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22%, 일반인의 29.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44%, 일반인은 31.3%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24%와 일반인의 27.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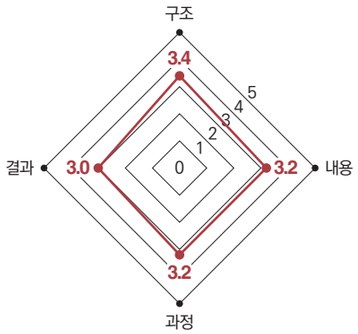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1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30%가 긍정적으로 29%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31.1%가 긍정적으로 36.5%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2.9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42%, 일반인이 28.7%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28%, 일반인 36.4%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목표명확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4), 내용(3.2), 과정(3.2),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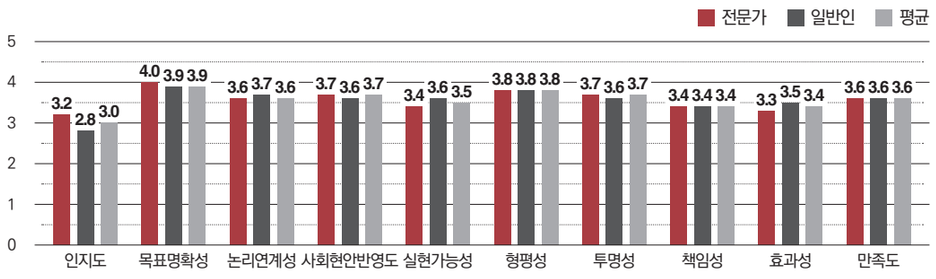
[그림 4-53] 아동수당제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소방청의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의 정책 인지도 점수는 전문가 집단 점수는 3.2점, 일반인 집단의 점수는 2.8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에서 해당 정책을 안다고 대답한 비중은 전체의 46.0%, 모른다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24.0%로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일반인 집단에서는 31.0%가 안다고 대답하고, 38.3%가 모른다고 대답하여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림 4-54]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민이 평가한 목표의 명확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평가는 전문가가 4.0점, 일반인 3.9점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그 이유는 정책의 성격이 구체적이며, 현장에서 그 정책의 집행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해당 정책의 목표가 모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 가운데 76.0%, 일반인 집단 가운데 77.0%가 이 정책의 명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소방청의 소방로 확보 강화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이 3.7점을 주었다. 정책목표와 수단사이의 논리적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집단 56.0%, 일반인 집단 64.9%이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 10.0%, 일반인 집단에서 8.1%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을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도 해당 정책에 3.7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특히 일반인 집단은 3.6점이라는 최고점수를 주었다. 국민들은 해당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6.0%, 일반인 내에서는 59.6%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보다는 일반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된다. 전문가의 경우 3.4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을 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해당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전문가에서는 52.0%로 중간 수준이지만, 일반인 집단에서는 56.7%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3.8점, 일반인 집단의 형평성 점수는 3.9점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이 정책의 형평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68.0%, 일반인 집단의 66.1%가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의 4.0%, 일반인 집단의 6.3%만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양 집단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3.7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으로 정책의 투명성이 가장 높은 정책에 속한다. 전문가 집단의 62.0%가, 일반인 집단의 58.8%가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직 전문가집단의 2.0%, 일반인 집단의 9.1%가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당 정책은 모든 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3.4점, 일반인 집단에서도 3.4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책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52.0%, 일반인의 46.2%이며,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16.0%, 일반인 집단의 14.3%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기대했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 집단은 3.3점을 주었고, 일반인 집단은 3.5점을 주었는데 이 점수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효과성 점수와 비교해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중간 정도에, 일반이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책에 대한 가시성이 높고 정책이 제공하는 정보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 것이다. 해당 정책의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40%, 일반인 집단에서는 52.9%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16.0%, 일반인 집단에서 1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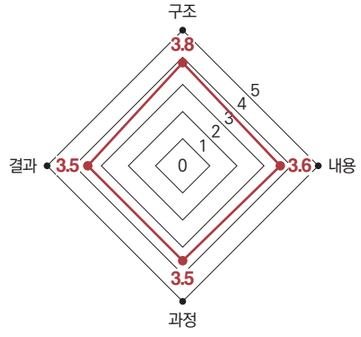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3.6점씩을 주어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에 가장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다. 해당 정책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전문가 집단의 비중은 52.0%,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중은 10.0%였으며, 일반인 집단 가운데에서는 만족한다고 평가한 비중이 58.7%,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이 9.4%였다.

소방청의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은 인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 평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의 평가점수가 비슷하며 다른 사회분야 정책에 비해 점수가 높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점수가 일반인 점수보다 높지만, 해당 정책은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서 전문가보다 일반인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8), 내용(3.6), 과정(3.5), 결과(3.5) 순서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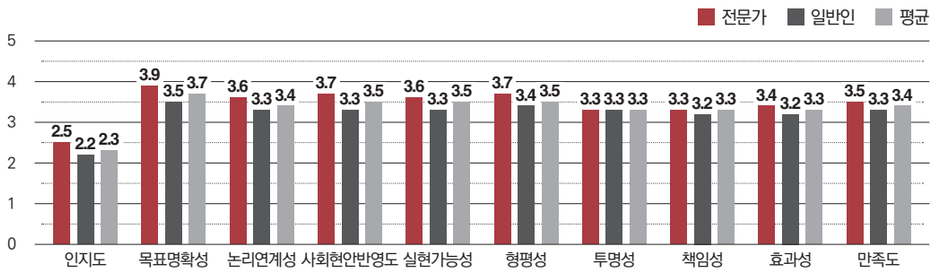
[그림 4-5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해당 정책은 정책 인지도가 평균 2.3점(전문가 2.5점, 일반인 2.2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할 때 인지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정책이다. 전문가 집단의 18.0%가 이 정책을 안다고 대답했지만 모른다고 대답한 집단이 54.0%로 많았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전체의 12.1%만이 정책을 안다고 대답했고, 62.1%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정책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4-5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모든 집단에서 정책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9점, 일반인은 3.5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 집단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72.0%, 일반인 집단에서는 50.9%였으며,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4.0%, 일반인 집단에서는 12.2%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점수는 전문가 집단 3.6점, 일반인 집단 3.3점이었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가장 높은 편이며 일반인 집단의 점수는 중간 정도의 점수에 해당한다. 전문가 집단의 68.0%는 해당 정책의 목표와 대안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1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44.7%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5.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70.0%는 해당 정책이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도 42.1%가 이 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답하였으며, 17.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지만,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전문가 집단이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62.0%가 긍정적으로, 일반인 집단의 일반인 집단에서는 39.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집단의 10.0%, 일반인 집단의 17.9%로 확인되었다. 긍정적이 답변에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주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은 정책 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을 주면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평가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의 62.0%가 정책의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48.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10.0%, 일반인 집단에서는 14.1%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추진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동일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50.0%가 투명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답했고, 20.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일반인 집단은 39.7%가 긍정적으로, 17.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정책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도,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도 전문가 집단보다 적어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46.0%, 일반인 집단의 34.1%가 해당 정책의 책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18.0%와 일반인 집단의 18.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과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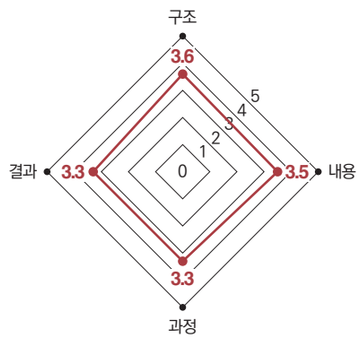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이러한 점수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할 때 높은 평가점수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50.0%, 일반인 집단의 35.9%가 해당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16.0%, 일반인 집단의 22.9%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으로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에서 58.0%가 해당 정책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으며, 12.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40.4%가 정책결과를 만족스럽다고 평가했고, 17.8%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6)와 내용(3.5) 측면에 비해서, 과정(3.3)와 결과(3.3)의 평가 점수가 낮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점수가 일반인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한편 각 세부평가 항목별로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내용, 과정에 비해서 결과 측면의 평가점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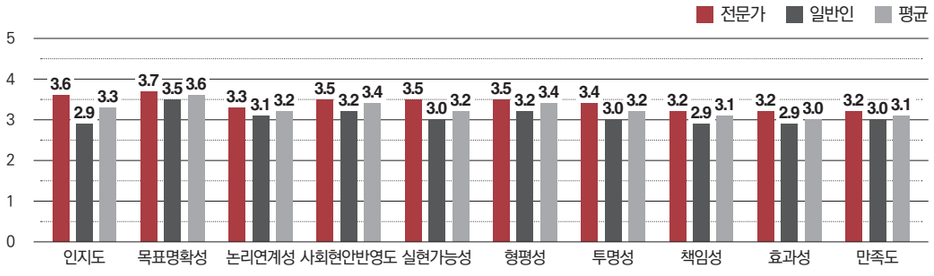
[그림 4-57]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6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9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6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28.2%가 안다고 응답하고 34.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 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8]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2%, 일반인 5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14%로 일반인 16%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3점, 일반인이 3.1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6%, 일반인 35.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16%,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24.9%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5점, 일반인 3.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56%, 일반인 내에서는 43.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18%, 일반인 24.4%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54%, 일반인의 경우 34.2%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30.1%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6%, 일반인 42.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14%, 일반인의 경우 22.5%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4%, 일반인 내에서는 30.3%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4%, 일반인의 26.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30%, 일반인은 28.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6%와 일반인의 33.5%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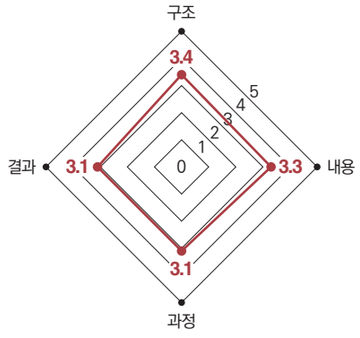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38%가 긍정적으로 2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29.5%가 긍정적으로 35.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32%, 일반인이 31.5%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16%, 일반인 29.7%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인지도와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반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4), 내용(3.3), 과정(3.1), 결과(3.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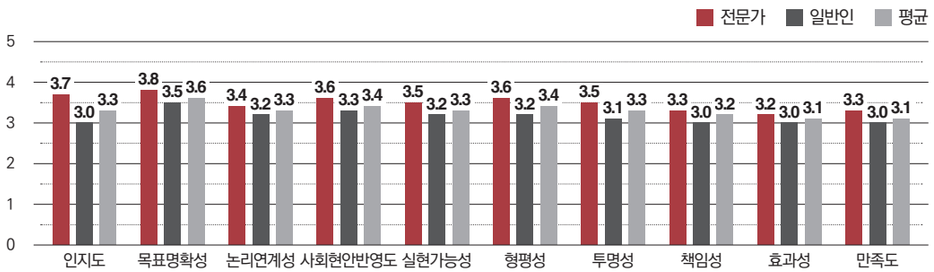
[그림 4-59]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7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5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4.4%가 안다고 응답하고 18.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0] 아이돌봄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8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6%, 일반인 51.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10%로 일반인 11.9%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6%, 일반인 39.7%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20%,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24.3%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6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0%, 일반인 내에서는 41.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18%, 일반인 20.8%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56%, 일반인의 경우 41.3%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0.8%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2%, 일반인 42.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6%, 일반인의 경우 19.7%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50%, 일반인 내에서는 32.7%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4%, 일반인의 22.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38%, 일반인은 30.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22%와 일반인의 2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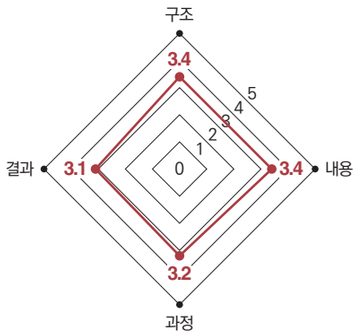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점, 일반인이 3.0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42%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30.9%가 긍정적으로 29.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42%, 일반인이 32.2%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22%, 일반인 27%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인지도,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4), 내용(3.4), 과정(3.2), 결과(3.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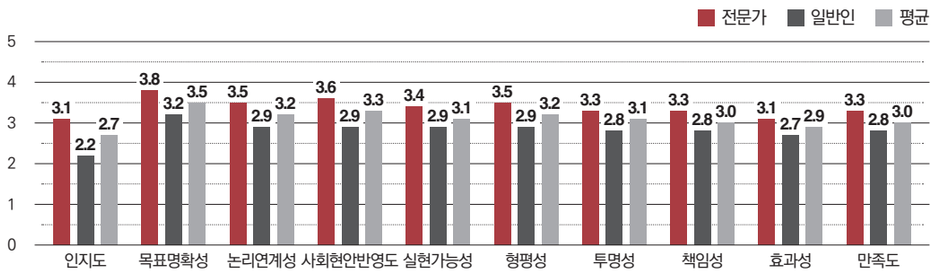
[그림 4-61] 아이돌봄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인사혁신처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중하위권으로 확인된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인지도 평가점수를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게 주었는데,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점수는 각각 3.1점, 2.2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40.0%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 26.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일반인 집단에서는 13.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나머지 59.5%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모른다는 답변이 약 4배 이상 많았다.

[그림 4-62]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68.0%가 해당 정책의 목표 명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4.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40.3%가 긍정적인 평가를, 20.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이 2.9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54.0%, 일반인 27.6%,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의 16.0%, 일반인 집단의 31.4%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해서도 해당 세부평가의 점수는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중간 정도의 평가점수로 확인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는 3.6점을,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일반인 집단은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다. 전문가 집단에서 68.0%이 해당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1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26.7%가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31.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인 집단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52.0%였지만, 일반인의 경우 24.3%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의 14.0%였지만 일반인의 32.8%에 달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보다 많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5점,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2.9점이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0.0%, 일반인 29.5%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10.0%, 일반인의 경우 32.3%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정책이 형평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3.3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을 주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50.0%, 일반인 내에서는 24.1%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22.0%, 일반인의 35.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인 집단보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부정적 평가도 적었다. 일반인의 경우 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3점을, 일반인 집단은 2.8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정책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된다고 답한 국민의 비중이 40.0%,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18.0%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20.0%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37.1%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일반인 집단의 긍정적 평가가 적고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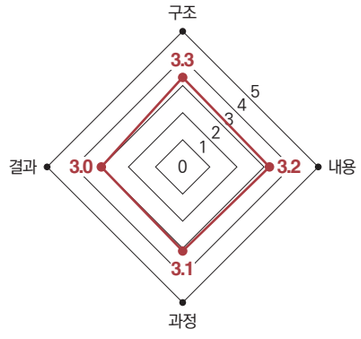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 집단은 2.7점을 주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32.0%가 긍정적으로, 24.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20.0%가 긍정적으로 39.3%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비교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전문가의 점수는 3.3점, 일반인 집단의 점수는 2.8점이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42.0%, 일반인이 25.2%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20.0%, 일반인 38.2%로 집계되었다. 일반인의 평가 점수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점수는 구조(3.3), 내용(3.2), 과정(3.1),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 비해서 평가 점수가 높지 않으며,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할 때 정책의 인지도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정책이다. 다른 정책에 비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 차이가 큰 편이다. 일반인 집단은 모든 평가유형에서 해당 정책에 최하위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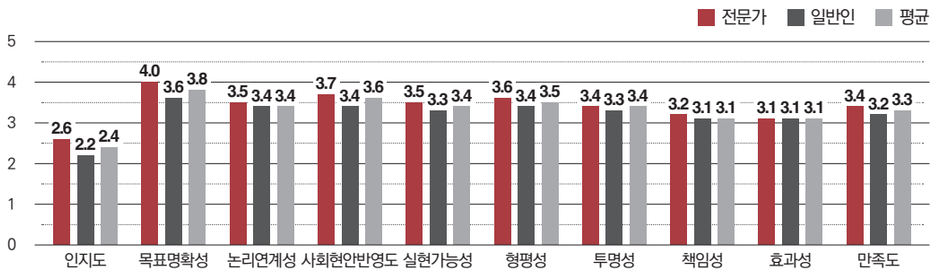
[그림 4-63]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4점(전문가 2.6점, 일반인 2.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비해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서도 인지도 점수가 훨씬 낮았다. 전문가 집단에서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2.0%이고,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8.0%이며, 일반인 집단에서는 11.8%가 안다고 응답하고 61.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모든 집단에서 정책을 모른다고 답한 국민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림 4-64]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4.0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을 주었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모든 집단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4.0%, 일반인 58.0%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4.0%가 일반인 11.0%이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4.0%, 일반인 48.4%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집단 내 12.0%, 일반인 집단 내 17.4%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해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확인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4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66.0%, 일반인 내에서는 48.4%가 사회현안을 정책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10.0%, 일반인 17.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할 때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높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 3.3점이라는 점수를 주어서 모든 집단에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할 때 정책 실현가능성을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의 48.%, 일반인 집단의 41.9%가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이 실현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전문가 집단의 8.0%와 일반인 집단의 21.1%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의 56.0%, 일반인 집단의 50.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6.0%, 일반인 집단에서 13,1%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더 높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균점수는 3.4점, 일반인 집단 평균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46.0%가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41.5%가 정책의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1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38.0%가 해당 정책이 책임성 있게 진행된다고 답하였고, 22.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31.3%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2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정책 책임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지만, 부정적인 답변 또한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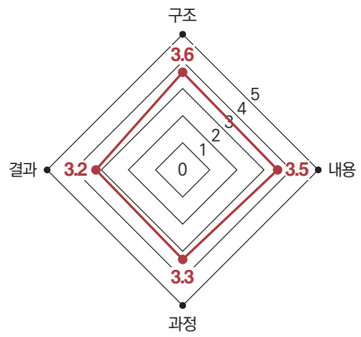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균점수는 3.1점으로 동일했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전문가보다 일반인 집단의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전문가 집단의 28.0%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26.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33.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24.2%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평균 3.4점, 일반인은 3.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48.0%, 일반인 집단의 40.3%가 해당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전문가 집단의 16.0%, 일반인 20.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여 중간정도의 평가점수로 확인된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높지 않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비교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중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평가분야별로 비교하면 다른 정책과 유사하게 구조(3.6), 내용(3.5)에 비하여 과정(3.4), 결과(3.3) 평가점수가 낮은 것이 확인된다.

[그림 4-65]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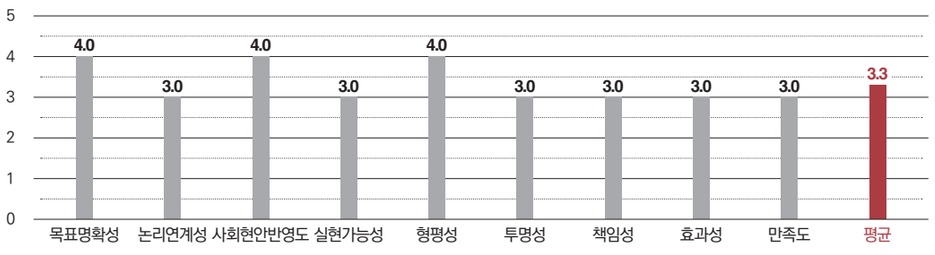
가) 정성평가 결과

(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치안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해당 정책은 과거의 여성·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의성이 있으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그리고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대책 마련의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정책대안의 적정성,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6]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른 집단보다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진다. 정책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여 세부정책으로 '여성대상 폭력근절 정책',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실종 대응 강화 정책' 그리고 '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은 핵심 성과지표('성폭력 미검률',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청소년 보호지원율')를 통해서 기대하는 변화 모습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2018: 101). 서로 다른 세부정책이 상충한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안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4점)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적 약자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포괄한다. 여성대상 범죄에서는 사건발생 시 경찰의 초동대처 강화와 가해자의 격리 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카메라 설치 점검, 촬영물 유포자 검거 등 구체적 대응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학대 대응 강화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학대신고를 홍보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청소년 보호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 특별관리하고 선도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부정책들의 내용은 피해 사전예방, 범죄 사각지대 해소, 현장 대응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책이 잘 시행되기 위

해서 유관기관 사이의 적극적 협조, 현장 관계자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논리적 연계성 점수는 보통(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평택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범행 동기와 대상이 모호한 묻지마 범죄 또는 가정 내 학대가 구조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노컷뉴스, 2016; 세계일보, 2016).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은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정부의 관심도도 높다.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수준(4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은 중앙정부 비예산 사업으로서(관계부처, 2018: 42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 치안 체계를 정교화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다양한 수단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인력이 필요한 강제적 수단은 단기간의 대책('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찰의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전담경찰관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금보다 교육이나 인력 지원 등 현장 역량의 개선이 필수적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은 직접적 수혜대상인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여성·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확장하여 정책대상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어느 시기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느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4점)고 판단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의 측면에서 해당 정책을 보통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부터 경찰청은 법무부,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젠더폭력 TF에 참석하여 여성폭력 근절대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나 의견반영의 통로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과거에도 경찰은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속에서 경찰청 내 다부서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부처를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으로 정하고, 각 지방청 및 경찰청에서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2018). 경찰청(2018)에 따르면 추진본부에서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우수사례와 미흡점을 발굴, 협의사항을 논의하며 정책을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현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지표('성폭력 미검률',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청소년 보호지원율')를 운영한다. 각 세부정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이후의 후속 점검이 요청되고 있지만, 경찰청이 선정한 지표 외에 정책과정에서 환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보통수준으로(3점)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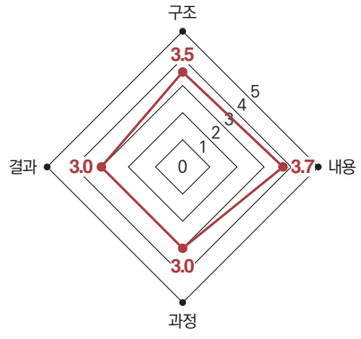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추진 이후에 '성폭력 미검률',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청소년 보호지원율'이라는 성과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성과지표만으로 최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종대책 측면에서는 「실종아동법」 개정 및 지문사전등록제도, 치매노인배회감지기 보급 등 실종제도의 개선(경향신문, 2018; 중앙일보, 2018)이 확인되는 한편 여성대상 범죄나 노인대상 범죄, 청소년 보호 대책에서는 여성대상범죄 또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문제,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등 정책을 집행할 때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종합하여 정책 효과성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 대상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경찰이 그동안 오랜 문제를 방치해왔으며 정책의 실제 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연합뉴스, 2018).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변화, 정부의 노력을 더 요구하기도 한다(한겨레, 2018). 아직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당 정책이 사회적 약자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일반의 불안감을 낮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평가점수는 보통(3점)을 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여 평가점수는 내용(3.7), 구조(3.5),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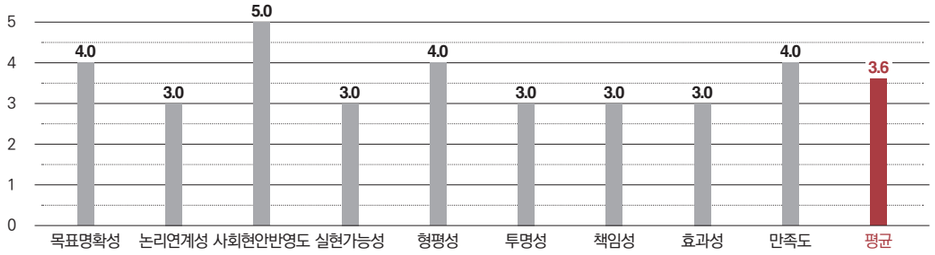
[그림 4-67]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정책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한다. 이들 정책은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며,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정책으로, 정책의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우려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8]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정책은 작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올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정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법률안 연내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연내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의 충분한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한 개인 책임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제안되었다. 또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개편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시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사회현안 반영도는 긍정적으로(5.0점)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며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된 수단(「국민건강보험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집행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목표대비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예산 집행계획에 비추어 보아, 사업 1년 차인 지난해 추산대비 단지 54.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정책이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의 급여지출액은 2018년 1분기까지의 38.7%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메디게이트, 2018.10.10.) 이러한 실정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3.0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질 예정이다. 특히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정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었다(보건복지부, 2018.06.19.). 반면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4.0점)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집행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정부 간의 실무협의체가 가동되어 운영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다시 말해, 본 정책이 '밥그릇 싸움'이나 '수가제 논쟁' 등으로 프레이밍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이 소외된 채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18.05.11.).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그리고 의견 수렴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난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부 간의 실무협의체를 같이 시작했다(보건복지부, 2017.12.19.). 이를 통해 병원계-의료계-정부는 환자 안전·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가 운영되어 상호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문제(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에 대한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조율에 실패하여 실무협의체가 중단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8.03.29.). 이에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등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에서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한겨레, 2018.03.18.).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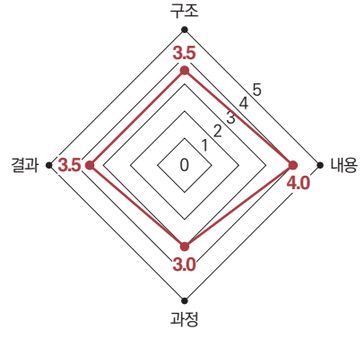
'국민의료비부담 경감'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난 1년간 노인틀니 부담, 중증치매 부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등에는 정책집행 단계에 맞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같은 종목의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에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집행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메디게이트, 2018.10.10.).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앞선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평가한 '문재인 케어'의 국민의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률은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보장률(70%)보다 다소 높게(75.9%)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중앙일보, 2017.12.14.). 따라서 정책의 만족도를 현재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에도, 대체로 국민들이 정부의 책임 강화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정책 만족도는 4.0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5), 과정(3.0), 결과(3.5), 내용(4.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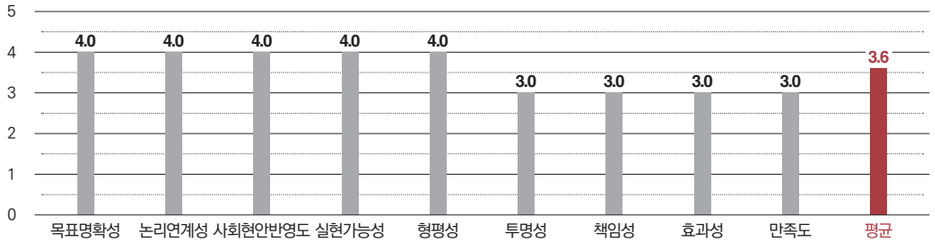
[그림 4-6]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국민기초생활보장

2017년 8월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은 단지 복지예산의 확대를 넘어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수많은 국민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함으로써, 비수급 저소득층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급여를 현실화하여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이전 정책과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관련 법안이 이미 개정되었고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리 중이며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논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0]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7.08.10.). 이 정책은 기존에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탈출의 지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와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속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강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있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급여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약화 및 양극화 심화 같은 빈곤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기존의 대책과 비교될 만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의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긍정적인 점수(4.0점)를 부여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빈곤 문제, 특히 노인 빈곤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한국사회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정책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빈곤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 단독 혹은 노인부부 등 노인 가구의 소득을 국민최저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4.0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점수인 4.0점을 부여하였다. 지난 해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정책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고('18.10),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제외되었다('17.11). 또한 계획보다 앞당겨,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장장부양'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4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절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의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 준비와 과정에서 여전히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존재한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되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이 이슈는 작년 11월 기초수급 노인 9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있다(프레시안, 2018.07.06.). 또한 장애인단체는 부양의무제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천지일보, 2018.09.05.).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 및 진정한 소통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모든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 교육급여의 경우는 교육부, 빈곤탈피와 자립지원의 경우는 노동부의 일자리지원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빈곤해소는 자립정책도 함께 동반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및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지원 같은 다양한 일자리 및 경제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 명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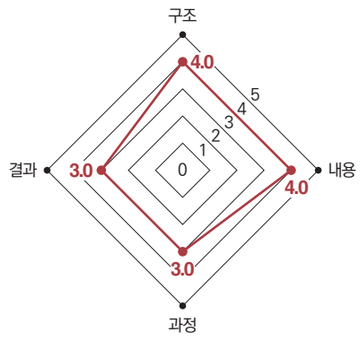
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장장부양'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자는 목적이다. 이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해있고, 따라서 소득이 약간 높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노인의 경우에도, 경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간의 경제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등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점을 고려했을 때(뉴스토마토, 2018.07.16.),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수급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되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된다. 이 때문에, 작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99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프레시안, 2018.07.06.). 이러한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처가 낸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의 가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3분위와 비교할 때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난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소득층에선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지적이다(한겨레, 2018.07.24.). 이처럼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우려를 고려한다면,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4.0), 과정(3.0), 결과(3.0), 내용(4.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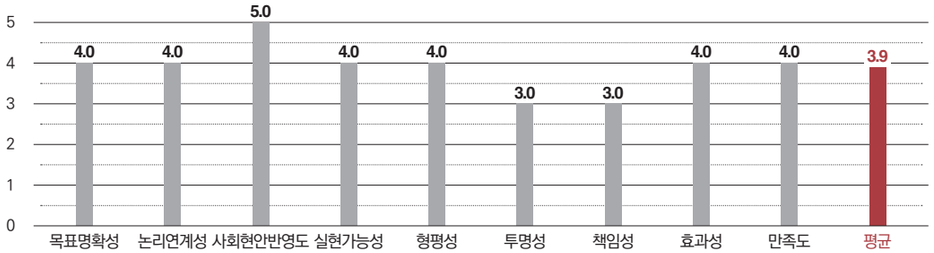
[그림 4-71]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 9월부터 집행되어, 현재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의 모든 가정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정책의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대상과 지원수준에 대한 합의가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필요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2] 아동수당제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 보건복지부도 정책자료집에서 강조하듯이,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이 유일한 정책대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에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양육, 보육, 요양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본 정책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물론,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논쟁, 보편성 여부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아동복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도입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중

앙일보, 2018.04.17.). 그러나 실제로 정책내용을 구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집행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늦춰지고, 정책대상도 상위 소득가정 10%를 제외하게 되는 등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도 및 지지도가 높고, 또한 OECD 35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가 31개국에 이르는 등 아동수당에 대한 국제적인 현안 인식도 높은 점을 감안해서, 사회현안의 반영도는 4.0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인 4.0점을 부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정책은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며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된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본 정책과 관련된 예산심사가 통과되었고, 「아동수당법」이 올 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현재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이 올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도는 4.0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선별지급'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여러 논쟁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위 10% 배제를 지지하는 야당의 논리는 부유층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제한된 자원을 저소득층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편지급'을 지지하는 논리는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 아동수당' 포기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내년 9월부터 만 9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4.0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의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지급대상의 축소라기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지하는 청원이 쇄도하였으며,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판도 자주 언급되었다(연합뉴스, 2019.09.06.). 그 결과 올해 예산 안에는 내년 9월부터 만 9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아동수당제도가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여야의 정치싸움에서 수단과 협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0)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책임성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아동수당법」)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이나, 어떤 목적으로 이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철학이 정치적 맥락과 교섭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지원대상과 수준이 정책시행 만 1년도 되지 않아 긴급하게 변화해오는 과정을 고려할 때, 현 집행의 문제 및 비판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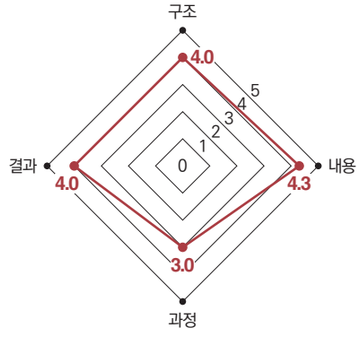
아동수당제도는 국민적 인지도 및 지지가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별다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단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녀 양육에 충분한 보탬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이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그 돈을 직접 쓰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02.05.). 결국, 아동수당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4.0점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올 9월부터 집행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한 가정이 신청을 꺼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2018.09.06.). 이렇듯 상위 10%를 제외하게 되면서, 정책집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과 논쟁점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만 9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짓기에 이르렀다.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국민적 인지도와 기대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다. 올 9월부터 집행되었으며, 내년에 또 정책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를 현재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책 만족도는 높은 수준(4.0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4.0), 과정(3.0), 결과(4.0), 내용(4.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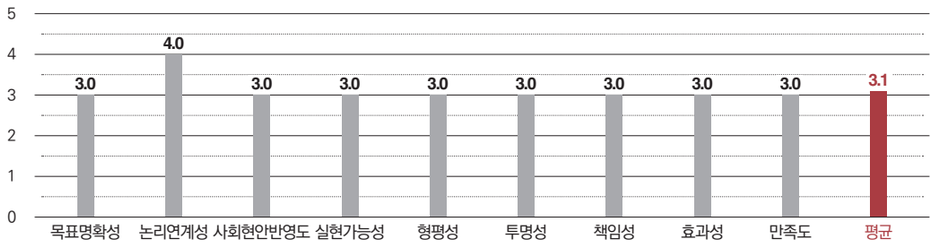
[그림 4-73] 아동수당제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로 인한 재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는데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가 거론되었다.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하면서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현장 진입 시 소방차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마련된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대책은 정책의 논리연계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그 밖의 항목에서는 평균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그림 4-74]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현장의 생존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성과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보통수준의 점수를(3점) 주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소방차의 화재 현장 출동에 있어서 소방차가 출동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교통 신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동체계의 구축,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과 같은 구체적인 수단들이 상호 개선이 될 때 소방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안과 정책목표 간에 높은 수준의 논리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높게 평가했다(4점).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해당 정책은 2016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 사건의 원인을 탐색하면서 사회적 관심 속에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상위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상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정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예를 들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하위 정책 중 하나가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도 거시적인 국가목표를 가지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안 반영도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은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신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법령 및 제도는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를 상향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경우 파손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한 새 법은 시행일(2018.7.10.) 이후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었다(국제신문, 2018). 또한 건물 밀집지역이나 협소한 도로 등 도로 자체의 문제가 실제로 소방차 출동을 어렵게 만드는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에도(서울연구원, 2016). 해당 정책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실현가능성은 보통(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소방로 확보 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책이 잘 실현될 경우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이 때 수혜대상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3점)의 점수를 주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해당 정책은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나 의견반영이 많이 이루어질만한 정책은 아니지만, 소방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외에도 성공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길 터주기 운동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은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해당 정책은 2017년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책의 강제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우선교통시스템 기술

표준화 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에서 의견 반영 또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없어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성 수준은 보통(3점)으로 주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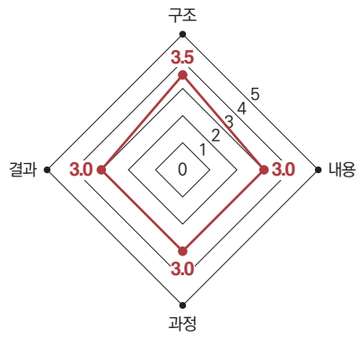
해당 정책의 효과는 소방로를 확보하여 재난 시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줄이고, 생존률을 제고하였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등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하며(국제신문, 2018), 아직까지는 해당 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해당 사업만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효과성은 보통수준으로(3점)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해당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소방로 확보와 재난 시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 생존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으며 만족도는 낮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분명한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는 보통(3점)으로 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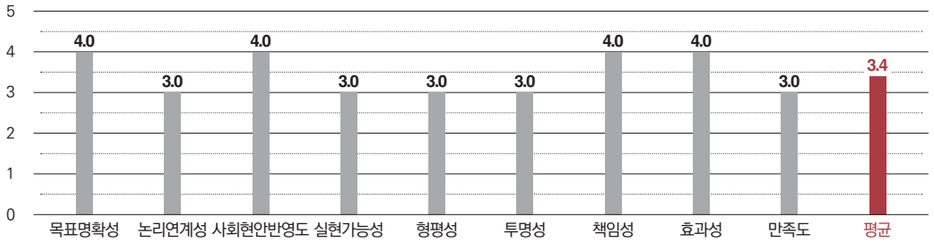
[그림 4-7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는데 수익성 저하 또는 원료수급 곤란에 의해서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해당 정책의 목표이다.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책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책은 국가가 공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자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정부는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목록을 매년 지정하고 이들의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의 자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정책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목표 명확성이 높다고(4점)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필수의약품의 자급기반 구축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정책은 의약품이 채산성이 낮거나 원료수급이 곤란해서 시장에 의한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지원, 행정지원, 위탁제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필수의약품을 제조하도록 하여 안정적 공급을 담보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가 직접 국영제약사를 설립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지만, 국영제약사를 운영하는 국가가 주로 중위소득구가로서 우리나라에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입법조사처, 2018).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수준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고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할 때마다 국가가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여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기존 우리나라는 필수의약품의 정의, 공급중단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부재했다.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 국민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현안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4점)고 보여진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은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으로부터 시작하

였다. 2016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구입·비축·배분하도록 하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으로 범부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급중단 위기 시 민간 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국회예산정책처, 2017) 실제 민간위탁 운영체계는 준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현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가필수의약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매년 지정목록이 확대(2016년 109개→ 2017년 126개→ 2018년 315개)되고 있어서 직접적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필수의약품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가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여 형평성 측면은 보통수준의 점수(3점)를 주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의약품의 중단위기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국영 제약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 시장기능 대체가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치하였다(연합뉴스, 2015). 수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가가 필수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필수의약품의 분명한 정의 및 단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이 얻어졌고(데일리메디, 2016) 「약사법」(제83조의3)이 개정,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책 마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의 의견반영이 적었던 점은 아쉽다. 해당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필수의약품의 국내 안정공급은 「약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필수의약품의 목록은 다양한 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까지 전주기의 현장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급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필수의약품 목록 지정에 반영하여 궤도를 수정하는 정책 환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아서 책임성은 높은 수준(4점)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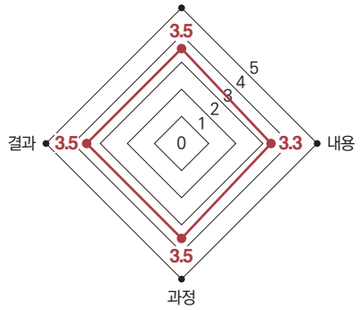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책이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가의 측면에서 국내 자급기반 구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4점)하였다. 2016년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다부처를 연계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수의약품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정책의 실현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체계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2016년 카나마이신 주사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위탁제조가 체결되면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여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중단 위기를 막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은 일반적인 수준(3점)으로 보인다.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위탁제조가 잘 이루어질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환자집단은 물론이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과정(3.5), 결과(3.5), 내용(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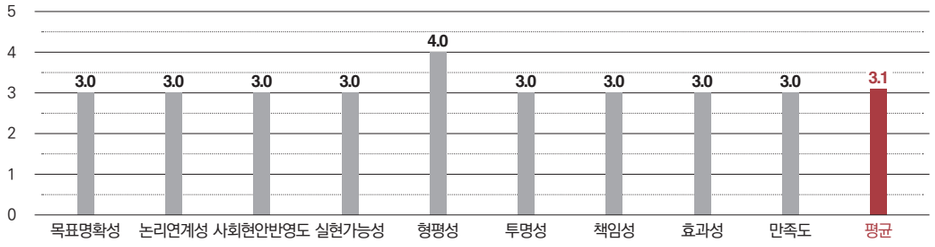
[그림 4-77]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최근 권력형 성폭력에 관한 미투운동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혜화역 시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정책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은 2017년 11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이다. 최근 2018년 7월 3일,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정부의 대응정책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의 목표명확성, 실효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정책평가 분야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8]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미투운동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책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이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법제의 내용에 비해서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대책마련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기존 법제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무력하였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정책추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통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07.03.)을 발표하는 등 시민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제시된 정책제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이러한 보완대책에는 이행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단지 법령개정이나 예산안 편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직장 내 성평등 구조의 근본적인 확립, 성별임금격차의 해소 등 성평등한 사회 속에서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미투운동과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혜화역 시위는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는 사안들이다.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문재인대통령은 성평등문제는 여성가족부만의 의무가 아니고 관련 모든 부처가 책임져야 사안으로서,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한겨레, 2018.07.03.).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목표라는 점, 본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의 의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염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법개정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응책에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여성신문, 2017.11.14.).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통(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성희롱·성폭력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고센터의 운영에 있는 것처럼, 본 정책은 소송 등 무료법률 지원의 확대, 가명조서의 적극적인 활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역고소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4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피해 경험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정책이 충분한 현실분석과 대응으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본 정책이 피해자 여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염려이다. 기존 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보다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는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해 행위를 중심으로 법정형으로 높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사안마다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는 성희롱·성폭력 관련으로 여성가족부의 사안이기는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촬영 및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부처에 해당된다.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이 된 모바일 웹하드에 대해 2016년부터 정부규제가 가능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만 신경쓰다가 규제 회피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 결과, 현재 단순 방조를 넘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한겨레, 2018.10.29.). 따라서 기존 정책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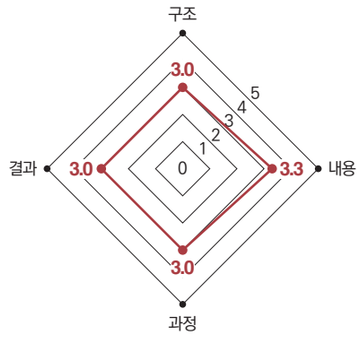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조사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존재한다. 실제로 2016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500여건 중 검찰에 기소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건에 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7.11.14.).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 간의 간극은 크다. 물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현재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껏 제시된 우려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성희롱·성폭력 대책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법제가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어떤 특단의 국민적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보다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정책에 대해 '졸속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보완대책과 개정된 법제가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완대책과 개정된 법제에 대한 만족도를 현재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0), 과정(3.0), 결과(3.0), 내용(3.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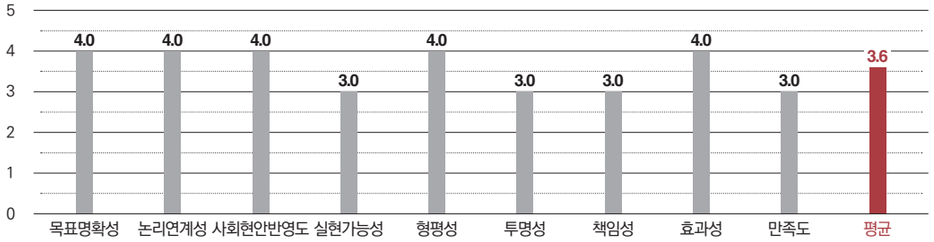
[그림 4-79]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아이돌봄 서비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의 경감과 이를 통해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저출산의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8월 31일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을 통해 보다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폭을 개선하였다.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하여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의 원하는 돌봄서비스의 필요와 정책과의 괴리, 아이돌보미 처우에 대한 미진한 대응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 민주성, 책무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0] 아이돌봄 서비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의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 등을 세부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작년 11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31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대책마련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계획, 소요 재정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제시한 점에서 강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 또한 뚜렷한 편이다.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정 및 지침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충되었다. 정책이 예산 확정 및 구체적인 개정지침을 포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4점을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고 하는 거시적 국가 목표를 가졌다는 점, 이를 통해 이용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구축하고자 한 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 보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4점)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점수인 3.0점을 부여하였다. 본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며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된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의 개선대책이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가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게 만족할 수 있는 정책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요-공급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서울신문, 2018.08.21.).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올 8월에 공표된 개선대책은 특히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였고, 서비스제공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비율도 상향(각 5% 포인트)하여, 궁극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노동시간(야간 및 주말근무)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선대책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발표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아이가 전염병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전액 정부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4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번 정부 개선대책에는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일례로,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대기 가정이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여, 이용자가 30분미만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초과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정책제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매일경제, 2018.05.29.).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1달간 시행한 '1대2~3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시행 이용자가 1명도 없어 시범운영 기간 중 단 한건의 이용도 성사되지 못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돌봄공백을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국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아이돌봄지원법」)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앙사업지원기관 및 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한계가 노출된다.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본 정책의 중앙사업지원기관으로 활동 중이지만, 그 조직과 규모가 작고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된 관리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타 기관들도 제공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주은, 2014). 따라서 본 정책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개선이 꾸준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지원기관 및 세부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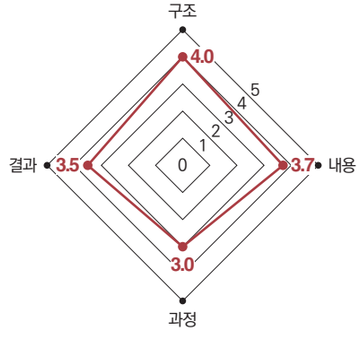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고 정책환류를 통해 대국민정책 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용자서비스 만족도가 최근 몇 년간 90점에 이르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4점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만족도가 90점대에 이르는 정부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모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적은 공급에 비해 많은 신청자 때문에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 대기가 길며, 반면 아이돌보미는 안정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동의 등·하원 시간에 이용자 대부분의 수요가 몰리는데, 그 시간대를 제외하면 아이돌보미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확충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문제도 대두된다. 지난 8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급여를 현재 시간당 급여 7,800원에서 1만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가 낮고 다른 부처의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비교했을 때 일관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과 근로자로서의 사명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4.0), 과정(3.0), 결과(3.5), 내용(3.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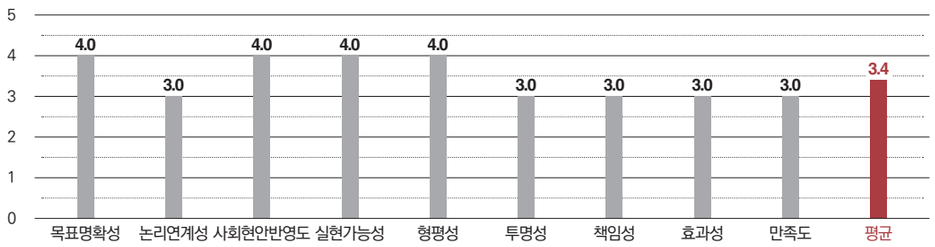
[그림 4-81] 아이돌봄 서비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인사혁신처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균형인사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방 인재', '사회통합형 인재(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와 같은 공직 내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통해 이들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상의 차별요소를 해소하며 공직 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목표달성의 시기가 분명하며 현재의 불공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정책의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그림 4-82]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이러한 공직 다양성 확보로 정부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공직 내 고위직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인재, 사회통합형 인재의 임용과 관련된 다양한 채용제도를 개선한다는 정책내용은 정책목표와 함께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 세부정책에서는 성과지표와 타임라인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평가(4점)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은 장애인·지역 인재·고졸 인재·저소득층 인재 등의 7·9급의 임용을 확대, 역량 개발 지원, 여성·이공계 인재의 인사관리상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고위직에서 연도별 채용목표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수단이 일관되게 양적 대표성과 실적지표 달성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행실적 공개와 인센티브 부여 이외에 절차적으로 실효성 있고 공정한 임용을 담보할 수단의 마련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균형인사에 있어서 채용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승진에 있어서 차별해소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균형인사 정책의 내용은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정책 대표성 향상'과 '차별 없는 인사관리로 형평성 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앞부분에 치우쳐있다. 또한 장애인, 지역인재, 사회통합형 인재 등 소수집단에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했지만 이들 모집비율이 매우 작아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소수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직 내 다양성이 상호견제나 창의성의 발현 등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논리적 연계성을 보통으로 평가(3점)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오래전부터 공직 내에서 균형인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직 내 균형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지만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며(한국경제, 2016) 우리나라의 여성고위직 비율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뉴스1, 2017)는 것이다.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근무환경이 존재하고(인사혁신처, 2018),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그러한 예이다(연합뉴스, 2017). 정부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균형인사 정책을 통합하고 체계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공직 내에서부터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다양성이 커지는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여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점수(4점)을 주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에서 주요 정책내용은 정책대상의 채용실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장애인의 구분모집 선발 확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기간 연장, 고졸인재 선발 확대, 이공계 관리자 임용 확대,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및 적용시험의 확대 등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22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실적을 정하고 있으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추진의 기관별 실적공개, 기관평가 반영, 이행실적에 따른 지원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높은 점수(4점)를 주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균형인사 정책은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 소수집단이 기존에 겪었던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집단에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고(4점)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인사혁신처는 2018년 민관합동 위원회인 '균형인사협의체'를 출범하였으며(2.27.) 두 차례의 회의를 운영(3.16./5.24.)하고,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2.28.), 여성고위공무원 워크숍(3.9.), 중증장애인공무원 간담회(4.1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당자 면담(4.30.), 타부처 의견수렴(5.15.~5.18.) 등을 거치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집단, 공무원, 시민단체, 타부처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떤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얼마나 반영해야하는가에 대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책 투명성은 보통수준의 점수(3점)을 주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해당 정책은 2017년 신설된 「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되는 균형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을 국무회의에서 보고·공개하고, 균형인사연차보고서 발간, 균형인사지수를 통해 기관을 진단하여 각종 기관 평가에 반영,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적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공직문화의 변화, 양성평등 제도의 경우 책임성을 확보할 체계가 미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성은 보통으로(3점)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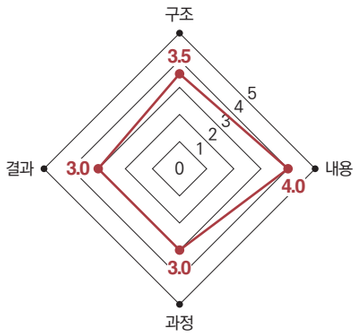
균형인사정책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목표실적을 달성하였는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직 내의 형평성과 공정성과 같은 가치가 높아졌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목표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실적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정책은 승진 등 균형인사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며 지역인재, 장애인인재, 사회통합형 인재 등의 제도가 매우 적은 수준의 채용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공직 내 차별 해소와 같은 사회적 가치 달성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종합하여 보통(3점)의 점수를 주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해당 정책은 정부의 다양성과 조직 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며, 다양한 소수집단에게 실질적 혜택과 차별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일반국민이 정책의 취지 측면을 이해했을 때 만족도는 보통 수준(3점)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4.0), 구조(3.5),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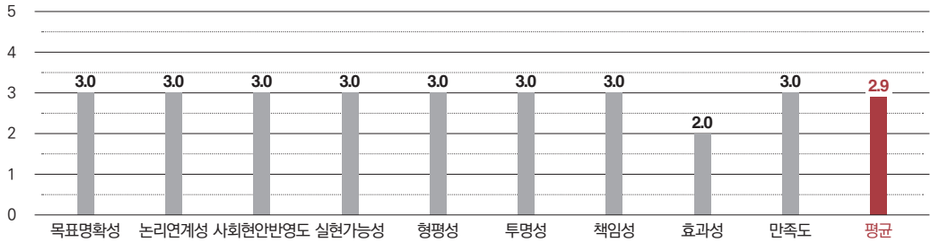
[그림 4-83]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으로 일상 속의 사소해 보이는 안전규정 무시가 지적되면서, 이러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대표적으로 무시되는 안전규정 가운데 7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근절하여 사회의 안전문화를 제고하겠다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행마다 관계된 부처가 다르며, 어떤 관행은 단일부처가 관련되어있지만 어떤 관행은 다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내의 세부과제는 경찰청-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행안부-지자체가 연계되어 추진하는 5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의 경우 노동부에서 4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각 과제별 추진수단은 법률개정, 시행령개정, 예산 반영 등 다양하다. 해당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보통의 점수를,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그림 4-84]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라는 7대 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대표 관행들을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목표는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고 있지만, 각 세부정책별로 기대되는 변화모습과 실적지표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달성의 타임라인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보통(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은 국민들의 안전준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등의 수단을 도입하면서,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민관 협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강제적, 설득적, 유인적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제도 개선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직접 안전무시 관행을 신고, 점검, 단속하도록 한다는 정책수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종합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세부정책 간 연계성이 약하다. 종합하여 보통(3점)의 점수를 주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으로 사소해 보이는 안전규정 무시 관행이 지적되는 경우는 매우 많았다. 이러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수준을 제고한다는 정책은 이러한 사회의 현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의해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이 선정되었는지, 7대 관행 근절이 효과를 거둘 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정책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3점)의 점수를 주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의 '안전 기반 확충' 측면에서는 예산 등이 확보되었고 구체적 계획이 있는 만큼 실현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할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해야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점검·단속 강화'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 안전문제를 신고할 민간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의도한 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이라고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 안전 기반 확충에서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산불 감시용 CCTV, 구명조끼 보급사업 등은 단기적으로는 수혜대상이 생기지만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긍정적 파급효과는 국민 전체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은 일반적인 수준(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의 선정에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의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해당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하게 공개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 점검과 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동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모든 관행이 계획으로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세부과제별 담당부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일부처의 경우 책임소재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여지나, 다부처가 관련된 추진과제에서는 책임성 소재가 불분명할 여지가 있고(중앙일보, 2018)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 수준의 정책의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가점수는 보통(3점)으로 주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이 2018년 5월 3일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보인다. 해당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7개의 세부정책에서 '안전 기반 확충', '법·제도 개선',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 문화 운동'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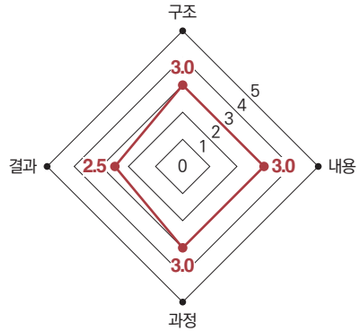
부정책 간 관련이 크지 않고 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자의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각 항목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안전무시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이 현장에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은 충분한지, 안전무시 관행 신고·점검·단속 강화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어떤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 주도의 안전문화 운동 역시 구체적 성과지표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할 때 부정적인 점수(2점)를 주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취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행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관행 변화를 강제적 수단으로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 설득 등 다양한 수단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일반국민은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7대 안전무시 관행 운동' 등이나 '안전보안관 제도'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만족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 만족도 수준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0), 내용(3.0), 과정(3.0), 결과(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5]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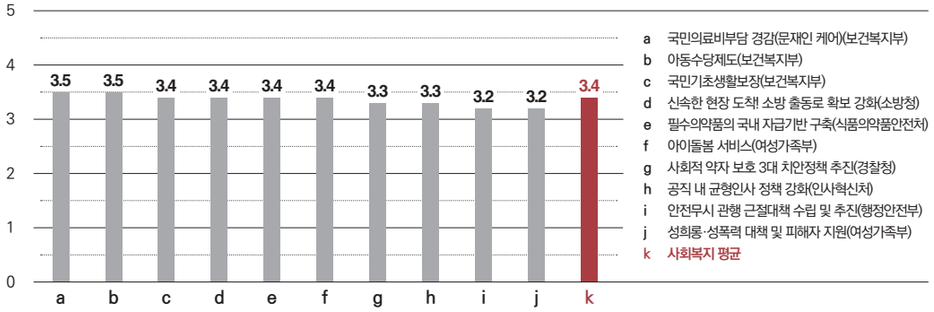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평균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구조(3.5점)와 과정(3.5점) 측면의 점수가 내용(3.2점)과 결과(3.2점) 측면보다 높았다.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평가항목은 평균적으로 정책구조에서 목표명확성(평균 3.68점)이 논리연계성(평균 3.37점)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이 분명한 목표와 변화모습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정책대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것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정교한 정책설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사회현안 반영도(평균 3.62점), 형평성(평균 3.55점), 실현가능성(평균 3.34점) 순서로 평가 점수가 낮아져서, 일반적으로 정책이 현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확보한 것에 비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과정 측면에서는 투명성(평균 3.20점)과 책임성(평균 3.16점)이 비슷한 점수를 받았고 정책결과에서는 효과성(평균 3.16점)보다는 만족도(평균 3.24점)가 점수가 더 높았다.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한편 가중치평가 결과 항목별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명확성 항목에서는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이 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이 3.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논리연계성 항목에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이 3.8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현안 반영도는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제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이 3.7점으로 가장 실현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이 낮은 실현가능성 점수를 받았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부담 경감이 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이 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3.4점을 받은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정책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아동수당제도,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지원,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책임성 측면에서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지원이 3.0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이 3.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2.7점을 받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이 가장 낮은 점수를,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이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측면에서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이 3.0점으로 가장 부정

적으로, 국민의료비부담 경감이 3.6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올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정책과 아동수당 정책(각 3.5점)이었다. 높은 정책을 받은 두 정책은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는 물론 연구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아이돌봄 서비스도 설문조사와 연구진 평가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진 정성평가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소방청의 소방 출동로 확보가 연구진 평가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낮은 순위(8위)였던 것이다.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가 높은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연구진 평가에서는 논리연계성을 제외한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투명성이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목표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의 규모도 작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종합평가를 받은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 정책(각 3.2점)으로 특히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의 효과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 다른 정책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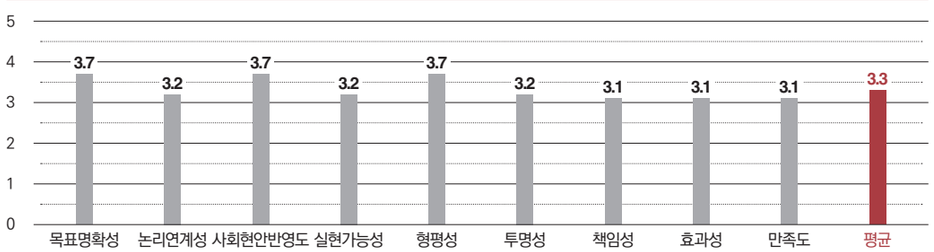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이 모두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인데, 이들은 오늘날 복지확대 기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견제 속에서 구체적 정책이 설계되고 있고, 이미 복지서비스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크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정책의 수혜대상이 폭넓고 보편적이다. 반면 낮은 종합평가를 받은 정책들은 주로 사회분야의 정책들이며, 사회의 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집행비용이 높고 정책이 다양한 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도 중요한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정부 주도의 단발적인 운동보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컨트롤 타워, 적절한 성과지표, 지역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 환류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결과 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개별 정책 내 평가점수 항목간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현안 반영도와 목표명확성이 다른 항목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책은 책임성 점수가 다른 항목의 평균점수를 상회하였다. 정책의 결과 측면의 평가 항목인 정책의 효과성과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다른 항목 평균점수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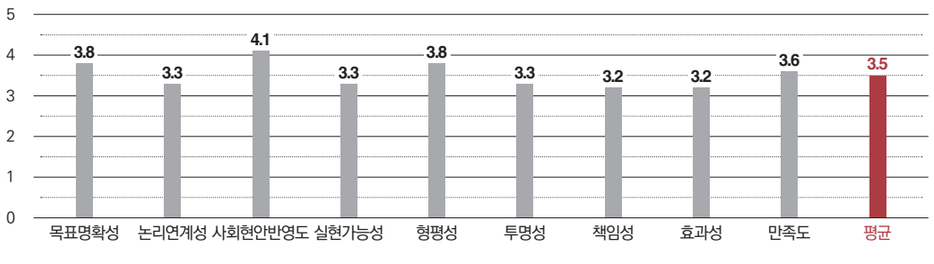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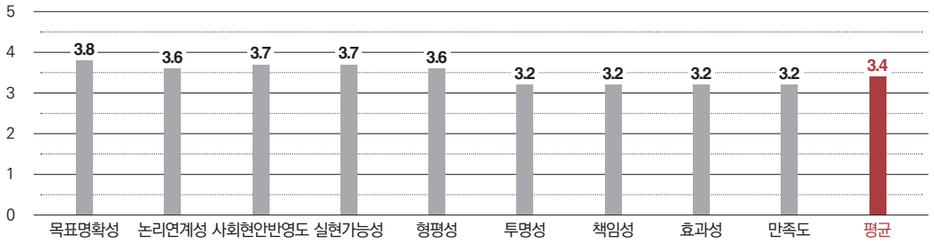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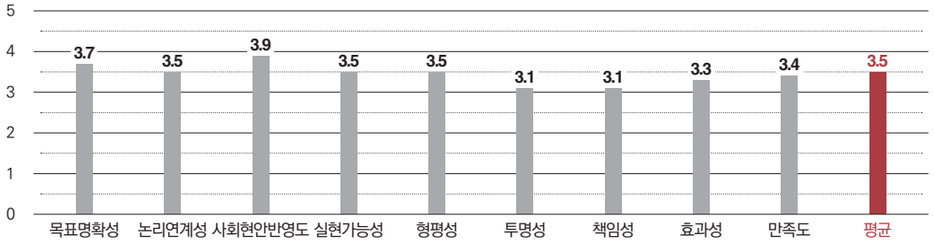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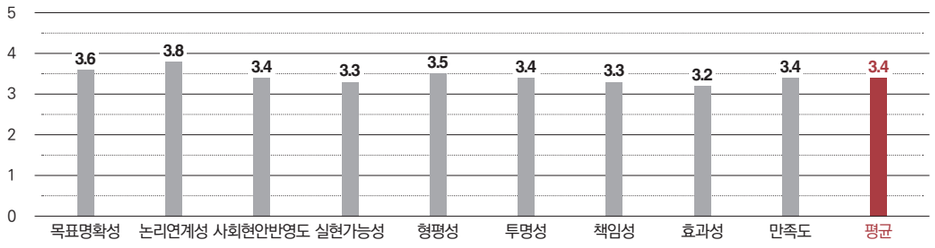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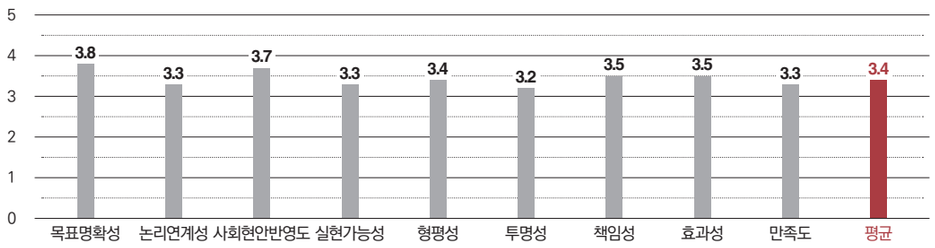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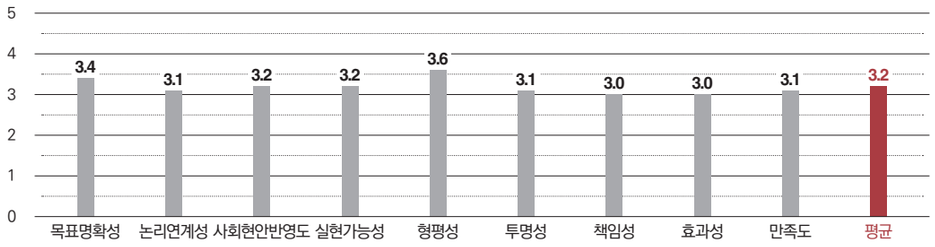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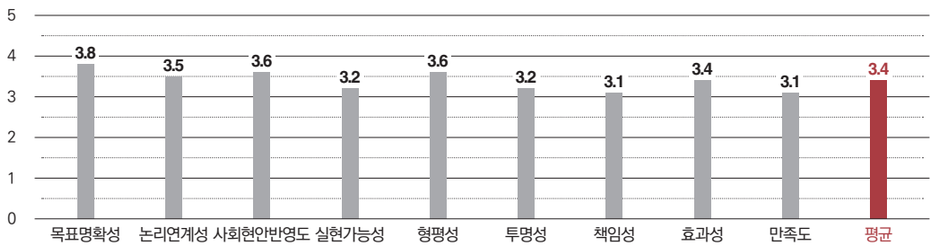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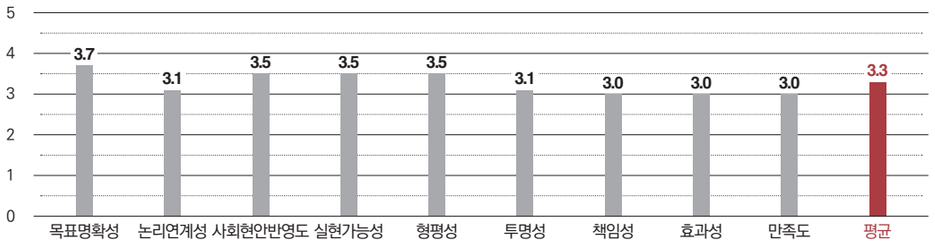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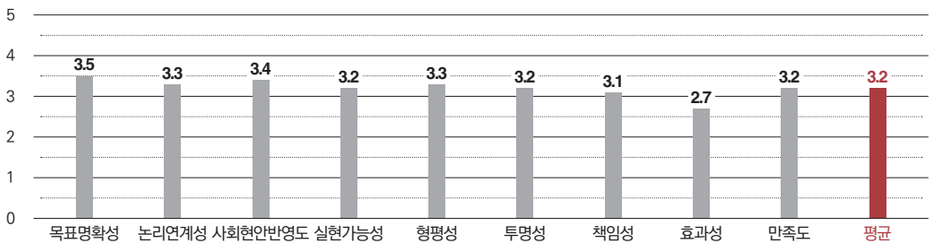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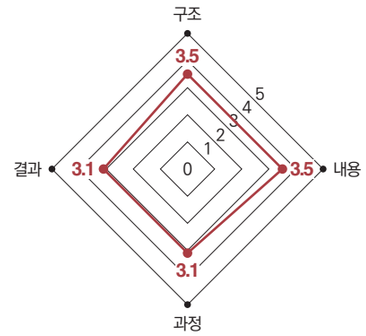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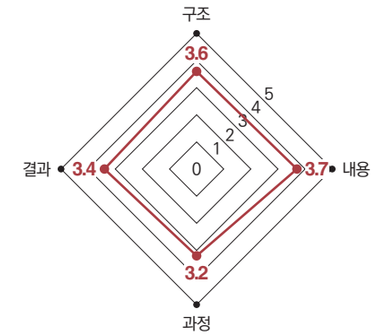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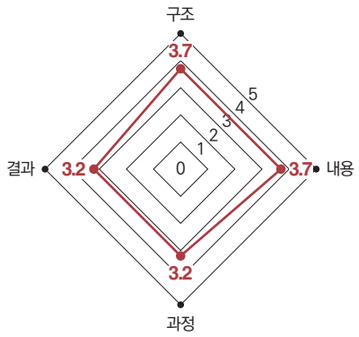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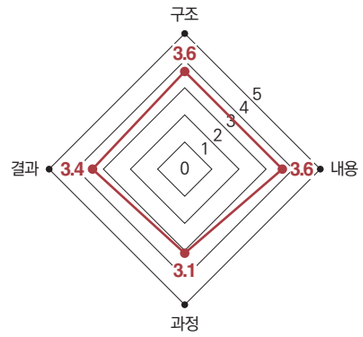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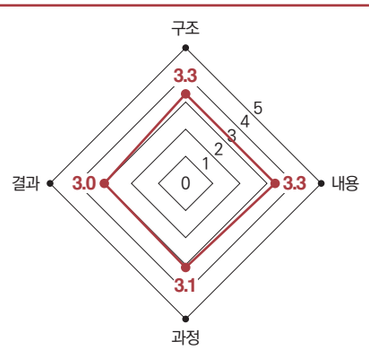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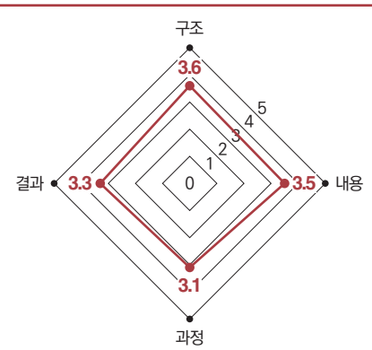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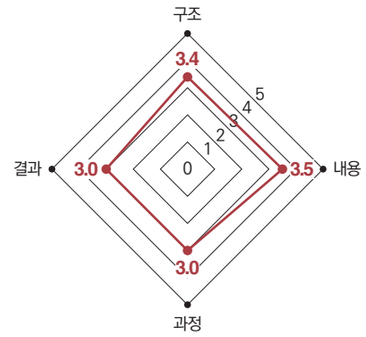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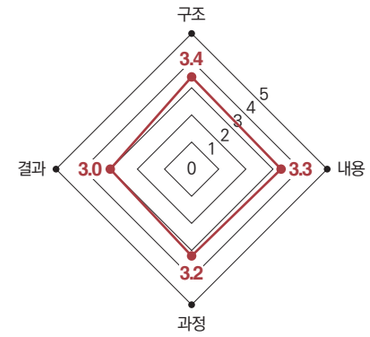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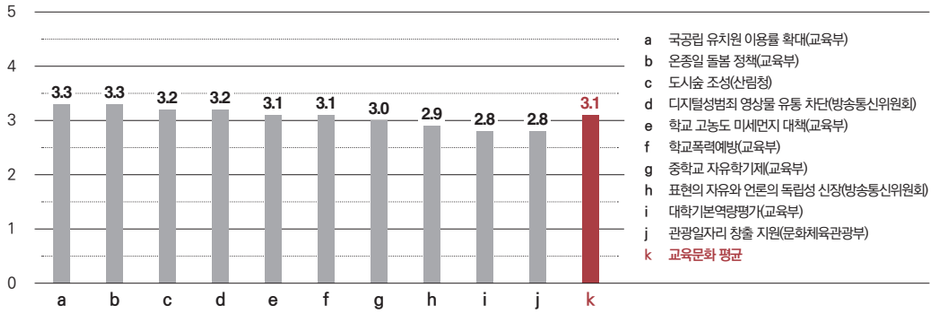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교육문화분야 10개 정책은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평균 3.1점을 받았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와 온종일 돌봄 정책이 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는 설문조사 평가 항목 가운데 논리연계성, 만족도,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만족도,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책임성, 투명성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과 도시숲 조성이 3.2점을 받았으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학교폭력예방이 평균치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3.1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은 2.9점, 대학기본역량평가와 관광일자리 창출지원은 각각 2.8점으로 평가를 받아 평균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기본역량평가와 관광일자리 창출지원의 경우 논리연계성, 만족도,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효과성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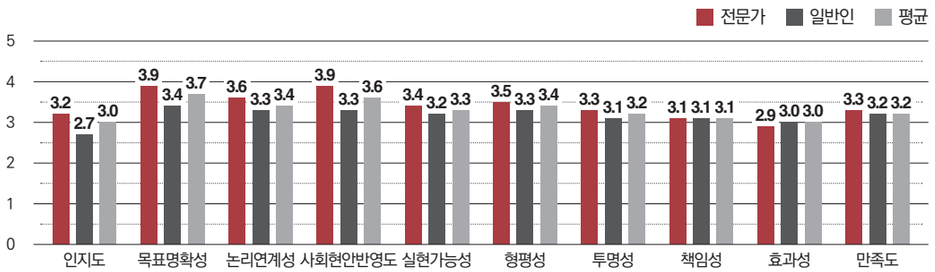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는 교육문화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5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4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1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1점을 받았다.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7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인지도에서의 일반인 점수는 교육문화정책분야의 정책인지도 일반인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4-90]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을 받아 평균 3.7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 점수는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명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또한 해당 정책의 열 가지 평가항목 중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6점, 일반인 3.3점으로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9점, 일반인은 3.3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6점을 받았다. 명확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중 가장 높은 전문가 점수를 보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는 3.4점을,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평균은 3.3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 실현가능성 평균인 3.0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주어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분야 정책 형평성의 전문가 평균(3.2점)보다 높은 수치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 집단은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3.3점을, 일반인 집단은 3.1점을 주었다. 평균은 3.2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 평균인 3.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동일하게 3.1점을 주었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대한 책임성 평가의 전문가 평균점수(2.9점)와 일반인 평균점수(2.9점)보다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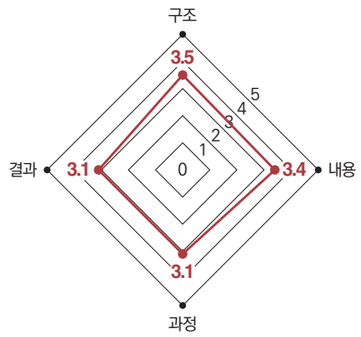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 집단은 2.9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0점을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유사한 결과값을 보였는데,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중 전문가 평균인 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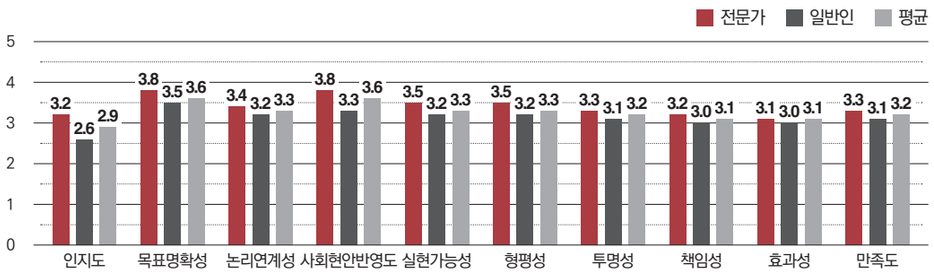
[그림 4-9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온종일 돌봄 정책

온종일 돌봄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와 함께 교육문화정책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5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4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2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1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2.6점으로, 평균 2.9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인지도에 대한 전문가 평균점수인 3.3점보다 낮고, 일반인 점수는 일반인 평균점수인 2.6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92] 온종일 돌봄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목표가 명확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는 3.8점이었고 일반인은 3.5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6점을 받았다. 전문가 점수의 경우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대한 명확성 평가의 전문가 평균인 3.5점보다 크게 높은 점수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온종일 돌봄 정책은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 평균 3.3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3.4점이었으며, 일반인은 3.2점이었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 정책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8점, 일반인은 3.3점을 주며, 두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사회현안 반영도의 전문가 평균점수인 3.4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온종일 돌봄 정책에 대해 전문가 3.5점, 일반인 3.2점으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각각의 수치는 교육문화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와 일반인 점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한 부분에서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형평성 평가에서 전문가 평균(3.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반인 점수는 일반인 평균(3.2점)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균 3.2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투명성 분야의 전문가 평균이 3.1

점, 일반인 평균이 3.0점임을 보아 두 집단 모두 온종일 돌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0점을 주며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 부분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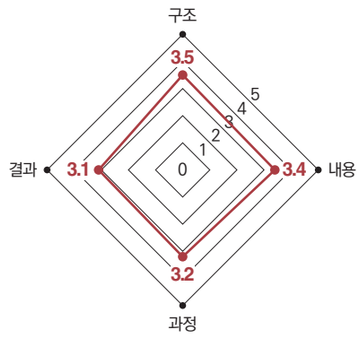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점수가 각각 3.1점, 3.0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점수 모두 효과성 평가에서 교육문화정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해당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3.3점, 일반인 집단에서 3.1점을 받아 평균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점수의 경우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전문가 평균점수인 2.9점보다 높은 결과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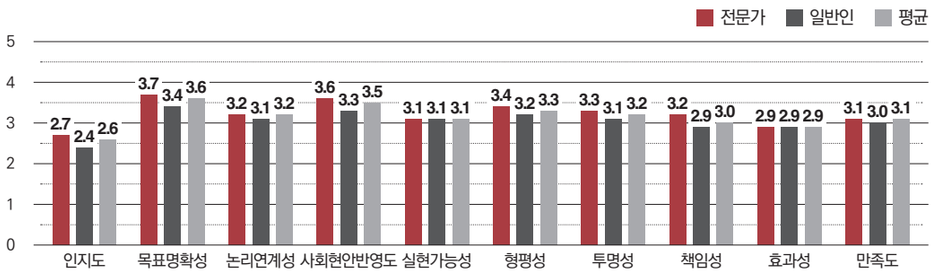
[그림 4-93] 온종일 돌봄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교육문화분야 평가 정책의 평균치인 3.1점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4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3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1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0점을 기록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2.7점, 일반인 집단은 2.4점으로, 평균 2.6점을 주었다. 인지도 부문은 해당 정책에 대한 다른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다.

[그림 4-9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4점으로, 평균 3.6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목표명확성의 전문가 평균인 3.5점보다 높았고, 일반인 점수는 일반인 평균점수인 3.4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3.2점, 일반인으로부터 3.1점을 받았다. 두 점수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인 3.1점 보다 높거나 같은 수치를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3점으로, 일반인 점수보다 전문가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 점수 평균인 3.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2점을 주며,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전문가 평균인 3.2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전문가로부터 3.3점, 일반인으로부터 3.1점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의 경우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 부분 전문가 평균(2.9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일반인 점수는 평균(2.9점)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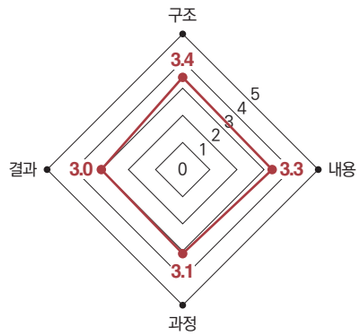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9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 보다는 낮아, 다른 항목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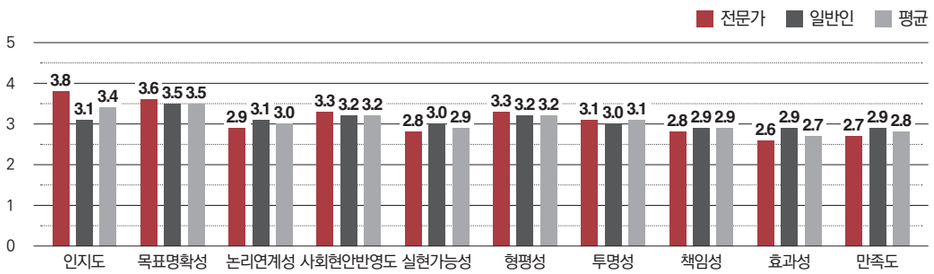
[그림 4-9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은 교육문화분야의 평균치인 3.1점의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2점을 나타났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1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0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8점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균 3.4점을 주었다. 인지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며, 평균점수인 3.1점 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다른 교육문화정책의 인지도 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6]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경우 명확성 부문에서 전문가는 3.6점을, 일반인은 3.5점을 주었다. 두 집단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각 집단 평균인 3.5점과 3.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균 3.0점을 주었다. 일반인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일반인 평균 3.1점과 같았으나, 전문가 점수의 경우 평균인 3.1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점수를 주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8점을,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두 집단의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각 집단 평균인 3.0점과 3.1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3.3점을, 일반인으로부터 3.2점을 받았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형평성의 전문가 평균점수인 3.2점보다 높고, 일반인 점수는 일반인 평균점수인 3.2점과 같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각 집단 평균인 3.1점과 3.0점과 동일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학교폭력예방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8점을,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의 경우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 평균 점수인 2.9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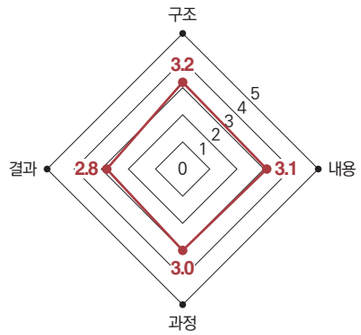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6점을,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문화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평균 점수인 2.8점보다 낮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학교폭력예방의 만족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두 점수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 점수인 2.9점, 3.0점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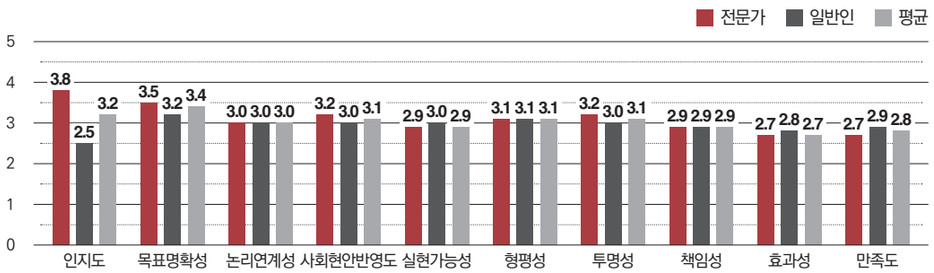
[그림 4-97]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2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0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0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8점을 받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두 집단의 평가는 다소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는 전문가로부터 3.8점을 받았으며, 해당 정책을 평가한 여러 항목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반인 집단은 가장 낮은 점수인 2.5점을 주었다.

[그림 4-98]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교육문화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전문가 평균인 3.4점보다 높았다. 반면 일반인 점수는 평균 3.4점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으로부터 모두 3.0점을 받았다.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균인 3.1점 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균 3.1점을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9점, 일반인은 3.0점을 받아 평균점수 2.9점을 보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을 주었다.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형평성 부문의 평균 점수인 3.2점보다 낮은 결과값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3.2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점수는 3.1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 평균 점수와 동일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9점을 주었다. 위의 투명성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 평균점수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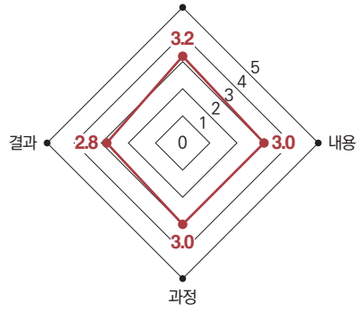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효과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8점을 주며, 교육문화정책의 효과성 부문의 전문가 평균(2.8점)과 일반인 평균(2.9점)에 모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과 비교했을 때에도 효과성 부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2.9점을 주며 평균점수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만족도 평균점수인 3.0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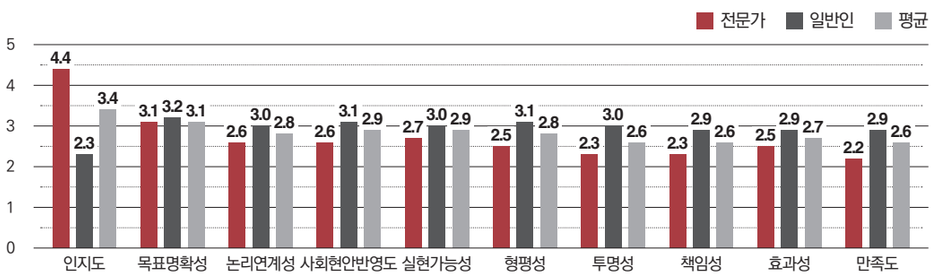
[그림 4-99]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대학기본역량평가

대학기본역량평가는 관광일자리 창출지원과 함께 2.8점으로 나타나 교육문화분야 평가 정책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0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2.8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2.6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6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문가 점수는 4.4점으로,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인 집단은 해당정책의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일반인 점수인 2.3점을 주었다.

[그림 4-100] 대학기본역량평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해당 정책의 목표가 명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3.1점, 일반인 집단으로부터 3.2점을 받았다. 다른 교육문화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전문가 평균점수(3.5점), 일반인 평균점수(3.4점) 보다 낮은 점수로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가 평가한 2.6점은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 점수 또한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일반인 평균인 3.1점보다 낮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 전문가는 2.6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위의 논리적 연계성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 점수 또한 일반인 평균점수(3.2점) 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점수는 2.7점, 일반인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점수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점수인 3.0점, 3.1점보다 낮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2.5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는 2.3점을,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

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낮았으며, 해당정책의 평가항목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는 2.3점이고 일반인 점수는 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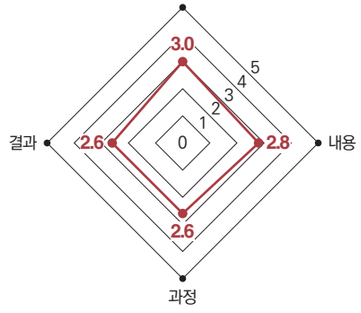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2.5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은 2.7점으로,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평균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2.2점을, 일반인은 2.9점을 부여하며 평균 2.6점을 받았다. 특히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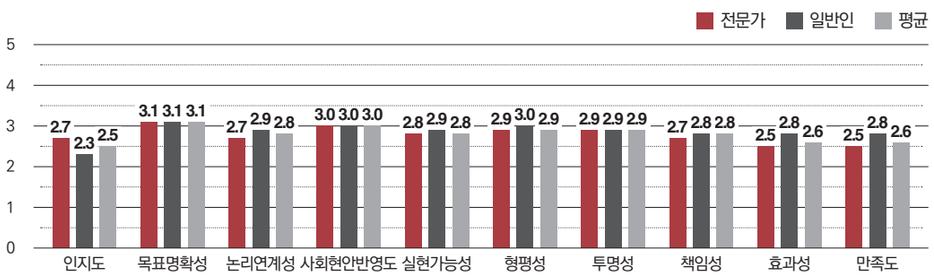
[그림 4-101] 대학기본역량평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관광일자리창출지원은 대학기본역량평가와 더불어 교육문화분야의 평가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0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2.8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6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는 2.7점을, 일반인은 2.3점을 주었다. 특히 일반인 점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항목 중 일반인 점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림 4-102]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명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었으나, 다른 교육문화정책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 점수 또한 일반인 평균점수인 3.4점보다 낮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 점수는 2.7점, 일반인 점수는 2.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8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균점수 중 가장 낮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점을 주었다. 각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점수인 3.4점, 3.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2.9점을 주며 평균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형평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문가는 2.9점을,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형평성 평균점수인 3.2점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9점으로 평가하였다. 위의 형평성과 마찬가지로 평균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 평균점수인 3.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7점을,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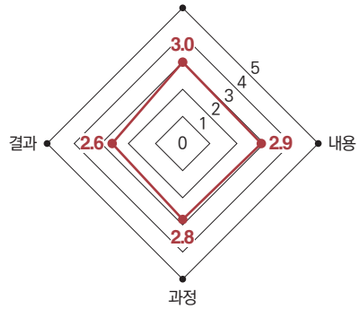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전문가로부터 2.5점을, 일반인으로부터 2.8점을 받으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점수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각 집단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특히 효과성은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전문가 점수를 받은 항목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2.5점을,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2.6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평균점수인 3.0점보다 낮다. 특히 전문가 점수는 위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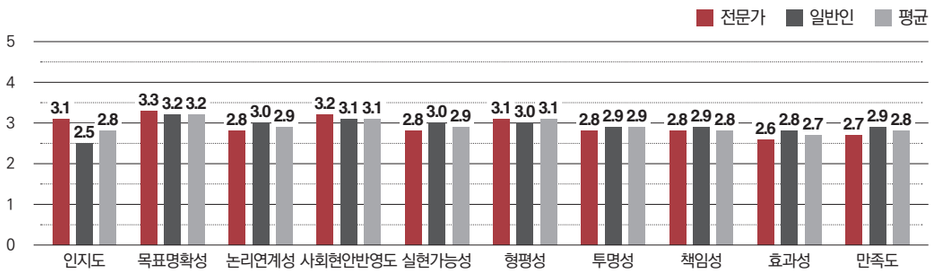
[그림 4-103]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은 교육문화분야 평가 정책의 평균치인 3.1점보다 낮은 2.9점을 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0점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2.8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8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은 2.5점을 주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해당 정책의 목표가 명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3점을,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3.2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인 3.4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2.8점을,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평균은 2.9점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들의 평균점수인 2.9점과 동일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책에 대한 반영도는 전문가로부터 3.2점, 일반인으로부터 3.1점을 받아 평균 3.1점을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 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반영도에 대한 전문가 평균 점수인 3.4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는 2.8점을, 일반인은 3.0점을 주었다. 평균은 2.9점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들의 평균점수인 2.9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며 평균점수는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해당 정책의 평가항목들의 평균점수인 2.9점보다 높아, 다른 평가항목 중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전문가로부터 2.8점을, 일반인으로부터 2.9점을 받았다.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점

수인 3.1점, 3.0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2.8점을, 일반인은 2.9점을 주어 평균점수는 2.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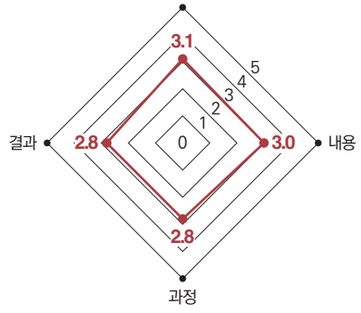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6점을, 일반인은 2.8점을 주며, 평균점수는 2.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점수는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른 교육문화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균점수인 2.9점보다도 낮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만족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2.7점을, 일반인은 2.9점을 주었다. 평균은 2.8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인 3.0점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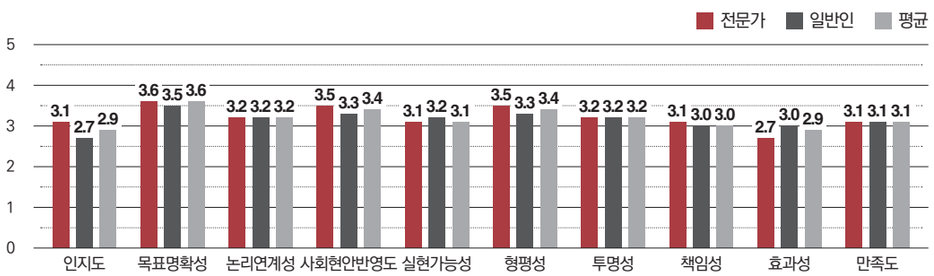
[그림 4-10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은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평균(3.1점)보다 약간 높은 3.2점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4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3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1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0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은 2.7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2.9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인지도에 대한 평균점수인 2.9점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그림 4-106]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는 3.6점을, 일반인은 3.5점을 주었다. 두 점수 모두 교육문화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각 집단 평균점수인 3.5점, 3.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2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점수는 교육문화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균점수인 3.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5점을, 일반인은 3.3점을 주어 평균점수는 3.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른 평가항목보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3.1점으로, 해당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보다 다소 낮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5점을, 일반인은 3.3점을 주어 평균점수는 3.4점이다. 다른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형평성 점수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아,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2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의 투명성 평균점수인 3.1점보다 높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3.1점을, 일반인은 3.0점을 받았다. 평균은 3.0점으로, 교육문화정책의 책임성 평균점수인 2.9점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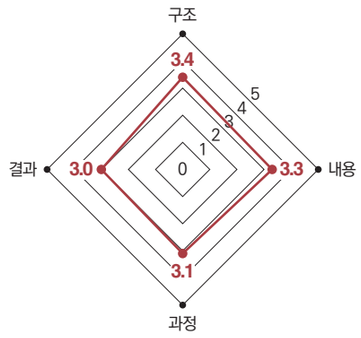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2.7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인 2.9점이며, 이는 해당 정책의 여러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해당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1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인 3.0점 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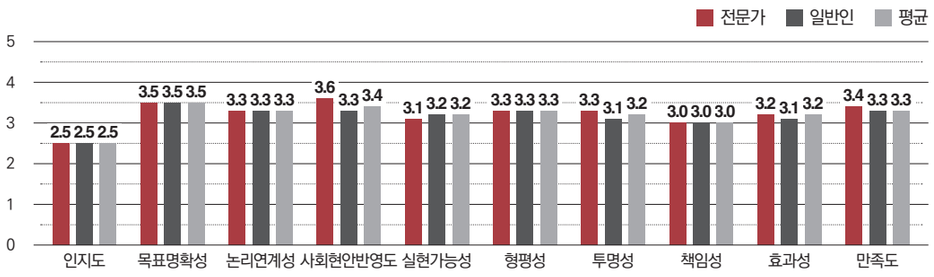
[그림 4-107]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도시숲 조성

도시숲 조성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는 3.4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3점을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1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2점을 받았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5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평가항목 중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8]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도시숲 조성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5점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의 평균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확성 부문은 해당 정책 중 일반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3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의 평균점수인 3.1점보다 높아,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도시숲 조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 전문가는 3.6점을,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3.4점이며, 해당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보다 높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1점을,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3점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점을, 일반인은 3.1점을 주어, 평균점수는 3.2점이다. 다른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투명성의 평균점수인 3.1점보다 높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점을 주었다.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책임성의 평균점수인 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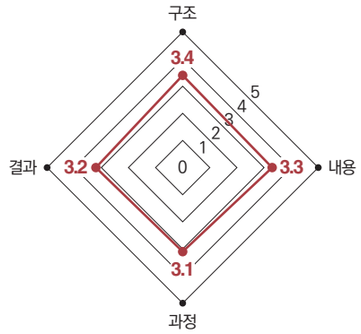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2점을,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평균점수는 3.2점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의 평균점수인 3.2점과 동일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도시숲 조성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는 3.4점을, 일반인은 3.3점을 주었는데, 이는 교육문화정책의 같은 평가항목에서 각 집단 내 가장 높은 점수이다.

[그림 4-109]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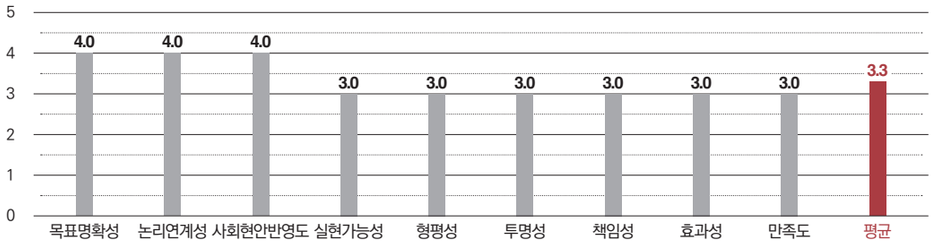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그림 4-110]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정책은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올해 초 25% 수준(보건복지부, 2017)이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 및 초중고교 부지 활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최소 2,600여 개의 학급을 추가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목표가 명확해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설 단계부터 유아 배치 계획 분석 등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여 공립 유치원에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담 체계 구축하여 공립 유치원 신·증설이 적합한 지역·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 교실 또는 중·고교 부지 활용하여 원도심 등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촉진하고 학급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급 당 유아 수를 낮추는 등 과밀학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대안들이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비교적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유아교육 기관이 국공립 유치원임에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018년 초 25%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최근의 사립 유치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최근의 사립 유치원 사태의 발생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단기적으로 향상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현존하는 사립 유치원의 존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40%까지 향상되면 1,020개의 사립 유치원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b). 폐원하는 사립 유치원의 후속 방안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엔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이 유치원 연령대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집중된 정책으로 정책이 국민 전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교육부는 전국에서 2019년 내 1,000개 학급 신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019년 약 2,000억~2,200억 원의 예산을 배분(news1, 2018)하여 3월 운영을 목표로 500개 학급을 설치했고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아를 모집할 것이라 밝혔다. 2019년 하반기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 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추가로 500개 학급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설립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어떤 지역이 왜 먼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2017년 12월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 이념을 체계화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가장 주된 계획 중 하나는 2021년까지 단계별로 주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 사립 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상반기 500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과 교원을 확보하고 하반기 500학급을 위한 예비비를 검토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환류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정책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의 책임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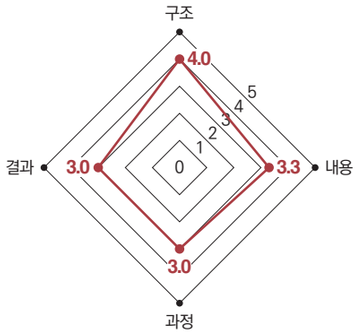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2017년 말에 시작한 초기 단계의 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추진으로 신설된 500개의 유치원 학급은 내년 2019년 3월부터 운영되므로 정확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 또한 부모협동형 국공립 유치원에 관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임대를 활용한 유치원이 개원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내년 3월 신설될 500개 학급을 확보한 상황이고 하반기 500개 학급신설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한 면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으로 신설된 500개 학급은 내년 2019년 3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는 높지 않다. 또한 내년에 신설되는 500개 학급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78개), 경기도(158개)에 치중되어 전국적으로 유아 학부모의 만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일보, 2018). 하지만 현재 학부모의 국공립 선호도가 50% 이상이라는 점,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 사태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는 유아 학부모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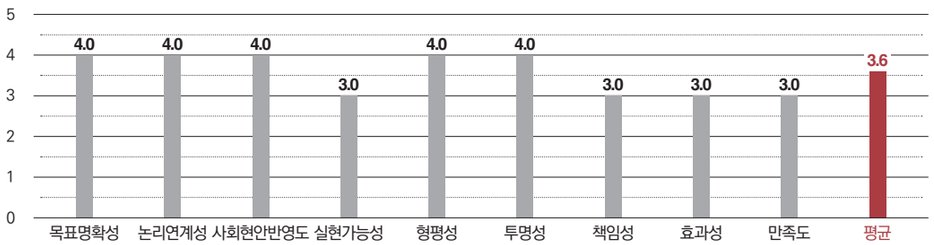
아래에서 보듯이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3),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에서는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1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온종일 돌봄 정책

[그림 4-112] 온종일 돌봄 정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온종일 돌봄 정책은 변화하는 양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존의 돌봄교실 중심과 분절적인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제한되고 분절적인 기존 돌봄 정책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통합하는 온종일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 모델의 개발과 확산, 기존 초등돌봄의 질 제고와 운영 내실화,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와 유관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1단계(2017~2018년)의 생태계 구축 시범 사업, 2단계(2019~2020년)의 돌봄체계 확대기, 3단계(2021년 이후)의 전면적인 온종일 돌봄서비스 실시 등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초등학교 방과 후, 방학 중 부모의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24만 명, 지역아동센터 8만 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천 명 등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는 총 267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학교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 돌봄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수요와 학부모의 관심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온종일 돌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발표한 것을 계기로 '범정부 공동추진단'이 곧이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4월 19일에 확정하게 되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선구, 경기 시흥시, 경기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6월 26일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18b). 2018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여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개 지역을 3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실 확충하기 위한 재원은 2018년 추경예산에 210억 원을 포함하여 마련하는 등 아직 시험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더구나 중앙-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단체 등을 어떻게 통합하여 하나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온종일 돌봄 정책은 전국의 267만 명 초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과 학부모의 공통된 요구를 편중 없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기대효과가 형평성의 기준에 잘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다소 편중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국회예산정책처, 2018) 자원 배분과 지역 수요를 적절하게 대응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추진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에 실행계획 수립, 사업공모, 선정, 예산 확보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이 4월 19일에 확정되고,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 공고(5월 4일), 사업설명회(5월 8일), 사업계획서 접수(5월 30일), 선정평가(6월 19일), 9개 지역 최종선정(6월 26일) 등 매우 짧은 기간에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부처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성가족부 실장, 세종시와 경기도의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 8명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논의 구조였다고도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청을 위해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을 변경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어왔으나, 2018년 추경예산의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사업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배분되도록 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공모 및 선정, 국고 예산 배분, 집행,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현재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그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평가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선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의 시설 확충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므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이르다. 또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현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혁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 중심 온종일 돌봄이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평가도 최소한 향후 3년간 선도사업의 실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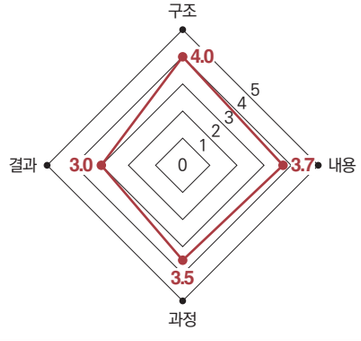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종일 돌봄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정책성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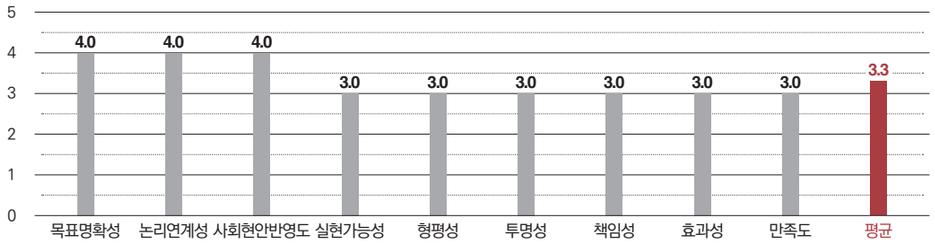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은 정책설계의 구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4.0), 내용(3.7)과 과정(3.5)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 측면에서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3.0).

[그림 4-113] 온종일 돌봄 정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그림 4-11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여 왔다는 면에서 정책목표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를 2020년까지 단계적 설치 확대하고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교육부, 2018e2: 6).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증가했으며 특히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점점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회 현안반영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교육부는 18년 3월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20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 시설이 없는 학교는 전국 617개교로(전국 초중고교 중 5%에 해당)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학교생활에 집중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는 면에서 형평성 항목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해당 정책은 2016년부터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8년 대대적인 보완을 겪게 된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시민단체, 학교 현장,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교육부 2018e2: 5).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교육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교육부는 2015년 12월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2017년 이후로도 꾸준히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 및 학교보건법 시행 및 규칙을 일부 개정했으며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교육부 2018e2: 8). 2018년 4월 교육부는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시민단체, 학교 현장,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 2018e2: 5).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볼 때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교육부는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해당 정책의 단기적 효과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 미세먼지 규정 또한 엄격화 되었다. 이에 학교는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무자, 실외 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은 의무적으로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정도를 확인한다. 만약 미세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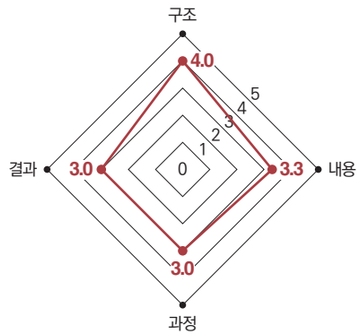
지 농도가 기준 이상인 날 야외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을 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외 체육활동은 실내에서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에게는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정화 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 여전히 학교 내 공기 질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기준 이상 시 정도에 따라 대응 요령을 구체화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했다. 또한 각 학급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안내 팸플릿을 부착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한 것 같다.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정책의 실시는 아직 미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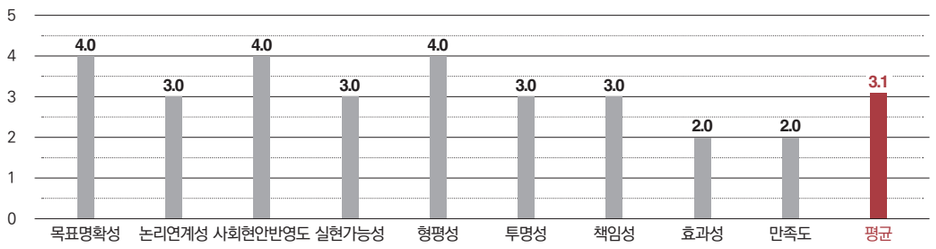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3), 과정(3.0), 결과(3.0)순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1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학교폭력예방

[그림 4-116]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문화 지원'을 비전으로 세우고 단위학교 예방교육 역량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심화 및 각급 학교별 다양화,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책목표가 매우 명확하다. 또한 정례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이 없는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가, 단위학교, 학교급별로 매우 다각도로 프로그램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생, 교사의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매체와 콘텐츠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당국에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정책대안이 백화점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학업에 바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만하다. 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역별 프로그램들이 각각 심화·다양화되고 전달방식도 동료, 상담, 체험, ICT 등이 총동원되고 있어서 프로그램들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학교폭력예방 효과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판별하여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리해야 할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또래를 대상으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논의는 미성년자들의 폭력 및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육체적, 언어문화적, 사이버상의 다양한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은 사회적인 우려와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이 국가, 지역, 단위학교별로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또래, 개별교육, 정규교육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이수하거나 적용 받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교원의 입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종류도 어울림, 또래상담학교, 학교관리자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별 프로그램들이 각각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총체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순응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수단의 공급비용뿐만 아니라 대상집단의 순응 및 수용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실행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대상은 초·중·고의 모든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폭력 위험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 상담학교를 2014년 6,396개교에서 2018년 8,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2015년 100개교에서 2018년 150개교로 확대하였고, 국가 수준 어울림 프로그램을 기본-심화-심층의 3단계로 구조화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감정조절',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4개 역량의 총 16종 심층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중·고 3종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기본프로그램과 2019년 3종의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UCC, 웹툰, 플래시몹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단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국가 어울림 프로그램 교원연수(8,929명), 또래 상담학교 지도교사(4,177명) 및 상담자(138,945명) 연수, 학교관리 및 책임교사 연수(22,348명)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고 폭력 사안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 직접적 당사자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이원화된 처리 절차의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의 도입을 발표하면서(교육부, 2018g7)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의제를 설정하기 보다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의 처리(학교장 종결권, 학생부 미기재)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는 하향식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핵심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학교폭력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은 매우 종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반면에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가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피해자, 가해자, 단위학교별로 분리되어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학부모의 참여 범위 제한 및 전문가 위원을 위촉 수준이 어느 지점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교육부와 관련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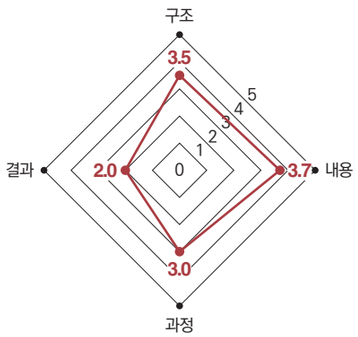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 정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학부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1,26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장혜진, 2018), 학부모의 74.9%가 최근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88%는 자신의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60.7%는 자신의 아이도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형법 등 형사법에서 폭력행위의 정의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무엇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학부모와 일반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의 법제도적 토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교육내용도 점차 심화·체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범하는 중대한 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학교 안과 밖의 폭력예방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반감시키는 청소년의 중대 폭력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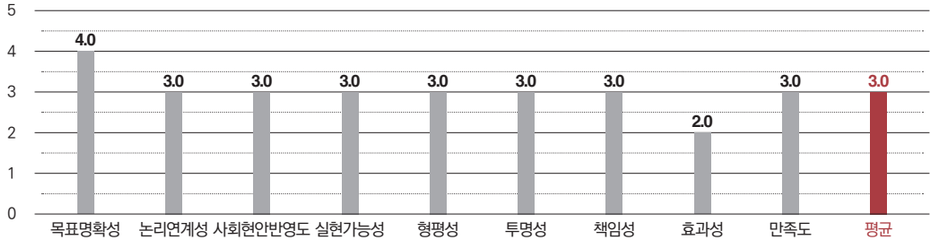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그 내용의 측면(3.7)과 설계의 구조 측면(3.5)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과정의 측면(3.0)에서 중립으로 평가되고 결과의 측면(2.0)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4-117]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림 4-11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2013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는 면에서 목표 명확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이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 간에 오후 활동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해당 정책은 중1 학생들에게 입시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교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는 자칫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자신 자녀의 학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과 후 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면에서 사회 현안을 반영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높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또한 현재의 대학입시가 변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를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여기고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몰입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자유학기제의 오후 활동은 주로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질이 지역 간 그리고 학교 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의 역량, 지역의 자원,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에 따라 이러한 오후 활동의 질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높게 평가되지 못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국민에게 소개되었다. 이후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같은 해에 자유학기제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 42개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4년 80개교 2015년 2,551개교로 확장했으며 2016년에는 전국 중학교에서 2018년에는 전국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자유학기제와 자유 학년제를 시행해 왔다(전윤경, 2018: 104~105). 이러한 점진적인 노력을 볼 때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 보이지만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확대 전에 자유학기제의 부작용과 다양한 학부모의 의견을 깊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에 전면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각 전년도에 실행한 자유학기 실천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된 자유 학기 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수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환류 과정은 개개의 학교나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만 한정되어 이루어질 뿐 자유학기제의 전반적 내용에 관한 개선은 부족하였다. 이에 자유학기제 정책의 책임성은 평균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례를 공유할 뿐 해당 지역에 알맞은 예산 및 인력 배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다른 교육환경 문제를 해소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부족한 인력을 사범대학생과 대학생 봉사단으로 보충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측면 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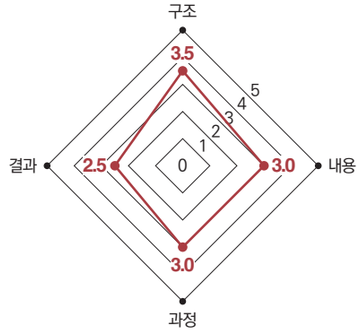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수업만족도와 체험활동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자유학기제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수업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부모 96%, 교사 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윤경, 2018). 하지만 정책의 만족도 지표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다. 관련연구에서 연구한 학생의 대표성과 연구방

법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 경우 해당정책이 입시교육부분에서 차지하는 거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다보니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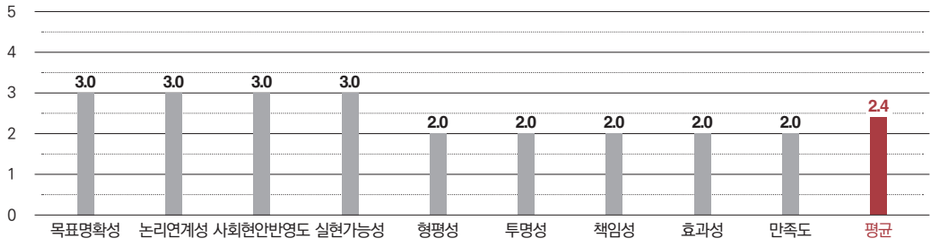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2.5)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에서는 목표명확성에서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1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대학기본역량평가

[그림 4-120]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책은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 역량진단을 중심으로 개선하면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와 과정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정책의 내용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해 대학의 등급을 정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 국고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가 재설정한 정책 목표는 실제 정책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다소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주요한 정책수단은 총 323개교의 일반, 산업,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일부제한대학(I유형), 재정지원전면제한대학(II유형)의 4등급으로 나누고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다만 진단평가의 지표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경쟁대상을 권역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며, 재정지원제한(일부, 전면) 등급을 3% 선으로 억제하고 정원 감축 규모도 1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1주기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진단 평가와 재정지원 및 정원감축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학 체질의 개선과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 등의 전략적 목표와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예를 들어, 전체 323개 진단 대상 대학의 64%가 우수 대학과 다소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대학을 구분하고 그중에서 53.3%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는 기준이며, 이런 기준이 권역별:전국 단위의 5:1 비율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때, 그러한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학생모집의 승인 권한을 활용하여 대학을 성과 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대학의 발전계획과 실행의 실태를 점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고등교육 품질의 기준과 미래 대학교육의 장기적인 좌표를 과연 정부 당국이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저출산 노령화로 축약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속에서 과거 사회발전 및 확장기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은 대학 교육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에 비해 해당 정책의 주요 수단은 표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부 주도 평가와 차등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이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의 행정지도와 재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맥락에서 정책수단의 실행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례에서 정책수단의 실행가능성과 고등교육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은 단선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5개 권역과 전국단위의 비율을 5:1로 정하고 전체 323개 진단 대상 대학의 64%를 우수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53.3%가 권역별로 우수 대학을 선정하게 함

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균형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설계로 인해 우수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모순은 해당 정책이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발전의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규범적 원칙을 모두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대학진단평가의 과정은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위원단의 구성과 평가는 매우 폐쇄적이고 통제된 조건에서 설정된 지표와 지표별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 자료(교육부, 2018g3)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 간에도 의견 교환과 토론을 금지하며, 평가 시간 외 숙식, 이동도 분리하거나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폐쇄되고 고립된 조건에서 어느 누가 대학의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품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하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통제 조건을 갖추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대학을 중앙집권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상호 논의도 철저하게 차단된 평가위원단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만하다.

[표 4-1] 진단의 공정성 및 진단위원의 독립성 확보 장치 개요

공모	선정	입소 전	진단 중
공모 시스템을 통한 개별 공모	보직/평가 경험 순, 대학 1교당 1명 선정 원칙	– 진단 정보(진단 대상 대학, 지표, 장소 등) 비공개 – 전자통신 기기 회수 – 보안 서약	– 지표별 진단팀 운영 – 폐쇄형 합숙 – 이동 동선 분리 – 진단장 등 모니터링 – 숙소 보안요원 배치 및 CCTV
공모자 중에서만 100% 선정	위원 선정 시 외부 영향력 제거, 교육부 퇴직자 배제	진단위원과 대학 등 외부와 접촉 차단 타 진단그룹 진단위원 간 접촉 차단 진단위원 간 평정 관련 사항 합의 및 공유 금지 진단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대학기본역량 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초점은 선정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과 학생정원을 차등화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을 보인다. 부족한 자원과 감소하는 학령인구라는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고 미래형 고등교육의 분명한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고등교육이 넘기 어려운 한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진단 평가 그 자체보다는 확인된 대학 교육의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에 정부 당국의 행정, 재정적 자원과 관심을 집중한다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부분에서 기업 혁신을 정부 당국이 스스로 하거나 대신할 수 없듯이 고등교육 혁신의 주체는 대학이지 정부 당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문 분야별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대학과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 혁신과 교육 개선을 꾸준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적 토대를 개선하고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정부 당국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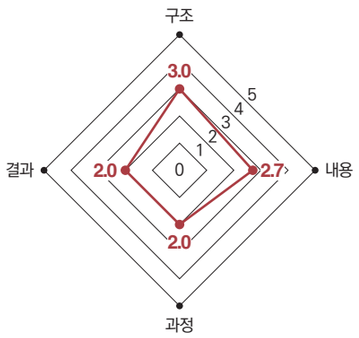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대학교육의 상태와 미래의 전망에 대한 염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대학의 기본역량이 무엇인지, 정부가 설정한 대학교육 발전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선정된 지표로 강조되는 측면에 자원과 노력이 집중되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중장기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난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학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대학과 일반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나 그러한 목표를 정부가 설계한 진단 평가와 행정·재정적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집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신뢰가 다소 부족하며 만족도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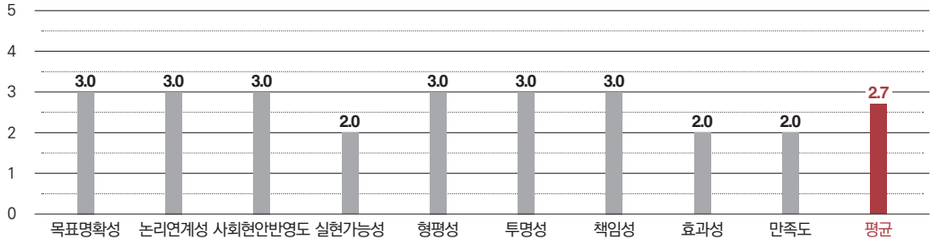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책은 구조의 측면(3.0), 내용의 측면(2.7), 과정의 측면(2.0), 그리고 결과의 측면(2.0)에서 모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21]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그림 4-122]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두 가지 목표 모두 거시적으로 큰 목표로 명확성이 다시 떨어져 보이며 정책기간 또한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중간점수를 받게 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벤처육성 (2012년 시작), 관광두레 육성(2013년 시작),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2014년 시작), 관광 일자리 센터(2018년 시작)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러한 세부정책들이 시기적 그리고 정책성격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각 세부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침체와 일자리의 양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공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정책은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적시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관광기업은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대다수(85.3%)로 여전히 규모가 영세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조업의 불확실성 확대 및 반도체 일단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기업의 투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실제 고용 또한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양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d: 1). 하지만 해당 정책은 이러한 사회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의 불황에서 나타난 대량실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경우 관광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는 달라 보이며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생기는 일자리가 대량실업으로 생기는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메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이 특정 산업과 지역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와 협업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고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 이에 투명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는 진행 중인 소관 과제가 완료된 후 언론 연계기획 기사와 SNS 및 온라인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혀 추후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황에 대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혁신 성장의 방안으로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해왔다. 2018년 2월 콘텐츠 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공간조성을 시작으로 관광벤처 보육센터 지역계획을 발표했으며 2018년 4월에는 관광벤처보육센터 입주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콘텐츠 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컨설팅과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운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발전을 고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2018년 1월 지역형 코리아 투어카드(강원)을 출시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테마여행 관광사업자 공모전 개최 및 대중교통 관광지도 제작, 지역형 코리아 투어카드(남해안)를 제작하여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한 기간이 짧아 아직 해당 정책들의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피드백 또한 부족해 정책의 책임성 부분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그간의 정책의 성과로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400여 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및 약 1,400개 일자리 창출되었으며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공고·이력서 총 991건 등록, 취업컨설팅 304회, 취업특강 5회 실시(2018년 4월 말~6월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7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1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320명이 취업하였다. 그리고 관광두레육성으로 지역관광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운영됨으로써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의 일자리 495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아직 정책의 효과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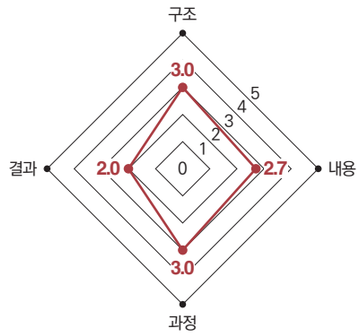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관광산업 특성상 특정 지역에 편향되어 발전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관광업계의 대형 유통 플랫폼 기업들과 영세 기업 간에 불균형한 경쟁 구조로 인해 수 영세기업의 성장이 뚜렷하지 나타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이 체감될 정도로 정책의 효과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의 만족도 또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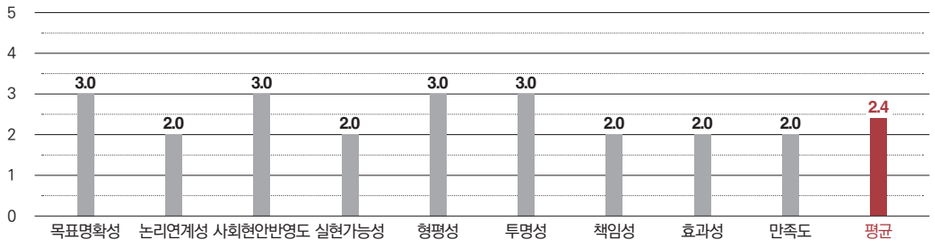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0), 과정(3.0), 내용(2.7), 결과(2.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항목별로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평가가 높지 않았으며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23]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그림 4-12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서 어느 특정 정책에 의해 설정되거나 달성될 목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면 그 정파적 토대와 상관없이 모두 추구해야 할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정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을 감안한 합리적 방송편성규제를 추진하고,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엄정성,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의 마련, 언론인 해직 방지와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추진하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게시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전환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절차 개선, 공영방송 평가체계 강화, 편성위원회, 수신료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의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협애하거나 이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수단의 체계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들의 집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언론사 지배구조 개혁 등과 같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적 개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나기도 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치적 상황의 변동과 집권세력의 변화에 좌지우지되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공영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공정하고 정확한 양질의 언론과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해당 정책의 실행과정은 법제도의 개선을 이루면서 그 결과로서 방송지배구조의 변화, 방송편성의 변화 등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및 언론 내부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개혁 활동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사회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사장 교체를 위한 행정·사법적 작용, 방송편성의 급격한 변화 등 일련의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 신장을 모토로 한 활동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방송조직 내부에서 제작종사자와 경영진 집단 간의 알력과 투쟁의 형태로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 2018a). 이와 대조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격 및 명예 보호와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새로운 지점에서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등 법제도의 개선은 지체되면서 오히려 인터넷 미디어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과 허위 정보 및 페이크 뉴스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잣대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8b). 2017년 12월 KBS, MBC, SBS, EBS 등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147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 부당 징계,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 부당 처우, 방송사 지배구조, 외주제작 거래 관행,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14개 방송사 133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부여하였는데 그 기준에 미달한 14개 방송국에 대해서도 추가 심사를 거쳐 모

두 재허가를 부여하였다. 유사한 사례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나타났다.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는 과락항목 없이 기준 점수를 상회하여 재승인되었는데 반해 TV조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강화된 심사의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MBN은 과락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건부로 재승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의 공정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엄정한 심사를 공언한 것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해당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법제도적 토대를 광범한 사회적 논의와 결정자들의 숙의를 통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정책내용의 아젠다를 발굴해나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지배구조의 개혁조치는 정부의 숙의와 제도변화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관련 조직의 내부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인 인적 청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과거의 정치적 편향성을 새로운 정치적 편향성으로 대체하는 형국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경영진과 이사회의 인적 구성 재편에 의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안의 선후와 우선순위를 가려 질서 있는 진행을 유도하거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아젠다를 충분하게 알리는 역할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새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분야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편성 절차,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하여 개혁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제반 정치적 환경의 격동 속에서 부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사회·정치적 동의를 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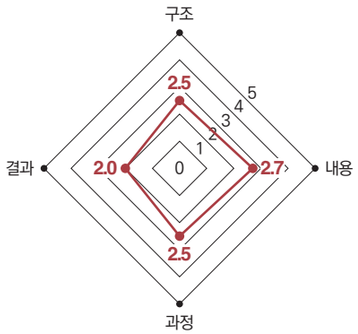
2018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20위가 상승하여 4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권교체기에 제한 없는 언론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정책이 아직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거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책은 아직 초기의 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개선 효과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 수단들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에 정책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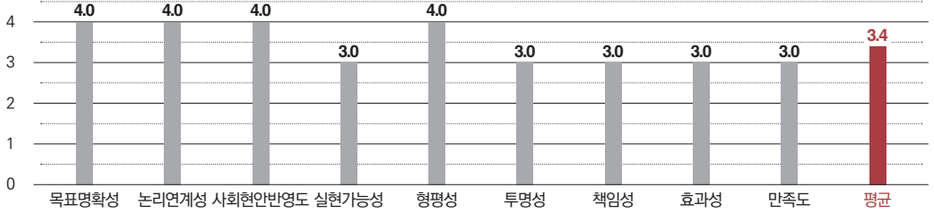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책은 구조 측면(2.5), 내용 측면(2.7), 과정 측면(2.5), 결과 측면(2.0)에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2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그림 4-126]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물 대상 집중점검 및 긴급심의, 기술적 조치 적용 확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인터넷상 유통 방지 및 피해 최소화하고자 추진하여 왔으며 정책목표는 자세하고 명확하여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심의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확대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조기에 원천 차단하여 왔고,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 정보 DB의 보급을 확대하고,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등 기술적 조치의 고도화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인터넷과 카메라 장비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 전송,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의 인터넷상 유통,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뿐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정보의 비동의로 유포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며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해당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적절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국회입법조사처, 2018b: 12). 해당정책이 이러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정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업로드되는 영상물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정부의 감시를 피해 또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어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민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건수를 국민에게 공개해왔다. 영상물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자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00일간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7월 31일 중간 결과 발표와 향후 추진될 후속 조치까지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유통방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상물이 업로드 되는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여 업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정책의 투명성이 좋게 평가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점검하고 영상물 적발건수가 증가하였을 때는 집중점검 기간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중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상물 업로드를 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습 유포자 ID에 대한 처벌을 경찰청에 의뢰하고 불법광고된 회선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해지 요청 등 다방면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의 사후적 조치만 취할 뿐 범죄차단을 위한 제도 및 기술 개선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책임성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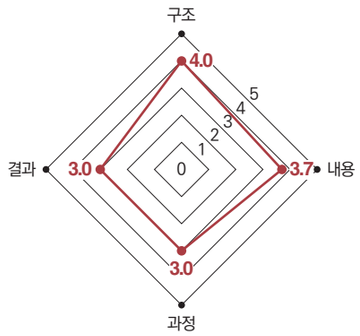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하여 2017년 9월부터 총 1년간 12,267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했다(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2018: 2).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효과가 국민이 느낄 만큼 크게 나타난 것 같지 않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업로드 하는 것을 단절할 수 있는 입법이 없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정책수단에 있어 한계가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은 이미 업로드된 영상물을 사후 차단하는 조치에만 한정되어 있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내 접근을 막는 조치 등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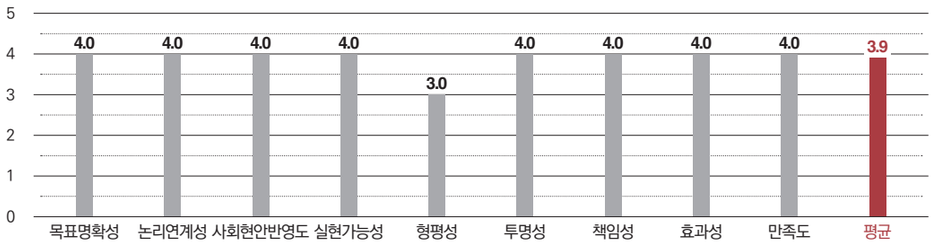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7),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항목별로는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그리고 형평성에서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27]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도시숲 조성

[그림 4-128]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도시숲 조성 정책은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산림복지 공간으로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조성 및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시 생활권에 다양한 유형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의 보호와 보건위생을 위해 공단, 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과 주변지역,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을 활용하는 생활환경숲, 도시지역의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협소한 도시의 생활공간에 거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녹색쌈지숲 87개소(58ha), 산림공원 23개소(69ha), 생활환경숲 72개소(85ha) 등 다양한 형태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예방하거나 시·도의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여 품질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도시공원,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도시숲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생활권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정책대안들의 품질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지 확보를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지역주민 협의체를 통해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도시숲 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방비 부담금 등 보조금 사업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계획 및 집행 체계를 볼 때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도시숲 정책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산림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누적 기준 도시숲 조성 실적은 전국 3,609개소 총 4,515ha에 이르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a). 이와 같이 정책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중소도시나 도농복합도시보다는 주로 많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a).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도시숲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종의 다양화, 안내표시판, 나무이름표 등을 신규 사업 설계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도시녹화 기부와 숲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도시숲 매뉴얼과 도시숲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며, 산림청의 사업타당성 심사, 시도 현장책임관 제도, 사업예산에 대한 관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들이 잘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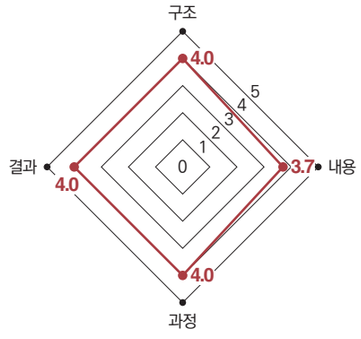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녹화 노력에 따라 도시숲 조성사업이 2016년 326ha에서 2017년 336ha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숲 조성 면적도 2016년 130ha, 2017년 161ha, 2018년 175ha로 증가하였다. 2017년까지 조성된 도시숲의 누적 면적은 총 4,515ha에 달한다. 산림청은 향후 예산확대와 기업 및 국민참여를 통해 매년 500ha이상 도시숲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8).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사이, 공단, 병원, 요양소 시설, 유휴지와 국공유지의 산림공원 다양한 형태의 숲이 조성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이 생활환경의 저해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도시숲 조성 정책은 구조 측면(4.0), 내용 측면(3.7), 과정 측면(4.0), 결과 측면(4.0)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29]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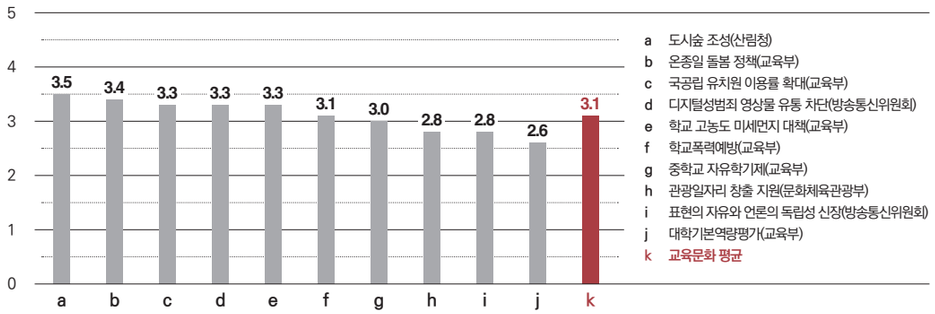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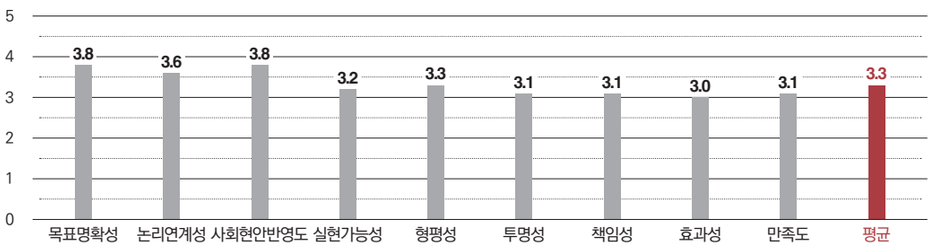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대한 설문평가와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가중합산한 종합평가에 따르면 전체 10개 정책의 평균점수는 3.1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립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정책은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3.5)이었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지난 수년간 교육문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온종일 돌봄 정책(3.4)이 높게 평가되었다. 지난 평가에서 초등돌봄교실이 교육문화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는데 새 정부가 이를 지역 중심 온종일 돌봄으로 전환하면서 절대평가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3.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정책(3.3), 학교 고농도미세먼지 대책(3.3)이 뒤를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중상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정책(3.1)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3.0)이 중간 그룹을 이루었다. 2018년 평가에서는 관광일자리 창출지원(2.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2.8), 대학기본역량평가(2.6) 정책 등이 교육분야 다른 정책들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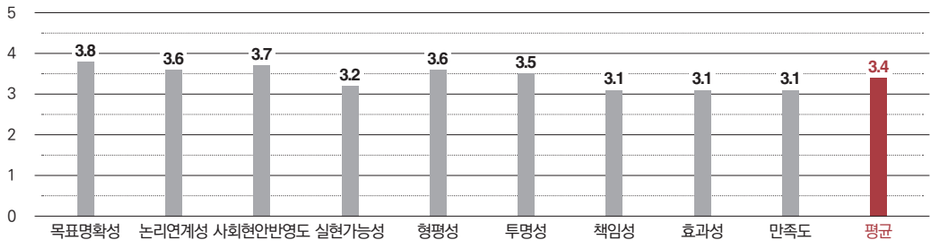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은 구조측면인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내용측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와 형평성이 실현가능성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과정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책임성에 비해 더욱 높게 평가되었고, 결과측면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구조측면인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그리고 내용측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과정의 특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결과측면의 효과성과 만족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중립에 가까웠다. 학교폭력예방정책은 지표 간 평가의 편차가 컸다.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지표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은 중간정도인 중립에 가깝게 평가되었고, 결과측면인 효과성과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은 목표명확성 지표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립에 가깝게 평가되었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에 가깝게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지표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은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해 중립에 가깝게 평가되었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책의 경우에도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투명성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평가되었고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은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게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3.4~3.7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3.2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중립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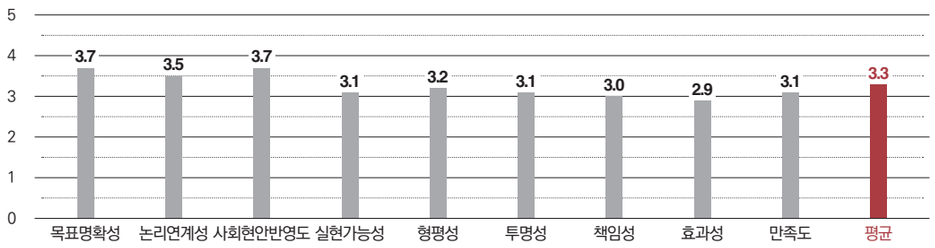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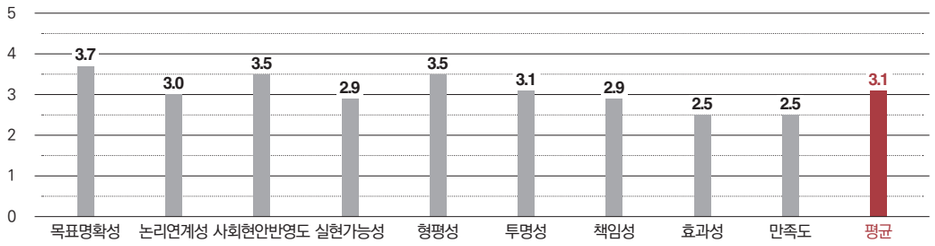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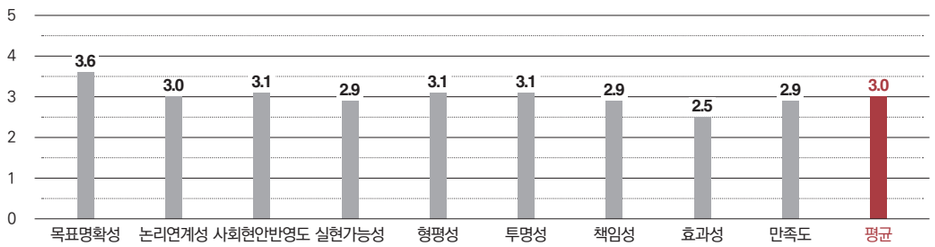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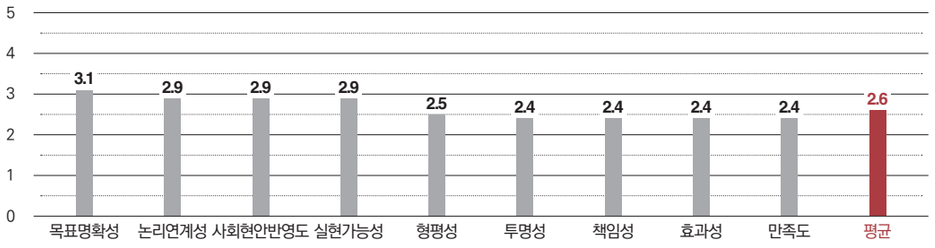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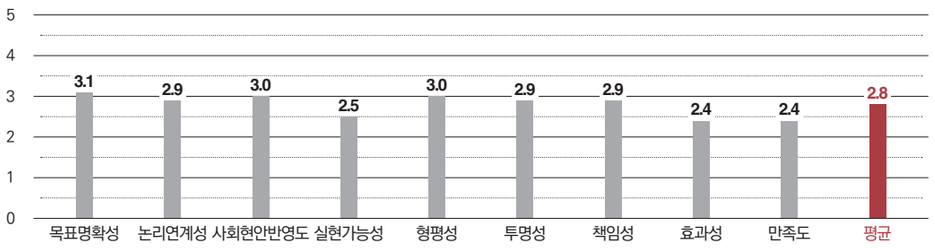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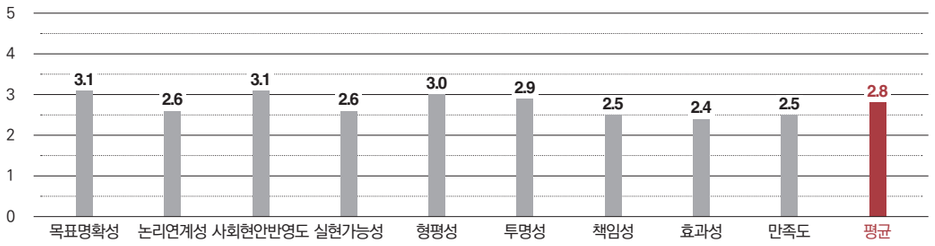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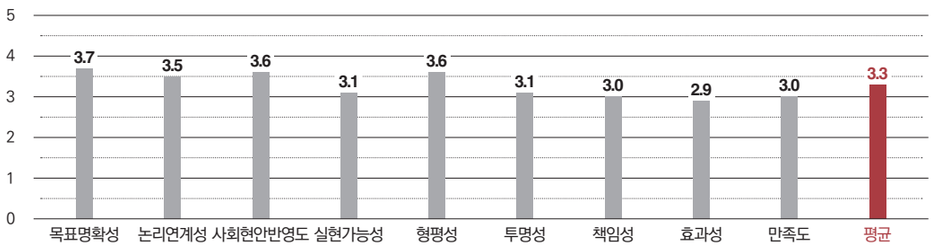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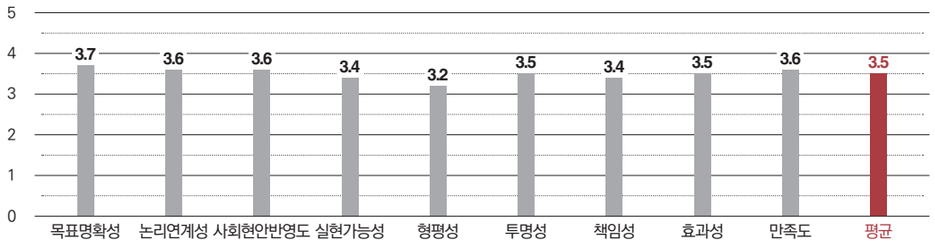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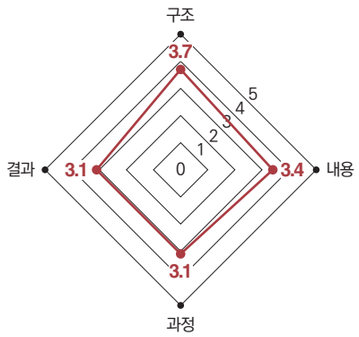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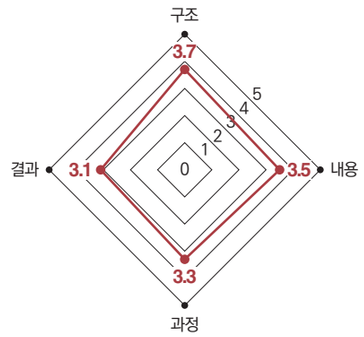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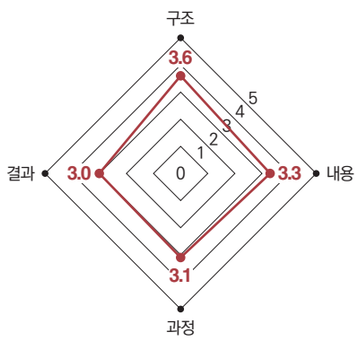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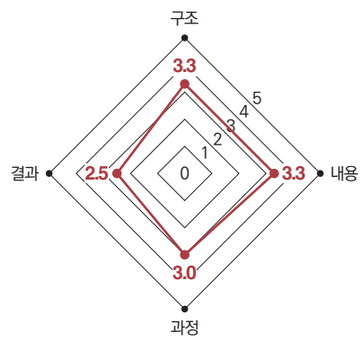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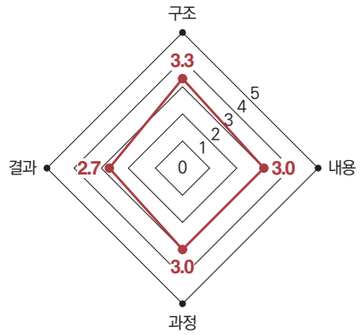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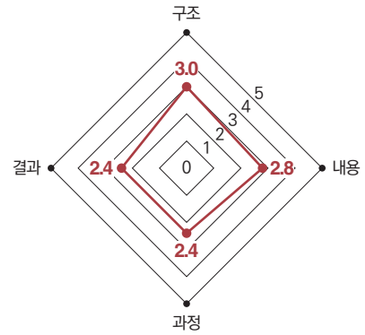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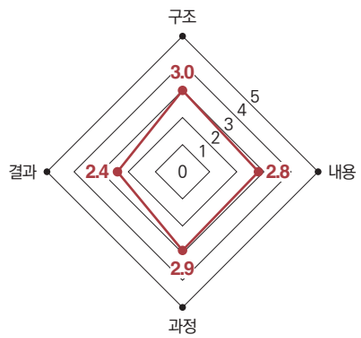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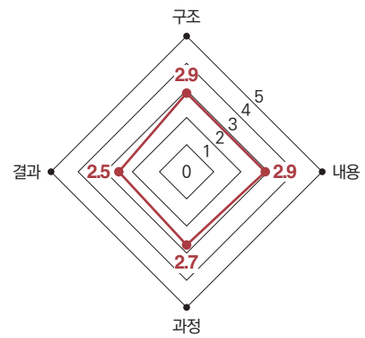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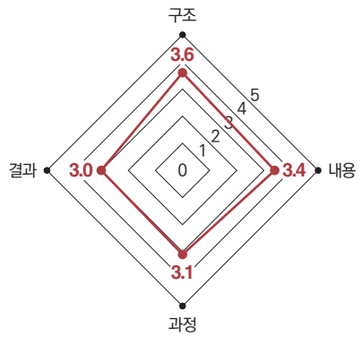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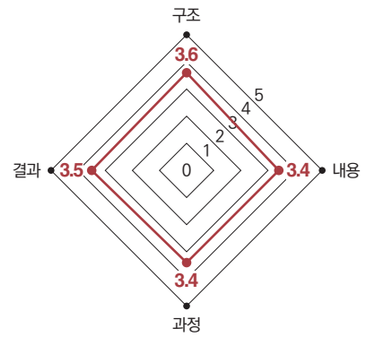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도시숲 조성(산림청)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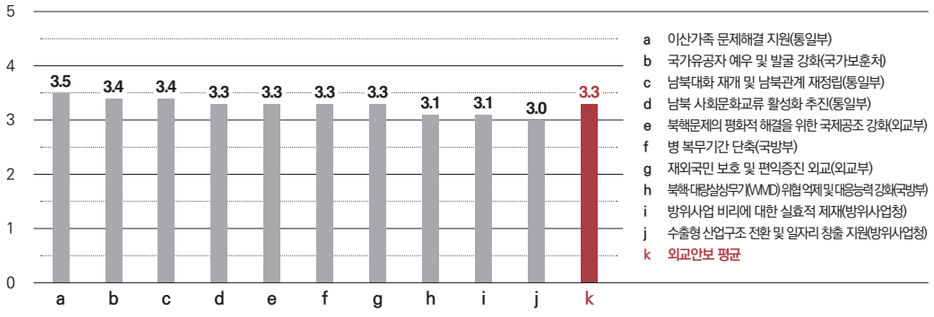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 결과

2차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는 3.3점의 평균을 나타내어 작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정책(2.9), 교육문화정책(3.1)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3.3)과는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균점수는 2014년에 3.0점, 2015년 2.9점, 2016년 2.8점으로 2016년까지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다가, 지난해인 2017년(3.3)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2015, 2016, 2017). 2017년에 높은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미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들었으나(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올해의 경우 남북화해 분위기와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교안보정책의 중점도 이러한 내용에 두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구조나 내용에 비해 정책의 과정 및 결과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은 예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외교안보분야 10개 정책 모두 정책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평가에 비해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결과로서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분야 정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결과로서의 성과 역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정책의 인지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문가 평가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예년과 동일하다.

외교안보분야 10개 정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각 정책 간 평가 결과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근소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 정책의 평균을 순위별로 언급하면,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3.5),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3.4),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3.4), 병 복무기간 단축(3.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3.3),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3.3),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추진(3.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3.1),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3.1),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3.0) 정책 순이다.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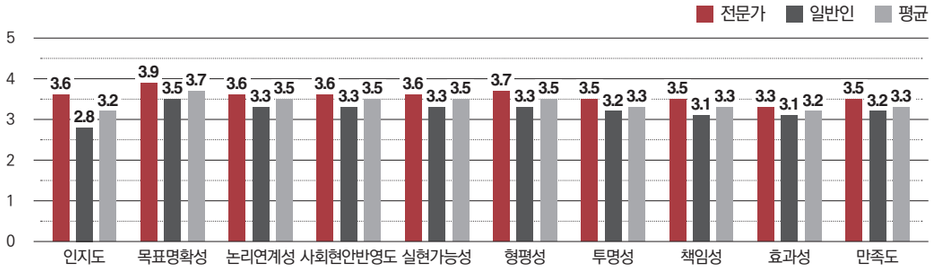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6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8점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의 56%가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인의 경우 27.6%만이 안다고 응답한 점을 보면, 이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4]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이 정책의 목표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72%, 일반인은 55.7%로 전문가와 일반인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4%, 일반인 14.4%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 중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은 3.3점, 평균은 3.5점의 결과를 보였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전문가의 경우 62%, 일반인의 경우 44.3%로 다소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8%, 일반인 17.4%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5점이다.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68%, 일반인 집단에서는 43.7%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2%, 일반인 22.8%로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 중 실현가능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64%, 일반인은 42.8%로 차이를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2%, 일반인 20.6%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5점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64%, 일반인 집단은 47%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6%, 일반인 19.5%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의 설문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이 정책의 내용이 국가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투명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52%, 일반인 집단에서는 34.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4%, 일반인 23.9%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에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이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 집단은 56%, 일반인은 32.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8%, 일반인 26.2%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정보제공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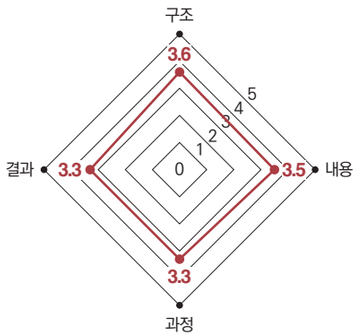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 중 효과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44%, 일반인의 경우 32.6%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8%, 일반인 26.7%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판단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의 효과를 아직까지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 정책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이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이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54%, 일반인의 4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6%, 일반인 23.4%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설문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정책의 만족도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6), 내용(3.5), 과정(3.3), 결과(3.3)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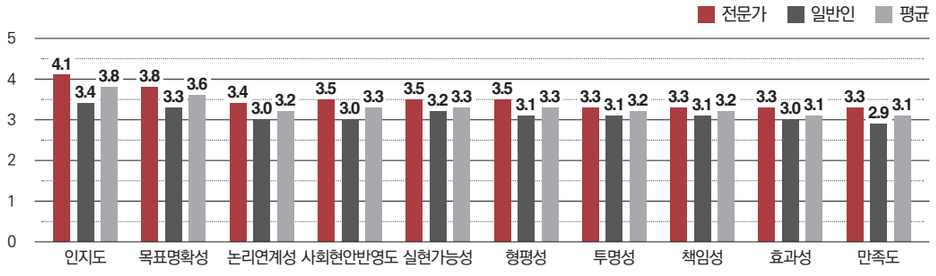
[그림 4-135]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평균 인지도는 3.8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경우 4.1점, 일반인의 경우 3.4점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 인지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전문가의 80%가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49.8%가 이 정책을 안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4-136] 병 복무기간 단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점수차가 상당한 편이지만, 평균은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목표 명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문가 집단은 70%인데 비해 일반인 집단은 48.3%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8%, 일반인 19.4%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 중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은 3.0점, 평균은 3.2점의 결과를 보였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56%, 일반인은 36.4%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25.1%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일반인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로 높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이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64%, 일반인은 3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자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문가 22%, 일반인 33.9%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 중 실현가능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60%, 일반인 41.8%로 나타나 양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0%, 일반인 25%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60%, 일반인 집단은 39.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양자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4%, 일반인 28.7%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투명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48%, 일반인 34.3%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27%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에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2점이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의 50%, 일반인 집단의 3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양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8%, 일반인 28%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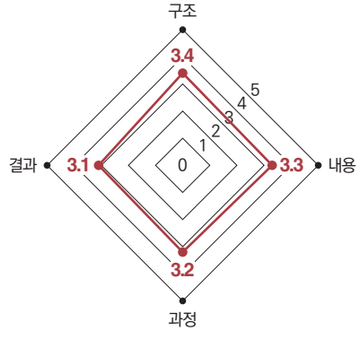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 중 효과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50%, 일반인 34%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2%, 일반인 33.7%로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이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1점이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의 48%, 일반인 집단의 33.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양자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33.5%로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3), 과정(3.2),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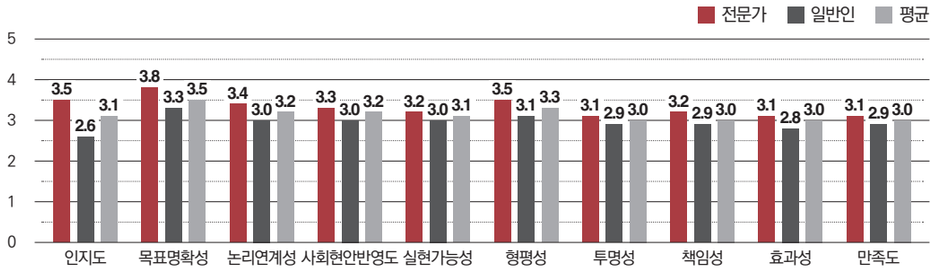
[그림 4-137] 병 복무기간 단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5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6점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의 58%가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인의 경우 21.2%만이 안다고 응답한 점을 보면, 이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8]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64%, 일반인은 42.4%로 전문가와 일반인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6%, 일반인 18.8%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 중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이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경우 56%가, 일반인 집단의 경우 32.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양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이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50%, 일반인은 33.7%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0%, 일반인 27.7%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 중 실현가능성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64%, 일반인은 42.8%로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2%, 일반인 20.6%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48%, 일반인 집단은 30.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양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투명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40%, 일반인 25%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32%, 일반인 31.9%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에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0점이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의 42%, 일반인 집단의 24.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양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8%, 일반인 32.5%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 중 효과성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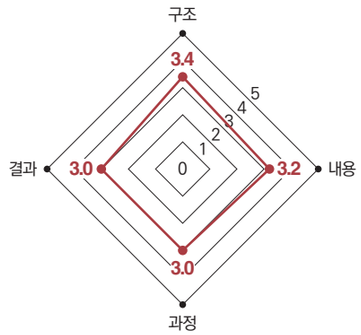
였으며, 평균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40%, 일반인 22.8%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32%, 일반인 34.8%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이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0점이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의 38%, 일반인 집단의 25.4%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양자 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8%, 일반인 33.1%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2), 과정(3.0), 결과(3.0)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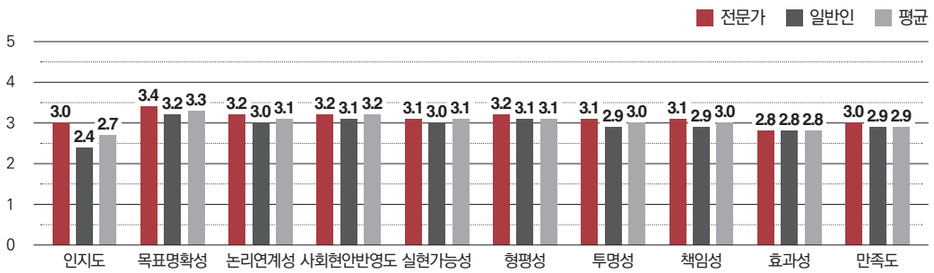
[그림 4-139]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0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4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28%, 일반인의 15.5%만이 이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점을 보면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40]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3점으로 보통의 수준이다.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48%, 일반인은 37.8%로 전문가와 일반인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2%, 일반인 20.2%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 중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1점이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전문가의 경우 42%, 일반인의 경우 27.2%로 다소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25.5%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2점이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44%, 일반인 집단에서는 35%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26.3%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 중 실현가능성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이다.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사업 및 금융지원 서비스 발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단기간에 실제로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38%, 일반인은 29%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6%, 일반인 28.2%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1점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42%, 일반인 집단은 30.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6%, 일반인 22.9%로 전문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마케팅 및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 이러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이라 보여진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투명성 지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이차보전 등의 금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정책의 성과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과정 영역에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이다. 전문가 집단의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24.5%만이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모니터링 측면의 보완을 통해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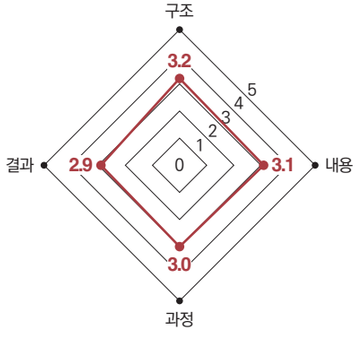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 중 효과성 지표에 대해 전체평균은 2.8점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는 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었지만(전문가 2.8점, 일반인 2.8점), 두 집단 모두에게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등의 정책효과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인지할 정도로 충분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발현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이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9점이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34%, 일반인의 23.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38%, 일반인 30.7%로 나타났다. 방산수출과 관련한 제도 및 금융지원, 컨설팅지원, 무상교육지원, 전시회를 통한 홍보지원 등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만족도는 높을 것이나 지원 실적이 가시적인 정책 효과로 발현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정책적인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정책 만족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2), 내용(3.1), 과정(3.0), 결과(2.9)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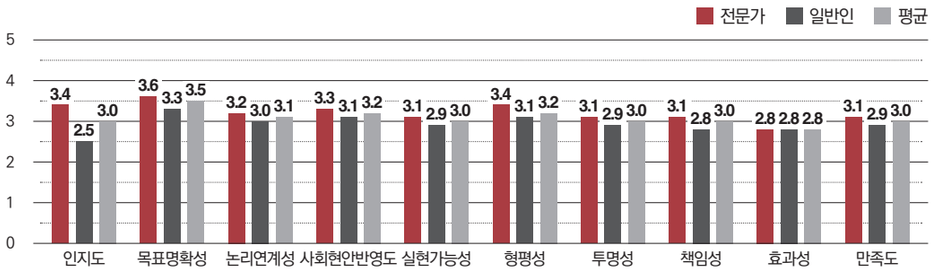
[그림 4-141]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4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2.5점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의 50%가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인의 경우 18.5%만이 안다고 응답한 점을 보면, 이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42]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5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목표명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62%, 일반인은 43%로 전문가와 일반인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4%, 일반인 20.9%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 중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전문가의 경우 42%, 일반인의 경우 31.4%로 다소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8%, 일반인 29.2%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및 법령정비 등 기존의 정책대안과 비교하여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그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남북 화해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예년에 비해 낮아진 것을(2017년의 경우 전문가 3.7점, 일반인 3.3점) 보여준다고 하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 영역 중 실현가능성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36%, 일반인은 27.3%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6%, 일반인 33.5%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일반인이 이 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그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을 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에서 이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이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48%, 일반인 집단은 31.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4%, 일반인 24.8%로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투명성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전체평균은 3.0점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26%, 일반인 집단에서는 34.4%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14%, 일반인 23.9%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의 구체적인 수행과정이나 성과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에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 집단은 42%, 일반인은 22.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32%, 일반인 34.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비리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문제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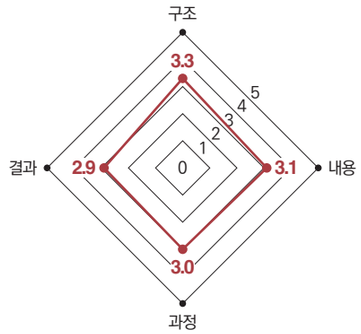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 중 효과성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8점, 일반인 집단은 2.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의 경우 26%, 일반인의 경우 21.4%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40%, 일반인 37.6%로 나타났다.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나 근년 발생한 굵직한 방위사업 비리 등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에서 이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3.0점이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32%, 일반인의 24.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24%, 일반인 34.6%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정책의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정책 만족도는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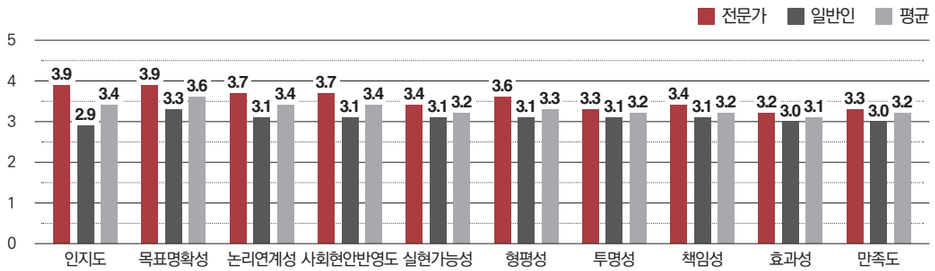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3), 내용(3.1), 과정(3.0), 결과(2.9)로 평가되었다.

[그림 4-143]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그림 4-144]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9점, 일반인이 3.3점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6점을 받아 두 집단 모두 본 항목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4점을 받아 두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는 주변국들과의 공조라는 정책대안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과거에 비해 진전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역시 전문가 3.7점, 일반인 3.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갑작스럽게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조성된 화해무드와 회담의 결과로 언급된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인 진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북핵문제와 국제공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예산과 관련하여 2016년과 크게 차이가 없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과 제도적·인력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은 3.1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북핵문제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서 형평성 측면에서 특별히 우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형평성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1점으로 전문가 집단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정책이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주변국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전문가 3.4점, 일반인 3.1점으로 본 정책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투명성 측면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담당부처에게 책임소재가 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오로지 정책의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이와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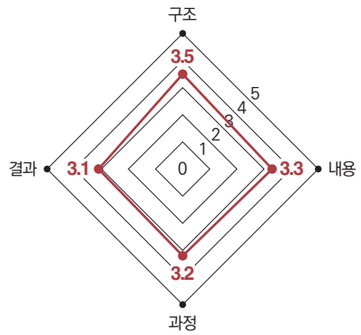
정책이 실제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2, 일반인은 3.0점으로, 본 정책의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부여받았다. 이는 비록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초에 여러 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화해무드가 시작된 후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회담의 결과 언급된 비핵화 과정이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에서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0점으로, 이는 다른 항목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책이 효과성 측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공조를 통해 이룩한 비핵화라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였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몽니를 부려 한 차례 취소되는 위기를 겪는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비핵화로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해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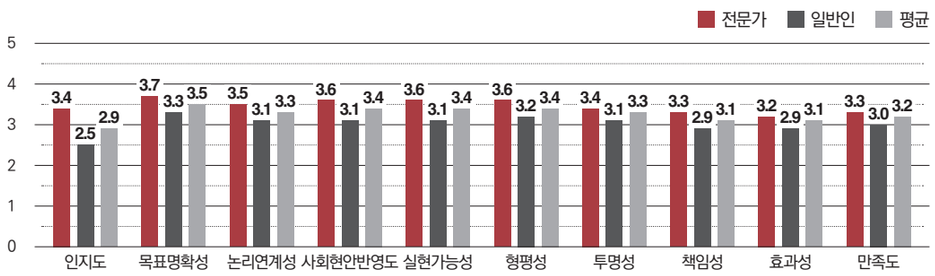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정책은 비록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의 구조(3.5) 측면이 내용(3.3), 과정(3.2), 그리고 결과(3.1) 측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4-14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그림 4-146]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해외에 체류 혹은 방문 중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의 점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부정책으로 다양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 정책에서 제시하는 세부 정책들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에 보통 수준이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교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 재외동포담당관을 둠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7.27.). 따라서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현안 반영도 점수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를 보면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의 논리적 연계성 및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 보통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응답자들은 이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 또한 보통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해외에 이미 있거나, 해외에 가기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즉 모든 국민이 잠재적으로 이 정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했는데, 이에 비해 큰 폭으로 점수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국민들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다양한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비교적 보통 수준이다. 이 정책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종류, 정책의 집행 과정, 정책의 수혜방법 등에 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나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 점수가 보통 수준으로 도출된 것이라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비교적 낮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사고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여 낮은 책임성 점수를 초래했을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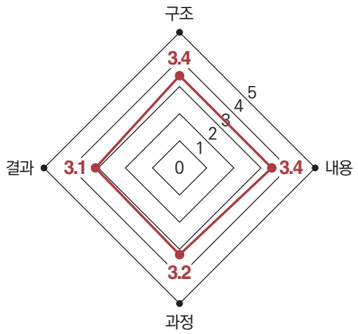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2.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외교부 정책의 예산과 그 종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피해 받는 국민의 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투입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응답자들은 현 정책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목표의 명확성이나 논리적 연계성 등 정책의 구조와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및 형평성 등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 정책의 과정 측면과 정책의 결과인 정책의 효과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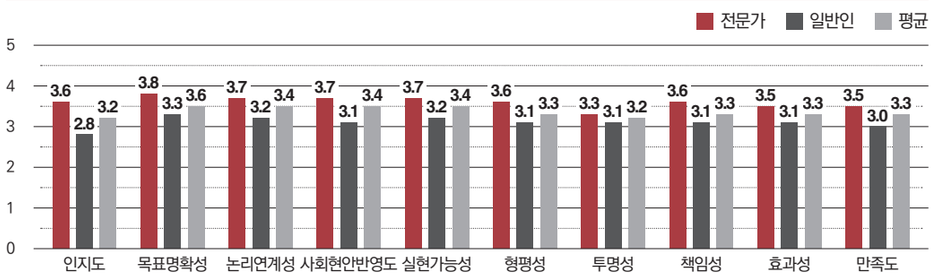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4), 과정(3.2), 결과(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그림 4-14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주었다. 이러한 평가는 두 집단 모두 남북 간 사회, 문화, 그리고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이라는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제시된 원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제도적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정책대안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해당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3.7점, 일반인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

안 경직된 남북 관계가 올해 초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화해무드로 돌입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2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정책의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2016년의 약 23억 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2018년 약 129억 원),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단일팀의 출전이 성사되었고, 다수의 방북 및 방남 공연이 성사되어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화교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6점, 그리고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사회·문화·체육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이 정부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본 정책의 수혜자를 국민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 중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3점, 일반인이 3.1점을 주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이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의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통일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형성 및 수행 과정에서 정책이 성사되기까지 비밀유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따라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정부 및 담당 부처 이외의 행위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1점을 매겼다. 이러한 평가는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되고, 남한 가수들의 평양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등 정책과 관련된 교류협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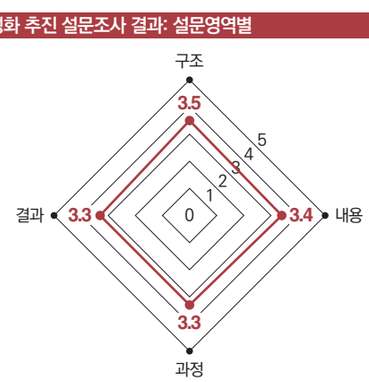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의 경우,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이는 평창올림픽에서 성사된 남북 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가 재개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0점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다른 항목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과 결부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것, 남한 가수들의 방북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이 높았던 것 등이 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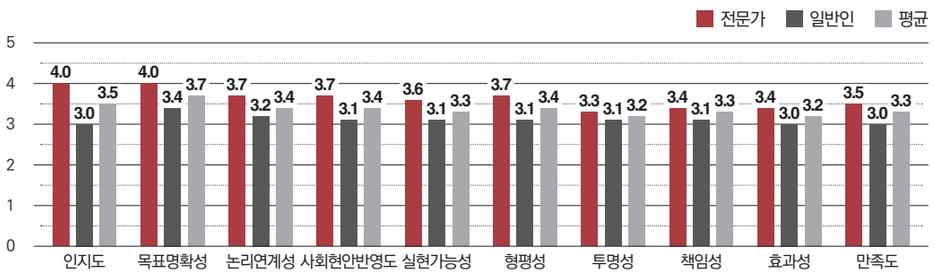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인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으며 정책의 투명성 외의 평가항목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 비교적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4), 과정(3.3), 결과(3.3)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의 점수를 부여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49]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그림 4-150]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4.0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두 집단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한편, 전체평균은 3.7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과 전문과 집단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0.6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 이 간극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세부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여러 남북 대화 및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남북대화는 북미회담의 성사로 연결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은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이 높은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인 집단의 경우 세부 정책들이 정책의 목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 점수는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본 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남북문제보다 현재 경제문제나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우선해야 할 사회 현안들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일반인의 해당 점수가 낮은 것은 해당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이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의 논리적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 정책이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인 집단은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없다. 이에 일반인 집단에서 정책의 형평성에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집단 모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에 대해서 비교적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부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이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응답자들은 이 정책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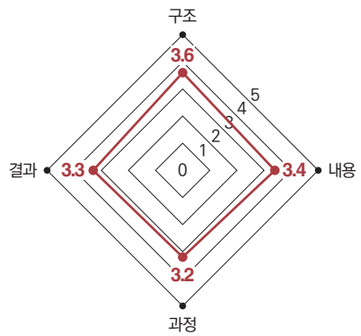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정책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반도 평화는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목표이며,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관계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응답자들은 정책을 통한 투입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남북회담 및 남북 공동 행사들이 개최되었음에도 일반인의 정책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앞서 8개의 응답 항목들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다른 정책들에 비해 이 정책에서 전문과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의 시각차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일반인 집단은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낮은 정책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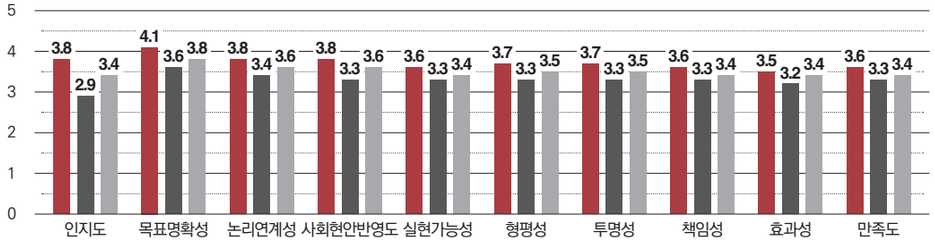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6), 내용(3.4), 결과(3.3), 과정(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1]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그림 4-152]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4.1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을 주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계속 고통을 받아온 이산가족에 대한 위로와 이산가족의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정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책적 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 점수는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남북 간 화해무드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북한이 중간에 몽니를 부리는 등 여전히 신경전이 존재하였고,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례화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가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여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산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정부부처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년 지역별로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정책과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주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산가족과 관련된 통계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현황을 게재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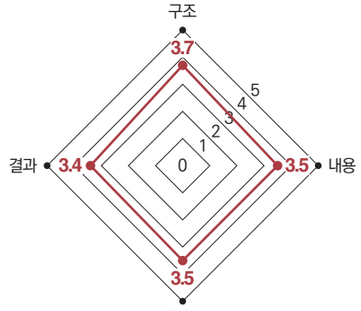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오랜만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긍정적인 평가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을 부여함으로써 두 집단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구체적인 목표설정, 정책대안의 높은 연계성, 예산의 확대 등 앞의 항목들에서 모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7), 내용(3.5), 과정(3.5), 결과(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3]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정책의 형평성 및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및 투명성과 책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4.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6점을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공동 2위에 해당한다.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및 정책의 책임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형평성과 민주성 및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5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6점을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공동 2위에 해당한다.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2.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2점을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3점을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7위에 해당한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2점을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이 4.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는 3.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구조 4.0점, 정책 내용 4.0점, 정책 과정 3.0점, 정책 결과 3.0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공동 2위에 해당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이 4.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항목에 대해서는 3.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는 2.0점으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구조 4.0점, 정책 내용 4.0점, 정책 과정 3.0점, 정책 결과 2.0점으로,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8위에 해당한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효과성, 만족도가 4.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3.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구조 4.0점, 정책 내용 3.3점, 정책 과정 3.0점, 정책 결과 4.0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공동 2위에 해당한다.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책과 관련하여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만족도가 4.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3.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구조 4.0점, 정책 내용 3.7점, 정책 과정 3.0점, 정책 결과 3.5점의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공동 2위에 해당한다.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4.0점으로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정책 목표의 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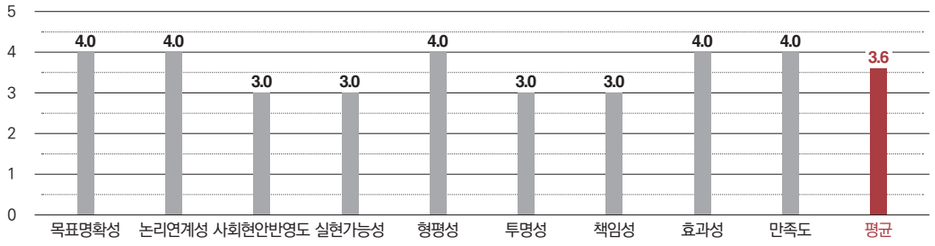
명성, 책임성, 만족도 항목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만 3.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구조 4.0점, 정책 내용 4.0점, 정책 과정 4.0점, 정책 결과 3.5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나) 정책별 정성평가 결과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에 관한 연구진의 정성평가 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 및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및 투명성과 책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유공자 기준을 보다 실질화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6.25전쟁,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고인이 되었거나 매우 연로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의 발굴에 많은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병적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국가기록원 검색범위를 넓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뉴시스, 2018).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학자·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문헌과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영남일보. 2018a; 매일신문, 2018),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신청주의에서 정부주도 발굴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국가보훈처, 2017),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보훈 관련 법제도를 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영남일보, 2018b),

[그림 4-154]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훈을 기리고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18, 국가보훈처, 2018b), 따라서 정책목표는 명확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이 평가되었으나(3.9),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3.5). 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일반인 집단의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는(2.8)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의 개선,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국립호국원 의전단의 신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로의 승격,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 확대,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의 위문 확대 등의 내용이 이행된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내일신문, 20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기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발굴은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 정성평가에서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을 위한 추진내용들이 모두 개선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이(국회정무위원회, 2017)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책대안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을 제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그 시의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였으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발굴의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학자나 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헌연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의 적극적인 발굴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영남일보. 2018a; 매일신문, 2018),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의 공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뜻을 기리고 예우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3.7), 일반인 집단에서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3.3).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고 직접 체감할 기회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도 정책의 투명성은 높지 않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 정책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의 투명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근거에서 이루어졌다. 즉 국가유공자 발굴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임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현재의 수준에서는 국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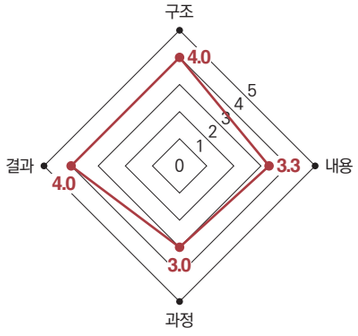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에 대한 보통 수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새롭게 개선된 정책대안들로 인해 이전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만족도의 경우에도 개선된 정책대안들로 인해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과 내용이 개선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 및 정책의 추진의 있어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3), 과정(3.0), 결과(4.0)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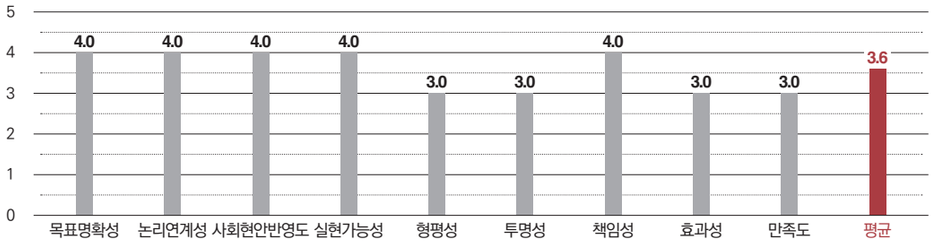
[그림 4-155]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 및 정책의 책임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및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여,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국방부, 2018).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들도 상당한 정도로 존재함을 고려하여(동아일보, 2017a, 동아일보, 2018a. 이데일리, 2018)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병 복무기간 단축 자체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과 우려를 함께 해소해나가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지속을 위한 노력,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지능화와 훈련체계의 고도화, 인구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관한 지속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56] 병 복무기간 단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윤지원, 2018), 따라서 정책목표는 명확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이 평가되었으나(3.8),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3.3). 이는 이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을 기준으로 2018. 10. 1.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2021.12.14. 전역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되며, 공군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이 단축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동아일보, 2018b).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염려에 근거한 평가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병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종합적인 상황을 인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이 정책은 그 시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술집약적 첨단 무기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앞서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그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역시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만을 두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이 정책의 목표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정책이 국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형평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추진의 방식으로는 입법을 통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정부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으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이행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정책의 책임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역시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 즉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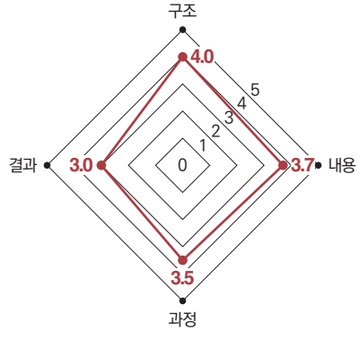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취업문제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책의 만족도는 단순히 병 복무기간의 단축만으로 제고되기는 어려우며,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지속을 위한 노력,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지능화와 훈련체계의 고도화, 인구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관한 지속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청년취업문제의 개선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며, 아직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3.5), 결과(3.0)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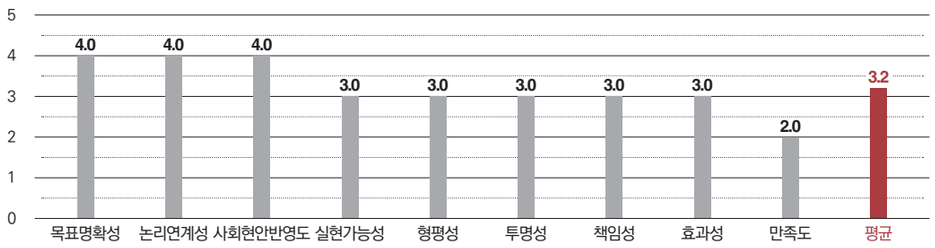
[그림 4-157] 병 복무기간 단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민주성 및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은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정책의 영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정책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58]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16개 과제 중 하나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와 북핵 ·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의 조기구축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의 조기 · 적기 구축을 위한 최우선 반영을 위해 2019년~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실질적 억제와 대응방안을 위한 연습과 숙달, 미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 방안 등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사일 타격(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연계 등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에의 적시적 대응을 위해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한 하부 정책간의 논리적 연계가 긴밀하다. 제1축인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고정형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이전에 타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 등 타격 수단을 집중 육성하는 가운데, 핵심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 확보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국방일보, 2017.1.2.). 한편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킬체인을 통한 타격에서 살아남은 북 미사일 세력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기 전에 이를 요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KAMD 전력의 핵심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성능개선에 2019년 전년 대비 1,023억 원 이상 늘어난 1,190억 원을 예산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통제소와 발사대·레이더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하는 PAC-3 유도탄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도탄 구매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 완료될 계획이다. 제3축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군이 가진 모든 타격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개념이다.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까지 침투·타격이 가능한 F-35A 전투기 도입과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 구매, 2000파운드(lbs)급 GPS유도폭탄(KGGB) 개발·양산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미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 발전을 위한 시기별(3월, 5월, 9월) 계획도 반영 · 공표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위력 개선비 15조원, '한국형 3축 방어체제' 구축에 5조 78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62개 핵심기술개발 과제, 특히 우위전력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며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위전력확보란 북한의 전략 · 전술 · 무기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우위전력확보를 위해 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등 무인체계(5개), 레일건 등 특수무기(5개), 탄도탄용 대형침투탄두 등 적 중심파괴(2개), 사이버전(1개), 공통적용기술(4개)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미래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화된 군전력 강화의 측면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올 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8년~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력 개선비에 총 78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그중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은 2020년대 초반까지 47개 무기체계에 57조 4,795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중앙일보, 2018. 8. 28).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의 필요성 및 운영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따르는 효용성의 문제, 미국 측의 집요한 견제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본적으로 안보정책은 우리 국민 전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정책에 자금이 우선 배정됨으로써 기타 군의 주요 전력 증강사업이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이 정책이 장기간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국방 R&D개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정책 채택으로 인한 정책이익이 전체 국민에게 고루 분산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으로 평가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관점에서 동 정책은 보통으로 평가된다.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청와대 및 국방부 홈페이지에 정책내용을 게시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 예산 상황 등을 각 언론사 보도와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과정 및 정책 수행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대외공개하는 것의 한계점은 인정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책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국방위원회, 201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킬체인(선제타격체계)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과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임차) 사업이 20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는 동 사업 중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2019년 예산으로 5조 785억 원 편성하였다. 이는 2018년보다 16.3% 증가된 수치이며, 3축 체계의 보완과 고도화 및 구축 관련 시험 시설 인프라 부족에 관한 국정감사 지적내용을(국회국방위원회, 2017) 보완하고,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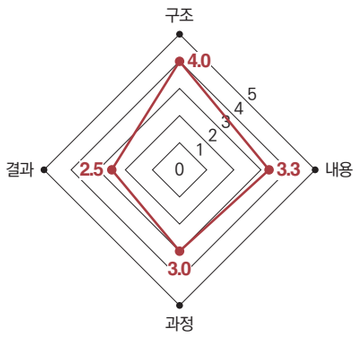
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한국군 중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의 진전으로 판단된다. 정책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에서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해오다 3년 이상 사업의 지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성은 보통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예산의 조기 집중 배정과 추진과정을 통해 정부의 동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집중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한국 안보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뚜렷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3), 과정(3.0), 결과(2.5)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59]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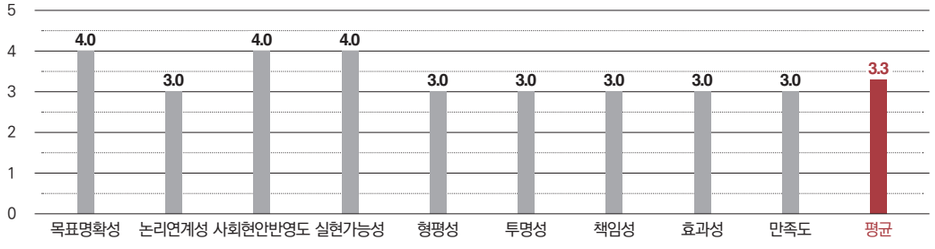


(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이 포함하는 지원내

용은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수출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부 추진과제간의 논리적 연계를 고려하여 하위사업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거나 기존의 유사 사업 간 통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160]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동 정책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을 내수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상개념[1], 기술획득 중심의 기존 절충교역제도에서 신 '방위산업협력 제도'로 전환하고 수출품목 및 방식의 다변화와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하위사업으로 하는 등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은 국정과제의 하나인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의 세부추진과제로서 4개 중점과제와(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그 하위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방위사업청, 2017). 국정과제와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의 연계성은 높으나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의 내용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협업,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수출경쟁력 강화와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은 개별정책으로 분리해서 인프라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 세부사업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의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가격은 85%, 기술은 87%, 품질은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증진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방산산업 매출은 3배, 수출은 10배 이상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문화일보, 2018.6.18). 방산수출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력을 강화하고 수출품목과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산수출 확대전략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지원정책은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여 수출품목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시장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시행계획은 정책이 맞닿아 있는 사회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서 언급한 국정과제인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의 4개 중점과제 하 12개 세부추진과제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수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품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이차보전[2]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는 등 12개 과제 모두 전반적으로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방위사업청, 2017). 또한 각 과제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동 정책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이들 국가에 대하여 중점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이나 정보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은 인정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나 중견 방산업체는 이미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료 감면 또는 면제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9개 방산업체가 대출한 1,931억 원을 부당보전한(감사원, 2018) 사례도 지적된 것을 고려하여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으로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정책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보통으로 평가된다. 수출 희망 기업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등의 수출지원 및 이차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된 정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혜대상 선정의 기준과 절차 및 정책의 성과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계획과 관련한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조금 및 이차보전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절충교역은 무기 등을 거래 시, 해당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과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절충교역에서 무상개념은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자산이 '무상(free)'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방위사업청, 2017).

2)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동 정책은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와 방산일자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국방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수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집행단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요소로 판단된다. 동 정책의 주관부서는 다양한 관련부처, 민간 방산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관련 지원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복잡한 정책집행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조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조직과 인력확충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책임성 측면은 보통으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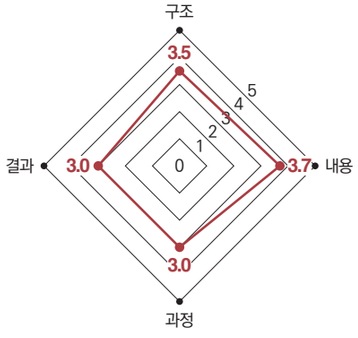
동 정책은 방산수출품목 및 수출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항공, 함정, 전차, 대포, 미사일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엔진, 레이더 등 현대 군사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단기술 분야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권역별·국가별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방산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시장개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송래찬, 2017). 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한 절충교역 협상안 작성과 지원 등의 마케팅 지원과 정보제공, 수출방식 다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 국제 방산전시회 개최 및 참여 활성화는 방산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등의 정책 효과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정책지원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최근 국방기술품질원과 대전마케팅공사 공동주관으로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이 개최되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방산분야에 참여해 정보의 교류와 정책소통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개별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수출시장의 개척과 방산수출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므로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국외사무소, 방산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방산수출지원센터 개설 논의, 방위산업 수출지원 법안 마련 등은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산수출과 관련한 제도 및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무상교육지원, 전시회를 통한 홍보지원 등 정책의 수혜자 측면에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방산물자수출지원제도가 존재하나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 실적 격차로 인해 일부 수혜대상(중소·벤처기업)이 수혜내용의 형평성으로 인한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3.0), 결과(3.0)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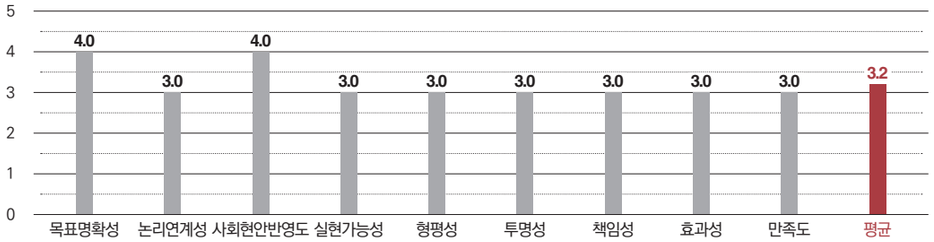
[그림 4-161]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방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외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기는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이 보통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적 효과와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내용과 성과 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62]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리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평가 및 교육시스템을 정비한다. 이 정책은 국정과제 중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차단하고 청렴한 업무환경을 정착시켜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軍·産 유착 및 부정과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의 추진내용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은 음성적 로비활동 처벌 강화,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비리 유형별 맞춤 관리·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현직자가 연계된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방산브로커' 등록 등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비리 무역대리업체의 등록취소, 일정 기간 동안 입찰대리행위의 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부정·비리·부실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방중심의 검증 및 평가제도를 보완하며, 출연기관의 부정·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유형별·맞춤형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방산비리행위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정립하고 고의적인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를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대안과 비교하여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시큐리티팩트, 2018.10.11).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으로 평가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그간 방위산업 비리는 방산업체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자리 잡아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많은 시도가 있어 왔음에도 노력의 결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구입과 군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 문제는 근 10년 이상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방산비리 문제가 단순히 부패범죄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품질결함이나 사업지연을 넘어 군사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관련 기관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치를 통해 방위산업 비리의 근절이 기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방위산업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 역시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행해졌으나(국회, 2016; 박학모, 2016; 방위사업청, 2017)되어 왔음에도 해결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선, 전문역량 강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현재 마련된 대안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대안이 청렴문화와 준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비리근절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비리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의 효과는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방위사업청, 2017)는 측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은 인정된다. 다만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미온적 처벌 관행에 대한 지적(국회국방위원회, 2015 등)이 있었던 만큼 민간인·예비역들에게 차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의 제재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군 관계자의 무리한 제재에 제한되기보다는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도입 사업 비리이거나 전형적인 군납비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도 포함한 해외도입사업의 점검 등 방산비리 제재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 처벌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은 보통으로 평가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방위사업청은 정보공개의 확대와 정책포럼, 외부강연을 통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는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책고객 평가부문에서 3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개선(+0.48)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민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은 다소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혁신의지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정책에 대한 결과나 성과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이 행정편의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성과 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예방을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방위사업감독관(개방형 직위)을 올해부터 정규조직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방산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추진 기본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마다 사업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2016년 12월 발족한 준법지원협의회제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방위사업 관련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위사업에 대한 자체 통제를 위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들 조직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한 검증·조사 업무의 강화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방위사업 담당자들의 개인적 판단유보 또는 보수적 판단 증가 등 책임성 저하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정책관리능력의 제고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반부패 관련 기관 협의회의 복원을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기는 했지만 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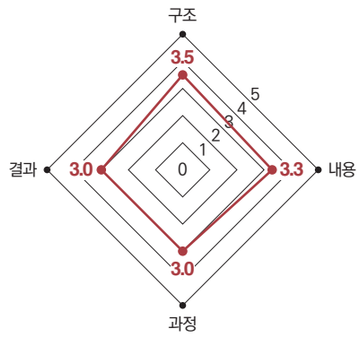
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7년 평가 5등급 최하위) 역시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각 군 및 방위사업청-출연기관-방위산업체 등 획득기관 간 협업추진과 정책참여자의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내용의 보완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원가검증시스템의 개선 등 제도적 방안과 방위사업청 내부 감사관실을 비롯한 방위사업청의 자정적 노력만으로는 비리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책의 개선의지를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 측면은 보통으로 평가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의 강화와 관리 측면에서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산비리의 발생으로 인해 동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저하되어 있다. 그간의 방산비리 해결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뚜렷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동 정책의 만족도는 높이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대책 등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과 대비되는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한 점에 비추어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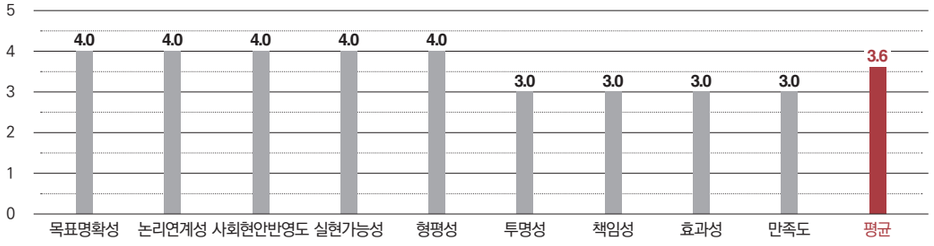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결과(3.0)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63]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그림 4-164]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199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6자회담 및 다자 회담이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이며, 다자 회담과 같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위에서 언급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6자회담의 실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북핵문제를 통해 형성된 6자회담이라는 협력의 틀이 동북아의 협력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종건, 2012). 또한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협력 증진에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북핵문제는 1993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및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다자회담 및 6자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벌일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6%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대북정책 주요현안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에서 비핵화가 약 86.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북핵문제와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을 중요한 정책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올해 4월 27일과 5월 26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아직도 일부 여론과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있지 않지만(뉴스 1, 2018),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1953년 이후 65년 만에 이루어졌고 미국과의 공조가 11월 29일부터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됨에 따라(중부일보, 2018)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외교정책, 특히나 안보와 관련된 외교정책은 해당 정책의 광범위한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수혜자를 국민 전체로 생각할 수 있고, 본 정책의 목표가 국민들이 오랫동안 현저한 정책 문제로 인식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정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주변국들로 상정되어 그 '격'에 따라 정부가 직접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외교부 담당 부처 및 유관 고위급 관계자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와 같이 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정책의 입안 및 수행과정에서 비밀 엄수 및 유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아베(安倍晋三) 총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하여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며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이승현, 2018), 11월 30일 G20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경인일보, 2018),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통일부, 2018). 그러나 아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문서에 의한 합의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핵과 과정에 대한 논의나 성과가 없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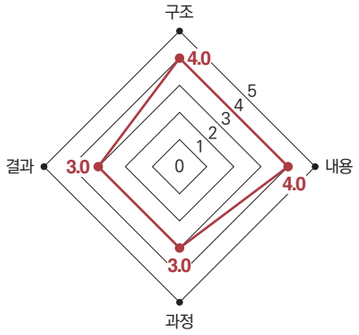
이 정책의 효과성 측면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 측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일견 대외적으로 비핵화의 의지, 특히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5년 제4차 6자 회담 중 발표한 9·19 공동성명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핵화 선언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각론이라고 판단된다(김태현 외, 2018). 또한, 6월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합의문에도 비핵화 과정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이러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조차 7월에 개최된 이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정책의 효과성을 낮다고만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월에 연기된 것뿐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전히 남북 및 북미 간에 접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KBS, 2018).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2014년 89.3%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래로 2015년 84%, 2016년 79.5%에서 2017년에는 70.6%로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비핵화(약 86.4%)를 선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2013년 이래로 처음 오르는 등(2016년 약 45.1%, 2017년 약 59.3%)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진전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비핵화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한 실질적 언급이 없는 선언만으로는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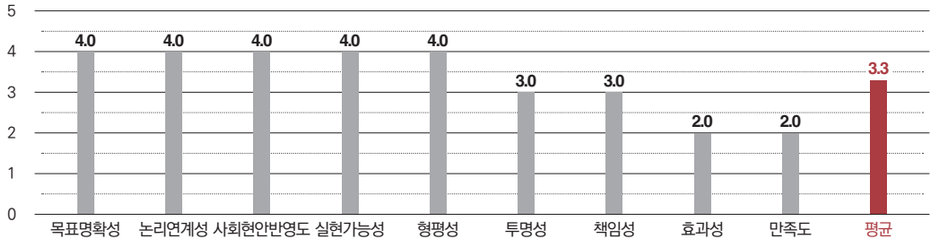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그림 4-166]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본 정책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세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사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위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국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국 확대,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등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부합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들 사이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2017)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의 수가 2013년 약 1400만 명에서 2017년 약 26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행정직원이 대폭 확충되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이 정책은 사회 현안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은 그 목표가 분명하고 대안의 연계성 또한 높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하여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예산은 2017년 약 151억 원에서 2018년 182억 원으로 약 19.7% 증가하였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 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약 191억 원으로 약 5%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은 해외에 이미 있거나, 해외에 가기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즉 모든 국민이 잠재적으로 이 정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내국인 출국자의 전년 대비 증가 비율이 2015년 20.1%, 2016년 15.9%, 2017년 18.4%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에 실제로 해당되는 국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인 형평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의 서비스 전달은 일방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정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정책 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거의 부재하다. 그러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가려는 국가의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해외에 출국하려는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더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어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정책의 투명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부처는 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재외공관 운영실태 관련 미흡했던 부분이 감사 결과 드러나 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사증 심사·발급 등 영사분야에서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재외공관들이 재외국민 수감자를 1년 이상 면담하지 않거나 주재국의 관계기관에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는데도 외교부 본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 및 감독이 미흡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재외국민 수와 관계없이 영사협력원[3]이 위촉되고 있거나 재외국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 등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지 않은 곳도 있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영사 조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한편, 사증을 심사·발급하면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38명에게 사증을 발급하였다가 국내 입국 후

3) 외교부는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7년 12월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등 총 81개 재외공관에서 153명의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공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감사원, 2018).

2017년 12월 현재 모두 불법체류 중에 있는 등, 11개의 공관에서 사증발급 업무가 부실했던 점 등이 밝혀졌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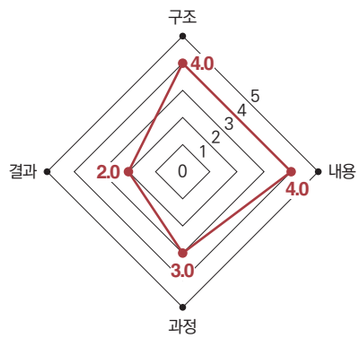
이 정책의 정책 효과성은 낮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 약 19.7% 증가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7년 그 피해 건수는 약 110%나 증가하였다.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성 범죄 피해가 307%로 급증하였다(이인영 의원, 2018.10.4.). 또한 이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외교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의 인지도는 21%,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 제도인 '동행 서비스'의 이용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보았을 때,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2차 설문조사 결과와 본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2014년 대비 2017년 해외출국자 수의 증가율 약 62.5%보다 피해건수 증가율이 약 110%로 2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조력 활동 미흡 및 부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과 사증 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본 정책으로 재외국민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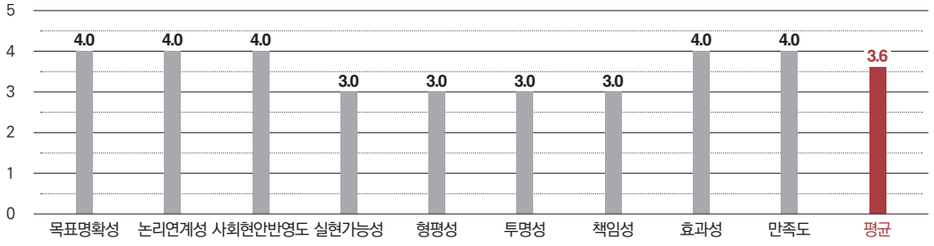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0), 결과(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그림 4-16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명확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정책의 목표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모호한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 난해한 표현이 없어, 정책의 목표가 지향하는 바나 효과를 정책 목표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은 1991년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으나, 특히 올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각별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되어 경기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경북도민일보, 2018). 또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제18회 하계 아시안게임에서도 농구·카누·조정의 3개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 외에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남측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방북하여 펼친 공연도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라는 평가를 받으며(Reuters, 2018)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여론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는 정책의 예산이 2018년 약 129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는 2016년의 예산인 약 2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2017년의 예산인 약 143억 원에 비해 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체육 분야 등에서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남북 간에 이질성, 특히 선거방식, 언어사용, 생활

풍습, 사회복지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동질성의 회복 및 민족공동체의 기반 조성은 단시간 내에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록 정책이 민족동질성 회복 및 민족공동체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그 효과가 국민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협력사업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정책의 주된 수혜자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정부의 통제와 관여로 인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은 정치적 국면에 의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임을출, 2018), 민간단체들의 관점에서 정책의 형평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통일정책의 특성상 안보와도 어느 정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책의 제안 및 수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질적으로 민간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대북제재 국면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남북 간 정부의 논의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출전이 성사되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특히 남북단일팀과 관련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여와 북한 응원단의 응원(약 75.4%), 북한 예술단의 공연(약 65.5%), 그리고 남북한 공동입장(약 63.3%)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찬성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약 58.7%로 찬성한다는 입장에 비해 많았다(연합뉴스, 2018). 또한, 민간 차원의 사회교류가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교류에 비해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 외에 민간 차원의 사회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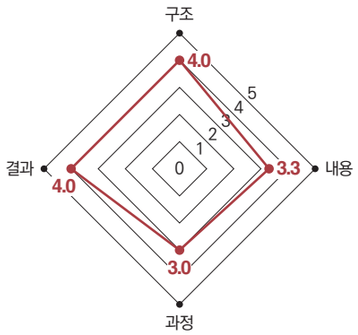
이 정책의 효과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와 2016년 4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및 긴급구호까지 제한되는 등(외교통일위원회, 2018) 최근까지 남북 간의 교류는 악화일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2월, 강릉·서울), 북한 태권도시범단 방남 공연(4회, 평창, 속초, 서울), '봄이 온다'(3.29~4.4, 평양) 공연(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방북), 개성만월대 평창특별전 개최(2월~3월, 평창상지대관령고교), 세계평화재단이사장(천담스님)·6.15남측위, JTBC, 민화협 관계자 일행 방북(6월~7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및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재개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내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세 번에 걸쳐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성과를 고려할 때,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 및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통일여론조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7.7%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서 '좋아질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9.6%가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를 성사시킨 본 정책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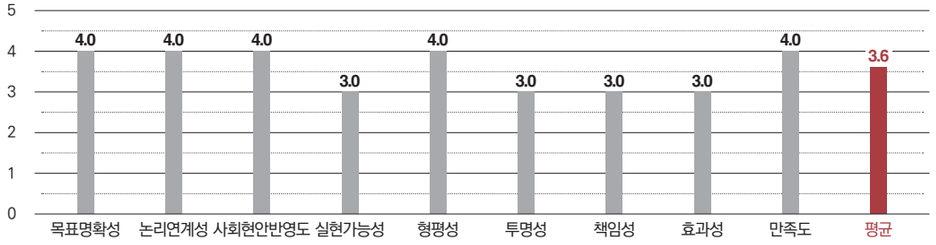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결과(4.0), 내용(3.3), 과정(3.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6]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그림 4-170]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책명인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은 이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및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 마련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포함한 35차례의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을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남북대화는 북미회담의 성사로도 이어졌는데 세부 정책이 목표에 대해 높은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은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든 남북문제는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까지도 핵과 미사일 위협,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되었다. 이에 북한의 해외 수입 차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까지 고려한다고 압박하는 등 북미 간 긴장감도 동시에 고조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전쟁 발발의 우려감 또한 커지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가장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 남북정상회담은 단 두 번뿐이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세 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이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답보 상태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런 국제 정세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불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남북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정책의 성패에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책 대상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과로 인한 수혜가 일부 국민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4]를 통해 각종 회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부터 실무진 회담까지 모든 남북회담의 일정, 장소, 참석 대표단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보도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회담의 내용도 공개되고 있다. 더하여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여전히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또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기조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 정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정책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정책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로 인해 올해 남북정상회담 등 35차례의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최초의 북미회담이라는 성과까지 만들어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도 평화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본 정책의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평화적 분위기 형성 외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4) https://dialogue.uni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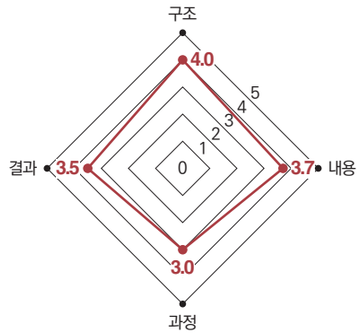
때문에 현재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에 대해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정책적 투입과 정책의 성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본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우선 과거 두 차례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을 올해에만 세 차례 이루어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가 가공할 정도로 고조되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2018년 평화적 분위기 형성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한 남북정상회담 및 여러 성과들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9월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잘했다', 22.1%가 '잘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실시되었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6%, 반대 29.1%로 집계됐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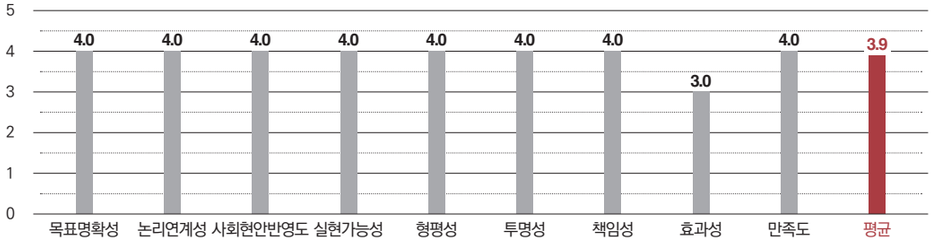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결과(3.5), 과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1]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그림 4-172]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책명인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은 이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아픔이 계속되어 온 이산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이산가족 교류의 지원 및 정례화이다. 이를 통해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사 확인 수요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교류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산가족 초청 행사의 횟수를 확대하고,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 횟수를 전년도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은 언제든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남북 화해 분위기와 이산가족의 고령화 가속화가 맞물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정책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를 보이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정책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은 그 목표가 분명하고 대안의 연계성 또한 높다. 이와 함께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하여 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산가족문제해결 지원 및 교류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6년 16억, 2017년 60억 8,500만원에서 2018년 119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산가족 해결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가는 문제이다. 남북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남북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책 대상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과로 인한 수혜가 일부 국민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의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간 실무진 회담 결과가 공개되어 있고, 통일부와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그 시기와 방식 등 실무적인 내용이 주가 된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책의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책임성은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 정책은 국정전략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국정전략으로 상정해 놓았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까지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정책의 책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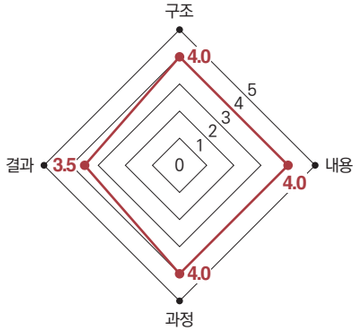
이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개별 중식 시간이 포함되는 등 내용적으로 내실 있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사 자체만 보았을 때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이산가족 상봉 또한 자연스럽게 성사되었지만 언제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지 여전히 기약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정책의 효과성은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객실에서 각 가족별로 중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개별중식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뉴시스, 2018).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4.0), 결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3]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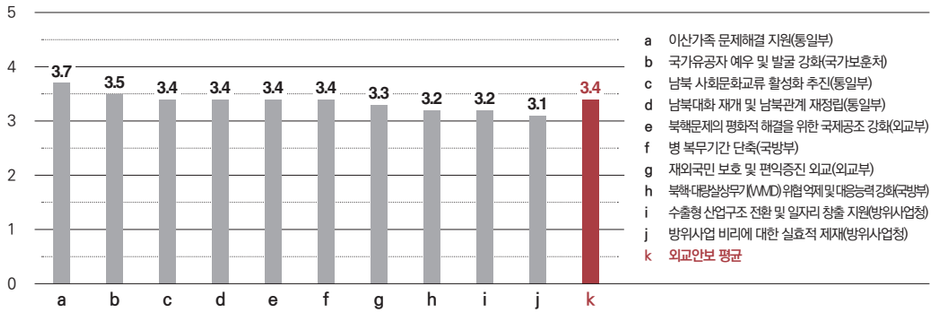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앞서 살펴 본 일반인·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진 정성평가 결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외교안보분야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7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다. 이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이 3.5점으로 2위를,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추진,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이 3.4점으로 공동 3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3.3점의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책이 7위를,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3.2점으로 공동 8위로 평가되었으며,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이 3.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종합 순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정성평가 순위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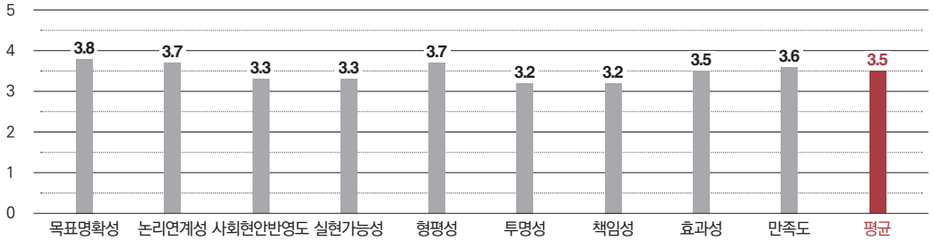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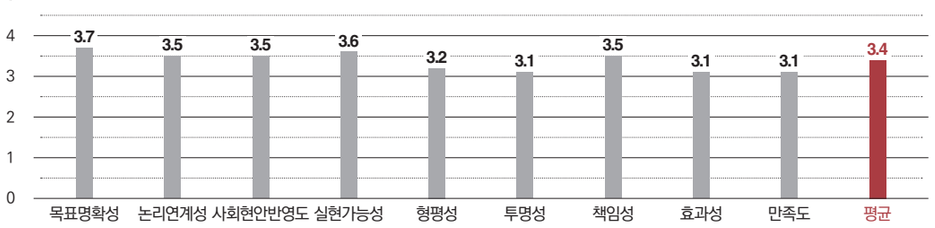
지표별로 살펴봤을 때,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9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었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3.6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논리연계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역시 3.8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었으며,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이 3.1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있어서도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3.3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실현가능성 지표는 10개 정책이 3.0-3.6점의 분포를 보이며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가장 나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과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으로 3.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이 3.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의 경우 3.1점,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책의 경우 3.2점으로 평가되어 역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형평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7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과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이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1점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다. 투명성 지표에서는 3.7점을 받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들이 3.0-3.2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정책들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안보분야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투명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책임성 지표 역시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3.6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과 3.5점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 외에는 모든 정책이 3.0-3.2점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이나, 외교안보분야 대부분의 정책들은 책임성과 관련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효과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6점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책이며, 이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이 3.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의 경우 2.7-3.2점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낮은 2.7점을 받은 정책은 재외국민 지원 및 편익증진 외교 정책이다. 만족도 지표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정책,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책, 이산가족 문제해결지원 정책이 3.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책이 3.5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의 정책들의 경우 만족도가 2.6-3.1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2.6점의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이다.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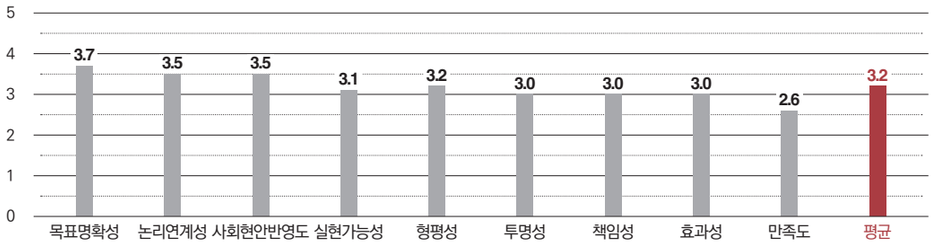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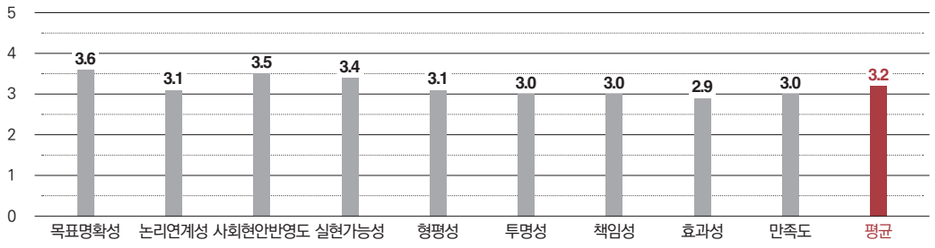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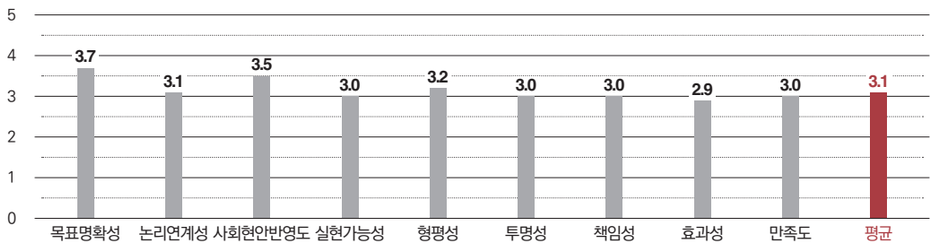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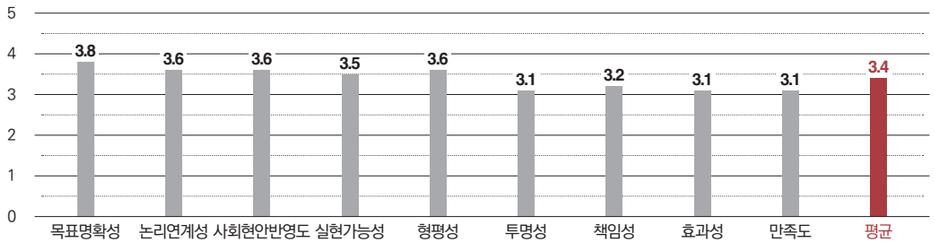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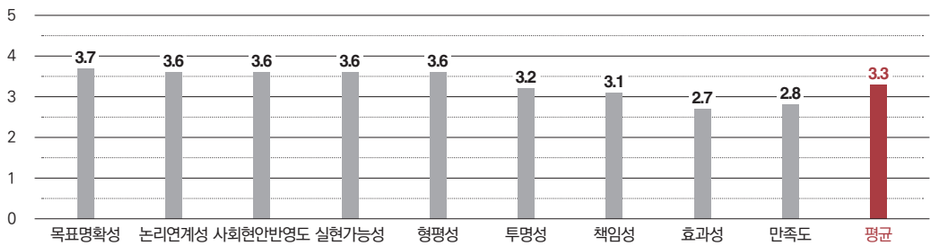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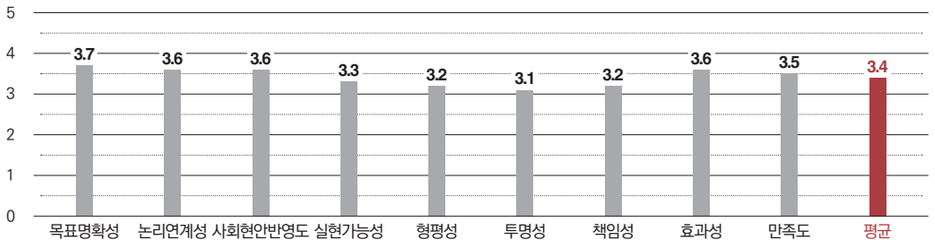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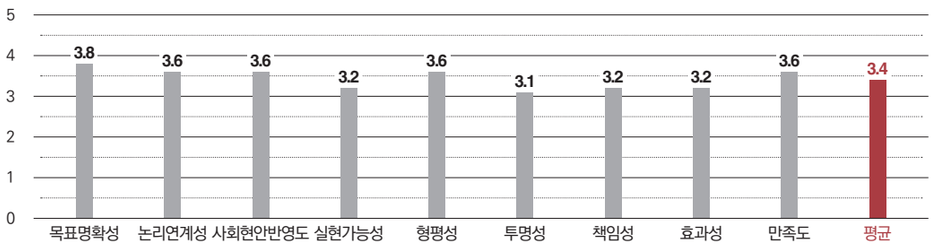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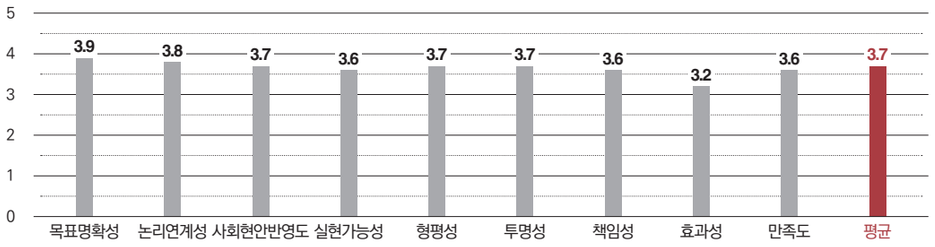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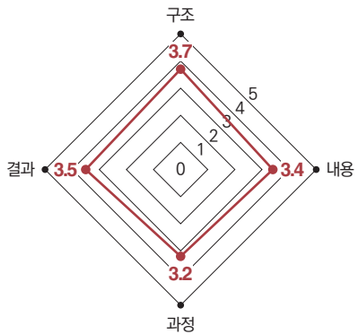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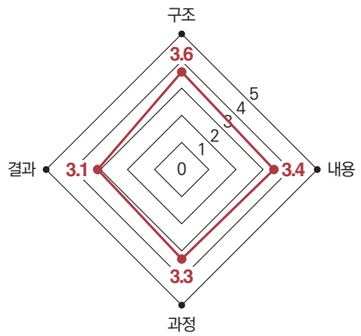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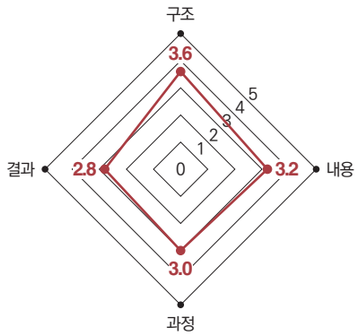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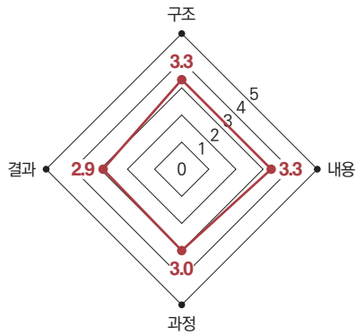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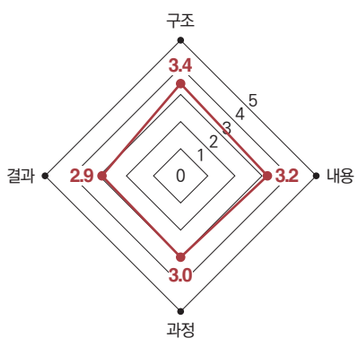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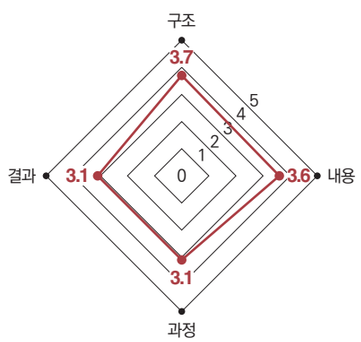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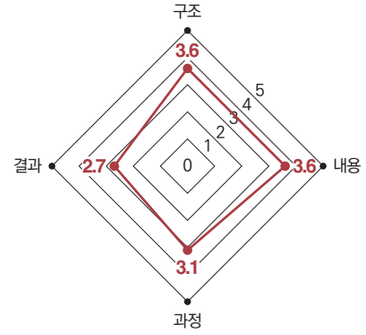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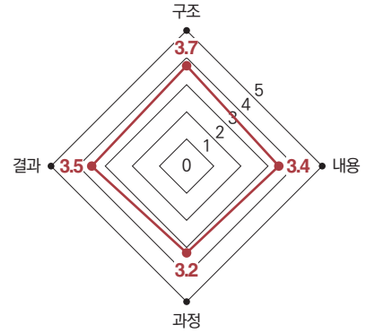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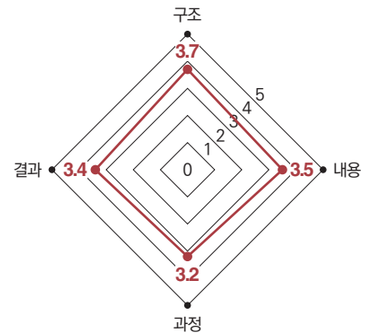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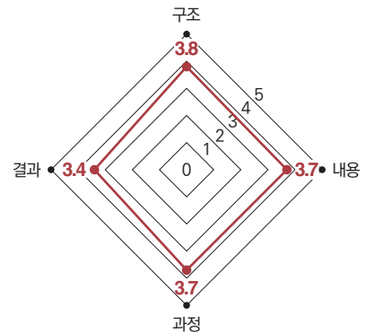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05

제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에 대한 인식

1 |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 320

2 |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 324

본 평가에서는 각 주요 정책별 평가와 더불어 1) 정부정책지지도, 2) 정부신뢰, 3)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4) 정책이 삶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를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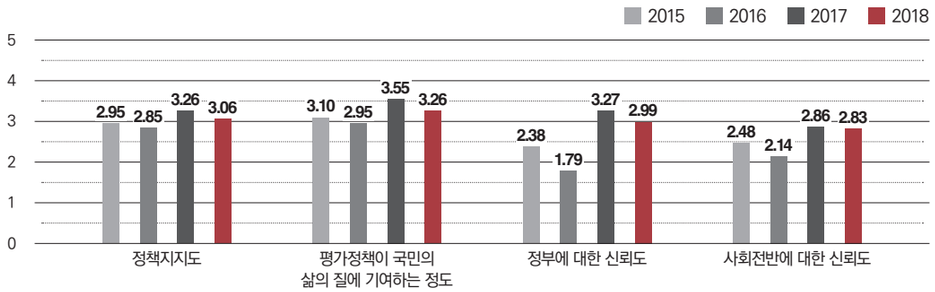
정책지지도 결과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그리고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책지지도가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이 정책의 소위 '허니문' 기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룹별 분석에서, 20대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떨어진 부분이나, 중부 그리고 수도권의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 따른 평가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에 대한 인식

본 평가에서는 각 주요 정책별 평가와 더불어 1) 정부정책지지도[5], 2) 정부신뢰, 3)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4) 정책이 삶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를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아래 [그림 5-1]은 네 항목의 지난 4년간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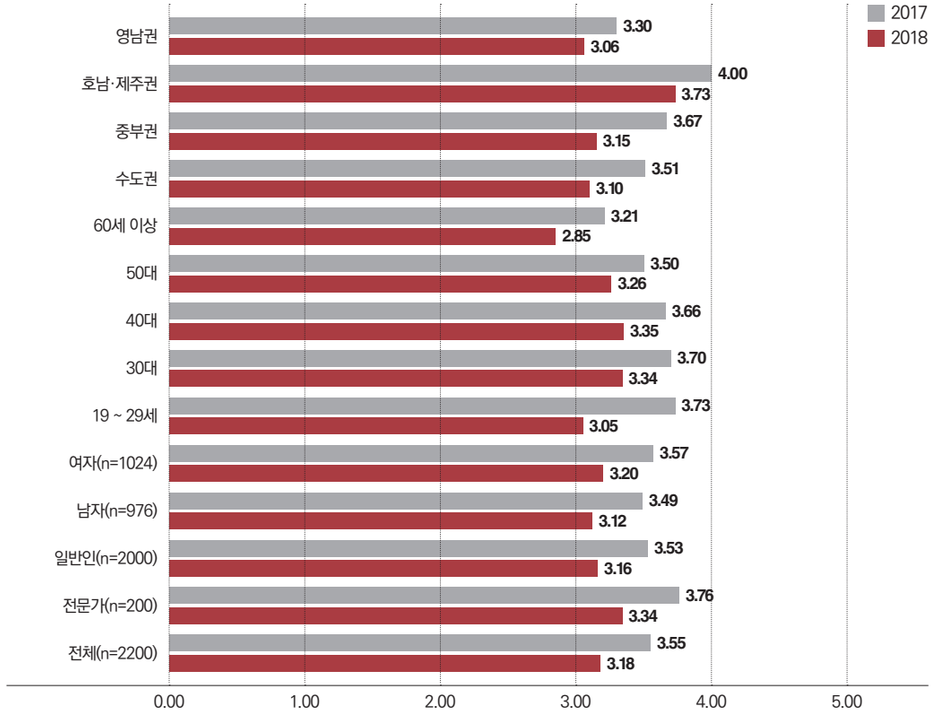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정책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부정책 지지도 평균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의 3.3점보다 0.3점 정도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정책이 국민에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도 3.6점에서 3.3점으로 0.3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17년의 3.3점에서 3.0점으로 역시 "보통"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였던 높은 수준의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찬반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2.8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2017년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6] 그 추세를 살펴보고 있다. 2018년의 설문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에 3.6점(100점 환산 시 72점)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였다. 또한 지역이나 나이·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호남과 제주권의 점수(3.7점)가 영남권(3.1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의 기대감(2.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대의 점수(2017년 3.7점에서 2018년 3.1점)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중부권(2017년 3.7점에서 2018년 3.2점)과 수도권(2017년 3.5점에서 2018년 3.1점)의 하락의 폭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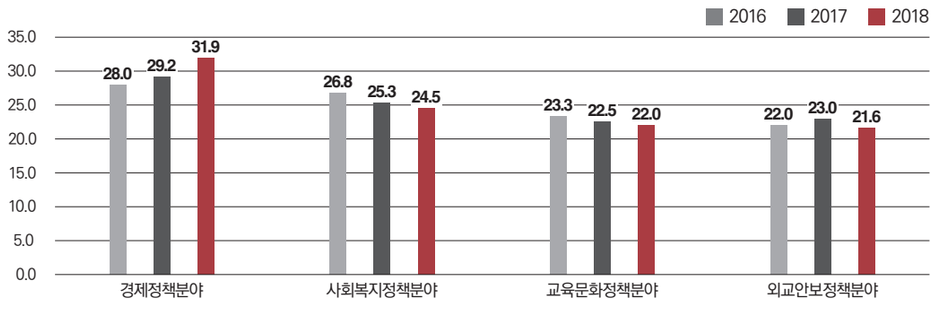
5) 국민의 정책지지도는 개별 정책에 대한 10개 세부항목의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6) 사용된 설문 항목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이다.

[그림 5-2]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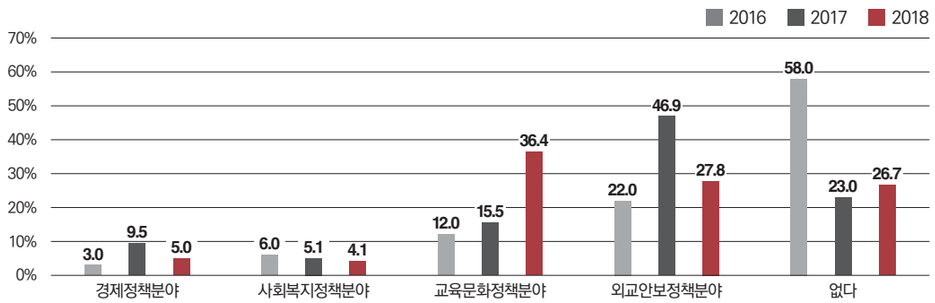
또한,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100점의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네 개의 분야(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로 나누어 점수를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림 5-3]은 2016년에서부터 2018년간의 3개년의 결과를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다. 우선 2018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경제 정책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32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가 그 다음으로 25점, 교육문화정책 22점, 외교안보가 2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중요성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경제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보다 높은 배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또한, 2017년에는 외교안보정책이 교육문화 정책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2018년의 조사에서는 다시 교육문화 정책보다 그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간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교안보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5-3]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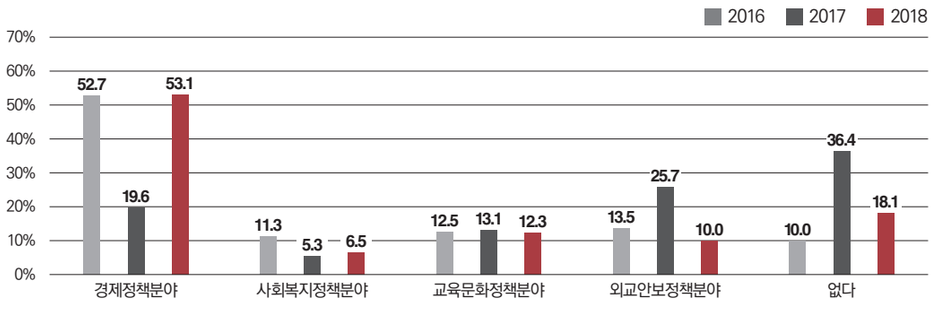


또한 본 조사에서는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4개의 정책 분야 중 어떤 분야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그림 5-4]는 개선된 정책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2018년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외교안보 정책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가장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36.4%),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분야(27.8%)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5.0%)과 교육문화정책(4.1%)이 나아졌다고 하는 응답은 5%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26.7%로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는 과반이 넘는 53.1%의 응답자가 경제정책분야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나타난 52.7%보다도 높은 수치로, 경제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반면 외교안보분야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년도의 25.7%보다 크게 줄어들어, 10% 응답자가 예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도와 비교해 안 좋아진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2017년의 36.4%에서 2018년 18.1%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5]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본 조사는 정부정책지지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7]을 실시하였다. [표 5-1]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정과 긍정이 비슷한 비율로 양분되어져 있다는 점이며, 부정보다는 긍정적 지지를 하는 응답이 다소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조사에서 정책지지도에 대한 일반인의 47.3%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51.5%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별 구분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이 응답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대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47.6%)보다는 부정적인 응답(51.3%)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정치적 성향은 정책지지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중도 진보나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60%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중도 보수나 보수로 본인을 정의한 응답자들은 30-40%만이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정책지지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71	0	129	200
		35.5%	0.0%	64.5%	100.0%
	일반인	946	24	1030	2000
		47.3%	1.2%	51.5%	100.0%
전체		1017	24	1159	2200
		46.1%	1.1%	52.7%	100.0%
일반인 – 성별	남자	471	10	540	1021
		46.1%	1.0%	52.9%	100.0%
	여자	475	23	663	1024
		48.5%	1.4%	51.5%	100.0%
일반인 – 연령	19~29세	183	4	170	357
		51.3%	1.1%	47.6%	100.0%
	30대	177	10	169	356
		49.7%	2.8%	47.5%	100.0%
	40대	194	6	202	402
		48.3%	1.5%	50.2%	100.0%
	50대	164	1	251	416
		39.4%	0.2%	60.3%	100.0%
	60세 이상	228	3	238	492
		48.6%	0.6%	50.7%	100.0%
일반인 – 지역	수도권	487	13	522	1022
		47.7%	1.3%	51.1%	100.0%
	중부권	124	4	134	262
		47.3%	1.5%	51.1%	100.0%
	호남·제주권	76	2	131	209
		36.4%	1.0%	62.7%	100.0%
	영남권	259	5	243	507
		34.5%	2.5%	63.0%	100.0%
일반인 – 학력	고졸 이하	487	12	509	1008
		48.3%	1.2%	50.5%	100.0%
	대재 이상	459	12	521	992
		46.3%	1.2%	51.5%	100.0%
일반인 – 정치적 성향	진보	82	1	126	209
		39.2%	0.5%	60.3%	100.0%
	중도진보	173	7	327	507
		34.1%	1.4%	64.5%	100.0%
	중도	406	14	397	817
		49.7%	1.7%	48.6%	100.0%
	중도보수	215	2	149	366
		58.7%	0.5%	40.7%	100.0%
	보수	70	0	31	101
		69.3%	0.0%	30.7.%	100.0%

[표 5-2]는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18년도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35%로 2017년도의 46.5%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정책지지도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반면, 정부신뢰도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중간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부신뢰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대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주와 호남 지방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4.5%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이는 반면,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1.2%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호남지역에서의 신뢰도는 전년도 63.3%에 비해 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을 진보로 정의한 응답자들의 경우, 59%의 응답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신을 보수와 중도-보수로 정의한 응답자들은 각각 16.9%와 11.9% 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차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5점으로 조사된 항목을 1-2점을 부정적인 대답으로 3점을 보통으로 그리고 4-5점을 긍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정부신뢰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55	50	95	200
		27.5%	25.0%	47.5%	100.0%
	일반인	706	594	700	2000
		35.3%	29.7%	35.0%	100.0%
전체		761	644	795	2200
		34.6%	29.3%	36.1%	100.0%
일반인 – 성별	남자	366	277	378	1021
		35.8%	27.1%	37.0%	100.0%
	여자	340	317	322	979
		34.7%	32.4%	32.9%	100.0%
일반인 – 연령	19~29세	146	104	107	357
		40.9%	29.1%	30.0%	100.0%
	30대	108	106	142	356
		30.3%	29.8%	39.9%	100.0%
	40대	110	135	157	402
		27.4%	33.6%	39.1%	100.0%
	50대	125	129	162	416
		30.0%	31.0%	38.9%	100.0%
	60세 이상	217	120	132	469
		46.3%	25.6%	28.1%	100.0%
일반인 – 지역	수도권	374	307	341	1022
		36.6%	30.0%	33.4%	100.0%
	중부권	99	76	87	262
		37.8%	29.0%	33.2%	100.0%
	호남·제주권	35	60	114	209
		16.7%	28.7%	54.5%	100.0%
	영남권	198	151	158	507
		39.1%	29.8%	31.2%	100.0%
일반인 – 학력	고졸 이하	372	297	339	1008
		36.9%	29.5%	33.6%	100.0%
	대재 이상	334	297	361	992
		33,7%	29.9%	36.4%	100.0%
일반인 – 정치적 성향	진보	37	48	124	209
		17.7%	23.0%	59.3%	100.0%
	중도진보	89	137	281	507
		17.6%	27.0%	55.4%	100.0%
	중도	302	294	221	817
		37.0%	36.0%	27.1%	100.0%
	중도보수	209	95	62	366
		57.1%	26.0%	16.9%	100.0%
	보수	69	20	12	101
		68.3%	19.8%	11.9%	100.0%

[표 5-3]은 사회신뢰도에 관한 그룹의 교차분석 결과이며, 2017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사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일반인이 22.9%였으며 2018년에는 22.1%로 그 수치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신뢰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수로 정의한 응답자의 경우, 10.9%만이 사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신을 진보로 정의한 응답자는 38.8%가 사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사회신뢰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49	87	64	200
		24.5%	43.5%	32.0%	100.0%
	일반인	706	852	442	2000
		35.3%	42.6%	22.1%	100.0%
전체		755	939	506	2200
		34.3%	42.7%	23.0%	100.0%
성별	남자	362	408	251	1021
		35.5%	40.0%	24.5%	100.0%
	여자	344	444	191	979
		35.1%	45.4%	19.5%	100.0%
연령	19~29세	172	118	67	357
		48.2%	33.1%	18.8%	100.0%
	30대	118	148	90	356
		33.1%	41.6%	25.3%	100.0%
	40대	124	183	95	402
		30.8%	45.5%	23.6%	100.0%
	50대	115	193	108	416
		27.6%	46.4%	26.0%	100.0%
	60세 이상	177	210	82	469
		37.7%	44.8%	17.5%	100.0%
학력	고졸 이하	360	454	194	1008
		35.7%	45.0%	19.2%	100.0%
	대재 이상	346	398	248	992
		34.9%	40.1%	25.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	58	70	81	209
		27.8%	33.5%	38.8%	100.0%
	중도진보	151	204	152	507
		29.8%	40.2%	30.0%	100.0%
	중도	295	376	146	817
		36.1%	46.0%	17.9%	100.0%
	중도보수	152	162	52	366
		41.5%	44.3%	14.2%	100.0%
	보수	50	40	11	101
		35.3%	42.6%	10.9%	100.0%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그리고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책지지도가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이 정책의 소위 '허니문' 기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룹별 분석에서, 20대의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떨어진 부분이나, 중부 그리고 수도권의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 따른 평가가 극명하게 다른 것은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06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 | 정책평가 결과 종합 332

2 |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36

2018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1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수치가 각각 3.1(2014년), 3.05(2015년), 2.98(2016년), 2017년 3.3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치가 작년보다는 0.15점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높은 기대를 반영했던 정책평가 점수가, 소위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정책효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정책구조(평균 3.4점)와 정책내용(평균 3.3점)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과정(평균 3.0점)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그리고 정책결과(평균 2.9점)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에는 국민이 공감을 하지만 그 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정책결과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소통되고 평가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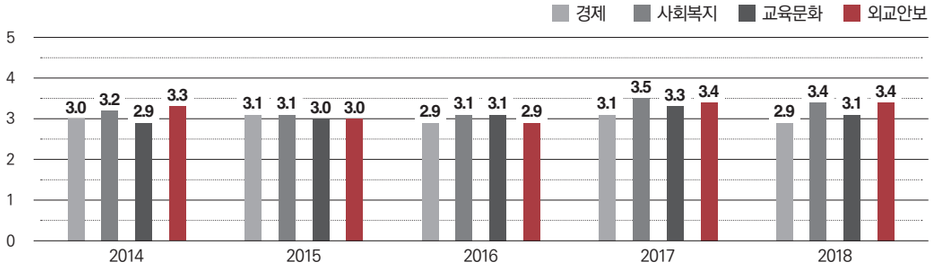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018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1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수치가 각각 3.1점(2014년), 3.05점(2015년), 2.98점(2016년), 2017년 3.3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치가 작년보다는 0.15점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높은 기대를 반영했던 정책평가 점수가, 소위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정책효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 분야별, 개별 정책별,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분야의 비교

[그림 6-1]은 4대 분야별 종합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4개 정책 분야의 2014년에 첫 정책평가를 실시한 이후, 그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정책분야는 2018년 2.9점으로 2017년 3.1점보다 하락하였으며, 그 수치가 정책평가가 시작된 5년 수치에서도(2014년의 3.0점, 2015년의 3.1점, 2016년 2.9점, 2017년 3.1점), 그 평가가 최하 수준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결과가 가시화 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8년 3.4점으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점수를 비교해도(2014년 3.3점, 2015년 3.0점, 2016년 2.9, 2017년 3.4점) 최고점에 해당하는 수치로, 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긍정적이니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문당시, 북미회담에 연기와 북중 무역마찰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외교분야에 대한 평가에 높은 상승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분야의 평가는 2017년 3.1점으로 2017년 3.3점에 비해 0.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9점, 2015년 3.0점, 2016년 3.1점 등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에는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이 전체 40개 정책 종합순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일자리 창출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3.4점으로 2017년 3.5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2014년 3.2점, 2015년 3.1점, 2016년 3.1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교안보분야와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정책들은 모두 평균 이상(3.0점)의 평가를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복지정책분야는 국민 대다수가 효과를 직접 해택을 볼 수 있는 점에서 다른 평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으로 소방송출로 확보를 위한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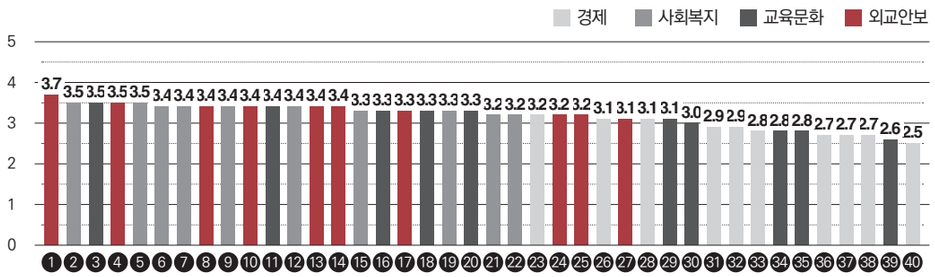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② 개별정책의 비교

[그림 6-2]는 40개 정책 종합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정책평가에서는 40개중 30개 정책이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15개, 2014년에 26개, 2015년에 22개의 정책이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치지만, 2017년의 38개 정책이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 3.5점을 넘어서는 정책도 5개로 2017년의 8개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5점이 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와 외교안보분야가 2개였고, 교육문화 분야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 두 정책은 국민의료비부담경감(3.5점)과 아동수당제도(3.5점)로 나타났다. 외교안보분야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두 정책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3.7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3.5점)이었으며 교육문화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도시숲 조성(3.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정책 중 경제정책분야의 정책이 7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5가지 정책은 소득주도성장(2.5점), 대학기본역량평가(2.6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2.7점), 재생에너지 3020(2.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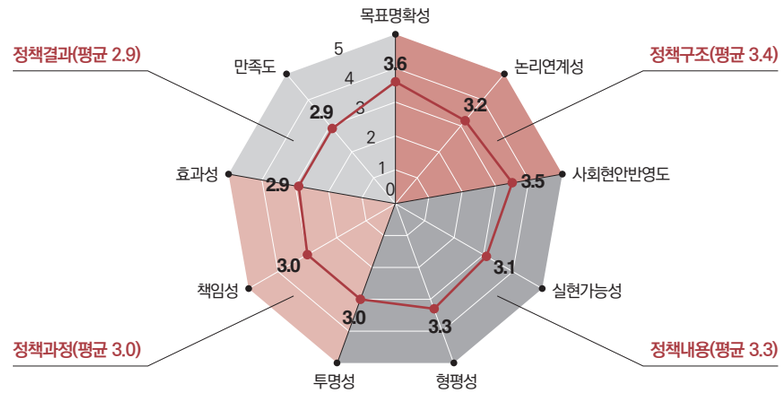


1.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
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
3. 도시숲 조성(산림청)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
5.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
6.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
7.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
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
9.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10.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11.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
12.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1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14.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15.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
16.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
1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
18.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1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
20.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
21.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
22.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23. 한미 FTA개정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
24.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25.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
26.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
27.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
29. 학교폭력예방(교육부)
30.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3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
3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
33.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34.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3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3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
37.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
38.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
39.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
40. 소득주도성장(다부처)

③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그림 6-3]은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책구조(평균 3.4점)와 정책내용(평균 3.3점)은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과정(평균 3.0점)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그리고 정책결과(평균 2.9점)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에는 국민이 공감을 하지만 그 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부설문 항목을 살펴보면 "목표명확성"이 3.6점으로 전체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현안 반영도"가 3.5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이 3.3점, 논리적 연계성이 3.2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실현가능성"(3.1점)과 "투명성"과 "책임성"(3.0점)은 평균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효과성", "만족도"(2.9점)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책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소통되고 평가받는지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분야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은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비대칭정보의 해소, 공정거래 협약 준수 유인 제공,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 정책의 세부 목표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의 관행을 사회적 규범으로 수립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규범이란 행위자들에게 내면화된 행위의 준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해에 걸쳐서 본 정책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를 내면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정책 자체의 높은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당국에게 정책의 완결성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그 한 예로서, 본 정책이 단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하는 사후적 역할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규범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행이 수립된다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본 정책에서 시도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의 높은 정책이행의지를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표명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정책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수 년 간 급격히 상승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억제 정책이다. 개발억제, 대출억제, 과세강화라는 삼축을 기반으로 아파트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 공급확대는 최근에야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멈추었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얼핏 시장안정으로 보이지만 안정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단기적인 충격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면 가격안정과 함께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택지개발을 통한 서울 외곽의 공급확대 뿐 아니라 서울 도심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허용할 것은 허용하되 과세강화나 임대주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만이 활용하는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질과 형식으로 제공하여 주택의 소유와 임대를 선호의 문제로 조금씩 바꿔가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은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물리적 개발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을 사람과 커뮤니티, 삶의 질 중심의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충분히 좋은 방향성이고 시도해봄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개발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업의 대부분은 기존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해 마을회관은 지어주지만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사업이 필요한 곳이 배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점의 극복을 위해선 형식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정책과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과의 차이점은 일자리 사업의 포함 유무 정도인데, 그렇다면 지역을 더 잘 알고 지역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재정구조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5:5 매칭 구조로는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사업신청을 하기 어렵다. 사업대상을 줄이더라도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어 정말 필요한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예산의 사업비가 흘러들어가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제대로 된 통제 장치 없이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지역에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에 대해서 본 연구는 관계당국이 느꼈을 고심을 공감하는 바이다. 총 가계부채 수준이 1,500조 원에 도달한 작금의 상황에서 건전한 거시경제의 유지를 위한 고육지계로서 서민 및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규제를 고육책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8.11.4). 한편 동시에 본 연구의 이러한 공감은 관계당국이 이러한 서민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대출절벽 및 이에 따른 신용경색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해야 하는 임무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금년 4분기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지적을 수용하여 중금리대출을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진으로 하여금 본 정책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시경제의 건전성 획득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머니투데이, 2018.5.27). 따라서 본 연구진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로 예측되는 서민, 자영업자, 은퇴자,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주문하는 바이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은 새로이 등장한 가치축장 및 거래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불안정성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으로서 효과적이며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그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래실명제의 도입을 통해 이해집단의 저항을 최소한 측면과, 금융시장의 자율적 거래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행위지침을 마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제공에 대한 높은 평가가 온당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본 정책의 초점이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 새로운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을 요구하는 시장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시장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요구하는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국민일보,

2018.7.25). 물론 가상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기근절과 범죄 악용 가능성 차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조건 제공을 위한 수동적 규제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블록체인의 기술적 혁신과 첨단기술의 선점확보를 이끌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창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이르러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년간의 한시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것이며,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창업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본 정책은 다른 분야의 노력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그나마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로 풀어야지 공공부문 단기 알바만으로는 답이 되질 않는다.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는 일시적인 진통제 같은 것인데 아플 때 진통제는 단기 증상완화는 되지만 원인치료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인치료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중 중요한 부분을 청년창업이 차지할 수 있는데, 청년창업의 핵심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정책은 규제완화와 함께 가야만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책 담론 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큼 논란이 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본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줄어들었고,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본 정책의 핵심 가정인 저소득층 소득증대라는 중간목표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따라서 일단 성장보다는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증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정책수단이다.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완만한 인상이 요구되며, 직종별 지역별 차등 인상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단기적인 대증요법이긴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위축된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다. 저소득층 소득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건설인데, 부동산 건설 위축과 함께 SOC 투자까지 줄어들어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를 인지하고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생활 SOC 투자의 성격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너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일자리 충격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20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진 우리 경제 구조를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려면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소개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판을 바꿔야 한다. 의도는 너무 좋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 아쉽게도 규제개혁을 통해 이뤄낸 것이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 그나마 최근에 정보통신융합법의 통과로 규제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 새로운 상품과, 창업, 새로운 시장의 창조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성격에 부합하려면 기술의 분야 구분이 없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정보통신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하려면 의료 관련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 두 분야의 규제완화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라면 분야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생산구조의 변환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책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규범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정책은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규범적 정당성이 실천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에너지소비 패턴 수립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정책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생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선결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규범적 정당성에만 의지한 채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종합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등의 통계수치로 대변되는 양적 목표보다는 효율적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보라는 질적 목표를 수립하고 집중하여 상기한 두 가지 선결조건을 먼저 확보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에 포함된 450억 규모의 R&D 사업 등의 항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 정책에 대한 본 연구의 평가는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평가하듯 "내줄 것을 내주고 지킬 것은 지켜"서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했을 때 무난하게 현상유지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중앙일보, 2018.9.5).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의 철강관세 예외국으로 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은 단순히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최근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하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아무리 내줄 것은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결과로 자동차산업 및 일정 산업에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사회복지정책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은 기존에 있던 경찰청 내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약자 범죄를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경찰청의 업무가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와 피해자 보호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부정책들은 정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책임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종 대응 강화'의 경우 기존의 '실종아동 대응 제도'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건의 발생 이후 실종아동법 등에 기반한 즉각적인 법적 지원이 기대되고, 지문사전등록제도과 같은 예방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치매노인배회기 등의 보급을 통해서 적은 집행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대응'이나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위기 청소년을 발굴, 특별관리한다는 '청소년 보호'의 경우 범죄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관련 기관과의 역할 조정, 현장 대응 등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 많으며 높은 집행비용이 예상된다. 현재 정책이 '신고기간', '단속기간' 운영과 같은 기간성 대책을 주로 활용하는 것도 현장의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해당 정책은 정책의 구조나 설계 측면보다 정책 과정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문제점으로 피해자와 집행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공론화에서 볼수 있듯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은 정책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집행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고려할만 하다. 해당 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한다는 것이지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정책시행에도 불구, 피해자 보호에 큰 개선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현재의 정책내용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현장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 장기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정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9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올 7월부터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과반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정책지향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집행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정부 간의 실무협의체가 가동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다시 말해, '밥그릇 싸움'이나 '수가제 논쟁'으로 정책이 프레이밍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은 소외된 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18.05.11.).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그리고 의견 수렴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가히 획기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5년 7월 다양한 복지욕구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 이후로, 정책 내용과 구성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고 소득분배지표가 약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획기적인 빈곤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본 정책을 빈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7.08.10.).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 명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장장부양'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자는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와 달리,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 및 우려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 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45만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궁극의 목표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기초연금의 일부를 수급노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다(한겨레, 2018.07.24.).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있어 많은 논쟁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저출산정책과 별개의 것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제도의 목적은 저출산 해소가 아닌,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은 가정이 10만원의 유인으로 인해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적다. 지난해 5월 말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아동수당에 대해 69.3%가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뷰어스, 2018.06.20.). 아동수당제도를 저출산 정책이나 이를 위한 수단적·포퓰리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 정책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정책은 거시적 사회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은 해당 정책의 추진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경험을 통해 정책을 수정할만한 구체적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소방차 현장도착 시간'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지표로서 정책보다는 그 외 인프라의 차이나 현장 역량 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부처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예컨대 행안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 중 '소방차진입로와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대책'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간단한 논리적 연계성과 목

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이 함께 잘 추진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교통시스템 변화 등 세부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제도 변화의 목적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얻어나가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의견 등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정책 홍보가 정부의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책은 민간 제약회사의 채산성 문제 등 시장상황에 의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 공중보건위기 대응,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책은 다수 중앙부처와 매년 필수의약품 목록을 지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단체, 의료현장과 제도적으로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환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하였다. 해당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정책의 집행과정에 집중된다. 공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제약사에 특례수입, 위탁제조, 구매지원, 공급 독려 등 적정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이 가운데 '위탁제조'는 민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독점적 지위가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협상에 실패한다면 의약품 공급중단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최근에도 '리피오돌' 사태에서 민간 제약사가 정부에 요구하는 필수의약품의 '약가 인상'을 둘러싸고 그것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때그때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 인상을 받아들이기보다 정부가 주도하여 필수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공공제약사')도 있지만(약업닷컴, 2018), 제약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에서 공공제약사 운영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주무부처인 식약처 입장도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구축 정책에서 민간 제약회사의 역할을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약사공론, 2018). 어떤 방식으로 민간과 책임을 공유해야 할지, 적정수준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기존 주요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불어진 최근에 들어서야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대책 및 피해자 구제책이 나왔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실제로, 이 정책에 대해 '졸속대책'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존재하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자주 제기된다(연합뉴스 2017.11.14.). 그래서 사후 약방문 같은 정책제안 이전에, 왜 기존 정책과 법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각종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기존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성희롱·성폭력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법제를 보다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조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장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난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자와 대상자, 행위요건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를 통일화하고 정비함으로서 혼선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조주은, 2018).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성폭력 징계와 사건처리에 대한 통일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기업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의 징계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통일된 세부지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해 단호한 경계가 될 만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연합뉴스 2018.03.15.).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07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만족도 평가 및 정책환류를 통해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수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완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보다 확장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아이돌봄지원법」에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정부의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초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의 아이돌보미 1200명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지난 8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통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지 '좋은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직을 홍보하기 이전에, 이들을 근로자로서의 대우하고 인정하는 제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정책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장애인 구분모집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이공계관리자 임용확대,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등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7월 정책대상별로 운영되던 이러한 제도들을 통합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되었다. 정책내용의 핵심이 대상별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양적인 대표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균형인사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지자체)-기획재정부(공공기관) 등 다기관이 연계되어 추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공직 내 진정한 의미의 균형인사가 이루어지고 공직 내 공정성 및 형평성 가치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채용성과를 강조하는 일차적 목표에서 더 나아가서 승진에서의 차별 해소 또한 목표해야 할 것이다. 균형인사 정책의 내용은 '다양성 확보를 통

한 정책 대표성 향상'과 '차별 없는 인사관리로 형평성 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뒷부분보다 성과의 가시성이 높은 앞부분에 치우쳐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균형인사제도가 1989년에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입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여성 고위공직자 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는 원인이 채용규모가 아니라 '유리천장'과 같은 관행이라는 비판을 고려할 때,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대상에 있어서도 차별 또는 불공정을 만드는 원인은 보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실적제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균형인사 원칙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비가시적인 측면 또한 해당 정책이 보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생활 속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관행들을 근절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진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법제도 개선, 예산 반영, 시행령 개정, 국민참여 신고제도의 도입, 안전문화 홍보운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관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행동을 모두 변화시킨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했다는 점은 이해할만 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먼저 세부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구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신고, 점검, 단속' 강화한다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각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또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주 담당부처를 중심으로 각자의 속도로 진행될 7개의 서로 다른 세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만한 협업 체계가 잘 마련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교육문화정책분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2021년까지 40% 이상으로 제고하려는 목표가 매우 명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단계적 이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립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단기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과 시설 확보의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매년 적정규모의 학급 신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폐원하는 사립 유치원의 수용능력을 국공립 유치원에 수용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중심에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전환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공모 및 선정, 국고 예산 배분, 집행,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하고, 전면적인 확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요 재원확보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정책은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계획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아직 많은 학교가 공기정화시설이나 실내체육 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정책수단은 국가, 지역, 단위학교별로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또래, 개별교육, 정규교육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일반 학생이나 교원의 입장에서 이수하거나 적용받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개별 프로그램들이 각각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 총체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공급비용뿐만 아니라 대상집단의 순응 및 수용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실행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오후에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지역과 학교 간에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를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몰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교육 당국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평가 정책은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 역량진단을 중심으로 개선하면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표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정책수단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래형 고등교육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 혁신과 교육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를 개선하고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정부 당국의 지원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관광벤처, 관광두레,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관광일자리센터 등의 세부방안들을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정책대상인 국민의 참여도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관광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일자리센터 운영과 박람회 구인·구직 프로그램 등 제반 정책수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정책의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것을 보인다. 광범한 사회적 논의와 당국의 숙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아젠다를 발굴해나가는 민주적인 기본 절차를 확립하고 조직의 내부자들 간

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인 인적 청산을 넘어 현안의 선후와 우선순위를 가려 질서 있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정책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심의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확대,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 정보 DB의 보급,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등 정책대안의 제도적 기술적 고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될만하나 현재의 정책이 이미 업로드된 영상물을 사후 차단하는 조치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하므로 앞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내 접근을 막는 방식의 사전 예방 조치에 더욱 많은 자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숲 조성 정책에 의해 2017년까지 조성된 도시숲의 누적 면적은 전국 3,609개소 총 4,515ha에 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산림청이 향후 매년 500ha 이상 도시숲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지역주민의 협조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함과 동시에 소요 예산의 산정 및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외교안보정책분야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강화 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훈을 기리고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내용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국립호국원 의전단의 신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로의 승격,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 확대,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의 위문 확대 등이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투옥 등 사법적 제재 여부가 아닌 실질적 독립운동 활동 여부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이나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인이 되었거나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임을 입증하고 판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실질화나 예우 강화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보훈 관련법과 제도를 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병적자료의 수집·분석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6.25전쟁 등에 관련된 문헌과 역사적 사실들을 충분히 고증하고 분석해서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 육군의 경우 2018.10.1.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2021년까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병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그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정책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지속을 위한 노력,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지능화와 훈련체계의 고도화, 인구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관한 지속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청년취업문제의 개선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핵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북한의 잠재적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 등 타격 수단을 집중 육성하며, 핵심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성능개선과 통제소와 발사대 · 레이더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F-35A 전투기 도입과 GPS유도폭탄(KGGB) 개발·양산 등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계획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3축 체계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입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3축 체계 조기 구축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뉴스웍스, 2018.4.8). 정부는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동시에 불용 및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 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남북의 평화·화해 분위기를 고려하여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서 융통성 있게 검토 ·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능동형 수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정책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협력 쿼터제 등을 도입하여 국방산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며, 맞춤형 수출방식 개발과 관련한 절차와 규정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마케팅 · 금융 서비스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정책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방산 분야의 수출품목 및 방식의 다변화가 중요한 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의 금융 · 마케팅 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성격상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그리고 성과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정책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 · 보완하는 동시에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가 및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비리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정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특히 정책의 인지도와 정책의 책임성 및 효과성 측면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위산업 비리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처벌의 강화와 교육시스템의 정비라는 정책대안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비리근절 문화와 청렴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비리의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정책이다. 올해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여건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나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대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정책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평가 결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제도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세부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들이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정책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책은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문화·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책임성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효과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주도의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정책은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및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경우 특히 투명성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내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정책의 투명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나아가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효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정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구축하며, 교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이산가족 정책으로 시행되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제정책분야

Neumark, D., Salas, I, Wascher, W. 2014.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ILR Review, 67: 608-648

SBS NEWS. 2018.7.14. [최저임금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소 월급 174만5천150원.

관계부처 합동. 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8.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요약).

관계부처합동. 2018.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관계부처합동. 2018.8.22. 별첨3: 정책과제별 건의 협·단체.

고용노동부. 2018.5.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1.25.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9.13. 공고 제2018-12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

국토교통부. 2018.9.5. 보도자료,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국무조정실. 2018.2.27.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국무조정실. 2018.10.19.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파의 길잡이 나왔다: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일보. 2018.7.15. "훅 날아간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투기 논란 그 후."

금융위원회. 2018.1.23. 보도자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금융위원회. 2018.4.16.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2018.6.25. 보도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18.10.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8.10.19. 보도자료, 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2018.3.7. 보도자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18.4.5.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2018.4.12. 청년일자리 대책&지역대책! 결재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VGpmwfuzq8

기획재정부. 2018.7.18. 보도자료, 김동연 부총리,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뉴시스. 2018.9.12. 청년일자리대책 반년만에 외환위기급 청년실업률.

머니투데이. 2018.5.27.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서 중금리대출 제외."

매일경제. 2017.8.24. 기과열지구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5년간 반대 '0'.

매일경제. 2017.12.25.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매일경제. 2018.7.15. 낡은 집 넘치는데… 인근 집값 올랐다고 재생 외면.

부동산 리얼투데이. 2017.9.15. 서울이 늙었다? 입주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체의 78%.

브릿지경제. 2018.11.12. 다시 혁신성장 페달 밟은 정부, 이번엔 이정표대로 갈까.

산업통상자원부. 2018.3.26. 보도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2018.5.30.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재생에너지 보급, 이상무! 산지훼손, 부동산 투기는 그만!.

산업통상자원부. 2018.9.3.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서울신문. 2018.11.4.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서울경제. 2018.5.13. 서울, 고급주택 가격상승률 세계 1위.

서울경제. 2018.7.16.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도소매, 숙박음식점 5개월새 3.4만개 감소… 일자리 완충지대 사라진다.

신아일보. 2018.1.23. 도시재생,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2018.11.22. 3분기 소득 양극화 심화… 고,저소득 간 격차 최고치.

조선비즈. 2018.10.21. "깐깐해진 DSR 대출 규제 자영업자 타격 크다."

조선일보. 2017.5.27. 최근 1년 서울 집값 상승률, 세계 150개 도시 중 91위.

조세일보. 2018.9.13. 9.13 부동산대책 "대출규제보다 종부세가 더 충격".

중소기업중앙회. 2017. 2017년 중소기업위상지표.
중앙일보. 2018.9.5. “한미 FTA 자동차 협상, 내줄 픽업 내주고 지킬 부품 지켰다.”
한겨레. 2018.7.14.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월급 174만원선.
한겨레. 2018.8.16. 주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주목받는 투잡.
한국금융. 2019.9.13. [9.13 부동산 대책] 핵심 키워드는 규제지역 주택대출 봉쇄.
한국경제. 2018.11.20. 50억 예산 받고도… 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

2. 사회복지정책분야

경찰청. 2017. 경찰 “SPO업무 정예화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토한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2017.12.22.)
경찰청. 2018. 경찰백서.
경찰청. 2018.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2018.6.14.).
경찰청. 2018. 보도자료.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계획 (2018.9.7.)
경향신문. 2018. 치매노인 실종 막는 배회감지기, 실종자 발견시간 크게 단축… 경찰 보급 확대키로. (2018.9.21.)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7.11.15.)
관계부처합동. 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8.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2018.07.03. 보도)
관계부처합동. 2017.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발표문. (2017.08.10.)
관계부처합동. 2017, 보도자료.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수립. (2017.08.10.)
관계부처합동. 2018.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08.10.)
국민일보. 2017. ‘약자’ 노린 범죄… 대책은 그때뿐 되레 더 는다 (2017.4.14.)
국회입법조사처. 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8. 성희롱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Vol. 16.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슈와 논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 (2018.8.30.)
뉴스토마트. 2018.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효자의 역설’ 현실화하나.” (2018.17.16.)
뉴시스. 2018. “3년 앞당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복지차원 ‘7만명 혜택.’” (2018.07.18.)
뉴시스. 2018. '소방차 골든타임 5분 도착' 광주 69.5%·전남 49.1%…전국 평균 55.6%. (2018.10.15.)
대한민국 정부. 2016. 보도자료.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2016.12.6.)
동아일보. 2017. OECD 31개국 도입 아동수당, 내년 7월 받게 될까. (2017.11.09. 보도)
중앙일보. 2018. ‘아동수당’ 과잉복지 논란 여선..‘국가보장 보편적 권리로 봐야.’ (2018.04.17. 보도)
매일경제. 2018. 탁상행정의 끝판왕 ‘1대多’ 아이돌봄 (2018. 05. 29.)
메디게이트. 2018. 리피오돌 약가협상 앞둔 정부의 장단기 대응방안은. (2018.7.4.)
메디게이트. 2018. 문재인 케어 재정지출 목표 대비 54.6%만 집행. (2018.10.10.)
메디컬옵저버. 2018. 식약처 “리피오돌 제네릭 개발 기업 혜택 준다” (2018.7.3.)
문화일보. 2018. ‘문재인 케어’ 논의서 국민 소외현상 두드러져. (2018.05.11.)
보건복지부. 2017. 보도자료.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017.08.09.)
보건복지부. 2018.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2018.06.19.)
보건복지부. 2018.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2018.5.14. 보도)
보건복지부. 2018. 보도참고자료. 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에 유감표명. (2018.03.29.)
보건복지부. 2018. 보도참고자료.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1차 논의결과. (2018.06.28.)
서울신문. 2018. 아이돌봄서비스 1년 기다렸는데… 사설업체 이용하라네요 (2018.08.21.)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령 운용 개선방안.
세계일보. 2016. [김현주의 일상 톡톡] 사회적 약자들 '범죄의 표적'이 되다 (2016.7.12.)
소방청. 2018. 보도자료.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2018.8.7.)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 (2018.5.30.)
약사공론. 2018. 약가 인상이 공급 안정에 답 아냐…공공제약사 활용 필요. (2018.7.3.)
약업신문. 2018.
여성가족부. 2018.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 (2018. 08. 31.)
여성신문. 2017. ‘직장 성폭력’ 막으려면 관행부터 바꿔라. (2017.11.14.)
연합뉴스. 2016. 사회적 약자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수위’ (2016.4.23.)
연합뉴스. 2017. 고위공무원 느는데 이공계 출신 되레 감소… 고작 5분의 1 (2017.10.24.)
연합뉴스. 2017. ‘직장내 성희롱’ 근로감독·처벌강화… ‘졸속대책’ 비판도. (2017.11.14.)
연합뉴스. 2018. 직장내 성폭력 ‘솜방망이’ 징계… 세부지침 마련해 강화해야. (2018.03.15.)
연합뉴스. 2018. ‘월10만원’아동수당 신청 않은 21만 명 왜… 신청률 91.6% (2018.09.06.)
인사혁신처. 2011–2018.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 2018.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중앙일보. 2017. 국민 10명 중 6명 ‘문케어’ 방향 OK, 건보료 인상은 NO. (2017.12.14.)
중앙일보. 2018. 빈곤층 54만명,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다고 주거비 탈락 없다 (2018.07.13.)
중앙일보. 2018. 아동수당이 포퓰리즘?… 이 정도 노력도 없이 저출산 탈출이라니. (2018.02.05. 보도)
중앙일보. 2018. 작년 실종아동 2만명… 유전자정보로 14년간 280명 가족 찾아. (2018.5.25.)
프레시안. 2018. 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2018.07.06.)
천지일보. 2018. 장애인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모든 급여에서 완전 폐지하라.(2018.09.05.)
한겨레. 2018. 기초연금 오르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에겐 ‘그림의 떡.’ (2018.07.24.)
한겨레. 2018. 문 대통령 “성평등, 여가부만의 일 아냐… 각 부처 책임져야” (2018.07.03.)
한겨레. 2018. 불법영상 나도는 ‘모바일 웹하드’ 2년전 단속구멍 방치했다. (2018.10.29.)
한겨레. 2018. 불법촬영 진짜 방조자는 경찰… 웹하드 왜 처벌 않나 (2018.8.10.)
히트뉴스. 2018. 필수약 공공적 공급, "제약사들의 협조 바란다" (2018.11.25.)

3. 교육문화정책분야

관계부처합동. 2017. 보도자료,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12월 28일.
관계부처합동. 2018a.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4월.
관계부처합동. 2018b. 보도자료,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6월 28일.
관계부처합동. 2018c.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 2018d.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10월 24일.
교육부. 2017a.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요. 9월 12일.
교육부. 2017b.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시안. 9월 12일.
교육부. 2017c.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11월 29일.
교육부. 2017d1.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시안). 11월.
교육부. 2017d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일반대). 12월 22일.
교육부. 2017d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전문대). 12월 22일.
교육부. 2017e. 보도자료,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12월 17일.
교육부. 2018a. 2018년 업무계획. 1월.
교육부. 2018b. 2018년 자유학년의 자유학기 활동 편성 운영 세부 수정 사항. 1월 17일.
교육부. 2018c. 2018년 자유학기제 수업지원 인력풀 운영 계획. 2월 8일.
교육부. 2018d.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2월.
교육부. 2018e1.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4월.
교육부. 2018e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 4월.
교육부. 2018f.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8월 23일.
교육부. 2018g.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0월.

교육부. 2018h. 참고자료,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현장점검회의 결과. 10월 29일.
교육부. 2018g1. 보도자료, 선생님과 학교가 빚낸 자유학기 수업. 6월 15일.
교육부. 2018g2. 보도자료,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8월 27일.
교육부. 2018g3. 보도자료,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9월 3일.
교육부. 2018g4. 보도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9월 10일.
교육부. 2018g5. 보도자료,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9월 19일.
교육부. 2018g6. 보도자료,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11월 5일.
교육부. 2018g7. 보도자료,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11월 9일.
교육부·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월 1일.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2017.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 4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 운영 가이드. 1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월.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0월.
국회입법조사처. 2018a.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8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 2018b.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7호. 8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진선미·한정애·민경욱·김삼화). 2018.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9월 11일.
김철민 국회의원실. 2017. 국내 도시숲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8월.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8. 보도자료, 역량강화대학, 1차 대학평가 후 2,611억 재정지원사업 받아. 10월 11일.
김희수. 2017. 일자리 관련 관광정책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7-20. 11월
대한민국 정부. 2018.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3월.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년도 업무계획.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018b. 보도자료, 문체부, 콘텐츠·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2018a. 2018년도 업무계획. 1월.
방송통신위원회. 2018b.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3월.
방송통신위원회. 2018c1.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자료.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2018c2. 보도자료_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2018. 보도자료, 방통위-여가부,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7월 6일.
보건복지부. 201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12월.
산림청. 2018a. 2018년 주요업무계획. 1월.
산림청. 2018b.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월.
산림청. 2018c. 2018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서. 1월.
산림청. 2018d. 보도자료, 미세먼지·폭염 잡는 도시숲 “더블 효과”. 8월 3일.
장혜진. 20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제10권 제2호) 8월.
전윤경. 2018.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3호. 6월.
주간조선. 2017. 자유학기제의 두 얼굴. 11월 13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82100012
중앙일보. 2018a. 한국, 언론자유지수 43위… 지난해보다 20위 상승. 4월 25일. https://news.joins.com/article/22567554
중앙일보. 2018b. “국공립 유치원 40% 땐 사립 1020곳 문 닫는다”. 12월 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174140
한국관광공사. 2018. 보도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10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8월.
국민일보. 2018. 예산·부지 확보…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산 넘어 산’. 10월 2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4774&code=11131300&cp=nv
news1. 2018. 1년 앞당긴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예산 책정 어떡하나. 10월 28일. http://news1.kr/articles/?3461471

4. 외교안보정책분야

KBS. 2018. 美 앤드루 김 방한… 북미 ‘판문점 채널’ 본격 가동(2018.12.04.)
Reuters. 2018. North Korea's Kim Jong Un, wife, watch South Korean K-pop stars perform in Pyongyang(2018.4.01.)
SKCN1H81A5
감사원. 2018. 감사보고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2018. 5)
감사원. 2018.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경남일보. 2017. 방산비리,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끊긴다. (2017. 7. 25.).
경북도민일보. 2018.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승자 '남북단일팀'(2018.2.14.)
경인일보. 2018. 문재인 대통령 '남북·북미간 비핵화회담' 활로 찾았다(2018.12.05.)
경향신문. '방위사업감독관' 정규조직 전환, 방산비리 뿌리 뽑는다. (2017. 12. 25.).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국가보훈처. 2017. 업무현황.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보고자료.
국가보훈처. 2018a.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2018b. 2018년 업무계획 보고. 제35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
국방부. 2018. '18-'22 국방중기계획.
국방부. 2018. '18년 업무보고서.
국방부 · 방사청. 2018. 보도자료. 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 2018. 1. 9.
국방일보. 2016. 전력화 진력… 2020년대 중반 ‘한국형 3축 체계’ 완성. (2016. 12. 30.).
국방일보. 2018a.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항아리형’으로. (2018. 8. 1.).
국방일보. 2018b. [이혜경 기고] 국방개혁 2.0, 변환기의 전략적 선택이다. (2018. 11. 28.).
국회 국방위원회. 2017. 2017 국방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분야별 재원배분.
국회의원 이인영 보도자료. 2018.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5년간 43,030명 110% 증가(2018.10.04.)
국회정무위원회. 2018.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호일보 2018. 독립유공자 공훈 적극 발굴 포상해야. (2018. 8. 16.).
김태현 외. 2018. [특집좌담] 4·27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봄, 평화의 문 열다 : '대격변 속 기회 맞은 한반도, 평화구축 의지 다져야. 통일한국. Vol. 413 (2018) pg. 10-18 p
내일신문. 2018.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된다. (2018. 6. 8.).
뉴스1. 2018. "美 상응조치 기대" vs "비핵화 의심"… 여야, 北 리용호 연설에(2018.9.30.)
뉴스웍스. 2018. 김학용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 · KAMD · KMPR'조기구축 지연 우려”. (2018. 4. 8.).
뉴스웍스. 2018. '방산비리' 구속자 50%가 항소심 무죄… 일반 형사범은 3%. (2018. 10. 8.).
뉴시스. 2018. ‘개별상봉+객식중식’ 이산가족 만족도↑ “속 얘기 많이해”(2018.8.25.)
뉴시스. 2018. 국가보훈처, 국가기록원 자료 검색범위 넓어져. (2018. 10. 1.).
대전일보. 2018. [국방] 군 병력 감축되면 국방력 떨어질까. (2018. 11.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청와대 비서실 개편…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2018.7.27.)
대한민국정부. 2018.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동아일보. 2017a. 복무기간 단축,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2017. 6. 20.).
동아일보. 2017b. 군 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 장교·부사관 비율 늘려 군 정예화. (2017. 7. 19.).
동아일보. 2018a.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한목소리 비판. (2018. 1. 20.).
동아일보. 2018b. 지난 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단축’ 혜택… 육군 21개월→18개월. (2018. 7. 27.).
리얼미터.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긍정평가 72% vs 부정평가 22% (2018. 9)
리얼미터. 2018. 北 비핵화 이전, 남북교류·협력확대, 찬성 58.6% vs 반대 29.1% (2018. 9. 20)
매일경제. 2018. 방산수출 지원 국이 공동사무소 만든다. (2018. 5. 16.).
매일신문. 2018. [기고] 무명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제언. (2018. 8. 13.)

문화일보. 2018a. 무기수출 3년째 내리막… '防産' 중기·벤처 육성으로 돌파구(2018. 6. 18).
문화일보. 2018b. "軍·産 유착 근절… 악성 非理 가중처벌할 것"(2018. 7.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민주평통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2018. 11. 27)
박학모. 2016.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B-11.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2018. 주요사업 안내 자료.
방위사업청. 2007. 절충교역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사업청. 2017. 2017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위사업청. 2017. 국제 방산시장 환경 변화 및 주요국 방산수출정책 연구를 통한 방산수출 진흥 방안.
방위사업청. 2018.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비즈니스포스트. 2018. "국회와정부, 방위산업 수출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팔 걷어". (2018. 4. 9.)
서울경제. 2017. '한국형 3축 체계'에 예산 쏠려… 흔들리는 군 전력증강. (2017. 11. 3)
스카이데일리. 재외국민보호제도, 여행객 상당수 알지 못해(2018. 10. 26)
시큐리티 팩트. 2018. [전문가 분석] 방산업체 죽이고 로펌만 살려, 방산비리 구속 수사 무죄율 50%. (2018. 10. 11).
연합뉴스. 2017. 최악 치닫는 북미… 또 다시 '한반도 위기설'(2017. 8. 13)
연합뉴스. 2018. "남북 공동입장엔 찬성·단일팀은 반대 높아"… 민화협 조사(2018. 1. 25)
연합뉴스. 2018. 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2018. 12. 3)
영남일보. 2018a. [사설] 독립유공자 발굴·후손찾기 국가 무한책임 가져야(2018. 3. 2)
영남일보. 2018b. 경북북부보훈지청, 2명 국가유공자 발굴… 증서 전달. 2018. 10. 5.
외교부. 2018. 2018년 외교부 정부 예산안 제출: 전년 대비 3.9% 증가, 한반도 비핵화, 재외국민 보호, 신남방정책 추진 관련 예산 확대(2018. 8. 28)
외교부. 2018. 2018년도 외교부 예산개요.
외교통일위원회. 2018. 제20대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료집.
윤지원. 2018. 고강도 「국방개혁 2.0」, 선진 민주강군 육성과 과제. 국방과 기술 2018년 9월호: 66-75면.
이데일리. 2017.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 文 정부 임기 내 58%만 완료. (2017. 10. 31.).
이데일리. 2018. [리얼미터] 군 복무기간 단축… 찬성 52.1% vs 반대 44.2%. (2018. 1. 29.).
이승현. 201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Vol. 13, Issue 1, p. 163-186
임을출. 2018. [진단]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필요. 북한 2018.10 (2018): 70-75.
정근식 외. 2018. 2017 통일의식조사. Vol. 2017 (2018) pg. 1-440 p.
조선일보. 2017. 방산비리, 채직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2017. 6. 9.).
중부일보. 2018. 문대인 대통령, G20서 '비핵화 한미공조 재확인'(2018.12.04.)
중앙일보. 2015. '軍방산비리 미온 처벌' 질타… 軍법원의 '현역 장교' 봐주기 '심각'. (2015. 9. 21.).
중앙일보. 2015. 군사법원, 방산비리 군 간부 봐주는 이유가 뭔가. (2015. 3. 10.).
중앙일보. 2018. 내년 국방예산안, 8.2% 늘어난 46조7000억원… 2008년 이후 치고 증가율. (2018. 8. 2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 국방개혁 2.0 평가.
청와대. 2018. 정책브리핑. "방위사업 혁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나갈 것". (2018. 8. 2.).
청와대. 2018. 정책브리핑. 향후 5년간 방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할 나침반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발간. (2018. 3. 9.).
최기일. 2018.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최종건. 2012.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 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1-24.
통일부. 2018.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파이낸셜뉴스. 북한매체 "국방부 예산증액, 판문점선언 정면도전". (2018. 9. 4.).
편집부. 2018. 국방 예산안 제출, 46.7조 원, 전년비 8.2% 상승. 국방과 기술 2018년 10월호: 14-17면.
편집부. 2018.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수립. 국방과 기술 2018년 8월호: 8-11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 방산 금융 지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겨레신문. 2017. '한국형 3축 체계'는 뜨거운 감자인가. (2017. 11.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국방R&D 추진 전략.
한국관광공사. 2017. 한국관광통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 사업소개 자료
한국방위산업학회. 201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국 방위산업업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8. 방산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 연구.

부록-2018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1. 경제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O	O
2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경쟁 촉진	O	
3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정책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보호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R&D(국민생활연구) 추진	O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연결 지능화(DNA, Data-Network-AI) 역량 강화	O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고도화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부담 경감		
10	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O	O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O	O
1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1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14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교통비 절감		
15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O	O
16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	O	O
17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18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		
19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사잇돌 제도) 활성화		
20	금융위원회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21	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O	O
2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안전판(safety net) 강화		
23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4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5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대	O	
26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업 체질개선	O	
2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2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지원 강화		
2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 취창업인력 양성		
30	방송통신위원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31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중독 및 무분별한 이용 문화 개선		
32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33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3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O	O
35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O	O
36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 한류마케팅		
37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안전 최우선의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		
38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벤처투자)	O	
3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O	
40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환경 개선(연대보증 폐지)		
41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확산		
4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혁신)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43	해양수산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O	
44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 수립(해양공간의 통합체계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45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		
추가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인상	O	O
	기획재정부	주52시간근무제	O	O
	다부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O	O
	다부처	핵심 생계비 경감대책	O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지주회사	O	

2. 사회복지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경찰청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종합추진계획	O	
2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O	O
3	경찰청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4	경찰청	'新 장발장 살리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5	경찰청	현장감식 책임실명제		
6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O	
7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O	
8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O	
9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1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O	
12	국민권익위원회	대형 집단민원 조정 강화		
13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14	기상청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15	기상청	기상학적 가뭄예보 시행		
16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개선		
17	기상청	체계적인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18	기상청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호우특보 기준 개선		
19	대검찰청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직제개편	O	
20	대검찰청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한 특별수사 축소 및 조직개편		
21	대검찰청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형사부 강화 및 전문화)		
22	대검찰청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2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O	O
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O	
25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제도	O	O
26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O	
27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8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	O	O
29	소방청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	O	O
30	소방청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제공		
31	소방청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안내		
32	소방청	주택에서 불이나면 누가 깨워줄까요? 주택화재경보기		
33	소방청	화재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O	
35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O	O
3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시행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38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	O	O
3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O	O
40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1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42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43	인사혁신처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	O	O
44	해양경찰청	당당한 해양주권수호		
45	해양경찰청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46	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추진		
47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강화		
48	해양경찰청	해양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49	행정안전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O	O
50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5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O	
52	행정안전부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53	행정안전부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		
54	환경부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55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		
56	환경부	빈병보증금제도		
57	환경부	층간소음 갈등해소		
58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O	

3. 교육문화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O	
2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O	O
3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	O	O
4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O	O
5	교육부	대학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O	
6	교육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		
7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 활성화		
8	문화체육관광부	방한관광시장 안정화 및 다변화	O	
9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O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O	O
11	문화체육관광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O	
1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O	O
13	산림청	도시숲 조성	O	O
14	산림청	산림복지 정책	O	
15	산림청	산림 병해충 방제		
16	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O	
추가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O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O	O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O	O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O	O
	교육부	대학 입시제도 개편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O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O	O

4. 외교안보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O	O
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O	
3	국가보훈처	정부기념식을 통한 보훈정신 선양		
4	국방부	공상 장병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급		
5	국방부	군대 급식 질 향상		
6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O	
7	국방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O	
8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O	
9	방위사업청	국가 연구개발(R&D)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	O	
10	방위사업청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O	O
11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O	O
12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	O	O
13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14	통일부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O	O
15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O	O
16	통일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O	
추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국방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O	O
	국방부	장병 취업활동지원		
	국방부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단기국내외시찰		
	국방부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부지매입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O	O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O	O
	병무청	보충역복무제도 중 산업지원인력정책	O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강화	O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 협력인재 양성	O	
	외교부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O	
	외교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사업		
	통일부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통일부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O	O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1판 1쇄 인쇄 2019년 2월 19일
1판 1쇄 발행 2019년 2월 21일

발행인 김수곤
지은이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총괄)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펴낸곳 동아E&D
주소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등록 2008년 2월 18일 101-86-37667
출판사등록 2010년 4월 20일 제300-2009-18호
아트디렉터 유진민
디자인 이종미
ISBN 978-89-97257-16-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 편집저작권 © 동아E&D

값 20,000원